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총서 41

## 자본의 세계화와 축적체제의 위기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위음

지음

한울  
아카데미

# 한글음

# 아카데미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e-CIP홈페이지(<http://www.nl.go.kr/ecip>)와 국가자료  
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2004449)

머리말

# 한글음

아카데미

# 한울

아카데미

# 한글음

아카데미

차례

머리말 · 3

제1장 ■

# 한글

# 아카데미

찾아보기 · 257

# 한글음

아카데미



# 세계화의 모순과 유로존 위기\*

정성진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장

“세계시장공황에서는 부르주아 생산의 모든 모순이 한꺼번에 분출한다. 특수 공황(그 내용과 범위에  
서 특수적인) 모순의 분출은 단지 산발적이며 고립적이고 일면적이다”(Marx, 1968: 534).

##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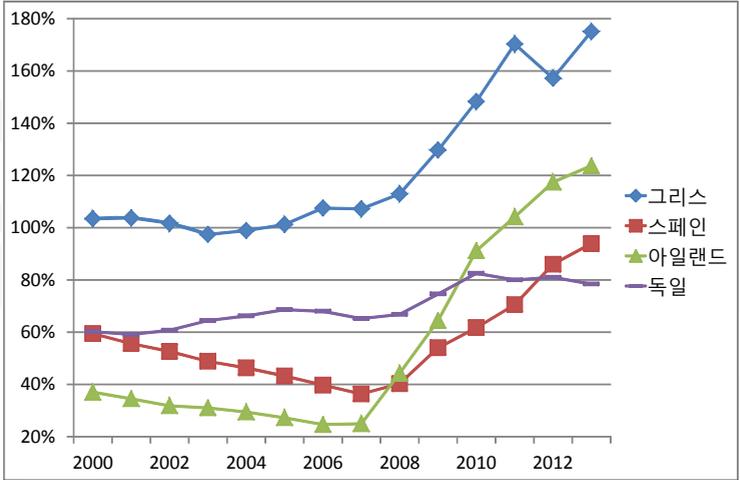
2010년 5월 그리스의 국가부채위기와 함께 시작된 유로존<sup>1)</sup> 위기는 부분  
적 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유로존 위기의 진원지였  
던 그리스 등 주변부 나라들은 2013년에도 후퇴를 계속했다. 유로존 위기의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NRF-2010-413-B00027)이다. 이 논문의 <그림 1-9>, <그림 1-10>의 데이터를 제  
공해준 라파비차스(C. Lapavistas) 교수와 포웰(Jeff Powell) 교수, 그리고 <그림 1-  
13>, <그림 1-14>의 데이터를 제공해준 마니아티스(Athanasios Maniatis)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1) 유로존은 EU 국가들 중 EMU에 따라 공동통화인 유로를 국민적 통화로 채택한 나라  
들로서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  
인 등 **17개국**을 가리킨다.

2014년 현재는 18개국입니다. \* 라트비아

<그림 1-1> 유로존 국가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2000~2013년)



자료: Eurostat.

핵심 지표였던 국가부채 비율은 <그림 1-1>에서 보듯이 2010년 위기 발발 당시보다 더 높으며, <그림 1-2>에서 보듯이 실업률은 2010년 이전보다 훨씬 높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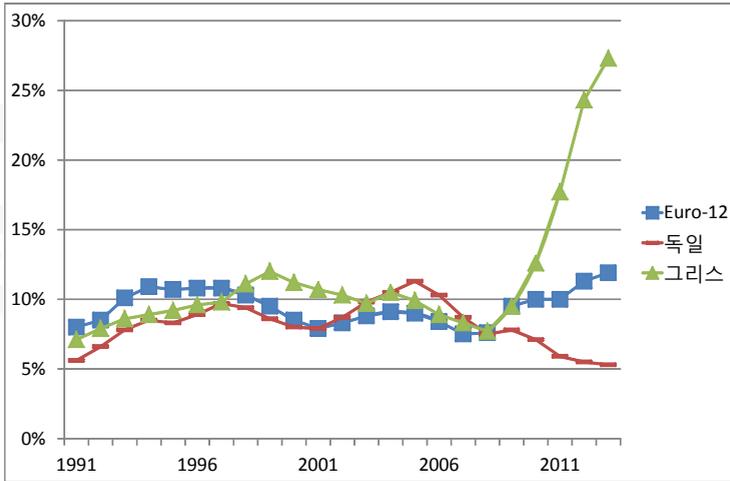
유로존 위기에 대해서는 케인스주의 경제학을 비롯하여 비판적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sup>3)</sup> 하지만 유로존 위기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접근은 아직 많지 않다. 유로존 위기 발발 전에는 유럽연합(European

헤어컷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2) 그리스의 경우 민간채권자들에 대한 상당한 ‘헤어컷’에도 불구하고 국가부채 총액은 2013년 3월 3,090억 유로로 2010년 5월 3,103억 유로에서 거의 감소하지 않았으며,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10년 5월 145%에서 2014년에는 175%로 오히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2013년 그리스의 실업률은 27%로 스페인보다 더 높고 18~24세 청년의 60% 이상이 실업자였다(Michael-Matsas, 2013: 438).

3)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2013년 37권 3호 특집 및 *Contributions to Political Economy* 2013년 32권 특집 논문들은 유로존 위기에 대한 케인스주의 관점에서의 연구의 현재의 도달점으로 보인다.

〈그림 1-2〉 유로존의 실업률(1991~2013년)



자료: AMECO.

Union: EU)이나 유럽화폐통합(European Monetary Union: EMU) 문제에 대해 네오그람시안 마르크스주의 국제정치경제학과 개방적 마르크스주의 간의 논쟁을 중심으로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졌다.<sup>4)</sup> 하지만 유로존 위기에 대한 본격적인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은 아직 소수이다.<sup>5)</sup> 이 논문에서는 마르크스의 세계시장공황론의 관점에서 유로존 위기의 원인과 대안을 검토할 것이다.<sup>6)</sup>

4) 예컨대 비엘러 외(Bieler et al., 2006)는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EU 및 EMU 연구의 당시의 도달점이다.

5) 현재까지 출판된 유로존 위기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접근으로는 카르케디(Carchedi, 2012), 캘리니코스(Callinicos, 2012), 로버트(Roberts, 2013) 등이 있고, 국내에서 비주류적 입장에서 이루어진 유로존 위기 논의로는 박상현(2012), 백승욱(2013), 이정구(2012), 유승경(2012) 등을 참조할 수 있다.

6) 마르크스의 세계시장공황론의 현재적 의의에 대한 논의로는 정성진(2012)을 참조할 수 있다.

먼저 2절에서는 EU와 EMU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유럽 제국주의 프로젝트의 모순적 산물로서 위기의 경향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인다. 3절에서는 유로존 위기를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적자라는 ‘쌍둥이 적자’의 누적, 유로존 주변부 나라들의 경쟁력 약화, 불평등 심화, 금융화, 제도적 부정합 등에서 찾는 기존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4절에서는 그리스 위기를 사례로 하여 유로존 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실물경제에서 이윤율 저하 경향임을 보인다. 5절에서는 유로존 위기에 대한 국가의 대응과 신자유주의의 재구축 과정을 검토한다. 6절에서는 유로존 위기에 대한 좌파의 대응을 검토하고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모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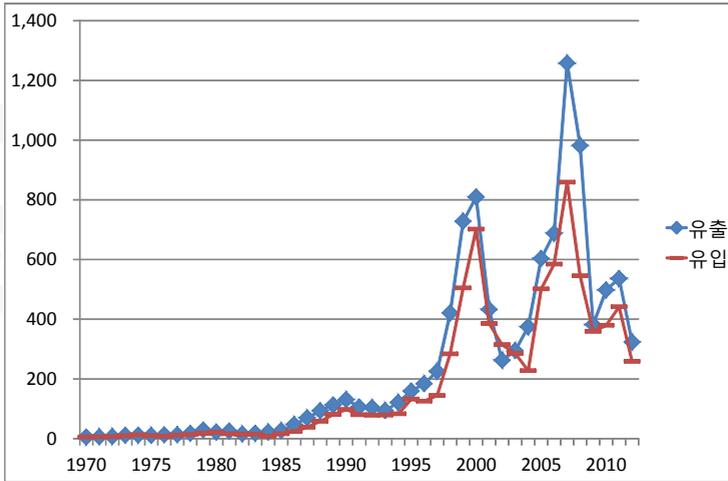
## 2. 세계화와 유럽통합의 모순

### 1)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유럽통합

유럽통합이 세계화라는 초민족적 과정의 한 부분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로존 위기도 지난 30년간 자본주의 세계화가 이룩한 세계경제의 고도의 상호의존성의 산물이었다(Bieler, 2012: 200; Michael-Matsas, 2010: 491). 유럽통합은 세계화의 산물인 동시에 세계화를 다시 크게 촉진시켰다. <그림 1-3>에서 보듯이 1989~1994년 EU로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은 연평균 829억 달러였는데, 글로벌 경제위기 직전 해인 2007년 이 수치는 8,591억 달러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또 1989~1994년 EU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은 연평균 1,112억 달러였는데, 2007년 이 수치는 1조 2,579억 달러로 역시 10배 이상 증가했다.

유럽통합은 세계화의 산물인 동시에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의 결과였다.

〈그림 1-3〉 EU에서 해외직접투자(1970-2012년, 단위: 10억 달러)



주: 'EU'는 EU 27개국을 가리킴.  
 자료: UNCTAD STAT.

그랄(J. Grahl)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유럽 금융은 글로벌화된 미국 금융체계에 완전히 종속되었다. 특히 독일의 금융에서 미국화는 두드러졌다.<sup>7)</sup> 은행과 산업 간의 전통적 연계는 약화되고 대신 투자은행이 발전했다(Grahl, 2011: 31~ 32). 유럽의 대서양 자본순환으로의 통합은 1999년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금융서비스행동계획’에 의해 촉진되었으며, 이로부터 통합된 금융서비스 시장이 출현했다. 이것은 미국 모델을 적극적으로 모방하고 이와 연계되는 과정이었다. 헤지펀드, 보험회사 및 외국인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증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점차 앵글로색슨 주주가치 모델이 라인모델을 압도하게 되었다. 2007년 말 미국 개인이 소유하는 외국인지

7) 아글리에따(M. Aglietta)는 독일의 신자유주의는 규칙과 규제를 중시하는, 이른바 질서자유주의(ordoliberalism)라는 국민적 전통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영미식 신자유주의와 같은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Aglietta, 2012: 34).

분에서 EU의 비중은 주식에서 42%, 자산담보부증권(ABS)에서 53%였으며, EU의 총 해외 주식투자 및 해외 자산담보부증권 투자에서 대미 투자의 비중은 각각 39%, 32%였다(Cafruny and Talani, 2013: 22).

유럽에서 신자유주의의 대두는 초민족적 유럽자본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1990년대 이후 EU에서 초민족적 자본의 점증하는 구조적 권력을 배경으로 신자유주의가 득세하였다(Bieler, 2012: 207, 209).

1980년대 말 및 1990년대 초 경제불황이 심화되면서 경쟁 압력이 강화되자, 스웨덴의 초민족기업들의 유럽의 타 지역들로의 입지 이전이 증가한 데서 보듯이, 헤게모니적 경제이념이 케인스주의로부터 신자유주의로 이동했다(Bieler, 2012: 202). 이 과정에서 EU 회원국으로의 가입은 신자유주의 이전의 케인스주의로의 복귀 가능성의 차단을 의미했다.

또 1990년대 이후 EU의 중동부 유럽으로의 확대전략은 자유화와 탈규제라는 EU 규칙들의 수용을 요구했다. 실제로 중동부 유럽으로 수출된 EU 모델은 매우 시장 지향적인 신자유주의였다(Bieler, 2012: 202~203).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안정성과 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SGP)’은 유로존 회원국들에게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고 국가부채도 GDP 대비 60% 이내로 유지할 것을 강제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명시된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 이자율 정책의 주요 목표는 물가 안정이었다. 마스트리히트 기준과 후속된 재정협약은 거시경제정책을 단기적인 글로벌 금융시장에 종속시켰다(Cafruny and Ryner, 2012: 33, 39; Cafruny and Talani, 2013: 19).

유럽통합은 그 자체 모순으로 가득 찬 과정이었으며, 유로존 위기는 이미 유로존 출발 시점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유로존 위기는 세계화론, 통합이론을 중심으로 낙관주의가 팽배했던 주류 사회과학의 EU 연구에 심각한 맹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주류 통합이론은 시장력을 탈정치화하고 시장에 기초

한 통합의 내재적 합리성을 상정한 반면, 그와 같은 통합에 내재한 권력관계를 과소평가했고 EU의 신자유주의적 기초로부터 비롯되는 불안정성을 간과했다(Cafruny and Ryner, 2012: 33, 35).

## 2) 신자유주의와 유로

주류 경제학자들은 유로는 환율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인플레이션을 저지함으로써 유로존 시민들의 일반적 후생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유로존 위기는 이와 같은 주류 경제학의 주장이 근거 없는 낙관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무엇보다 유로화 자체가 유럽의 거대 초민족기업과 금융기관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 창출되었기 때문이다. 유로화는 금융화에 대한 거대 유럽 자본의 대응으로서 세계시장에서 유럽 자본에 더 나은 조건을 확보하려는 시도였으며, 유럽의 산업자본이 자국 노동자들에게 더 엄격한 규율을 강제할 수 있게 했다(Lapa-vitsas, 2013b: 385~386).

연합하기

EMU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및 초민족적 세계화 과정의 일환으로 성립했다. 유럽통합은 화폐와 법의 지배를 제도화했으며, 이는 자유주의 국가 목적을 강화하고 대중민주주의의 열망에 타격을 가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민주적 요소를 그것의 자유주의적 기초와 연계시켰다(Bonefeld, 2012: 64). 유럽통합은 ‘1인 1표’의 민주적 이념, 즉 민주적 다수에 의한 통치이념에 기초한 과정이 아니었다. 유럽통합은 대중의 민주적 정치적 권리의 성취를 무력화시키고 이를 초민족적 법치와 화폐에 의한 통치로 대체했다. “군주의 공화국은 화폐 공화국이고, 그 구현체는 ECB이며, 그 신민은 영토적으로 편제된 유럽 노동계급이다”(Bonefeld, 2012: 54, 56). 즉, 유럽통합을 추진했던 이념인 초민족주의(supranationalism)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대중민

민주적인 정치적 권리의  
or  
민주적·정치적 권리의

주주의의 영향을 제한하고 노동자계급이 자국 정부에 압박을 가해 복지와 고용보장을 획득할 수 있는 힘을 박탈하기 위한 장치였다.

유로존에서는 초민족적 금융정책이 국내적 고려로부터 절연된 독립적 중앙은행과 함께 정치적 결정의 역할을 제한하고 경제정책 결정을 사회갈등에 대한 케인스주의적 대응으로부터 분리시킨다(Bonefeld, 2012: 58~59).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명시되어 있듯이 ECB와 그것의 금리정책의 최우선적 목표는 물가안정이었다(Bieler, 2006a: 125). ECB는 처음부터 강하게 통화주의, 반케인스주의로 편향되어 있었다(Guttman and Plihon, 2013: 364~365). EMU는 통화정책에서 정치를 제거하려는 시도였다. ECB는 경제정책을 폭넓은 정치적 책임성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정부를 시장의 규율에 더 잘 따르게 했다(Bieler, 2006a: 121; Bieler, 2012: 199). 유로 통화체제는 국민적 제도들의 외부 또는 그 상위에 위치했다.<sup>8)</sup> 유로는 본질적으로 모든 유로존 국가들에게 외국통화이며, 이들이 처한 경제적 현실과 상관없이 이들을 경직적인 고정환율제도로 묶고 이들로부터 화폐주권을 박탈한다. 유로는 금본위제도와 마찬가지로 국민적 정부는 그 공급을 통제할 수 없다. ECB는 유로존 국가들의 최종대부자가 아니며, 유로는 유로존 국가들에게 외국통화이다(Aglietta, 2012: 20, 23). 예컨대 주변부 나라들이 차입한 유로는 그것이 법적으로 국내 통화라고 할지라도 최종적으로는 외국통화로 작동한다(Lapavitsas, 2013: 297). 이는 과거 케인스주의 체제에서 통화체제가 노자(勞資) 간의 제도화된 국민적 타협을 지지하기 위해 그것에 종속된 것과 대조적이다(Boyer, 2013: 548).

중복 느낌입니다

8) 유로의 세계화폐로서의 특수성은 그것이 특정 국가의 국민적 화폐가 아니라 여러 국가들에 의해 '무(無)'로부터 창출되었다는 데 있다. 또 유로화와 함께 출범한 ECB는 어떤 연방정부나 혹은 한 회원국 정부의 지지에 의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특수한 중앙은행이다(Lapavitsas, 2012: 289; Lapavitsas, 2013a: 300).

한편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SGP는 반인플레이 우선정책을 재정정책에 대한 제약과 결합시켰을 뿐 그것이 야기한 불균형에 대한 교정 메커니즘을 제공하지 않았다(Stockhammer, 2014). 실제로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발한 지 한참 후인 2008년 7월에도 ECB는 기준금리를 3.75%에서 4.25%로 인상(!)했으며, SGP에 의거하여 공공재정 감축과 긴축정책을 고집했다(Cafruny and Talani, 2013: 23). 2008~2010년 미국의 경기부양 지출은 GDP 대비 5.6%였던 반면, 같은 시기 유로존 국가들의 지출은 1.6%에 불과했다(Guttman and Plihon, 2013: 369).

EMU는 긴축의 정치를 목적으로 한 초민족적 장치였다(Bonefeld, 2002: 134). 유로존에서 국제적 경쟁에 노출되는 것은 단일시장 프로그램과 통화통합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회원국들 모두에 대해 자본에 이득이 되는 상당한 구조조정을 강요했다(Laskos and Tsakalotos, 2013: 137). EMU는 참여 국가들을 국제경쟁에 노출시키기 위한 극단적 전략이었는데, 이는 노동에 대한 지속적 구조조정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었다. EMU는 전통적인 평가절하를 통한 국제경쟁력 유지 수단을 제거했으며 단지 임금 억압, 즉 “내적 평가절하(internal devaluation)” 방안만을 남겨두었다(Overbeek, 2012b: 230).<sup>9)</sup> 노동대중은 유로존 주변부뿐만 아니라 중심부에서도 체계적 공격을 받았다. 이런 의미에서 EMU와 유로화의 출범은 “자본가 권력의 특수한 조직 양식”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Sotiropoulos, Milios and Lapatsioras, 2013: 192). 즉, 유로는 **특정한 통화인 것을 넘어** 자본의 특정한 착취전략이며 자본가 권력의 형태이다.<sup>10)</sup> 특정 통화 범주를 넘어

9) 이런 점에서 보면 유로존 위기는 유럽 자본가들에게는 ‘신의 선물’이었다. 그리스, 아일랜드 등지에서 최저임금이 대폭 삭감되었다(Toussaint, 2013).

10) 리스본 전략이 천명했던 완전고용정책조차도 더 많은 일자리가 탈규제와 상품 및 자본, 노동시장의 자유화를 창출하는 것을 상정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라는 EMU의 기조와 상충되지 않는 것이었다(Bieler, 2012: 201).

EMU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유럽에서 자본축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었다(Mavroudeas, 2013: 306). 첫째, 통화 통합은 통화의 차이에 기인한 불안정성과 문제점들을 제거함으로써 공동시장을 확장시킬 것이다. 둘째, 통화 통합은 자본 간 경쟁과 제국주의 간 경쟁을 더 잘 조율할 것이다. 이전에는 생산성이 낮은 자본은 생산성이 높은 자본으로부터의 경쟁을 경쟁적 평가절하를 통해서 대처할 수 있었다. 하지만 EMU와 함께 이와 같은 경쟁적 평가절하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통화 통합은 개별 자본들에게 자신들의 수익성 문제를 자본 간 경쟁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착취 강화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즉, EMU가 원활하게 작동하여 자본축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은 유럽 노동자계급의 순응이었다. 따라서 경제상황이 악화하면서 대중적 저항이 분출할 경우 EMU와 유로체제는 불안정화된다(Bonefeld, 2012: 64). EMU는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에 더욱 강한 규율을 부과했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EMU와 유로체제를 위기에 더욱 취약하게 했다(Sotiropoulos, Milios and Lapatsioras, 2013: 204).

### 3) 제국주의 프로젝트로서 유로

EMU는 참여 국가들 모두에게 평등한 세계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특히 아일랜드는 EU의 내부 시장에서의 자유무역 전략을 통한 성공적 추격 전략의 모범적 사례로 선전되었다(Bieler, 2013: 176). 그러나 이런 기대는 유로존 주변부 나라들 다수가 유로존 위기 국면에서 국가채무위기에 직면하면서 산산조각이 났다. EMU는 독일을 중심으로 한 중심부 나라들의 경쟁력은 강화해주었는데, 이는 유럽 남부의 저발전 국가들의 희생을 대가로 했다. EMU 성립에 따라 국민적 통화정책, 산업정책, 통상정책이 폐지되면서 유로존 내부의 경쟁

이 절대우위에 기초한 경쟁으로 됨에 따라, 승자의 이득은 패자의 손실로 지 불되었으며, 유로존 중심부와 주변부 간의 불균등발전이 심화되었다(Mavroudeas, 2013: 306). 이로부터 유로존에서 발전이란 추격 없는 불균등결합발전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Bieler, 2013: 176~177).

세계화와 자본주의적 조건에서 유럽의 경제적·화폐적 통합은 유럽 여러 나라들 간의 사회경제발전의 불균등성을 제거하기는커녕 도리어 심화시켰으며 원심력을 강화했다(Michael-Matsas, 2010: 491). 이는 무엇보다 독일과 같은 유로존 중심부 국가들의 거대 기업들이 수출 주도 경제성장전략, 즉 신중상주의(neo-mercantilism)를 추구했기 때문이다(Overbeek, 2012b: 228; Guttman and Plihon, 2013: 365). 유로의 도입 자체가 유로존 중심국들, 특히 독일의 경제적 이익을 반영한 것이었다. 독일은 유로를 미국을 대신하는 제국주의 중심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간주했다(Carchedi, 2012: 298). 유로는 주로 독일 자본의 헤게모니가 유럽과 세계 무대에 행사되는 수단이었다(Lapavitsas, 2012: xx). 유로는 처음부터 독일 자본의 글로벌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도되었다. 유로는 세계준비통화로서 달러의 지위, 따라서 미국의 세계적 헤게모니에 도전할 수 있게 했다. 실제로 독일의 지배계급은 유로존을 관리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의 재정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통화 통합을 조직했다. 유로존 회원국들은 통화 통합으로부터 약간의 이득을 얻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독일의 지배계급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게 해서는 안 되었다. 유로존에서 동질적 재정정책의 부재는 한편에서는 독일의 제한된 권력을 보이는 것이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통화 통합에 수반된 재정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독일 자본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었다(Lapavitsas, 2013b: 387).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 중·미 간 불균형과 유사한 현상이 유로존 중심부와 주변부 나라들 간에 나타났다. 독일의 수출업자들과 금융자본은 그 주된 수

해자였다(Laskos and Tsakalotos, 2013: 82, 86). 유로가 출범했을 때 독일 통화는 과소평가되고 주변부 국가들 통화는 과대평가되었는데 이는 유럽 시장에서 독일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했다(Toussaint, 2013). 유로는 유로존을 독일 자본의 사실상 국내시장으로 전환시켰다(Lapavistas, 2013: 293). 2009년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는 자그마치 2,350억 달러로서 GDP의 6.4%에 달했는데, 그 중 85%는 유럽연합 국가들과의 사이에서 발생했다(Cafruny and Ryner, 2012: 40). 그리스의 경우 유로존 가입에 따라 그리스의 기존의 응집된 체제가 와해되었지만 이는 더 경쟁력 있는 생산체제로 대체되지 못함으로써 그리스 경제는 유럽 중심부의 부속물이 되고 말았다.<sup>11)</sup> 그리스는 유로존 가입 이후 몇 가지 결정적인 정책수단을 상실했으며 이는 그리스의 위기 대처능력을 현저히 약화시켰다. 이처럼 EMU와 유로의 도입은 유로존 국가들의 수렴이 아니라 양극화로 귀결되었다(Overbeek, 2012b: 230).

하지만 유럽통합 프로젝트는 독일 제국주의 이해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과정은 아니었다. EMU를 비롯한 유럽에서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는 초민족적 사회세력들 간의 투쟁의 산물이다. 또 신자유주의 유럽 프로젝트를 주도한 것도 1983년 결성된 유럽원탁회의(European Round Table: ERT)로 상징되는 유럽 자본가계급의 ‘유기적 지식인’들이었다(Apeldoorn, 2014: 196~198). EU를 통해 구축된 거대한 국내시장은 유럽 자본이 세계시장을 정복하는 발판으로서 기능하고 외부 경쟁으로부터 유럽 자본을 보호해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EU의 쌍무적 무역전략은 ‘글로벌 유럽(Global Europe)’이나 ‘경제파트너십협정(Economic Partnerships Agreements: EPA)’에서 보듯이, 서비스, 투자 및 공공조달의 영역에서 해외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통해 유럽 대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Bieler, 2012: 206~

11) 물론 그리스가 종속국이라는 말은 아니다. 그리스는 여전히 중진국 경제이다(Mavroudeas, 2013: 309).

207). 2006년 EU의 ‘글로벌 유럽’ 전략은 EU의 공동무역정책 수립을 통해 기존의 유럽의 사회적 모델을 해체하는 동시에 유럽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발전도상국 경제들을 수탈하는 것이었다(Bieler, 2012: 203~204). ‘글로벌 유럽’은 발전도상국과 신흥시장을 고생산성 재화와와의 교환으로 저생산성 재화를 교역하도록 강제하는 부등가교환 관계 속으로 고정시키는 메커니즘이었다(Bieler, 2013: 180). ERT도 초민족적 유럽 자본의 헤게모니 프로젝트를 입안하여 규제완화, 유연적 노동시장, 인프라 투자 등에서 신자유주의 모범 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Bieler, 2012: 206, 209). EU 집행위원회가 주창한 ‘유럽 2020 전략’은 지역 고용정책의 지침으로서 유연안정성(flexicurity)과 함께 지식집약적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서 경쟁력 강화와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발전도상국 시장의 EU 기업들에게 개방을 강조한다. 반면 노동권이나 사회보장과 무상의료를 통한 탈상품화 같은 목표들은 누락되어 있다(Nousios and Tsolakis, 2012: 252~253).

유로존 위기는 유로존이 유럽인들의 협동적 연합이기는커녕, 글로벌하게 작동하는 새로운 화폐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위계적인 통화 통합이었음을 보여주었다(Lapavitsas, 2013b: 389). 이번 유로존 위기를 거치면서 이른바 ‘공통적인 유럽적 정체성’이라든가 유럽적 연대라는 것이 얼마나 취약한 것이었는지도 잘 드러났다. 그 대신 상충하는 국익이 다시 전면에 부상했다(Mavroudeas and Paitaridis, 2013). 유로존의 중심부와 주변부와의 양극화는 유로존 위기로 이어지면서 유로존 체제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Boyer, 2013: 551).

### 3. 유로존 위기의 원인에 대한 기존 이론 검토

이 절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유로존 위기의 원인으로 제시되고 것들을 (1) 쌍둥이 적자, (2) 경쟁력 약화, (3) 금융화, (4) 불평등 심화, (5) 제도적 부정합 등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 이들을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 1) 쌍둥이 적자

주류 경제학자들은 이번 유로존 위기의 원인은 유로존 주변부 나라들의 경상수지 적자이며, 이는 이들 나라들의 방만한 재정에서 비롯된 재정적자와 경쟁력 약화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중 재정적자가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하는 메커니즘, 이른바 ‘쌍둥이 적자 가설’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한다.<sup>12)</sup>

$$Y=C+I+G+(X-M+N) \dots\dots\dots (1)$$

(Y: 국민소득, C: 민간소비, I: 투자, G: 정부지출, X: 수출, M: 수입, N: 순소득과 이전)

위 (1)식에서 경상수지(CA)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CA=X-M+N \dots\dots\dots (2)$$

국민소득은 다음 (3)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

12) 이하의 수식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마브로테아스와 파이타리디스(Mavroudeas and Paitaridis, 2013)를 참조할 수 있다.

$$Y=C+S+T \dots\dots\dots (3)$$

(S: 저축, T: 조세)

(3)식에서 저축 식을 도출하면 다음 (3a)식과 같다.

$$S=Y-C-T \dots\dots\dots (3a)$$

(1)식을 (3)식에 대입하여 저축(S)에 대해 풀면 다음 (4)식과 같다.

$$S=C+I+G+CA-C-T=G-T+CA+I=BD+CA+I \dots\dots\dots (4)$$

(BD(재정적자)=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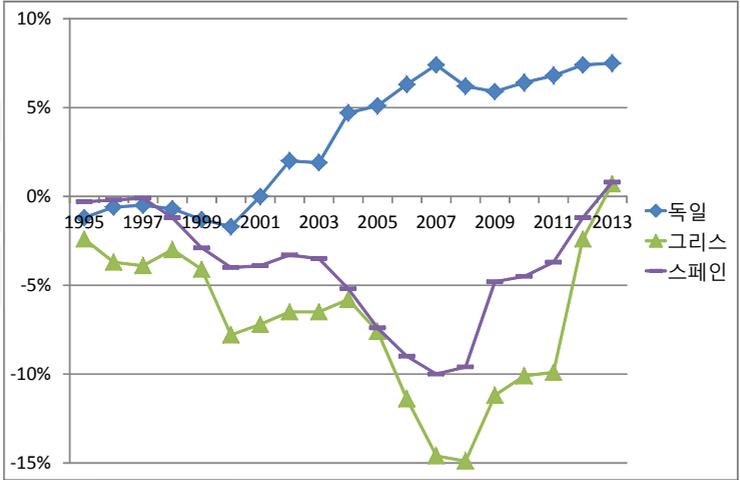
(4)식을 경상수지(CA)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 (5)식과 같다.

$$CA=(S-I)-BD \dots\dots\dots (5)$$

(5)식에서 (S-I), 즉 저축과 투자의 차이가 시간에 걸쳐 안정적이라고 가정하면, BD, 즉 재정적자의 변동은 경상수지의 변동으로 반영된다는 것, 즉 재정적자가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한다는 ‘쌍둥이 적자’ 가설이 성립한다.

이처럼 주류 경제학에서는 경제가 경상수지 적자에 처하는 이유를 민간 부문의 마이너스 저축이나 공공부문의 마이너스 저축에서 찾는다. 요컨대 국민들이 분수에 넘치게 살았기 때문에 적자가 났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그림 1-4>에서 보듯이 유로존 주변부 국가들에서는 경상수지 적자가 2010년 유로존 위기 발발 이전부터 증가했다. 주류 경제학은 유로존 위기가 재정적자-경상수지 적자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임금상승 억제, 공공지출 억제와 같은 대내적 긴축정책을 위기에 대한 처방으로 제시한다. 일

(그림 1-4) 유로존 국가의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1995~2013년)



자료: 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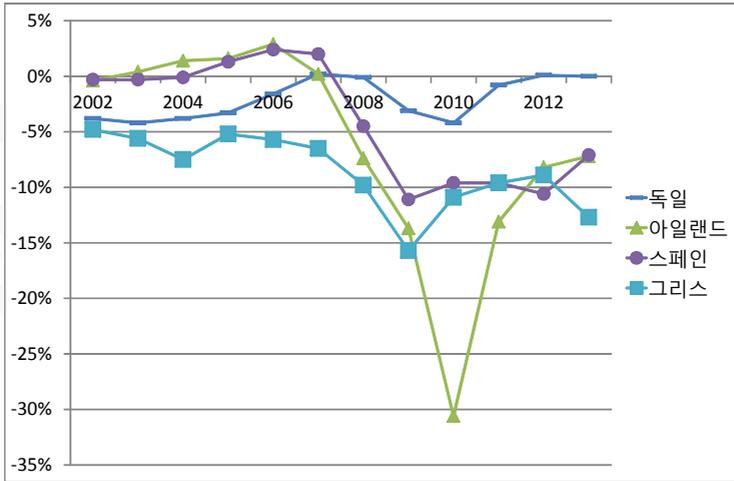
부 주류 경제학자들은 불황을 방종한 나라들을 교정하는 수단으로 간주하기도 한다(Sotiropoulos, Milios and Lapatsioras, 2013: 186).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긴축정책을 불황을 방종한~

하지만 이와 같은 쌍둥이 적자 가설은 항등식적 관계를 묘사하는 데 불과하며 위기의 인과관계를 포착한 것은 아니며, 더구나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실제로 유로존 주변부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증가한 것은 재정적자가 증가해서라기보다 이들 지역에서 경제성장 전망이 호전되면서 중심부로부터 자본유입이 증가하고 이와 연관되어 국내 신용이 급증한 결과였다(Sotiropoulos, Milios and Lapatsioras, 2013: 195). 이른바 쌍둥이 적자는 과잉축적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다(Mavroudeas, 2013: 310; Lapavitsas, 2013: 297; Laskos and Tsakalotos, 2013: 2, 80).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유로존 나라들에서 조세수입이 감소했고 그 결과 이들 나라에서 재정적자가 급증했다(Lapavitsas, 2013: 297). 그리스의 경우 국

참고문헌에 2013 두 개 있음. 2013a ? 2013b ?

(그림 1-5) 유로존 국가의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비율(2002~2013년)



자료: Eurostat.

가부채가 증가한 것은 조세수입에 비해서 정부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지출에 비해서 조세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다(Sotiropoulos, Milios and Lapatsioras, 2013: 213).<sup>13)</sup> 아일랜드와 스페인의 경우 국가가 은행시스템을 구제하려 나서기 전까지는 재정상태는 건전했다(Young and Semmler, 2011: 17). <그림 1-1>과 <그림 1-5>에서 보듯이 유로존 국가들에서 국가부채와 재정적자는 위기 전이 아니라 위기 후에 급증했다.<sup>14)</sup>

유로존 주변부 나라들에서 부채 증가의 주된 요소는 국가부채가 아니라 민간부채였다. 예컨대 그리스의 경우 1980년대부터 이미 국가부채 비중이

13) 그리스에서 고질적인 조세수입의 부족은 의식적인 친부유층 정책의 결과인데, GDP 대비 조세회피 및 탈세의 비율은 12~15%에 달한다(Milios, 2013: 199).

14) 2008년 이후 이와 같은 공공부채의 급증은 어떤 민주주의 국가도 감히 1930년대 대공황과 같은 규모의 경제위기를 자국에 부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Streck, 2011: 20).

증가하기 시작했지만, 1990년대 말 이후 증가한 부채의 대부분은 국가부채가 아니라 가계부채와 은행부채였다. 라파비차스(C. Lapavitsas)가 지적하듯이, 1990년대 말 이후 유로존 주변부 나라들에서 국가부채에서 특징적인 것은 그것의 증가보다는 오히려 구성 변화이다. 예컨대 유로존 위기 직전 그리스 국가부채 중 2/3의 채권자가 외국인이었다는 된 점에서 보듯이, 주변부 국가는 이 시기 국내 저축이 감소하자 외국자본 차입을 통해 국가부채를 조달하게 되었다(Lapavitsas, 2013: 295~297). 유로존 위기 전 유로존 주변부 나라들은 유로존 회원국이 됨으로써 낮은 이자율로 국가부채를 조달할 수 있었는데, 이는 국가 차입이 내국통화로 간주되는 유로화로 표시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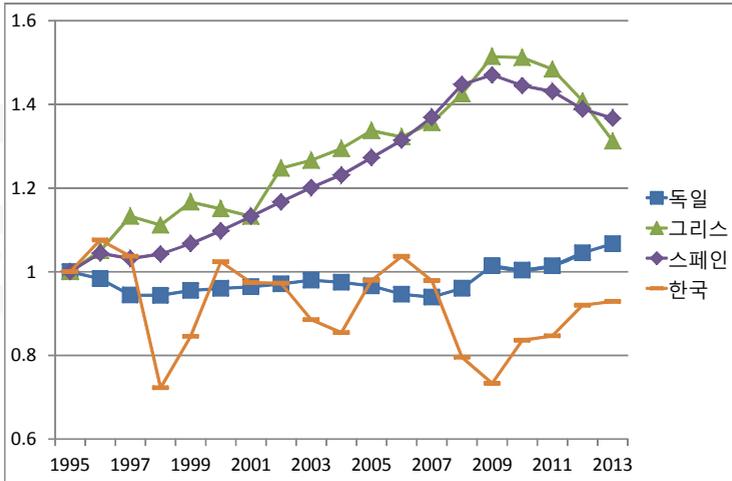
2013a  
2013b

유럽에서 국가부채가 심각한 문제로 된 것은 그 규모가 어떤 임계치를 넘었기 때문이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이 유로존 주변부 정부들에게 대출할 때 엄청난 프리미엄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정부는 독일이나 네덜란드 정부보다 4~8%포인트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했다. 이는 유로존 국가들이 신자유주의 경제교리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위기에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국제금융시장이 의구심을 품었기 때문이다(Overbeek, 2012a: 39; Overbeek, 2012b: 232).

## 2) 경쟁력 약화

라파비차스는 유로존 주변부 국가들에서 국가부채 위기는 주변부에서 방만한 재정 때문이 아니라 주변부 국가들의 경쟁력 약화 때문이라고 주장한다(Lapavitsas, 2012: 5). 라파비차스는 주변부의 상대적 고임금이 주변부의 단위노동비용(unit labor cost)을 상승시켜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본다. <그림 1-6>에서 보듯이 1995~2007년 단위노동비용이 유로존 주변부 나라들에

〈그림 1-6〉 유로존에서 명목단위노동비용의 추이(1995~2013년)



주: 1) 명목단위노동비용=피고용자 1인당 실질 GDP에 대한 피용자 1인당 보수 비율(유로화 기준)

2) 1995=1

자료: AME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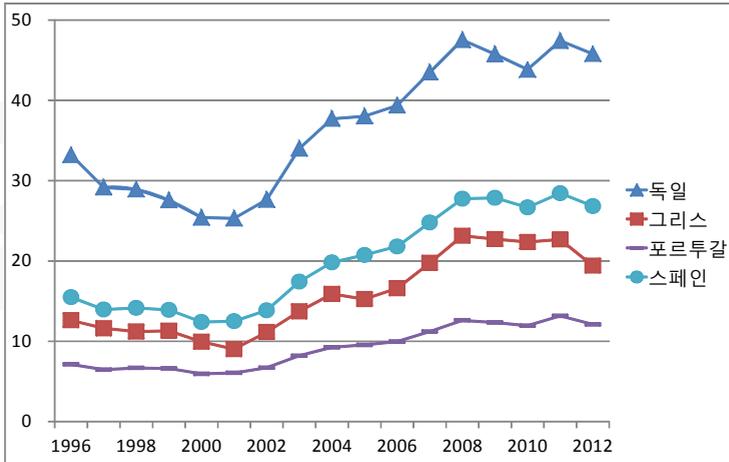
서는 빠르게 증가한 반면, 독일에서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유로존 주변부의 상대적 고임금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가 이들 나라에서 국제수지 적자와 재정적자를 누적시켜 위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라파비차스는 유로존 중심부인 독일의 강화된 국제경쟁력은 독일 국내에서 자본의 노동에 대한 착취 강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즉, 유로존에서 독일의 ‘근린국핍화(beggar-thy-neighbor)’의 전제는 ‘자기국핍화(beggar-thyself)’였다는 것이다.<sup>15)</sup> 즉, 지난 20년 동안 유로존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경제적인 독일이 명목노동비용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노동자들은 산출에서 체계적으로 더 적은 몫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또 이처럼

정치경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독일이

15) 1996~2008년 독일의 수출은 유로존 회원국들보다 2배나 빠르게 증가했던 반면, 독일 민간가계의 국내수요는 유로존 회원국들에 비해 매년 1.5%씩 감소했다(Young and Semmler, 2011: 10).

<그림 1-7> 제조업 부문 시간당 피고용자 총비용(1996~2012년, 미국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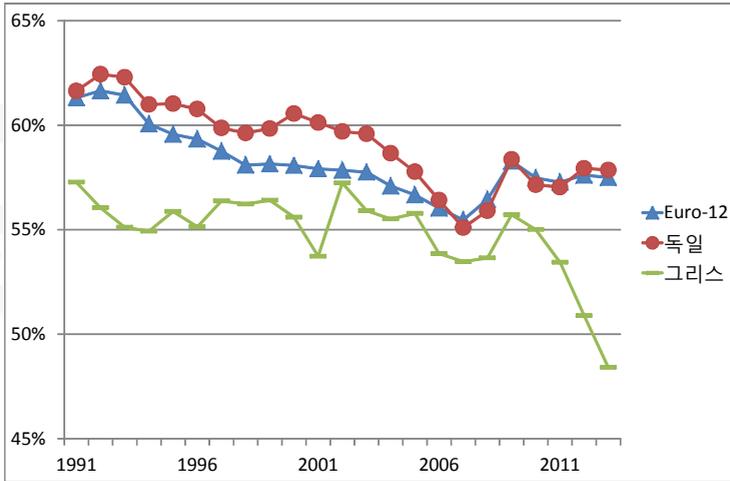
자료: ILO, *Key Indicators of the Labour Market*, 8th Edition.

독일 노동자들의 명목 보수가 지난 20년 동안 정체한 결과 주변부 나라들은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Lapavitsas, 2012: 4~5; Meadway, 2012: 152).

그런데 이와 같은 라파비차스의 경쟁력 약화 가설은 쌍둥이 적자 가설과 마찬가지로 사실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그림 1-7> 과 <그림 1-8>에서 보듯이 독일의 시간당 임금과 GDP 대비 임금 비율은 유로존 주변부 나라들의 그것에 비해 훨씬 높았다. 따라서 유로존 주변부가 상대적 고임금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로존 중심부 국가들의 수출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화된 주된 이유는 비유로화들에 대한 유로화의 가치가 유로화가 대체한 유로존 중심부 국가들의 이전의 국민적 통화의 가치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유로존 출범 이후 상대적으로 물가가 안정된 독일에서 실질환율은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그리스에 비해 20% 이상 낮았다(Guttman and Plihon, 2013: 371).<sup>16)</sup> 이로 인해 유로존 중심부 국가들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2000년 3.7%

〈그림 1-8〉 GDP에 대한 임금의 비율(1991~2013년)



자료: AMECO.

에서 2007년 4.7%로 증가했다. 반면 주변부 국가들의 수출품은 가격경쟁력 면에서 낮아졌고, 이에 따라 이들의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2000년 4.6%에서 2007년 8.5%로 증가했다(Blankenburg et al., 2013: 467).<sup>17)</sup>

또 유로존 위기 이전 이들 유로존 주변부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중심부 나라들보다 오히려 높았는데, 이 역시 유로존 주변부 국가들의 경쟁력 약화가 이들 나라의 위기의 원인이 되었다는 라파비차스의 주장과 상치된다. 실제로 1995~2008년 그리스, 스페인 및 아일랜드의 실질 GDP는 각각 61%,

16) 하지만 영(B. Young)과 세믈러(W. Semmler)는 독일 제품은 전통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실질환율 저하가 독일의 수출 증가의 주요인이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유로존 출범 이후 독일의 수출 급증은 유로존 주변부 국가들에 대한 수출보다는 동유럽과 아시아에서 교역국들의 급속한 성장의 결과라고 주장한다(Young and Semmler, 2011: 19).

17) 2000년대 그리스의 경쟁력 약화 중 36%가 유로의 평가절상 때문이었다(Karamessini, 2012).

56%, 124.1% 증가했음에 반해, 독일, 이탈리아 및 프랑스는 각각 19.5%, 17.8%, 30.8%밖에 증가하지 않았다(Milios, 2013: 190; Young and Semmler, 2011: 13). 지난 2000년대 독일에서 고용은 136만 명 감소했으며, 자본스톡 증가율도 EU 국가 중 가장 낮았다(Bellofiore et al., 2011: 135). 반면 그리스의 경우 1994~2007년 GDP는 연평균 3.7% 증가했는데, 이는 유로존에서 아일랜드 다음으로 높은 성장률이었으며, 1995~2009년 이윤마진을 역시 EU 15개국 중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Karamessini, 2012).<sup>18)</sup>

유로존 주변부 국가들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증가한 것은 이들 국가들의 방만한 차입이나 경쟁력 약화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 전망을 갖는 나라들로의 외국자본 유입과 국내 신용이 크게 증가했고, 이것이 다시 국내 수요를 증가시켜, 무역수지 적자 증가와 실질환율 상승 압력을 낳았기 때문이다(Milios, 2013: 193).<sup>19)</sup>

### 3) 금융화

대다수 케인스주의 경제학자들은 유로존 위기의 주된 원인을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금융화와 불평등의 심화에서 찾는다. 이들은 유로존 위기는 신자유주의가 위기의 뿌리에 있다는 의미에서 신자유주의의 위기라고 규정한다(Stockhammer, 2014). 즉, 유로존 위기는 신자유주의의 주요 정책을 수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위기가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위기였다(Laskos 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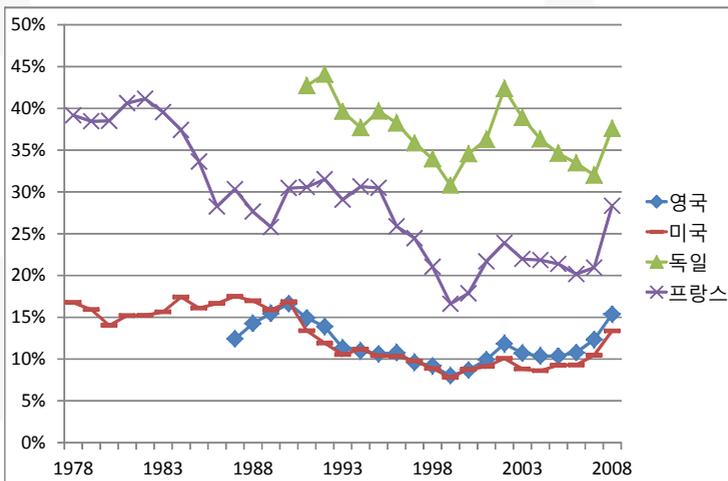
18) <그림 1-8>에서 보듯이 그리스에서 GDP 대비 임금 비율은 EU 최하 수준이었다.

19) 반면, 카르케디(G. Carchedi)는 유로존 주변부 국가들에서 위기 전 무역수지 적자의 증가를 유로 탓으로 돌리기는 힘들다면서, 유로존 주변부 국가들의 무역수지 적자는 중심부 국가, 즉 독일에 비해 주변부 국가들의 후진적 기술수준 및 낮은 생산성에 주로 비롯된 것이며, 이는 다시 이들 나라에서 자본가들의 기술혁신의 부진에 주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Carchedi, 2012: 307).

Tsakalotos, 2013: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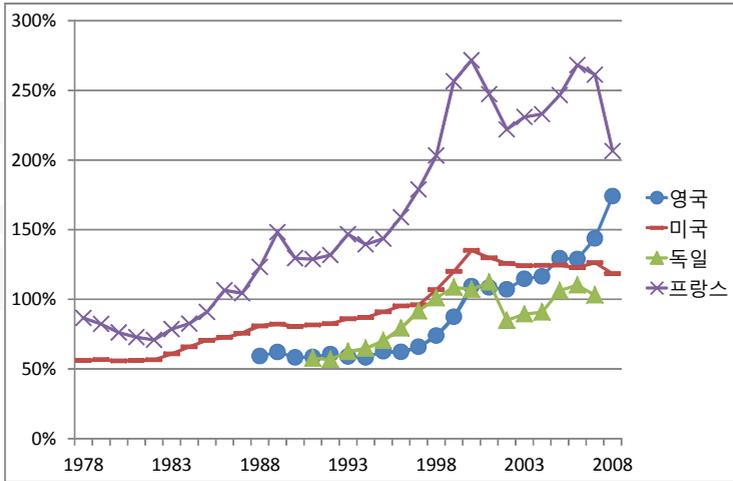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대두와 함께 미국식 글로벌 금융이 출현하자 유럽의 정치지도자들은 유럽의 금융체제를 이에 통합시키려 노력했다. 예컨대 미국 사회의 급증하는 부채를 팽창적 화폐정책으로 뒷받침했던 FRB의 그린스펀의 정책을 유럽의 노조지도자들조차 모델로 간주했다. 그들은 ECB와 대조적으로 미국 FRB는 화폐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다(Streeck, 2011: 18). 이로부터 유럽에서도 전통적인 은행신용, 즉 간접금융으로부터 미국식 직접금융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EU에서 금융시장이 통합되고 유럽적 규모에서 기업통제시장이 출현하면서 유럽대륙 경제에서 금융화가 촉진되었다. 지난 세기말 금융 주도 축적은 금융세계화의 중심인 미국이나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대륙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도 지배적인 성장모델이 되었다(Overbeek, 2012a: 35~37). 1980년대 이후 유럽에서 금융화의 진전은 <그림 1-9>, <그림 1-10>

<그림 1-9> 비금융법인의 부채 총액 대비 대출 비중(1978~2008년)



자료: Lapavistas and Powell(2013: 8, Figure 1).

〈그림 1-10〉 비금융법인의 고정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율(1978~2008년)



자료: Lapavistas and Powell(2013: 8, Figure 2).

에서 보듯이 비법인기업의 총부채 중 대출 비중의 감소(이는 간접금융의 비중 감소) 및 고정자산에 대한 금융자산의 비율 증가에서 확인된다.

EU 및 유로화 출범에 따라 유럽 지역의 금융개혁 및 금융화가 크게 진전되었다. 유럽에서 금융화는 유럽이 심각한 경쟁력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잘못된 믿음하에 매우 급속하게, 또 경제적 안정성이나 사회정의를 무시하면서 추진되었다. EU는 글로벌 금융구조의 진화를 수수방관했으며, 그 결과 유럽의 은행과 기관투자자들은 2007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쉽사리 노출되었다(Grahl, 2011: 31).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 중심부 국가들은 그리스와 같은 유로존 주변부 국가들과의 교역에서 획득한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다시 주변부 국가들로 환류시켜 이들 나라들에서 금융화를 부추겼다.<sup>20)</sup> EU와

20) 이 점에서 채무위기에서 ‘책임’은 채무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즉, 이번 유로존 국가부채위기의 ‘책임’은 독일과 같은 경상수지 흑자국이 축적한 대량의 민간자산을 다시 적자국의 국채에 투자한 것에도 있

EMU가 출범하면서 유럽 지역 상이한 사회구성체들 간의 국가 고유 리스크 평가가 수렴하고 금리 스프레드가 축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유로존 주변부 국가들로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었다(Milios, 2013: 192~193). 유로존 주변부 국가들에서는 실질금리가 낮아지면서 대출을 받아 주택과 내구재를 구매하는 것이 크게 늘어났으며, 그 결과 주택과 자산가격이 크게 상승했다.<sup>21)</sup> 게다가 신자유주의 정책 전환에 따른 금융규제 완화는 이와 같은 주택 거품을 더욱 팽창시켰다. 하지만 당시 주류 경제학자들과 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은 이러한 현상을 유로와 금융자유화의 혜택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Boyer, 2013: 538).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발발 전까지 유럽 정치·경제에서 금융의 지배력은 엄청나게 증대했다. 2002~2007년 GDP에 대한 금융자산의 비중은 EU에서는 600%,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700%, 아일랜드에서는 900% 증가했다(Overbeek, 2012b: 228). 유럽에서 금융자본이 이윤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 제조업 기업의 이익 감소를 대가로 한 것이었다.

유로존 주변부 국가들에서는 스페인과 아일랜드에서 보듯이 민간부채가 공공부채로 전환되면서 국가부채위기가 발발했다. 2008년 이후 유럽 국가는 은행 손실을 공공부채로 전환하면서 효과적으로 사회화했다. 이로부터 규제완화에서 비롯된 은행채무위기는 형태로 표출되었던 유로존 위기는 이들 은행을 국가가 구제하면서 국가부채위기로 전환되었다(Cafruny and Talani, 2013: 23).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및 스페인 은행들의 총자산 중 정부채권 비율은 2000년대 초 11%에서 2008년 4%로 낮아졌지

다(Altwater, 2012: 276).

21) 유로존에서는 단일통화정책으로 명목금리는 동일하다 할지라도,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 독일과 같은 중심부에서는 실질금리는 경제성장률에 비해 높아서 긴축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물가상승 압력이 있는 그리스와 같은 주변부에서는 실질금리는 경제성장률에 비해 낮아서 확장적 효과가 발생했다(Guttman and Plihon, 2013: 367).

만, 2010년 말 다시 6%로 증가했다(Lapavitsas, 2012: 194, Fig 10). 유로존 위기 이후 유럽 은행들은 이전에 비해 더 국민적으로 되었는데, 이는 이들이 자신들의 정부에 대해 대출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Lapavitsas, 2013: 302).

2013a/b

유로존 주변부 국가들이 발행한 국채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주택담보부채권(MBS)과 유사한 역할을 했다(Bellofiore, 2013: 505). 2009년 말 유럽 은행들은 약 1조 달러의 악성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그 중 2/3는 독일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었다. 유로존 주변부 나라들의 국가부채의 채권자들은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중심부 은행들이다. 2009년 말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및 스페인에 대한 프랑스와 독일 은행들의 대출총액은 이들 나라 GDP의 각각 16%, 15%에 달했으며, 특히 그리스에 대한 프랑스 은행과 독일 은행의 대출은 각각 1,380억 달러, 840억 달러나 되었다(Cafruny and Talani, 2013: 24).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독일 은행의 부채 비율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았다(Cafruni and Talani, 2013: 22).

유럽 금융시장은 12개 정도의 거대 금융회사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들은 유럽 국가부채위기를 심화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Overbeek, 2012b: 232). 유럽의 금융자본은 국민적 정부들이 자신들을 구제하면서 과도한 부채를 지게 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품고 있다. 2008년 이후 민주적 자본주의에서 분배투쟁은 국제금융자본과 국민국가들 간의 갈등으로 전환되었다. 최근까지 자신들을 구제해달라며 국민국가를 협박했던 금융기관들이 바로 그 국가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예컨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촉발시키는 데 주요한 방아쇠 역할을 했던 맨해튼에 본부를 두고 있는 신용평가기관들은 이제는 그때 자신들과 자본주의 경제 전체를 구제하기 위해 엄청난 부채를 졌던 국가들이 발행한 채권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Streeck, 2011: 20, 26).

금융화가 유로존 위기를 악화시킨 요인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유로존

위기의 원인이 금융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위기에 대한 설명으로서 금융화론은 생산영역에서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금융화는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선행한 이윤율 저하와 과잉축적 경향에 대한 자본의 대응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금융화가 이번 유로존 위기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유로존 위기 발발 전 그리스에서 금융화의 진전 정도는 중심부보다 훨씬 덜했다. 라파비차스가 금융화의 주요 지표로 간주하는 노동자들의 민간부채는 그리스에서는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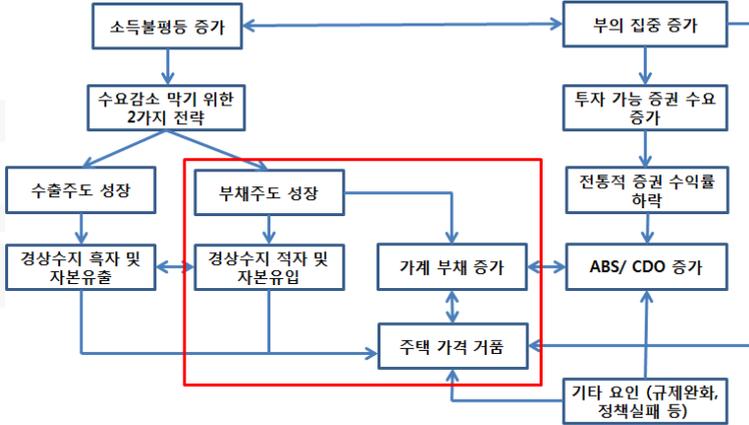
#### 4) 불평등 심화

신자유주의하에서 심화된 부익부 빈익빈의 불평등 역시 총수요의 위축을 가져와 위기의 배경을 조성했다(Goda et al., 2014). 케인스주의 경제학의 관점에서 불평등과 부의 집중이 위기를 촉발하는 메커니즘은 <그림 1-11>과 같이 도시된다.

앞의 <그림 1-8>에서 보듯이 유로 12개국에서 GDP에 대한 임금의 비율, 임금몫은 1991년 61.3%에서 2007년 55.5%로 감소했다. 2008년 위기 이후 다른 유로존 나라들에서는 임금몫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았지만, 구제 금융 조건으로 긴축이 강제된 그리스의 경우 계속 저하하고 있다. 또 1980년대 이후 분배의 불평등의 심화는 영미식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유럽 자본주의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12>에서 보듯이 피케티(T. Piketty)가 계산한 총소득에서 상위 10% 소득 비중은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본거지인 미국에서만 아니라 ‘복지국가’ 유럽에서도 30%에서 35%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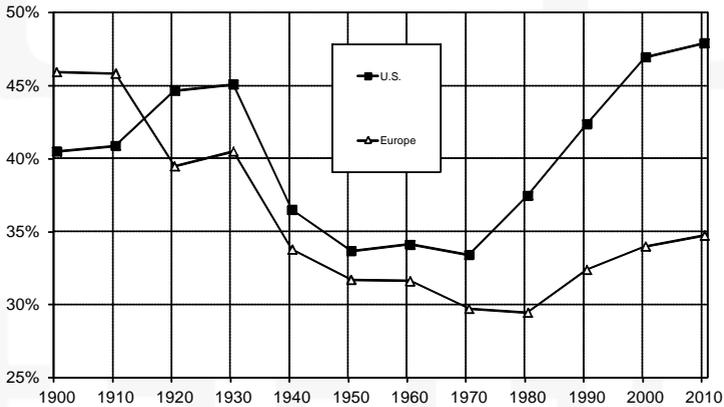
분배의 불평등이 수요를 위축시켜 위기를 심화시키는 것은 분명하다. 그

〈그림 1-11〉 불평등과 위기의 인과관계



주: 박스 안의 항목들은 위기의 징후를 가리킨다.  
 자료: Goda et al.(2014: Figure 3)

〈그림 1-12〉 미국과 유럽에서 총소득에서 상위 10%의 소득 비중(1900~2010년)



자료: Piketty(2014: 324, Figure 9.8)

러나 분배의 불평등의 심화는 기본적으로 자본의 노동착취 강화가 야기한 것이고, 이와 같은 착취 강화는 자본 수익성의 악화에 대한 자본의 대응의 결과임을 감안한다면, 분배의 불평등 심화는 위기의 결과 혹은 악화 요인일 뿐이다.

### 5) 제도적 부정합

일부 주류 경제학자들은 유로존은 먼델(R. Mundell)이 제안한 최적통화지역(optimal currency areas: OCA)의 제도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실패할 운명이었다고 주장한다. 즉, 최적통화지역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지역 내 자본과 노동의 이동성, (2) 가격과 임금의 유연성, (3) 불리한 영향을 받는 지역, 국가 혹은 부문 간의 자동적인 재정이전 메커니즘, (4) 경기순환의 동조화 등이 필요한데, 이 중 어느 것도 유로존에서는 결여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실패할 운명이었다는 것이다(Boyer, 2013: 535; Guttman and Plihon, 2013: 362~364).

토포로브스키(J. Toporowski)는 유로존 위기의 원인을 유로존 자체의 부적절한 제도적 디자인에서 찾는다. 토포로브스키에 따르면 유로존의 부적절한 제도적 디자인은 중앙은행은 있지만 중앙정부가 없고, 국민적 정부는 있지만 국민적 중앙은행은 없고, 은행은 있지만 최종대부자는 없는 것으로 요약된다(Toporowski, 2013: 572). 어떤 화폐도 완전한 주권국가라는 제도가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없다는 점을 이번 유로존 위기가 잘 보여준다는 것이다. 또 유로존 회원국이 되는 것은 통화정책과 환율정책이라는 두 개의 정책수단의 상실을 의미했고, 이는 혁신적 산업정책이나 사회적 협약 혹은 소득정책 같은 것으로 보충되어야 했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위기가 발발했다는 것이다(Boyer, 2013: 562).

주류 경제학자들은 유로존의 출범에 따라 대내적 환율변동 요인이 제거되고 국민적 재정정책에서 ‘프리라이더’도 금지되어 위기의 원천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관리 오류는 유로존 내에서 금융불안정의 단지 한 요인일 뿐이었다. 민간부문 특히 은행은 부동산 투자를 부추긴다거나 증권화를 추진한다거나 부채 비율을 고도로 높이는 등 매우 위험한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전형적인 ‘민스키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Boyer, 2013: 546).

프리라이더(free rider, 무임승차자)

토포로브스키는 유로존의 제도적 부정합이 유로존 위기에 대한 대응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유로존은 회원국들에게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60%를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2011년 유로존 지역에서 이 비율은 평균 90%에 달했고, 독일조차 이 비율은 82~88% 수준이었다. 따라서 유로존 중심부 국가들조차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60% 이하가 될 때까지 재정흑자를 확보하도록 강제되었는데, 이와 같은 재정흑자가 무역흑자나 민간부문의 투자 증가에 의해 상쇄됨이 없이 GDP 감소를 야기하여 유로존 전체의 경제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부채 비율이 상한을 상회하고 경제는 불황인데 국가부채를 감축하려 한 시도가 GDP 감소를 야기하여 국가부채를 오히려 더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Toporowski, 2013: 572~573).

유로존의 제도적 부정합은 위기의 주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유로존의 제도적 부정합 및 이에 대한 대안 모색은 제도주의적 관점보다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자본의 국제화와 국가화의 변증법, 혹은 다수국가의 불균등결합발전 및 지정학적 경쟁의 필연성이라는 관점에서 더 잘 설명될 수 있다.<sup>2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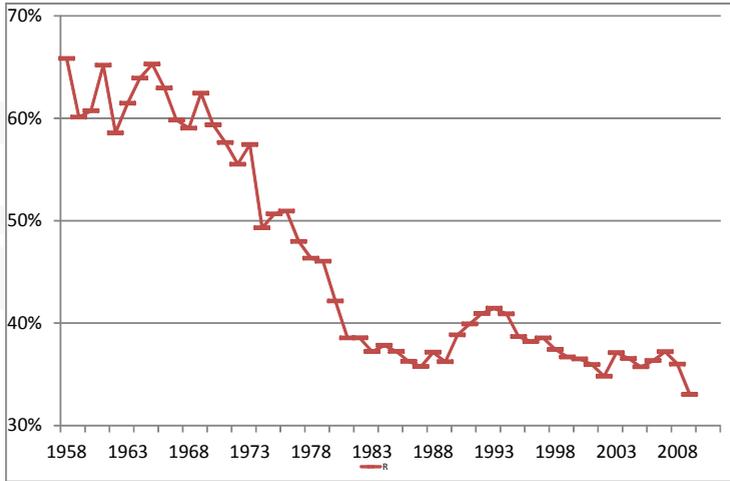
22) 자본주의에서 다수국가의 불균등결합발전 및 지정학적 경쟁에 대한 최근의 마르크스주의적 연구로는 아니바스(Anievas ed., 2010)를 참조할 수 있다.

#### 4. 이윤을 저하 위기와 세계시장공황으로서 유로존 위기

유로존 위기, 그리스 위기는 국지적 위기가 아니라 세계시장공황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007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발하지 않았다면 2010년 그리스 위기, 따라서 유로존 위기도 발발하지 않았을 것이다(Karamessini, 2012).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벨로피오르(R. Bellofiore)처럼 유로존 위기는 내생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도래한 것이라고 보는 것도 옳지 않다(Bellofiore, 2013: 506). 유로존 위기는 기본적으로 유로존 국가 경제의 생산영역에서 진행된 자본의 과잉축적 위기이며 이윤을 저하 위기의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Michael-Matsas, 2010: 492~493). 즉, 유로존 위기의 배후에는 이윤을 저하가 있었다. 이 절에서는 그리스의 위기를 중심으로 이윤을 저하 위기론으로 유로존 위기를 설명해 보겠다.

그리스의 경우 위기 발발 전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서 비롯된 이윤율의 저하가 진행되었다. 1980년대 초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는 케인스주의가 포기되고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지만, 그리스에서는 오히려 이 시기부터 케인스주의가 채택되기 시작했다. 그리스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은 1996~2004년 PASOK의 시미티스(C. Simitis) 수상 주도하에 추진되었다(Kouvelakis, 2011: 21; Mavroudeas, 2013: 301). 그리스에서 신자유주의는 지체되었던 만큼 급격히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EU 및 EMU 가입은 결정적 역할을 했다. 2001년 EMU에 그리스가 가입하면서 준수해야 했던 SGP는 긴축정책을 강제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이후 그리스의 착취율은 크게 상승했으며, 이는 임금상승이 생산성 상승을 한참 밀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Mavroudeas, 2013: 308). 게다가 이 시기 그리스 자본가들은 신용과 가공자본 팽창을 활용한 금융화를 적극 추진했다. 유로의 낮은 금리가 저렴한 신용을 부추겼다. 민간소비도 은행이 제공하는 저렴한 개인 신용에 의

〈그림 1-13〉 그리스 비농업부문의 이윤율(1958~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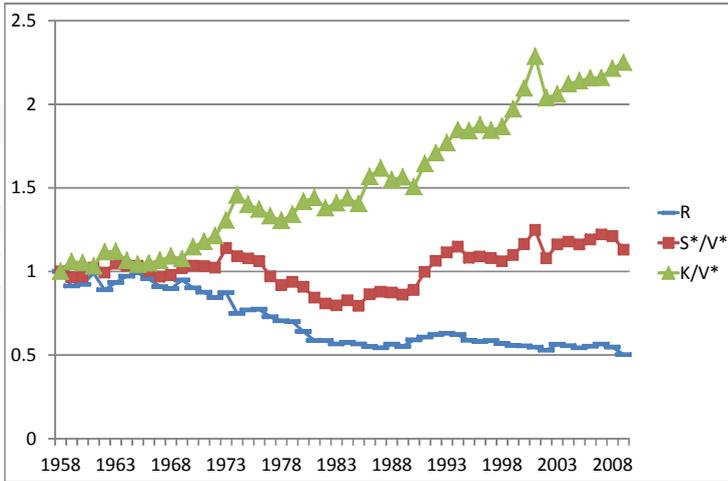


자료: Maniatis and Passas(2013), Figure 10.

해 증가했다. 이런 지속될 수 없는 정세적 요인들이 EU 평균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인위적인 호황을 가져왔다. 이런 인위적 호황은 PASOK과 ND 정부들의 공공지출 증가에 의해 더욱 부풀려졌으며 이는 다시 공공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공공부채 증가는 대부분 해외차입 증가로 조달되었는데, 이는 해외차입이 저렴했을 뿐만 아니라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국내 신용 증가를 억제했기 때문이다(Mavroudeas, 2013: 308).

그러나 2007~2008년 글로벌 위기는 이러한 행복감에 종지부를 찍었다. 인위적 호황이 붕괴했고, 이윤율 저하 위기가 시작되었다. <그림 1-13>에서 보듯이 그리스 비농업부문의 이윤율은 1960년대 이후 장기 저하 경향을 보였으며, 198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 전환과 함께 일시적으로 반전되었지만 1993년 이후 이와 같은 반전 추세가 중지되고 다시 저하한 끝에 2009년 위기가 발발했다(Maniatis and Passas, 2013).<sup>23)</sup> 채무에 기초한 개인소비와 적자재정으로부터 제공된 총수요 자극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제거

〈그림 1-14〉 그리스 비농업부문 이윤율의 결정요인(1958~2009년)



주: 1) R = 이윤율, S\*/V\* = 잉여가치율, K/V\* = 자본의 유기적 구성

2)  $R = S^*/K = (S^*/V^*)/(K/V^*)$

자료: Maniatis and Passas(2013), Figure 3, 8, 10에서 필자 작성.

되면서 이윤율 저하 위기가 폭발했다(Maniatis and Passas, 2013). 금융화는 위기의 도래를 지연시켰지만 과잉축적을 악화시켰다. 생산자본의 수익성이 저하하자 위기가 폭발했다. 금융화는 수익성 위기의 폭발을 잠시 지연시켰지만 결국 더 큰 규모로 폭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Mavroudeas, 2013: 308).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고임금으로 인해 이와 같은 이윤율 저하 위기가 폭발한 것은 아니다. 이 시기 노동소득분배율은 계속 하락했으며 명목임금 상승률은 소비자 가격 상승률에 미치지 못했고, 실질 단위노동비용도 저하했다. <그림 1-14>에서 보듯이, 이 시기 이윤율의 저하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K/V\*)의 고도화에 기인한 것이었다. 즉, 착취율(S\*/V\*) 상승으로 인한

23) 최근 출피디스(L. Tsoulfidis)와 차리키(P. Tsaliki)도 그리스에서 이윤율의 장기적 저하 추세 및 2007년 이후 이윤율의 급락을 확인했다(Tsoulfidis and Tsaliki, 2014: 9, Figure 6).

이윤율 상승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가 이윤율 저하를 초래했다.

## 5. 유로존 위기에 대한 국가 대응과 신자유주의의 재확립

유로존 위기는 임시변통식의 긴급 대출과 채권 매입, 긴축 프로그램을 통해 위급 상황을 넘겼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 유럽 국가들의 매우 경쟁적이고 군사화된 대응과 달리 이번 유로존 위기의 경우 재활성화된 IMF의 지원하에 잘 조율된 경기부양책 및 확장적 통화정책과 유럽, 북미 및 아시아 정부들에 의한 유럽 은행과 전략산업들에 대한 상당한 원조가 특징적이었다(Nousios and Tsolakis, 2012: 246). 2010년 5월 유로존 국가들과 IMF는 그리스에 IMF의 구조조정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1,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데 합의했다. 2010년 유로존 구제금융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유럽금융안정화기구(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EFSF)가 설립되었으며, 이는 다시 2013년 상설적인 유럽안정화기구(European Stability Mechanism: ESM)로 대체되었다.<sup>24)</sup> 유로존 위기 국면에서 ECB는 회원국 정부들의 차입 수요에 부응할 수 없었는데, 이는 회원국 정부에 대한 ECB의 직접 대부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ECB는 증권시장 프로그램(Securities Market Programme)을 도입하여 2차 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국가부채위기에 대응했다. 2011년 3월 유럽정상회의(European Council)는 유로플러스조약(Euro-Plus Pact)에 서명하여 EU 집행위원회에 회원국들의 경제 정책에 대한 증대된 통제권을 부여했다. 2011년 가을 ECB는 3년간 저금리

24) 유로존 위기에 대한 IMF-ECB-EC의 구제금융 내역에 대해서는 유승경(2012), 박상현(2012), 장세진(2013) 참조.

장기대출 프로그램(Long Term Refinancing Operation: LTRO)을 통해 은행들에게 사실상 무이자 유동성을 제공하여 이것으로 투기적 공격을 받고 있는 국가들의 국채를 매입하게 했다. LTRO는 미국 FRB의 양적완화와 유사한 정책으로서 사실상 최종대부자 역할을 담당했다. LTRO는 ECB가 은행들에게 저리의 자금이 넘치게 했는데, 스페인과 이탈리아 은행들은 이를 이용하여 고수익 캐리트레이드에 뛰어들었다. 2011년 12월과 2012년 2월 사이 스페인과 이탈리아 은행들은 각각 670억 유로, 540억 유로의 국채를 매입했다(Cafruny and Talani, 2013: 25~26). LTRO는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유로존이 총체적으로 붕괴하는 것을 막아주었다.

최근 유로존 위기는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 같다. 하지만 유로존의 구조적 불균형과 모순은 여전히 남아 있다(Cafruny and Ryner, 2012: 44). 오히려 유로존 위기 이후에도 정책 지향에서 유로존 이전과 상당한 연속성이 확인된다. 유로존 위기는 유럽에서 신자유주의를 재확립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되었다(Sotiropoulos, Milios and Lapatsioras, 2013: 206). 유럽의 자본과 국가는 이번 위기를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역사적 기회로 활용했다. 신자유주의는 위기의 조건에서 노동의 규율을 강화하고 자본축적을 재개하기 위해 다시 강화되었다(Nousios and Tsolakis, 2012: 256).<sup>25)</sup> 예컨대 그리스에서 국가채무위기는 그리스의 기존의 고용모델을 해체하고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Karamessini, 2012).<sup>26)</sup> 이로부터 유로존 지역에서 신자유주의는 다시 부활·강화되고 있다(Laskos and Tsakalotos,

25) 앞의 <그림 1-5>는 2008년 이후 그리스와 스페인에서 단위노동비용의 급감은 유로존 위기 이후 진행된 ‘대내적 평가절하’, 즉 임금 삭감이 얼마나 급격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26) 유로존 위기 발발 직전 해인 2007년 그리스에서 파트타임 고용과 유연노동시간 계약 비율은 EU 15개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피고용자 중 한시계약 비율은 EU 27개국 평균 이하였다(Karamessini, 2012).

2013: 90; Sotiropoulos, Milios and Lapatsioras, 2013: 199; Milios, 2013: 197).

유로존 위기는 유럽 금융자본에게는 황금의 기회였다. 유로존 위기 전에도 유로존 정부들은 자금 수요를 전적으로 민간금융자본에 의존했는데, 유럽의 민간금융자본은 2009년 경기부양책을 이용하여 ECB로부터 거의 제로 금리로 자금을 차입하여 연 3~4%의 이자를 지불하는 국채를 구입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Aglietta, 2012:17; Toussaint, 2013). 유럽의 초민족기업들은 이번 위기에서 큰 타격을 받지 않았으며, 약간의 손실도 중국과 같은 신흥시장의 수요 증가로 보상받을 수 있었다. 특히 초민족 산업자본은 유로존 위기 속에서도 유로존 외부로의 수출과 생산의 글로벌 아웃소싱을 확대했다. 이것은 국민적 수준에서는 성장의 저하를 가져왔지만 초민족기업들에게는 지속적인 이윤을 보장했다. 예컨대 유니레버는 2012년 유로존 수요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신흥시장에서 매출의 50% 이상을 올려 수익이 증가했다(Apeldoorn, 2014: 200~201).

또 유로존 위기 국면에서 남부 유럽 국가들은 부채 상환을 위해 자국의 상당수 공기업과 부동산을 헐값으로 대량 매각했다.<sup>27)</sup> 글로벌 경제위기 발발 이후 EU는 유럽 주변부를 채무 함정에 밀어넣는 ‘내부적 제3세계화’ 과정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유럽의 주변부 국가들은 경제주권을 상실하고 있다(Mavroudeas, 2013: 310). 유로존 위기 이후 유럽, 특히 주변부 국가들에서는 금융자본의 이익에 철저히 봉사하는 IMF-ECB-EC의 기술관료(‘테크노크라트’)의 지배가 강화되고 있다(Toussaint, 2013). 유로존 위기는 자본주의 관계의 헤게모니적 이데올로기 형태로서 신자유주의의 위기인 것을 넘어 자본주의 생산시스템 자체의 위기였다.

2010년 5월 ‘트로이카’, 즉 IMF-ECB-EC의 테크노크라트들이 그리스에

27) 공공자산의 사유화는 다름 아닌 수탈과정으로서 축적을 추진하고 그리스 국민을 긴 축으로 몰아넣기 위한 것이다(Altwater, 2012: 274).

구제금융 제공 대가로 강요한 구조조정안에는 공공부문 임금 25% 인하, 공공지출 대폭 삭감, 역진적 세금 인상, 대규모 사유화 등이 포함되었다(Aglietta, 2012: 26). 유로존 위기에 대한 유럽 지배계급의 대응의 본질은 위기에 대한 전략이라기보다 노동의 저항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이다(Sotiropoulos, Milios and Lapatsioras, 2013: 201). 유로존 위기는 사회에 대한 시장규율을 강화하고 노동과 자연에 대한 착취 강화를 초래하고 있다(van der Pijl, 2012). 유로존 위기에 대해 독일이 제안한 재정협약(fiscal compact) 역시 케인스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경쟁력 논리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Cafruny and Talani, 2013: 28).

유로존 위기에서 신자유주의 정권들이 채권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강제하고 있는 긴축내핍정책은 생활조건의 악화, 실업 증가, 인구 다수의 빈곤화를 초래하여 총수요 위축, 불황 심화 및 부채 부담 증가, 긴축 강화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Callinicos, 2012). 2010~2011년 그리스에는 GDP 대비 10.5%의 재정지출 삭감이 강요되었으며, 2009~2010년 그리스의 실질 GDP는 4% 이상 감소했다(Altwater, 2012: 277). 유로존 위기 이후 유럽 여러 나라들에 구제금융과 긴축정책을 통한 규율적 신자유주의가 강제되면서 정치에서 권위주의 경향도 강화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제금융자본의 글로벌 과두제를 위한 채무정수기관으로 전락했다. 거리에서의 폭동과 민중 봉기는 시장력이 없는 대중에게 남아 있는 최후의 정치적 표현이다(Streeck, 2011: 26~28).

EU의 위기관리는 긴축 형태의 신자유주의를 강화하면서 자본 간 경쟁, 국가 간 경쟁을 격화시키고 있다. 유로존 위기 동안 분명하게 드러난 독일의 신중상주의 정책, 핵과 군수산업 영역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산업 프로젝트의 포기, 유럽의 군산복합체의 미국 기업들로의 점증하는 예측, 유럽 에너지 정책의 국민적 에너지 대기업에 대한 완전한 종속 등은 그 예들이다. 유로존

위기 국면에서 유럽에서 미국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현재 유럽은 1991년 이후 및 심지어 1960년대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분열되고 예측되어 있다. 신자유주의의 기초 위에서 현재 유로존 위기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통합과 지역적 자율성을 위한 처방이 되기는커녕 통합을 방해하고 아래로부터의 정치적 동원과 지정학적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다(Cafruny and Talani, 2013: 30~32).

## 6. 결론을 대신하여: 유로존 위기와 좌파의 대안

유로존 위기 이후 일부 케인스주의 개혁주의 경제학자들은 유럽 재정통합(fiscal union)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CB가 국가부채를 매입하거나 유로본드를 발행함으로써 국가부채를 유럽화하고 유럽적 수준의 재정 및 거시경제 관리감독기구를 설치하자는 제안(Overbeek, 2012b: 235)은 유럽 재정통합의 약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대안들은 신자유주의 문제설정에 갇혀 있다. 예컨대 유럽 재정통합은 재정적 정통성과 대내적 평가절하를 조건으로 해서만 제한된 재정이전이 이루어지는 매우 강압적이고 비민주적인 SGP에 근거한 구조조정체제를 제도화할 것이다(Cafruny and Ryner, 2012: 45). 벨로피오르는 ‘구조적 케인스주의’ 입장에서 투자의 사회화, 고용의 사회화, 은행의 사회화를 유로존 위기의 대안으로 제안한다(Bellofiore et al., 2011: 144; Bellofiore, 2013: 510). 알트바터(E. Altwater)는 ‘유럽적 국가성(European statehood)’의 강화, 즉 ‘재정이전 연합’을 통한 진정한 ‘사회적 유럽’의 건설을 대안으로 제시한다(Altwater, 2012: 284~285). 한편 유럽노동조합연맹(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 ETUC) 사무총장 몽크스(J. Monks)는 “투기자들로부터 자본주의를 구하자”면서 노동조합이 기업 및 정부와 협력하

여 금융시장의 자기파괴적 방종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Nousios and Tsolakis, 2012: 249). 그런데 ETUC가 ‘글로벌 유럽’과 같은 무역자유화를 지지하는 것은 지역적 계급타협의 일부로서 세계 다른 지역의 노동자들을 희생으로 하여 유럽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Bieler, 2013: 181).

케인스주의자들은 대체로 이번 유로존 위기의 배후에 신자유주의 시기 심화된 불평등이 놓여 있다고 보기 때문에,<sup>28)</sup>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안한다. 스톡하머(E. Stockhammer)는 평등과 무역균형을 고려할 수 있는 초민족적으로 조절되는 임금교섭체제를 도입하여 단체교섭구조를 강화하고 유럽 수준의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Stockhammer, 2014). 위송(M. Husson)은 유로존 위기는 불평등의 심화에 따른 임금몫의 감소에서 기인했다고 하면서 조세개혁을 통한 임금 인상을 대안으로 제시한다(Husson, 2012: 300). 피케티는 ‘글로벌 부유세’를 대안으로 제안한다(Piketty, 2014). 그랄(J. Grahl)과 티그(P. Teague)는 유럽에서 **국민적 사회적 모델**의 붕괴를 대체할 수 있는 EU 수준에서의 사회정책의 부족을 위기의 원인으로 주목하면서 EU 수준의 ‘사회적 통합(social union)’을 대안으로 제시한다(Grahl and Teague, 2013: 678). 토포로브스키는 화폐시장에서 유동성을 유지하고 국내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EU 전체에서 임금 상승을 제안하면서, 이와 함께 재정적자와 공공투자를 유지 혹은 증가시켜 명목 GDP 증가율이 국가부채 증가율보다 높아지게 하면, 마스트리히트 기준을 충족시키면서도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보다 효과적인 경제회복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Toporowski, 2013: 582).

유로존 위기 원인으로 제도적 부정합을 강조하는 이들은 대책에서도 유

국민적인  
사회적 모델의  
국민적·사회  
적 모델의

28) 예컨대 피케티(Piketty, 2014)가 대표적이다.

로를 제대로 된 완전한 통화로 재확립할 것을 제안한다. 즉, 유로를 주권국가로 뒷받침하지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유럽 재정 통합을 이룩하여 주권국가들이 집단적으로 중기적 재정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Aglietta, 2012: 36). 케인스주의자들은 대체로 유로존을 유지하면서 이를 개혁하지는 이른바 ‘좋은 유로(good euro)’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좋은 유로’는 유로존 주변부 국가들 채무의 상당 부분의 탕감과 함께 유럽의 부국에서 빈국으로의 재정이전을 요구한다. 아글리에따(M. Aglietta)에 따르면 그리스에 대한 지원은 더 이상 대출 형식이어서는 안되고, 그리스의 생산적 투자 용도로 지정된 재정이전이 되어야 한다(Aglietta, 2012: 28). 하지만 라파비차스에 따르면 ‘좋은 유로’는 세계화폐로서 유로의 역할과 충돌하는 비현실적 전략이며 결국 ‘유로 없는(no euro)’ 상태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한다(Lapavistas, 2012).

라파비차스는 좌파 케인스주의 입장에서 이른바 ‘아르헨티나 옵션’, 즉 유로존 탈퇴 및 국민적 통화로의 복귀와 경쟁적 평가절하 정책을 대안으로 주장한다(Lapavistas, 2012: 10; Aglietta, 2012: 29~30). 라파비차스에 따르면, ‘나쁜 유로’든 ‘좋은 유로’든 세계화폐를 창출하려는 시도는 유럽 자본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며 이는 중심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주변부에는 심각한 위기를 가져다줄 뿐이다. 따라서 유로존은 해체되어야 하고,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일 뿐인 유럽주의는 거부되어야 한다(Lapavistas, 2012: 294~296). 라파비차스는 유로존 주변부 나라들의 수출과 경제성장이 둔화된 것은 이들이 자신들의 국민적 통화 폐기와 함께 경쟁적 평가절하라는 정책수단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로부터 라파비차스는 유로존을 탈퇴하여 국민적 통화를 부활시키면 경쟁적 평가절하 정책도 다시 쓸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로부터 수출과 경제성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sup>29)</sup> 또 라파비차스는 주변부 국가들은 ‘디폴트’(국가파산

선언)를 독일과 같은 중심부 국가들과의 채무탕감 협상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주변부가 ‘디폴트’를 선언하면 독일을 비롯한 중심부 나라들 주요 은행들의 위기가 재연될 것인데, 이는 독일과 같은 유로존 중심부가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독일은 유로를 유지하기를 원하며 또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부 나라들의 ‘디폴트’가 야기할 손실과 비용을 부담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독일 지배계급은 은행들에게 유동성을 계속 제공하면서도 채무의 비용을 주변부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주변부 국가들에게 긴축을 강요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긴축은 다시 불황을 심화시켜 주변부 국가들의 ‘디폴트’ 위험을 높이고 있다(Lapavistas, 2013b: 389~390). 즉, 유로존 주변부 국가들은 유로존에 잔류하기 위해서는 가혹한 긴축정책을 수용해야만 하는데, 이는 실업을 격화시키고 이들 나라의 생산체제를 약화시킬 것이다. 이로부터 라파비차스는 주변부 국가들은 중심부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고 있는 유로존에 더 이상 잔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Lapavistas, 2013b: 390). 한편 알트바터는 유로존 탈퇴는 정치적 행동의 새로운 공간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즉, 유로존 탈퇴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더 나은 국민적 조건을 조성할 것이며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와의 단절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Altvater, 2012: 284).<sup>30)</sup> 아글리에따는 유로존 탈퇴 옵션이 성공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단시일 내에 충족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Aglietta, 2012: 29): (1) 자본도피를 막기 위한 모든 금융계좌 동결, (2) 초단기간 내 신규화폐 교환, (3) 최소한 1주일 정도의 은행 휴업, (4) 새로운 화폐가 유통되기까지 국가의 초단기 어음 발행, (5) 은행 국유화.

29) 아글리에따에 따르면 드라크마 복귀 후 그리스는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약 70%의 평가절하를 단행해야 한다(Aglietta, 2012: 30).

30) 알트바터는 유럽 좌파가 현존 사회주의 붕괴 시기의 혼돈과도 관련하여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른 EMU의 성립을 수용한 것은 중대한 역사적 과오였다고 지적한다(Altvater, 2012: 285).

하지만 이와 같은 라파비차스의 ‘유로존 탈퇴 → 국민적 통화 복귀 → 평가절하’ 접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유로존 주변부 국가들이 국민적 통화 복귀 후 평가절하를 단행할 경우 이는 한편에서는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것이지만, 유로화 표시 국가부채와 금융기관 부채를 증가시킬 것이며, 이 때문에 위기로부터의 회복에 필요한 민간 및 공공 투자가 억제될 수 있다(Toporowski, 2013: 582). 카르케디(G. Carchedi)도 유로존 탈퇴 후 경쟁적 평가절하를 할 경우 수출기업의 잉여가치의 일부가 수입국가로 이전되며 이윤율은 오히려 더 저하할 것이며, 경쟁적 평가절하를 하는 나라의 진정한 문제인 생산체제의 비효율성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한다(Carchedi, 2012: 308~309).<sup>31)</sup> 위송도 라파비차스가 제안하는 유로존 탈퇴 → 국민적 통화로의 복귀 → 평가절하를 통한 경쟁력 회복 전략은 한 나라가 다른 교역 상대국으로부터 시장을 빼앗는 비협조적 해법일 뿐만 아니라, 환율 조작으로 경쟁력을 회복한다는 생각은 환상이며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계급역학을 이동시킬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도 일면적이라고 비판한다. 유로존 탈퇴는 진보좌파의 대안이라기보다 프랑스의 ‘국민전선’과 같은 극우파의 정강이며 외국인 혐오와 유럽통합을 모든 사회악의 근원으로 저주하는 담론과 결합한 국가사회주의 논리라는 것이다(Husson, 2012: 302~303).

유로존 위기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은 일국적 케인스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국제주의적 혁명적 관점에서 모색될 필요가 있다. 구소련에서 일국 사회주의 노선의 실패의 역사를 언급할 것도 없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에서 대안경제전략의 실패, 프랑스에서 좌파 공동강령의 실패 등의 경험은

31) 하지만 주변부 국가들이 기술혁신을 수행하고 생산체제를 현대화하는 것도 대안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이를 통한 생산성 향상 덕분에 이윤이 일시적으로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는 생산성이 평균 이하인 자본과 국가로부터의 잉여가치 이전에 기인한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와 평균이윤율의 저하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Carchedi, 2012: 309~310).

일국적 케인스주의 접근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모든 종류의 민족주의적 경쟁력 담론과 단절하는 것이 좌파적 대안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Laskos and Tsakalotos, 2013: 143). 이와 관련하여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시 트로츠키가 제안했던 ‘사회주의 유럽합중국’ 슬로건은 현시점에서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Trotsky, 1915). 유럽통합의 역사적 과제는 유럽의 노동자계급에 의해서만, 그리고 사회주의 유럽합중국 건설이라는 혁명적 수단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Michael-Matsas, 2010: 492; Michael-Matsas, 2013: 7). 특수 이익을 넘어 유럽 수준에서 공동이익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초민족적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유럽의 신자유주의는 난공불락이 아니다. 유럽을 보다 공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사회운동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미래는 열려 있으며 초민족적 연대와 공동저항은 전진을 위한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Bieler, 2012: 212~213). 이를 위해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유럽헌법 국민투표 부결운동에서 정점에 달했던 신자유주의 유럽통합에 대한 대중저항의 경험, 유럽사회포럼의 경험이 재평가되어야 하며 (Apeldoorn, 2014: 194), 2010년 9월 29일 ETUC가 조직한 공동 시위, ‘긴축 반대-일자리와 성장 우선’ 등과 같이 신자유주의 EU에 대해 아래서부터 도전하는 초민족적 풀뿌리 사회운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 유럽합중국은 유럽 지역의 중심부와 주변부 노동자 간의 연대와 함께 유럽 전체의 노동운동과 글로벌 주변부의 노동운동 간의 초민족적 노동연대(transnational labor solidarity)를 통해서만 구축될 수 있다(Bieler, 2013: 183). 물론 사회주의 유럽합중국 강령과 함께 이를 재취하기 위한 행동강령 혹은 이행기강령으로 공공부채 감사 및 폐기, 긴축정책 폐기, 대자본 중과세, 은행 수탈 및 공공 금융서비스체제로의 편입, 노동시간 단축, 사유화 중단, 공공서비스 확대 등이 요구되어야 한다(Toussaint, 2013). 예컨대 국제금융자본의 외채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EMU 및 EU와 급진적으로 단절하는 것은 사회적 부의 분배관

계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급진적 단절, 즉 새로운 사회주의적 기초 위에서 사회적 관계의 재조직을 필연적으로 야기할 것이다 (Michael- Matsas, 2010: 502).

이상 필자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유로존 위기의 원인으로 주장되는 그리스 등 일부 남유럽 주변부 국가들의 방만한 재정이나 독일과 같은 유로존 중심부 국가들의 경상수지 흑자의 누적과 주변부 국가들의 경상수지 적자의 심화, 유로존의 중심부와 주변부 간의 경쟁력 격차의 확대, 혹은 금융화 등은 오히려 세계시장공황의 현상들이거나 이미 발발한 공황에 대한 대응일 뿐이다. 생산부문에서 이윤율의 장기적 저하 경향이야말로 유로존 위기의 근본 원인이다. 유로존 위기는 2007~2009년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에 연속된 위기로서, 마르크스적 의미의 세계시장 공황으로서, 한동안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의 무풍지대인 듯 했던 ‘사회적 유럽’도 자본주의 공황에서 자유롭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자본주의에서 위기는 자본주의의 어떤 특정한 유형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일반에 내재적 경향이다. 따라서 유로존 위기에 대한 좌파의 대안은 유로존의 개혁 혹은 탈퇴가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트로츠키가 주장했던 사회주의 유럽합중국 건설과 같은 국제주의적인 글로벌한 접근의 21세기적 버전이 되어야 한다(Michael-Matsas, 2013: 7).

## 참고문헌

- 김수행·장시복 외. 2012. 『정치경제학의 대답: 세계대공황과 자본주의의 미래』. 사회평론.
- 박상현. 2012. 「유로통합의 모순과 재정위기의 정치경제」. 《경제와 사회》, 97호, 155~191쪽.
- 백승욱. 2013. 「EU의 경제위기 대응과 신자유주의적 통합의 심화」. 《마르크스주의 연구》, 10권 4호, 68~104쪽.
- 유승경. 2012. 「유로존 위기의 원인, 전개과정 그리고 전망」. 김수행 장시복 외. 『정치경제학의 대답: 세계대공황과 자본주의의 미래』. 사회평론, 259~287쪽.
- 이정구. 2012. 「유로존 경제위기의 동향과 전망」. 《문화과학》, 70호, 210~235쪽.
- 장세진. 2013. 「유로의 위기와 우리의 대응」.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엮음. 『세계경제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대응』. 한울, 249~278쪽.
- 정성진. 2012. 「마르크스의 세계시장공황론: 세계화와 공황의 연구방법을 위하여」. 《마르크스주의 연구》, 9권 3호, 12~65쪽.
- Aglietta, M. 2012. "The European Vortex." *New Left Review*, No.75, pp.15~36.
- Altvater, E. 2012. "From Subprime Farce to Greek Tragedy: The Crisis Dynamics of Financially Driven Capitalism." *Socialist Register* 2012, pp.271~287.
- Anievas, A. ed. 2010. *Marxism and World Politics: Contesting Global Capitalism*. Routledge.
- Apeldoorn, B. 2014. "The European Capitalist Class and the Crisis of Its Hegemonic Project." *Socialist Register* 2014, pp.189~206.
- Bellofiore, R. 2013. "'Two or three things I know about her': Europe in the global crisis and heterodox economic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37, No.3, pp. 497~512.
- Bellofiore, R., F. Garibaldi and J. Halevi. 2011. "The Global Crisis and the Crisis of European Neomercantilism." *Socialist Register* 2011, pp.120~146.
- Bieler, A. 2006a. "Class Struggle over the EU Model of Capitalism: Neo-Gramscian Perspectives and the Analysis of European Integration." in A. Bieler and A. Morton(eds.). *Images of Gramsci: Connections and Contentions in Political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Routledge. pp.119~132.
- \_\_\_\_\_. 2006b. "European Integration and Eastward Enlargement: A Historical Materialist Understanding of Neo-liberal Restructuring in Europe." in A. Bieler, W. Bonefeld, P. Burnham and A. Morton.(eds.). *Global Restructuring, State, Capital and Labour: Contesting Neo-Gramscian Perspectives*. Palgrave. pp.71~90.

- \_\_\_\_\_. 2012. "Globalisation and European integration: The internal and external dimensions of neo-liberal restructuring." in P. Nousios et al.(eds.). *Globalisation and European Integration: Critical approaches to regional order and international relations*. Routledge. pp.197~217.
- \_\_\_\_\_. 2013. "The EU, Global Europe, and Processes of Uneven and Combined Development: the Problem of Transnational Labour Solidarity."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39, pp.161~183.
- Bieler, A., W. Bonefeld, P. Burnham and A. Morton. 2006. *Global Restructuring, State, Capital and Labour: Contesting Neo-Gramscian Perspectives*. Palgrave.
- Bieler, A. and A. Morton(eds.). 2006. *Images of Gramsci: Connections and Contentions in Political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Routledge.
- Blankenburg, S., L. King, S. Konzelmann and F. Wilkinson. 2013. "Prospects for the eurozone."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37, No.3, pp.463~477.
- Bonefeld, W.(ed.). 2001. *The Politics of Europe: Monetary Union and Class*. Palgrave.
- Bonefeld, W. 2001. "European Monetary Union: Ideology and Class." in W. Bonefeld (ed.). *The Politics of Europe: Monetary Union and Class*. Palgrave. pp.64~106.
- \_\_\_\_\_. 2002. "European Integration: the Market, the Political, and Class." *Capital and Class*, No.77, pp.117~142.
- \_\_\_\_\_. 2012. "Neo-liberal Europe and the Transformation of Democracy: On the State of Money and Law." in P. Nousios et al.(eds.). *Globalisation and European Integration: Critical approaches to regional order and international relations*. Routledge. pp.51~69.
- Boyer, R. 2013. "The euro crisis: undetected by conventional economics, favoured by nationally focused polity."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37, No.3, pp.533~569.
- Busch, K., C. Hermann, K. Hinrichs and T. Schulten. 2013. "Euro Crisis, Austerity Policy and the European Social Model: How Crisis Policies in Southern Europe Threaten the Eu's Social Dimension." *International Policy Analysis*. Friedrich Ebert Stiftung.
- Cafruny, A. and M. Ryner. 2012.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European Union: The irrelevance of integration theory and the pertinence of critical political economy." in P. Nousios et al.(eds.). *Globalisation and European Integration: Critical approaches to regional order and international relations*. Routledge. pp.32~50.
- Cafruny, A. and L. Talani. 2013. "The Crisis of the Eurozone." in A. Cafruny and H. Schwartz(eds.). *Explo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dvances i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Vol.18, pp.13~33.
- Cafruny, A. and H. Schwartz(eds.). 2013. *Explo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dvances i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Vol.18. Boulder, CO.

- Callinicos, A. 2012. "Contradictions of Austerity."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36, No.1, pp.65~77.
- Carchedi, G. 2001a. *For Another Europe: A Class Analysis of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Verso.
- \_\_\_\_\_. 2001b. "The EMU, Monetary Crises, and the Single European Currency." in W. Bonefeld(ed.). *The Politics of Europe: Monetary Union and Class*. Palgrave. pp. 37~63.
- \_\_\_\_\_. 2012. "From the Crisis of Surplus Value to the Crisis of the Euro." *World Review of Political Economy*, Vol.3, No.3, pp.288~312.
- Goda, T., O. Onaran and E. Stockhammer. 2014. "The Role of Income Inequality and Wealth Concentration in the Recent Crisis." Paper for Progressive Economy Annual Forum. Brussels.
- Grahl, J. 2011. "The Subordination of European Finance." *Competition and Change*, Vol.15, No.1, pp.31~47.
- Grahl, J. and P. Teague. 2013. "Reconstructing the eurozone: the role of EU social policy."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37, No.3, pp.677~692.
- Guttman, R. and D. Plihon. 2013. "Whither the Euro? History and Crisis of Europe's Single-Currency Project." in M. Wolfson and G. Epstein(eds.). *The Handbook of the Political Economy of Financial Crises*. Oxford University Press. pp.357~377.
- Husson, M. 2012. "Exit or Voice? A European Strategy of Rupture." *Socialist Register 2012*. pp.298~306.
- Jessop, B. 2012, "The world market, variegated capitalism and the crisis of European integration." in P. Nousiet et al.(eds). *Globalisation and European Integration: Critical approaches to regional order and international relations*. Routledge. pp.91~111.
- Karamessini, M. 2012. "Sovereign debt crisis: an opportunity to complete the neoliberal project and dismantle the Greek employment model." in S. Lehndorff(ed.). *A triumph of failed ideas: European models of capitalism in crisis*. European Trade Union Institute. pp.135~162.
- Kouvelakis, S. 2011. "The Greek Cauldron." *New Left Review*, No.72, pp.17~32.
- Lapavistas, C. 2012. "Default and Exit from the Eurozone: A Radical Left Strategy." *Socialist Register 2012*, pp.288~297.
- \_\_\_\_\_. 2013a. *Profiting Without Producing: How Finance Exploits Us All*. Verso.
- \_\_\_\_\_. 2013b. "The Eurozone Crisis through the Prism of World Money." in M. Wolfson and G. Epstein(eds.). *The Handbook of the Political Economy of Financial Crises*. Oxford University Press. pp.378~392.
- Lapavistas, C. et al. 2012. *Crisis in the Eurozone*. Verso.
- Lapavistas, C. and J. Powell. 2013. "Financialization varied: a comparative analysis of

- advanced economies.” *Cambridge Journal of Regions, Economy and Society*.
- Laskos, C. and E. Tsakalotos. 2013. *Crucible of Resistance: Greece, the Eurozone & the World Economic Crisis*. Pluto Press.
- Lehndorff, S.(ed.). 2012. *A triumph of failed ideas: European models of capitalism in crisis*. European Trade Union Institute.
- Maniatis, T. and C. Passas. 2013. “Profitability Capital Accumulation and Crisis in the Greek Economy 1958-2009: A Marxist Analysis.” *Review of Political Economy*, Vol.25, No.4, pp.624~649.
- Marx, K. 1968. *Theories of Surplus Value*, Part II. Progress Publishers.
- Mavroudeas, S. 2013. “Development and Crisis: The Turbulent Course of Greek Capitalism.” *International Critical Thought*, Vol.3, No.3, pp.297~314.
- Mavroudeas, S. and D. Paitaridis. 2013. “The Greek saga: competing explanations of the Greek Crisis – A Marxist alternative.” Paper presented at the 1st World Keynes Conference.
- Meadway, J. 2012. “The Euro: Crisis and Collapse?” *Competition and Change*, Vol.16, No.2, pp.150~159.
- Michael-Matsas, S. 2010. “Greece and the World Capitalist Crisis.” *Critique*, Vol.38, No.3, pp.489~502.
- \_\_\_\_\_. 2013. “Greece at the Boiling Point.” *Critique*, Vol.41, No.3, pp.437~ 443.
- Milios, J. 2013. “Neoliberal Europe in Crisis: Syriza’s Alternative.” *Studies in Political Economy*, Spring, pp.185~202.
- Nousios, P., H. Overbeek and A. Tsolakis(eds.). 2012. *Globalisation and European Integration: Critical approaches to regional order and international relations*. Routledge.
- Nousios, P. and A. Tsolakis. 2012. “The Contested Reconstruction of the Belle Epoque? Europe 2020, Transnational Capitalism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Global Restructuring.” in P. Nousios et al.(eds.). *Globalisation and European Integration: Critical approaches to regional order and international relations*. Routledge. pp.243~268.
- Overbeek, H. 2012a. “Sovereign Debt Crisis in Euroland: Root Causes and Implications for European Integration.” *The International Spectator*, Vol.47, No.1, pp.30~48.
- \_\_\_\_\_. 2012b. “Global capitalist crisis and the future of the European project.” in P. Nousios et al.(eds.). *Globalisation and European Integration: Critical approaches to regional order and international relations*. Routledge. pp.218~240.
- Piketty, T. 2014.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Belknap Press.
- Roberts, M. 2013. “Workers, punks and the euro crisis.” Michael Roberts Blog, March 16.
- Robinson, W. 2013. “Global Capitalism and its Anti-‘Human Face’: Organic Intellectuals and Interpretations of the Crisis.” *Globalizations*.

- Sotiropoulos, D., J. Milios and S. Lapatsioras. 2013. *A Political Economy of Contemporary Capitalism and its Crisis*. Routledge.
- Stockhammer, E. 2014. "The Euro Crisis and contradictions of Neoliberalism in Europe." Post Keynesian Economics Study Group. Working Paper 1401.
- Streeck, W. 2011. "The Crisis of Democratic Capitalism." *New Left Review*, No.71, pp.5~29.
- \_\_\_\_\_. 2012. "Markets and Peoples: Democratic Capitalism and European Integration." *New Left Review*, No.73, pp.63~71.
- Toporowski, J. 2013. "International credit, financial integration and the euro."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37, No.3, pp.571~584.
- Toussaint, E. 2013. "The Euro Crisis, Contradictions between Countries in the Periphery and Centre of the European Union." *Global Research*, November 26.
- Trotsky, L. 1915. "The Programme of Peace." from <http://www.marxists.org/history/etol/newspape/fi/vol05/no09/trotsky.htm>
- Tsoufidis, L. and P. Tsaliki. 2014. "Unproductive Labour, Capital Accumulation and Profitability Crisis in the Greek Economy."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Economics*, 1(23).
- Van der Pijl, K. 2012. "Securitisation as Class Formation - Finance, Geopolitics and the Eurozone Crisis." Paper for the conference 'A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of Securitization.' University of Amsterdam, October 15~16.
- Wolfson, M. and G. Epstein(eds.). 2013. *The Handbook of the Political Economy of Financial Crises*. Oxford University Press.
- Young, B. and W. Semmler. 2011. "The European Sovereign Debt Crisis: Is Germany to Blame?" *German Politics and Society*, Vol.29, No.1, pp.1~24.



## 미국과 스웨덴의 금융화 비교\*

김의동 | 경상대학교 경영대학 국제통상학과 교수

### 1. 서론

1980년대 이후 세계적 차원에서 금융부문의 위상과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금융엘리트의 위상이 크게 높아져 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로 [금융자산/세계GDP] 비중이 급증한 것을 2절의 <그림 2-1>과 <그림 2-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계에서는 이런 추세적 변화를 금융화(financialization)로 정의하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신자유주의적 궤도 변화를 추동한 중요한 현상으로 주목해왔다.

두메닐과 레비(Duménil and Lévy, 2004: chapter 2)의 경우 신자유주의는 금융헤게모니를 대변하는 이념적 표현이며, 자본과 시장의 세계화는 금융화의 매개고리 역할을, 금융화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구체적 형태이며 내

---

\* 이 논문은 2010년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 2010-413-B00027)에 의하여 연구되었으며, <국제지역연구> 16권 4호(2012년 12월)에 게재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용이라고 설명한다. 금융화의 성격과 함의에 대해 논자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정의를 내리고 있긴 하지만, 이 글에서 금융화란 국내의 경제의 작동에서 금융활동, 금융시장, 금융행위자, 금융기관, 금융동기의 역할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금융화라는 용어가 나타내려는 내용적 의미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단순히 금융자본이 거대한 투자 풀을 형성하고 높은 수익을 찾아 이동하는 규모의 확대나 중요성의 증대 현상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금융부문이 스스로 새로운 투자상품과 투자처를 만들어내면서 수익을 창출해나가는 소위 ‘금융의 자립화’ 국면을 부각시키기 위한 용어로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금융화 현상에 대한 연구 동향은 대체로 미국의 금융화 원인과 그 영향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보여왔으며, 단지 일부 연구에서 OECD 국가들의 금융부문 비중 증가 추세를 상호 비교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최근에 와서 금융화의 경제적 효과로 논의를 확산시켜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화 현상이 국가별로 어떻게 나타나며 그 특성이 어떠한지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국가별 비교는 별로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금융화에 대한 국가 비교연구를 위하여 세계적 금융화를 주도해온 영미식 모델의 대표주자인 미국과 북유럽 모델의 대표주자인 스웨덴의 금융화를 비교·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춰보려고 한다. 엡스타인과 자야데브(Eptstein and Jayadev, 2005: chapter 3)에 의하면 OECD 국가의 금융화 추이를 금융소득자의 소득비중 변화를 통해 살펴보면 금융화 현상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국가로 미국을, 그 반대 지형에 스웨덴이 위치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도 하다.

금융화에 대한 국가 비교를 위해 2절에서는 세계화와 금융자본 활동의 확산추이를 간단하게 설명한 후 금융화에 대한 기존 연구에 대해 살펴보려 한

다. 3절에서는 우선 금융업, 보험업 및 부동산업(Finance+Insurance+Real Estate, 이하 FIRE로 칭함) 추계를 중심으로 미국과 스웨덴의 금융화 추이를 살펴보고, 금융이윤 추세와 미국과 스웨덴 금융화의 특징을 각각 기존 통계자료를 이용한 추세집계와 2차 자료를 통해 상호 비교·검토하려 한다. 그런 연후에 양국에서 금융화와 소득양극화의 상관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3가지 지표, 즉 역(逆, inverted) 파레토(Pareto)-로렌츠(Lorenz) 계수 추이, 상위 10% 소득계층의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 지니계수 추이 등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4절에서는 비교·검토 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종합해 보고, 5절에서는 상호 비교·검토 결과에 대한 함의에 대해 정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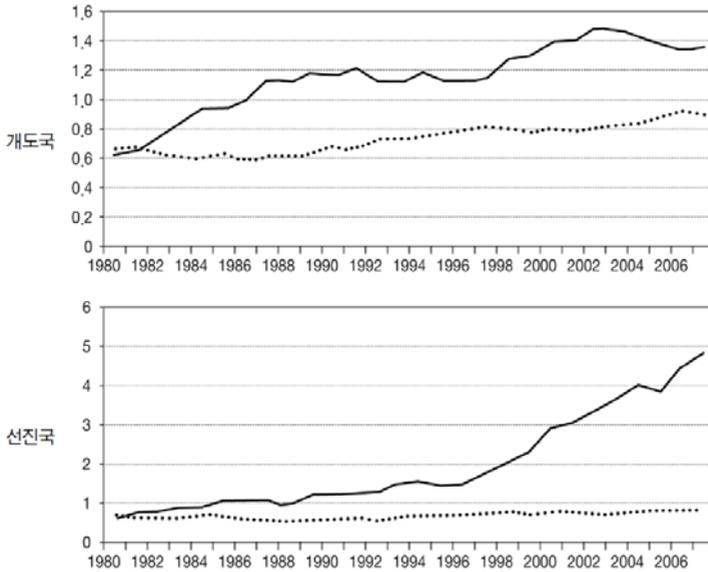
## 2. 세계경제의 금융화 심화와 기존 연구 검토

### 1) 금융자본 활동의 세계화

<그림 2-1>의 UNCTAD(2012) 자료에 의하면 1980년대 이후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 금융부문의 비중 증가율이 국제무역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그 이후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sub-prime mortgage crisis) 발생 때까지 증가 추세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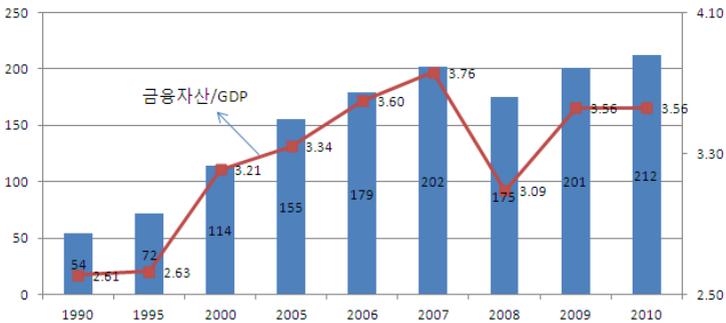
이러한 금융부문 비중의 증가추세는 <그림 2-2>의 맥킨지(Mckinsey) 자료, 즉 <금융자산 총액>과 <금융자산/세계 GDP> 비중 추세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세계적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가 70개국 금융시장을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자료(Mapping Global Capital Markets 2011)에 따르면, 세계의 금융자산 가치는 1990년 54조 달러에서 2010년 212조 달러로 20년 동안 무려 4배로 증가했다.

<그림 2-1> 금융부문의 비중 증가와 무역개방 추이(1980~2007년)



주: — 금융화 수준 = 금융부문 자산과 부채 누적액/세계 전체 GDP  
 ..... 무역개방도 = 무역규모/세계 전체 GDP  
 자료: UNCTAD(2012).

<그림 2-2> 세계 GDP 대비 금융자산 규모 변화 추이(조 달러, 배)



주: 금융자산에는 파생상품을 제외한 주식, 채권, 금융기관 잔고 등이 포함됨.  
 자료: Mckinsey Global Institute Mapping(2011: 2), 이종태(2012: 31).

또한 이런 금융자산 가치는 실물경제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다. 1990년 세계 금융자산의 가치는 글로벌 GDP의 2.6배 정도였다. 그런데 2000년엔 3.2배,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는 3.7배까지 치솟는다. 다음 해(2008년)에는 3배로까지 내려갔다가 2010년 현재 3.5배로 회복되어 있다. 조사대상인 70개국 중 상당수가 개발도상국이란 점을 감안하면, 대다수의 발전된 산업 국가에는 GDP의 3~4배에 달하는 금융자산이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피거슨(Niall Ferguson)에 의하면 서브프라임 위기 발생 전인 2006년 말 기준으로 세계 산출액은 약 47조 달러인 데 비해 전 세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51조 달러로 경제 산출량보다 10% 이상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피거슨, 2010: 10~11). 국내채권과 국제채권의 총가치는 68조 달러로 50% 더 컸고, 파생상품 거래 잔액도 473조 달러로 세계 전체 산출액보다 10배 이상 큰 것으로 집계되었다. 추가적으로 2007년 말 기준으로는 모든 ‘장외시장’ 파생상품의 명목가치(공공거래소 거래 상품 제외)가 600조 달러에 육박하였으며, 1990년에만 610개이던 헤지펀드가 7,000개가 넘어섰으며 약 2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상의 3가지 자료는 1980년대 이후 금융부문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금융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어왔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는 증거들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20년은 세계적 차원에서 부채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커지는 동시에 국가들을 그물처럼 잇는 세계 차원의 채권-채무 네트워크 역시 고도로 복잡해진 시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결과 금융의 불안정성 여부가 세계경제에 더욱 중요한 지표로 부상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2) 금융화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금융화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한 많은 문헌들, 즉 두메닐과 레비(Duménil and Lévy, 2004), 브레너(Brenner, 2003), 크로티(Crotty, 2005), 크리프너(Krippner, 2005), 크레겔(Kregel, 2008), 카티와다(Khatiwada, 2010), 케드로스키와 스탱글러(Kedrosky and Stangler, 2011) 등의 연구는 모두 미국의 금융화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금융화에 대한 최근의 국내 연구를 보더라도 대다수 연구는 주로 미국의 금융화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전창환, 2009; 조복현, 2009; 홍장표, 2010; 김의동, 2011 등 참조). 스웨덴 금융화의 경우 1999년 스웨덴 연금제도 개혁을 개인화, 시장화, 금융화 측면에서 살펴본 주은선(2006: 제1장)의 연구가 유일한 편이다.

참고문헌  
없음

여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OECD 관련 초기 연구로는 파워·엡스타인·자야데브(Power, Epstein and Jayadev, 2005, 2007) 등이 있다. 이들 연구의 공통점은 OECD 국가의 금리생활자(Rentier) 소득의 증가추세를 조사하여 금융화의 추세와 그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명목가치로 측정하든, 아니면 실질가치로 측정하든 1960~1970년대와 비교해 1980~1990년대 기간에 금리생활자에 귀속된 소득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자료 불분명  
참고문헌에도  
없음

이들 연구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금융화의 결과 자산소유자들이 큰 이익을 보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소득불균등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조사대상 기간 중 실질이자율이 증가했다거나 하는 경제환경 변화를 감안해야 하지만 금융자유화와 경제의 개방은 분명히 자산소유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런 결과는 팰리(T. Palley)의 연구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는데, 팰리는 금리생활자의 소득비중 증가 추세를 통해 금융화가 모든 선진국에서 확

산되어왔음을 밝히고 있다(Palley, 2007). 그는 또한 금융화가 비금융 기업지배력을 관리자 중심에서 단기 성장을 추구하는 주주 중심으로 옮겨놓으면서부터 경제성장이 억제될 가능성을 높여 금융화 시기에 경제성장이 정체되어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스톡하머(Stockhammer, 2004)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 밖에도 크로티(Crotty, 2005), 오르한가지(Orhangazi, 2008), 프리만(Freeman, 2010), 케드로스키와 스탱글러(Kedrosky and Stangler, 2011) 등 금융화가 실물생산에 대한 자본투자를 **구축하였음을** 입증하려는 관련 연구가 연이어 제출되었다. 저성장 문제뿐 아니라 금융화의 부정적 영향으로 금융불안정성의 확산과 소득불평등 강화 및 경제주체의 부채 확대 등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이루어져 왔다.

구축(驅逐)하였음을

하인과 반 트릭(Hein and Van Treeck, 2008), 크레겔(Kregel, 2008), 시나몬과 파자리(Cynamon & Fazzari, 2009) 등은 금융 주도 성장체제는 취약한 금융구조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불안정하며, 특히 호황 국면에서의 부채 팽창을 불안정성의 핵심으로 파악한다. 이들은 주로 민스키(H. P. Minsky)의 ‘금융불안정가설(financial instability hypothesis)’에 의존하고 있다.

스테판 외(Stephen et al., 2011)는 주요 선진국 모두에서 대체로 경제주체들의 부채가 크게 증가한 기간이 금융화 심화기간과 맞물리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18개 OECD 주요국들의 1980년대 이후 가계, 기업 및 정부 부채를 합한 매크로 레버리지(macro leverage) 상승 추세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에바와 콰드리니(Eva and Quadrini, 2012)도 과거 30년간(1980년대 이후~현재) 경제의 금융화가 진행되면서 대다수 선진국들에서 소득불평등(inequality)과 공적부채(public debt) 증가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스톡하머(Stockhammer, 2008)는 EU 국가를 중심으로 그들의 투자행태, 소비행태 및 정부지출 등의 변화가 어느 정도 금융화와 연관되는지를 분

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금융부문의 수익률 증대 현상을 확인하였으며 금융화의 특징이 경제 불안정의 심화(오버슈팅, boom과 bust)를 초래하는 중요한 동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는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선진국에서 금융위기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 혹은 위기가 지연된 이유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역할이 감소하지 않아 금융위기가 단기적이며 급격하게 조정되기보다는 장기간의 정체나 경기불황의 모습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OECD 국가에 대한 연구로서 아싸(Assa, 2012)의 연구가 있다. 그는 두 거시지표, 즉 GDP에서 차지하는 금융부문의 부가가치 비중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금융부문의 비중이 OECD 국가들에서 크게 증가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에 따르면 1970년에 금융부문의 부가가치 비중이 20%대에 있었던 국가는 프랑스와 멕시코 두 나라뿐이었지만 2008년에 와서는 34개국 중 28개국이 20%를 상회하였으며 그 중 15개 국가는 25%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권에 속한 국가는 룩셈부르크, 이스라엘, 프랑스,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GDP에서 금융과 부동산 부문의 비중이 30%를 상회하는 나라들이다. 룩셈부르크의 경우 1970년 대비 2008년에 7배, 즉 7%에서 49.2%로 급증하였다. 또한 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아이슬란드, 영국, 핀란드 등 11개국이 2008년까지 금융부문 비중이 2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총고용 중에서 금융부문의 고용 비중 추이도 비슷한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에서 1994년까지는 어떤 국가도 금융부문의 고용 비중이 총고용의 10%를 넘지 않았던 것이 2008년에 와서는 23개국이 1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룩셈부르크 28.9%를 필두로 7개 국가(스위스, 미국,

이스라엘, 스웨덴,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에서 15%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국가 중 10개국이 2배로 증가하였으며 5개 국가가 3배, 7개 국가가 그 이상의 증가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연구들은 일정한 금융화 지표, 즉 <금융자산/GDP, 금융부채/GDP, 금융부문 이윤율/전체 산업 이윤율, 금융부문의 부가가치/GDP, 금융부문의 고용/전체 산업고용> 등의 추세를 통해 OECD 국가들의 금융화 추세를 상호 비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국가별 금융화 추세 및 그 특성 비교의 수준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미국과 스웨덴의 금융화 추세 및 특징 비교가 나름대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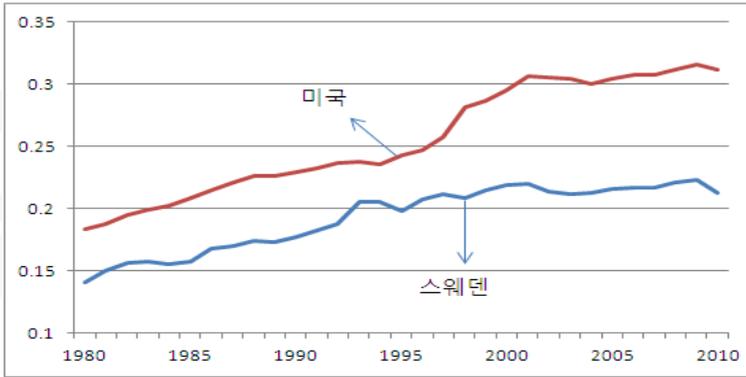
### 3. 미국과 스웨덴의 금융화 추세와 특징

이 절에서는 ‘금융부문의 규모, 수익성 증대 및 금융부문 중요성 증대’ 등 일반적 정의를 중심으로 우선 미국과 스웨덴의 금융화 추세를 살펴본다.

#### 1) 미국과 스웨덴의 금융화 추이 비교

부동산업을 포함한 금융업, 즉 FIRE의 위상과 규모는 1980년대 이후 미국과 스웨덴 양국 모두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3>에서 미국의 금융부문 위상을 우선 살펴보면 1980년 GDP의 18% 수준에 미치지 못하던 것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며 2000년대 후반 약 32%대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미국보다 낮지만 스웨덴의 경우도 1980년 GDP의 14%대에서 2000년대 후반 약 22%

〈그림 2-3〉 각국 GDP 대비 FIRE 부문의 비중 추이



자료: OECD StatExtracts(<http://stats.oecd.org/>) 자료를 활용해 계산함.

대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것은 미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 이후 금융부문 비중이 스웨덴에 비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추세변화는 1999년 이후 미국에서 금융부문에 대한 탈규제가 마무리되어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경계가 철폐되었다는 점과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글로벌 불균형에 의한 유동성 팽창과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스웨덴의 경우 1980년대 내내 추진한 신용시장과 자본시장 개방 이후부터 금융위기가 발생한<sup>1)</sup> 1991년까지는 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반면 1991~1994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증가추세를 보였지만 2000년대 내내 그 증가속도에서 아주 완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미국과 스웨덴 양국 모두에서 경제주체의 부채가 급증하는 모습을

1) 로고프와 라인하트(2010: 164)는 스웨덴의 금융위기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선진국 5대 대형 금융위기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그는 5대 위기로 1977년 스페인, 1987년 노르웨이, 1991년 핀란드와 스웨덴, 1992년 일본을 지칭하고 있다.

보이고 있어서 금융화 시기의 경제성장 중 상당 몫은 빛의 증폭에 의한 성장 (easy liquidity bubble)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모든 경제주체의 GDP 대비 부채규모가 1980년에 비해 금융위기 전인 2008년에는 거의 두 배로 증가한 것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그림 2-6> 참조).<sup>2)</sup>

스웨덴의 경우 1990년대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위기 시 급등했던 정부부채는 위기 이후에 급격히 감소하여 2010년 기준으로 GDP의 40%대를 유지하고 있어 매우 건전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 비해 그나마 정부가 타 경제주체의 부채 증가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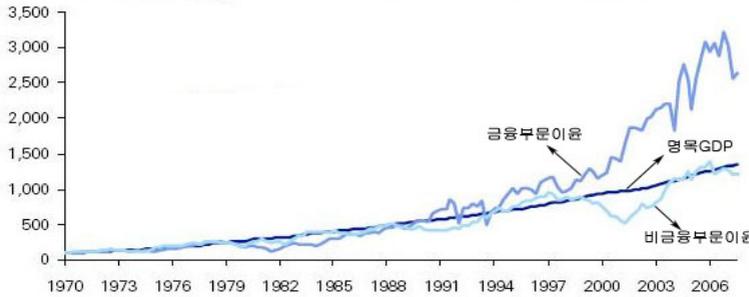
## 2) 미국의 금융화 내용과 특징

<그림 2-3>에서 미국의 FIRE 부문의 GDP 대비 비중이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글로벌 불균형이 본격화된 1999년 이후 그 증가추세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FIRE 비중 증가만으로 금융화 심화를 단정하기에는 내용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금융화 심화의 증거로 전체 산업부문에서 금융부문의 이윤 변화 추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2-4>에서 서브프라임 위기(sub-prime crisis) 직전까지의 GDP 성장

2) GDP 대비 미국정부 부채는 1980년대 초반 20%대 후반에 머물다가 빠르게 증가하여 1990년 GDP의 56%대에 이르러 약 2배 증가하였으며, 2011년 100%에 접근하면서 다시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를 포함한 각 경제주체들의 부채 급증으로 2011년 8월 Standard & Pooers는 미국의 부채등급을 하향조정했다.

〈그림 2-4〉 미국 명목 GDP와 금융 및 비금융 부문의 이윤 추세(1970년=100)



자료: Jones(2008), <http://www.ft.com/alphaville>; <http://www.karlhenrikpettersson.se/u-s-political-crisis-2-a-new-financial-crisis-with-its-epicentrum-on-wall-street/>에서 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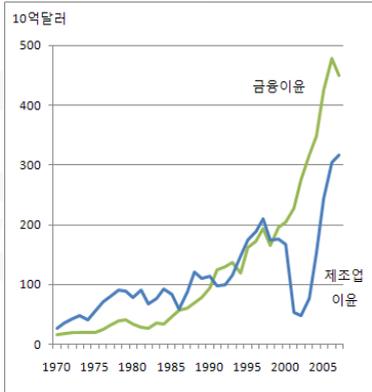
를 대비 미국의 부문별 이윤을 추이를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금융부문 이윤이 1990년대 이후 GDP 증가 궤적을 벗어나기 시작해 지난 20여 년간 GDP나 비금융부문의 이윤 증가추세와 완전히 동떨어져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에 비금융부문 이윤율은 대체로 GDP 성장추세와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에서 금융부문의 자기강화과정(self-reinforcing process)이 얼마나 강력하게 전개되어왔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sup>3)</sup>

<그림 2-5>에서도 이런 특징은 그대로 나타난다. 부문별로 보면 1990년대 이후 금융부문의 이윤율이 실물부문보다 더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금융부문의 이윤율 상승이 전체 이윤율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현상을 두고 두메닐과 레비(Duménil and Lévy, 2004: chapter 2)는 1970년대 이후 축적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신자유주의적 자본 대응의 징표로 해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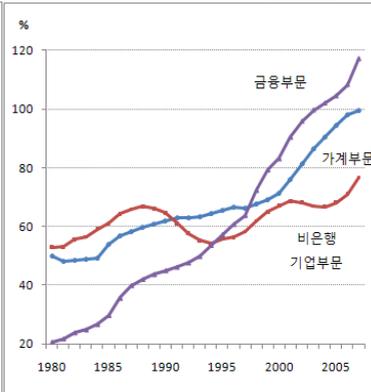
이처럼 금융부문의 중요성과 주도성이 1980년대 이후 크게 부각된 데는

3) 미국의 금융화 전개과정과 관련된 서술의 일부는 김의동(2011)에서 부분적으로 인용함.

〈그림 2-5〉 금융부문과 제조업부문 이윤 추이(1970~2007년)



〈그림 2-6〉 GDP 대비 민간부문의 부채비율(1980~2007년)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NIPAs);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2009\)](#).

자료 불분명

몇 가지 제도적 추동요인(institutional roots of financialization)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1970년대의 자본주의적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금융부문의 민영화, 자유화, 개방화 등 제 정책이 추진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금융시장 자체의 동학(finance market dynamics)을 들 수 있다. 주지하 다시피 1970년대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으로 전통적인 은행의 수익 추구가 어렵게 되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금융부문 이윤율을 급격하게 하락시켰다(<그림 2-5> 참조). 이런 상황에서 1980~1990년대에 걸쳐 미국 연준은 이자율을 높이는 한편 긴축정책을 실시하여 인플레이션 속도를 낮추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추세가 급격히 반전되면서 확장적 통화정책, 즉 2002년 이후부터 1~2% 수준의 평균 단기이자율을 유지함으로써 풍부한 값싼 유동성을 활용할 수 있었다.

더욱이 2000년대 이후 대내적으로 느슨한 통화정책에다 소비자금융 및 주택금융 등의 확장이 결합되면서 금융부문의 비중이 확대되고 자립화 현상이 심화되어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화 현상을 증폭시킨 배후로 미국의 소득불균등 현상에 주목하기도 한다. 즉, 소득 상위 10% 계층의 소득은 급증한 반면 나머지 소득 계층의 소득이 정체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각종 소비자금융과 주택금융 등을 통해 금융부문의 수익원을 확장시켜나갈 수 있었다(<그림 2-4>, <그림 2-5> 참조).

여기에 글로벌 불균형으로 대표되는 대외적 요인도 유동성 팽창에 한몫을 담당했다. 즉, 글로벌 불균형에 의한 미국 국채 투자를 중심으로 큰 규모의 해외자금 공급과 신용팽창이 이루어져 금융부문이 확장될 여지를 넓힌 점이다. 유입된 외국자본은 금융기관 수익률을 회복시키는 재원으로 활용되었으며, 다른 한편 소비자와 기업 및 정부가 빚에 의존한 소비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셋째, 유동성 공급과 별도로 경제의 기본구조를 금융부문에게 유리하게 만든 것은 1990년대 이후에 본격화된 일련의 탈규제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으로 1999년의 「금융현대화법(the Financial Modernization Act)」<sup>4)</sup>을 들 수 있다. 또한 투자은행제도 도입으로 금융기관의 독

4) 미국의 경우 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Gramm-Leach-Bliley Act)」이 도입되면서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은행, 증권 등의 겸업이 전면 허용됐다. 또한 파생금융시장에서 대부분의 규제를 제거하기도 했다. 대표적 사례가 1999년 금융과 관련해 당시 마지막 규제라 할 수 있는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을 폐지한 것이다. 이 법은 1930년대 대공황 직후 상업은행(예금과 대출과 투자은행업(증권 영업)을 함께 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 대공황 당시 은행들이 고객의 예금으로 증권투자 등 위험한 투자를 벌이다 금융공황을 초래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법이 폐지되면서 은행은 예금자와 차입자 사이의 전통적 자금증개자에 머문 것이 아니라 부채를 활용해 고위험-고수익을 얻는 금융투기의 주체로 나선 것이다. 전통적으로 월가의 은행들은 고객예탁금이 아닌 고유계정에 의한 거래를 꺼려했지만, 환율과 이자율의 변동성 확대로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수익성이 높아지자 고유계정거래를 통한 증권투자가 은행의 중심활동

집적 수익 거래(proprietary trading)가 크게 증가하였다.

1999년부터 투자는행제도가 도입되면서 그동안 유지되어왔던 엄격한 위험관리에 대한 제약이 풀리자 오히려 고위험-고수익 투자 패턴이 확산되면서 금융의 투기적 성격이 매우 강화되었다. 말하자면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고 오히려 수익추구자로서의 기능이 강화된 결과 비정상적 금융부문 팽창과 이윤 증가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탈규제는 이자율과 주식 가격의 변동성을 증대시켜 리스크로부터 이익을 얻는 새로운 금융기법 창출을 촉진하였다. 1980년대 이후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commission-based methods) 소비자금융의 팽창과 증권화(securitization) 현상을 들 수 있다. 그 결과 피거슨(2010)이 제시한 것처럼 CDS(신용부도스와프)나 모기지 기반 및 다른 파생상품 증권의 영역이 확연히 넓어지게 되었다. 이는 소위 공급자 측면에서 금융상품의 유형이 크게 확대되었음을 말해준다. 이 때문에 신용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각종 신 금융상품에 의한 수익 증대 기제가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금융서비스기업의 기업 내 업무 복잡성과 금융시장 시스템의 상호 얽힘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에 반해 전체 금융 시스템을 관장할 규제자의 역할은 점점 더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해커와 피어슨(Hacker and Pierson, 2010)은 이러한 적응적 규제의 부재를 규제의 표류(regulatory drift)라고 불렀다.

넷째, 기업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금융자산이 되고 주주가치경영이 확산되면서 비금융부문 관리자들의 경영 패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주주가치경영이 확산되면서 금융 지향적 관리자들에 의해 주가를 올리기 위한 단기계획이 경영관리의 핵심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기업의 주주가치경영은 최고경영자의 보수를 장기간의 시장점유율 확대, 판매 증

---

으로 등장한다.

대, 생산 확대를 기반으로 하는 이윤보다는 스톡옵션(stock option) 등에 연계 시킴으로써 더욱 강화되었다.

이미 기존 문헌 연구에서 보았듯이 비금융부문의 금융화는 기업경영자들의 투자전략을 장기에서 단기로, 생산에서 금융투자를 중시하는 패턴으로 옮겨가게 만들었다. 비금융기업들의 금융활동의 증가, 주주우선주의의 강화, 기업통제에 대한 시장의 발전은 경영 지향을 기업성장이라는 장기적 목표에서 수익성이라는 단기적 목표로 변화시켰다.<sup>5)</sup>

다섯째, 브레튼우즈(Bretton-Woods)체제의 붕괴와 변동환율제로의 이행을 들 수 있다. 변동환율제(1973년 3월 각국이 채택) 아래에서 각국 정부가 무역, 외환,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추진하고 세계시장에서 무한경쟁을 펼치게 되면서 각국 통화 사이의 환율과 금리의 변동에서 오는 손실이 매우 컸다. 이런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선물(futures), 옵션(option), 스왑(swap)]이 등장했으며 금융산업이 크게 성장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연금제도도 이러한 금융화 추세를 강화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미국의 경우 개인퇴직계좌(IRA)와 확정기여형(DC) 적립기금으로 나누어져 연금금이 운용되고 있다. 그 중 1980년에 도입한 401(k) 플랜은 일종의 확정기여형 퇴직자연금제도이다.<sup>6)</sup>

피고용자들이 선택해 임금의 일정 비율을 401(k)계좌에 적립할 수 있으

5) 현실적 추세는 경영자의 인센티브를 단기적 주식시장 가치목표에 초점을 맞추도록 조장하고, 경영자 보상을 주가에 연계하도록 몰아갔다. 문제는 경영자들이 회사 주가의 상승에 따라 보수를 받지만, 주식 손실이나 대차대조표 손실에 대해서는 제재를 받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는 고위험, 단기행동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이었다.

6)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제도인 '401(k)'제도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일정액을 불입하되 회사에서 같은 액수를 지원해주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정민, 2010: 2).

며, 게다가 이 적립액을 어디에 투자할지 선택권도 갖는다. 미국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1985년 GDP의 55.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는 약 120%까지 커졌는데(정민, 2010: 4) 퇴직연금의 투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연기금이 금융화를 심화시키는 데 일조하였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금융화 심화로 1990년대 이후 나타난 축적패턴은 실물부문의 이윤과 투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과거의 축적체제와 크게 달라졌다.

첫째, 이윤이 상품의 생산과 유통보다는 주로 금융 채널을 통해 획득되었다는 점이다(Krippner, 2005). 금융이윤은 소비자금융의 확대와 부채 활용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으로 금융부문 내부에서 창출되었다. <그림 2-5>에서 보듯이 제조업 이윤이 급격히 감소한 1990년대 후반 이후 금융이윤이 급속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금융화가 심화될수록 금융부문이 실물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인 이윤획득기반을 창출하면서 이윤 증가를 주도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위 ‘금융의 자립화’ 혹은 ‘금융의 자기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기업금융에서 가계금융으로의 전환으로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연계가 기업의 투자지출에서 가계의 소비지출로 이동하였다는 점이다. 2001년 닷컴 버블 붕괴 이후 미국에서 새로운 금융화 영역으로 등장한 것이 주택 투자의 촉진이었다. 이것은 주택소유자들에게 실질임금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대출에 의해 주택자산을 늘려 삶의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유도했다. 따라서 주택가격의 거품현상은 금융화를 위한 기초토대를 형성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sup>7)</sup> 자산효과를 통해 소비자들의 소비를 증가시

7) 1990년대 이후 미국 경제에서 임금소득 상승과 무관하게 소비지출을 늘리는 새로운 기제가 작동하면서 호황국면이 나타났다. 우선 소비자금융의 확대와 가계의 신용접근성 향상에 따른 소비지출의 증가이다. 1980년대 초까지 소비자금융은 주택과 자동차

켜<sup>8)</sup> 경기침체에 대한 탈출구 역할을 하였다.

<그림 2-6>에서 1980년대 이후 미국 경제 민간부문의 부채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물기업의 부채 비율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금융부문과 가계부문의 부채 비율은 급속히 증가하였다. 가계지출의 경우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커진 한편 이를 반영하여 가처분소득에서 원리금상환 비율이 차지하는 비중도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2-7>, <그림 2-8> 참조).

특히 다른 부문에 비해 금융기관의 부채 증가는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그림 2-6> 참조). 금융기관이 레버리지(leverage)를 활용해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금융부문의 부채가 가계부문을 추월하면서 부채 증가를 주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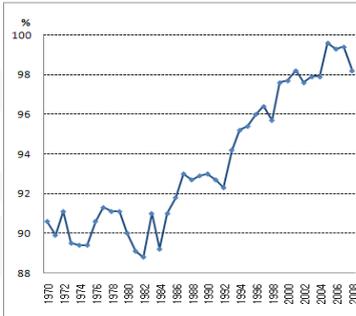
이런 사실로부터 미국 경제의 성장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가 실물부문의 투자와 이윤율에서 가계와 금융부문의 부채 및 앞서 설명했던 정부 부채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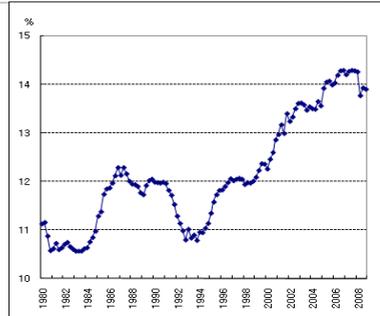
구입으로 한정되었지만, 1980년대 후반 주택금융의 혁신으로 어떤 종류의 소비도 세금공제혜택 이자율로 차입할 수 있게 되었다. 주택자산가치담보부대출(home equity loan)로 주택가치가 상승할 때 추가 차입으로 가계의 소비지출이 늘어났으며, 1990년대 이후 일반화된 현금차입형 재융자(cash-out refinancing)는 이자율이 하락할 때 차입을 늘려 소비지출을 증가시켰다(홍장표, 2010: 255). 소비자금융의 확대는 임금소득자들을 소비와 자산관리 양면에서 금융의 지배망 속에 포섭시켰다(Lapavistas, 2009). 이로 인해 과거처럼 금융이윤은 실물자본이 생산과정에서 추출한 이윤의 일부를 배분받는 것이 아니라 금융 채널을 통해 가계와 임금소득자로부터 직접 확보된다.

- 8) 자산효과를 통한 소비와 투자수요의 증대이다. 금융시장에서 자산가격은 구입가격과 무관하게 미래의 예상수익과 할인율에 따라 변동한다. 자산가격의 상승은 시장 참가자들이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한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실현적이다. 이 자기실현성은 은행들이 레버리지를 활용한 고유계정거래(proprietary trading)로 한층 강화된다. 은행들이 헤지펀드, 자산유동화전문회사(SIVs), 도관회사(conduit)를 설립해 증권투자자로 나서면서 자산가격의 상승을 뒷받침하였다(Gowan, 2009). 이처럼 상업은행들이 계열사를 활용해 증권투자에 뛰어들면서 부채 증가 → 증권가치 상승 → 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금융부채의 동학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홍장표, 2010: 255~256).

〈그림 2-7〉 가처분소득에 대한 소비지출 비중



〈그림 2-8〉 가계부문 부채상환비율 (원리금상환액/가처분소득)



자료: Federal Reserve, Flow of Funds Accounts(FFAs).

증가로 진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말하자면 미국 경제는 1990년대 이후 이윤이 금융 채널을 통해 주로 획득되고 금융이 거시경제의 변동성을 좌우하는 금융 주도 자본주의로 진화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금융시장이 자원배분을 결정하는 한편 경제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수행하면서 실물부문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오르한가지(Orhangazi, 2008: 서문)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런 금융의 주도성은 그 이후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의 발생동인이 되었으며, 2013년까지 3단계에 걸친 양적완화(Quantity Easing)를 통한 경제 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하였다.<sup>9)</sup>

사실 미국은 2007~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 생산과 소비 및 부의 감소효

9)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미국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됨에 따라 2013년 5월 출구전략을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미국 연준의 출구전략은 양적완화 축소부터 시작되어 금리 정상화, 주택담보부증권 매각 등 3단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향후 미국 경기회복 속도와 글로벌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밝힌 셈이다. 그 후 양적완화 규모 축소의 시기와 폭이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해 세계경제의 새로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 실업 증가와 소득 감소, 국가 위상 추락에 따른 국가적 트라우마의 부정적 효과, 양적완화를 통한 예외적인 국가개입의 강화 등의 큰 비용을 지불한 셈이었다(Tyler, Luttrell and Rosenblum, 2013).

참고문헌  
없음

### 3) 스웨덴의 금융화 내용과 특징

<그림 2-3>에서 보듯이 스웨덴도 1980년대 이후 금융화가 심화되는 추세가 진행되었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그림 2-9>에서 스웨덴의 금융부문의 이윤 비중을 살펴보면 1980년대 신용 및 자본시장 자유화 이후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1991년까지는 25%를 상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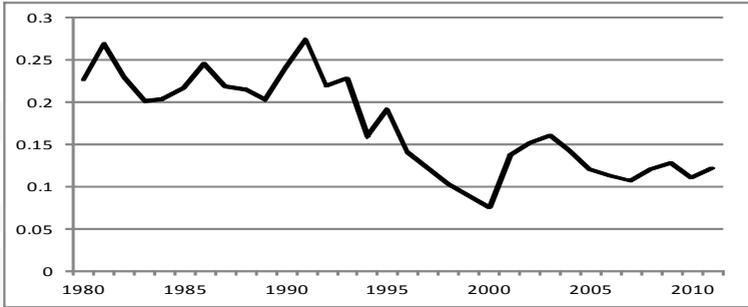
금융위기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하여 2001년에는 10% 미만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반전되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10~15%대 사이에서 유지되면서 신용 및 자본시장 자유화 시기 때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미국의 금융부문 이윤 비중이 평균 30%대에서 움직이는 것에 비해 그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웨덴의 금융부문 이윤을 추이는 상당 부분 과거 신용과 자본시장 자유화 과정, 금융위기 과정, 그 이후 회복과정으로 대표되는 세 시기의 정책흐름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신용 및 자본자유화 시기의 정책흐름과 금융화의 진행과정을 살펴보자.

스웨덴의 경우 1980년까지는 철저히 금융산업부문에 대한 강한 규제를 실시하였으나 1981년 이후부터 금융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하였다.<sup>10)</sup> 금융

10) 금융자본 세계화로 통화의 독립성이 약화되고 정부가 이자율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면서 저금리 기조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즉, 정부가 금융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면서 일국 단위에서 복지지출 및 실업률 조절과 관련된 케인스주의적 재

〈그림 2-9〉 스웨덴 산업 전체 이윤 중 금융부문의 이윤 비중 변화 추세



주: 금융부문 이윤/(비금융부문 이윤+금융부문 이윤)임.  
 자료: 스웨덴 통계청(<http://www.scb.se>).

자유화 정책은 그 당시 세계적 추세이기도 했지만 점차 스웨덴 경제의 대내외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금융규제 완화 정책의 필요성이 매우 커져 있었다. 이를 반영해 사민당 정부는 1980년대 내내 금융자유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sup>11)</sup>

참고문헌  
없음

그 결과 1985년에 신용시장 제한이 거의 철폐되었으며 1989년까지 자본 이동 제한이 거의 폐지되었다(Stefan Ingves, 2006: 3). 비록 많은 비용을 치른 후였지만 1992년 11월 19일에는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고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함으로써 외환제도의 규제도 동시에 크게 완화시켜 이후 30%까지 스웨덴 크로나(Crona)화의 평가절하가 이루어졌다.

각 경제주체들의 부채 증가에 따른 유동성 확대로 스웨덴의 부동산가격은 1980년대 10년 동안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후에도 가계부채 등 유동성 공급에 의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2-11> 참조).

정 및 통화 정책을 더 이상 고수할 수 없게 되었다.

11) 보다 상세한 것은 신정완(2009: 78~79) 참조.

이처럼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부동산가격이 상승한 상황에서 1990년을 전후로 대내외의 경제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곧바로 가계대출 급증 → 부동산 폭등 → 글로벌 경기 침체 → 부동산 폭락 → 금융부실 문제가 터지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실물경기 침체를 더욱 악화시켜 부동산 거품의 붕괴를 가져와 금융위기의 도화선 역할을 하였다.

대표적인 신용규제 완화정책이 1985년 11월에 단행된 은행의 대출상한 규제 폐지조치였다. 이는 결국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과열을 유발하였다. 특히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 자금이 많이 유입되면서 자산가치의 폭등을 초래해 거품경제가 형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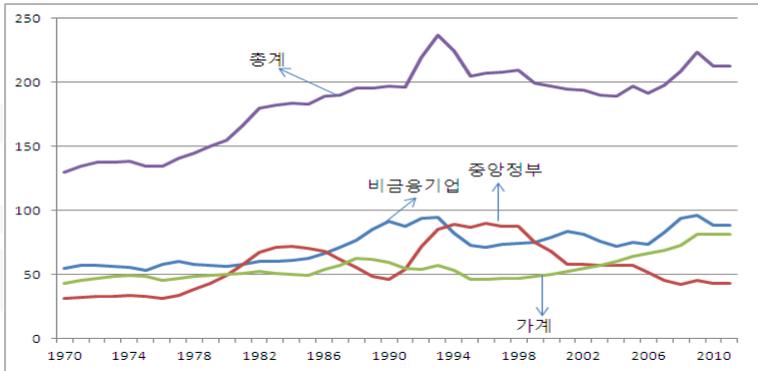
또한 당시 스웨덴의 조세제도는 가계의 이자지급액의 일정 부분을 조세 감면(50%)을 해주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높은 상황에서 가계는 부채를 많이 지는 것이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어 부채에 기초한 과잉소비와 투기가 성행하였다.

1980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980년 50%에서 1990년 60%대를 상회하였으며 또한 비금융기업의 부채도 GDP의 50% 후반대에서 90%대 까지 크게 증가한 것에서 단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다(<그림 2-10> 참조). 정부지출 비중도 1980년대 중반까지 크게 상승하다가 후반부에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각 경제주체들의 부채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부동산가격 하락에 더하여 스웨덴 은행들의 만기 불일치 문제 - 호황국면에서 국내의 단기자금을 빌려와 장기대출에 활용하는 문제 - 는 금융위기 국면에서 은행들의 예금지급능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90년 하반기부터 전반적인 경기하강이 시작되어 산업생산과 소비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1990년 여름부터 부동산 부문에 대출을 많이 한 금융회사

〈그림 2-10〉 스웨덴 전체 및 경제주체별 부채/GDP 추이



자료: 스웨덴 통계청(www.scb.se).

〈그림 2-11〉 스웨덴 부동산가격 지수 추이(1981=100)



자료: <http://www.globalpropertyguide.com/real-estate-house-prices/S/sweden>.

들을 시작으로 금융위기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이후 스웨덴 경제에 큰 충격을 가져온 금융위기로 확산되었다.<sup>12)</sup> 금융위기가 진행되던 1991년 말에 집권한 부르주아 정당 연립정부는 재정적자 감소를 위해 긴축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경기침체를 가중시켜 금융위기를 일시적으로 더 심화

12) 상세한 금융위기 발생원인과 관련해서는 김의동(2006), 신정완(2009, 2010) 참조.

〈그림 2-12〉 스웨덴 장기 및 단기 국채 수익률 추이(월평균, %)



자료: 스웨덴 통계청(www.scb.se).

시켰다.

첫째,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국민소득 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와 실업률 상승 및 빈곤층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지출 증대를 낳았다. 그 결과 중앙정부 채무가 1991년 말 기준 GDP의 48%이던 것이 1993년 말엔 90%대로 급증했다(<그림 2-10> 참조). 또한 통화정책도 긴축적으로 운용되면서 1992년에는 이자율이 12.5%에 달했다(<그림 2-12> 참조). 높은 이자율은 정부 채무의 이자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Whyman, 2003: 169).

두 번째 과정으로 금융위기 수습과 안정회복의 과정을 살펴보자. 금융위기 확산에 대한 정부의 본격적 개입은 1992년 9월 모든 은행들의 예금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을 선언하면서 이루어졌다. 게다가 스웨덴정부는 지불 불능 상태에 빠진 금융기관에 구제금융을 실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혹한 요구, 즉 주주에게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면서 정부 측에 약속서를 제출케 하였다.<sup>13)</sup> 이것이 금융위기 확산 조기 차단에 가장 기여한 조치로 지금 까지도 평가되고 있다.

1993년 5월에는 ‘은행지원위원회’가 설립되어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부실상태와 정부의 개입계획 등을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상세하게 밝힘으로써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데 기여하였다. 중앙은행(Riksbank)은 은행들에게 시장이자율로 자금을 충분히 공급했고 외환이 필요한 은행들에게는 외환도 공급했다(신정완, 2010: 47).

또한 자산관리회사(Bad Bank) ? (Securum)과 ? (Retrieva)를 통해 금융기관 자산의 재구성과 처분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그 외에 정부는 문제가 된 금융회사들의 인수합병과 향후 민영화 절차 등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위기에 대처하였다(한국금융연구원, 1997: 12~13). 금융위기는 금융부문의 구조조정도 강제하여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을 통해 전체 은행시장의 약 75%를 차지하는 현재의 스웨덴 4대 은행(Swedbank, Handelsbanken, Nordea, SEB)이 탄생하면서 경영효율성과 수익성을 크게 개선시켰다.<sup>14)</sup>

한글음 또는  
한글번역

1992년에는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고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함으로써 이후 30%까지 스웨덴 크로나화의 평가절하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를 통해 수출기업들의 국제 가격경쟁력을 제고하여 이후 스웨덴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Whyman, 2003: 171). 소위 서브프라임 사태에 직면하여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고했던 ‘금융위기 대처방식의 스웨덴 모

- 13) 스웨덴정부의 위기 대처방식은 은행 주주 각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인데 반해 미국의 방식은 은행과 주주가 책임져야 할 온갖 부담을 대중이 책임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위기 대처방식은 소수의 은행 대주주 부(富)를 보호해주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결과적으로 미국의 정부 부채를 증가시켜 미래 미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 14) 금융위기에 대처하면서 스웨덴정부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국가개입을 최소화시키려 노력했다. 국유화를 통해 위기에 처한 은행들을 구조조정을 하는 가운데, 오직 노르데아(Nordea) 은행지분 19%를 보유했을 뿐 나머지 지분은 모두 민영화를 통해 전문가 운영체제로 넘겼으며 시장 지향적 은행 운영을 촉진하였다. 해외, 특히 북구 인접국과 발트연안 국가, 독일, 영국 등에서 은행의 지점과 자회사를 설립하고 동시에 외국은행의 국내영업 규제를 철폐하면서 시장 지향적 금융부문 구조조정을 독려했다.

델'이 이때 성립된 것이다.

변동환율제로 이행한 이후 스웨덴정부는 그 이전까지 사민당 정부가 최우선 목표로 두었던 완전고용 달성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1993년 1월에 '허용 인플레이션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것을 거시경제정책의 최우선적 목표로 삼았다. 말하자면 1930년대 이후 유지되어온 케인스주의적 거시경제정책 패러다임을 포기하고 통화주의 패러다임을 수용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재정정책 기조도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예산절차 개혁을 통해 정부지출 억제를 제도화했다. 또 다른 한편 명목임금인상율도 인플레이션 억제 목표를 상회하지 않는 범위에서 반영되도록 했다. 이는 1990년대 초 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1980년대의 각종 거시경제정책이 인플레이션 억제에 실패한 데에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그 결과 정부의 부채규모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었다.

이제 마지막 과정으로서 금융위기가 온전히 수습되고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 이후 2000년대의 스웨덴 금융화 심화과정을 살펴보자. 위기가 수습되면서 인플레이션 억제정책과 건전재정 확보정책으로 정부 부채는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비금융기업부문과 가계의 부채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말하자면 정부 부채가 감소하는 공백을 비금융기업부문과 가계부문의 부채 증가로 유효수요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위기 수습 후 가계부문의 부채 증가가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GDP 대비 50%대에서 빠르게 증가하여 금융위기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10년에는 80%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스웨덴의 경우도 미국과 유사하게 1990년대 후반부터 가계부문의 지출 증가, 혹은 부채 증가를 통해 유효수요가 견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소비자금융의 확대로 임금소득과 지출의 금융화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금융 채널과 가계의 연결성이 더욱 커진 증거라 할

수 있다.

또 금융화를 촉진한 대표적 정책변화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지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8년에 단행된 공적연금개혁을 꼽을 수 있다.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이 결합된 개혁 이전의 스웨덴 연금제도는 보편적인 보장을 넘어서는 평등 제고의 기획이었다. 나아가 공적연금은 노동계급과 중간계급 간 연합의 기반을 창출해냄으로써 정치적 통합기능을 수행하였다.<sup>15)</sup>

하지만 신 연금제도의 골간을 형성하는 소득비례연금과 적립연금은 급여 소득에 따라 국가가 징수하는 연금보험료를 재원으로 한다. 보험요율은 급여의 18.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 중 16%는 소득비례연금의 기금으로 활용되며 국가가 부과방식으로 운영한다. 남은 2.5%는 개인마다 적립되어 스스로 운용하는 적립연금이 된다. 이런 개별적 적립방식은 연금제도를 금융시장 활동에 연결시킴으로써 스웨덴의 핵심적 제도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이런 스웨덴 방식의 개혁을 벨프레이지(Belfrage, 2008)는 ‘보편적 금융화(universalize financialization)’로 부르고 있다.

해외부문에서도 금융화를 촉진하였다. 금융위기로 스웨덴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자 스웨덴 기업들에 대한 해외자본의 투자가 급증했으며 1995~1999년 기간에 특히 해외자본의 유입이 활발했다. 또 금융위기의 성공적 해결 이후 스웨덴 증시가 초호황을 구가하면서 기업의 자금조달에서 증권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였다. 당연히 주식보유 인구조도 급증하여 2003년 초에 스웨덴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주식보유액이 89%를 기록했는데, 이는 영국과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신정완, 2010: 54).

이렇게 스웨덴 기업들에 대한 해외자본의 소유지분이 늘어나고 기업들의

15) 상세한 내용은 주은선(2006) 참조.

자금조달에서 증시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높아짐에 따라 이전 시기에 비해 스웨덴 경제 운용에서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적 요소가 강화되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특히 물가안정을 최우선시하는 통화주의적 거시경제정책은 물가안정을 통해 실질이자율을 높임으로써 금융투자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 간 경쟁과 금융활동 및 금융상품 다양성이 커지면서 금융시장의 활력이 제고되었다는 사실이다. 금융위기가 안정되어가면서 신용시장 및 자본시장의 자유화와 함께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던 보험부문, 모기지 은행부문, 각종 신용회사, 리스회사, 팩토링 회사 및 카드 회사 등의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신 연금제도 등의 영향으로 다양한 파생상품을 포함하는 주식 및 채권 시장이 급성장하였으며 역동적인 시장의 존재는 효율적 경쟁과 효율성 촉진 및 양질의 대출조건을 형성하기 시작했다(신정완, 2009: 54).

다양한 분야의 금융기관들이 스웨덴 금융시장의 경쟁 효율성을 높여간 결과 은행들의 경영효율성과 수익성도 크게 제고되어 2000년 이후 스웨덴 금융부문 이윤이 높아지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대체로 1990년대 후반 이후 스웨덴은 ‘통화주의적 사민주의 모델’<sup>16)</sup>로 전환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스웨덴에서의 금융화 역사는 짧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16) 이 모델의 핵심적 강점이 물가안정을 유지함으로써 건설한 경제성장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라면, 이 모델의 핵심적 약점은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매우 높은 국면에서 고용증대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스웨덴처럼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최근 세계경제위기 국면에서와 같이 세계적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크게 타격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물가안정을 최우선시하는 거시경제정책을 고수할 경우 수요부진으로 인한 대량실업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게 된다.

금융산업부문에서는 스웨덴을 발틱의 금융 중심지로 만들고자 하는 소위 ‘금융 중심지 스톡홀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데 반해 이에 저항할 구심점이 없는 상태여서 향후에도 금융화가 심화될 개연성이 높다. 스웨덴의 2012년 말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의 173%까지 급등했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위기가 찾아왔던 1990년대 최고치 135%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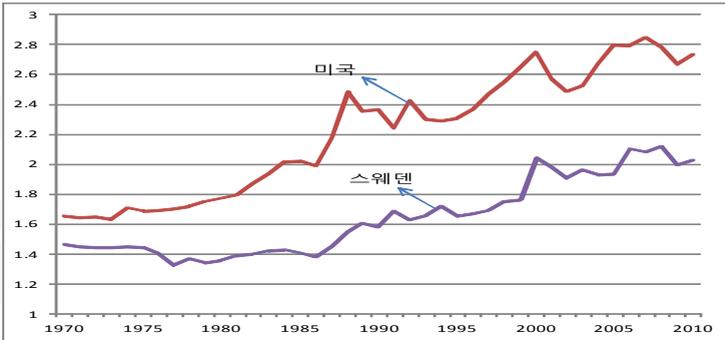
2013년에 들어와서 스웨덴 재정당국은 가계부채 부담을 늘려왔던 은행 담보대출의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은행의 모기지(mortgage) 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 수준을 최근 기준보다 상향시킬 것을 예고했다. 특히 스웨덴 가계부채는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에 접근하고 있어 두 방안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추가적 대안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 4) 미국과 스웨덴의 금융화와 소득불균등 추이

이 소절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금융화의 가장 큰 특징으로 지목한 소득불균등 문제를 미국과 스웨덴의 경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양국의 금융부문 이윤 증가 추세와 금융화 심화가 기존 문헌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1980년대 이래 미국과 스웨덴의 소득분배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향성이 있는지 여부를 몇 가지 소득분배 관련 지표, 즉 역(逆, inverted) 파레토(Pareto)-로렌츠(Lorenz) 계수 추이, 상위 10% 소득계층의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 지니계수 추이 등을 통해 살펴보자.

<그림 2-13>에 나타나 있는 역 파레토-로렌츠 계수는 소득분배 조사에서 상위 계층의 소득배분과 연관되어 있다. 일반적인 파레토-로렌츠 계수 대신에 역 파레토-로렌츠 계수를 사용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계수 값이 커질수록 상위 계층의 소득 비중이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한편

<그림 2-13> 미국과 스웨덴의 상위 1%의 역 파레토-로렌츠 계수<sup>17)</sup>



자료: <http://g-mond.parisschoolofeconomics.eu/topincomes/>의 통계를 근거로 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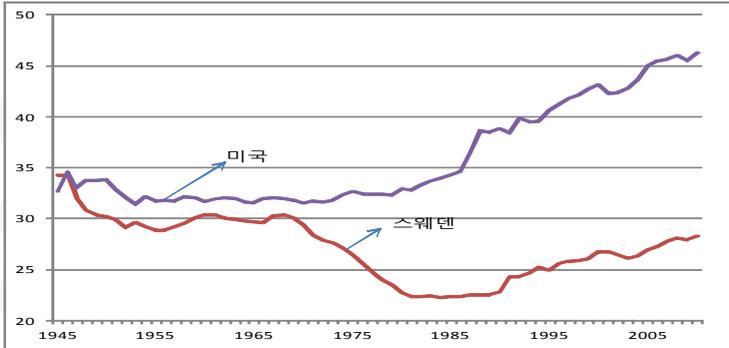
계수 값이 커질수록 상위 계층의 불균등성도 높아진다는 것을 동시에 나타내줌으로써 더 큰 경제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스웨덴 공히 상위 1% 계층의 소득이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 1980년대와 비교해 2008년 금융위기 전 거의 2배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약 50%대 증가에 그친 스웨덴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추세가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이 스웨덴에 비해 상대적으로 타 소득계층과 소득 1% 상위 계층 간 소득불균등이 더욱 심화되어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1991~1993년 금융위기를 거친 이후에 상위 1%의 소득이 크게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미국과 스웨덴의 상위 10% 소득계층의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를 <그림 2-14>에서 살펴보아도 비슷한 추세를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1980년대 초까지 30%대에서 안정을 유지하다 그

17) 역(逆) 파레토-로렌츠 계수(b)는 파레토-로렌츠 계수(a)로부터 산출된다. 그 공식은  $b = a / (a - 1)$ 이다. 대안적으로 b값은 직접 상위 소득계층 비중 시계열을 통해 계산할 수 있으며 그 공식은  $b = 1 / [\log(\text{상위 1\%} / \text{상위 0.1\%}) / \log(\text{상위 10\%})]$ 임. 이 그림의 경우 상위 1%의 소득계층과 1% 내 0.1%의 소득불평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14〉 미국과 스웨덴의 상위 10% 소득계층의 전체 소득에서의 비중 추이



자료: <http://g-mond.parisschoolofeconomics.eu/topincomes/>의 통계를 근거로 계산함.

이후부터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000년대 후반에는 45%대를 상회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는 1960년대 후반까지는 미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1970~1980년대에는 그 비중이 오히려 20%대 초반으로 크게 감소하다가 1990년대 초반 금융위기 이후에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0년대 후반에 20% 후반에 접근하고 있다(Roine and Waldenström, 2010: 306~309).

스웨덴의 경우 상위 10% 소득계층의 소득 점유율이 미국과 유사하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점유율의 경우는 미국의 절반 남짓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민주의적 정책에 입각한 복구모델이 영미식 모델에 비해 금융화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소득양극화 수준이 훨씬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적 체제, 즉 높은 세금-높은 복지를 근간으로 하는 복지국가 원칙, 탈상품화 관행, 재분배정책, 적극적 노동정책, 강력한 연금제도 등이 금융화에 따른 소득불균등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니계수를 통해 소득불평등 추세를 살펴보아도 이런 추세는 비슷하게 나타난다. OECD(2011) 자료를 통해 지니계수를 살펴보면,<sup>18)</sup> 미국의 지니계수는 1985년 0.34 수준에서 2008년 0.4 수준으로, 스웨덴의 지니계수는 0.2 수준에서 0.27 수준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양국 모두에서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졌지만, 지니계수에서도 미국의 소득불평등이 스웨덴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상위 1%, 상위 10%의 소득 증가 비중이 스웨덴보다 미국에서 더 크게 증가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런 결과는 도메이(Domeij, 2008)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그는 미국과 스웨덴 경험을 비교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소득불균등 심화는 주로 시장가격 변화와 그룹 내 편차 확대로 발생하는 데 비해 스웨덴의 경우 비록 금융이윤은 1980년대와 같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지만 노동력 구성의 변화<sup>19)</sup>가 중간 소득계층의 편차 증가<sup>20)</sup>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

18) 지니계수는 소득의 정의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다. OECD의 지니계수 계산방식은 세후 가치분소득으로서 정부의 현금보조(cash transfer)를 반영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19) 스웨덴에서는 종래 블루칼라 노동자조합인 LO와 경영자연맹인 SAF가 먼저 중앙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상승폭을 결정하고 그 후에 업종과 직능별 노동조합이 그에 준하는 형태로 개별 임금상승 수준을 결정했다. 연대임금제도로 대표되는 이 시스템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에 걸쳐 임금의 극단적인 평등화를 가져왔다. 직능과 업종 간의 임금격차가 억제된 결과 고졸 기능이라도 취업할 수 있는 건설제조업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수년간 대학교육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이나 기술직의 임금 수준과 별반 다를 바 없었다. 그러자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는 이점, 즉 교육프리미엄은 크게 떨어졌다. 그 결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정체되었고 생산성 향상과 구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되면서 점차 중앙단체교섭체계가 무너져 교육과 기능 수준에 따라 임금격차가 서서히 벌어지게 되었다. 이를 도메이(Domeij, 2008)는 구성효과(compositional effect)의 변화로 부르기도 한다.

20) 사실 스웨덴에서 중간소득계층의 불균등이 커지게 된 핵심적인 근거는 1980년대 중반에 중앙교섭체계가 와해되면서 업종과 직능에 따른 노동소득의 차이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연대임금제도가 약화되면서 임금결정과정은 더욱 탈집중화되고 개별화된 시스템으로 이행되었다. 1990년까지 모든 임금협상은 개별노

로 나타나며 상위 소득계층의 편차 확대는 주로 가격과 그룹 내 편차 확대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물론 옵션이나 금융이윤 몫의 증가와 같은 자본 소득의 체화가 고소득자의 소득불균등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과 스웨덴 양국 모두에서 금융화가 심화되어온 1980년대 이후에 사회 상위계급과 하위계급 간의 소득격차가 크게 혹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소득격차는 자본소득을 포함할 경우 더 확대된다. 즉, 주식 같은 금융자산이나 토지·주택 같은 부동산 자산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불평등의 급속한 증가가 금융화 심화의 중요한 경향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소득불균등 심화는 다시 사회불안정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강화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 4. 미국과 스웨덴 금융화의 비교

앞의 3절에서 살펴본 미국과 스웨덴의 금융화 심화과정과 그 특징을 공통점과 차이점의 측면에서 종합해 요약·정리함으로써 양국 금융화 과정의 특수성과 수렴 정도를 파악해볼 수 있다.

---

동조합과 사용자연합 간에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 초반에는 공공부문이 등급기준에서 개인기준의 임금형성체제로 이행하였다. 1997년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산업발전과 임금결정 협정(Agreement on Industrial Development and Wage Formation)’이 만들어져 이를 근거로 대체적인 임금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임금 그룹 내 차이가 크게 확대되었다.

## 1) 미국과 스웨덴 금융화의 공통점

먼저 미국과 스웨덴 금융화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유사한 특징들을 정리해보자.

첫째, 무엇보다 신자유주의적 금융화가 본격화된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양국 모두에서 금융부문의 비중과 금융부문의 이윤 비중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즉, 양국 모두에서 1980년대 이후 금융의 역할이 심화되는 금융 주도 축적체제로 이행해왔음을 확인하였다. 미국의 경우 <그림 2-3>, <그림 2-4>, <그림 2-5>에서, 스웨덴 경우 <그림 2-3>과 <그림 2-9>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금융화 확산의 정도에서는 미국이 스웨덴의 비중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자유주의적 정책에 기반을 둔 미국에 비해 스웨덴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금융화에 저항하는 조직과 논리가 상당히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sup>2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이전까지 위험을 사회화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1980년대 이후(신용시장과 자본시장 규제완화 이후) 스웨덴 사회에서 금융위험의 사유화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직은 금융화 수준이 스웨덴 복지국가체제의 근간을 흔들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 국가 주도의 금융화에 점점 더 영향을 받기 쉬운 상태로 변화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국가 주도적인 스웨덴식 포디즘하의 단일체적 성격과 금융독립성의 성격이 1980년대 이후의 신용시장과 자본시장의 개방 및 1999년 연금제도 개혁의 영향으로 국가 주도적 금융화 과정으로 이행해 온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양국 모두 경제주체의 부채 증대에 의존해 금융 관련 수요가 증대되

21) 벨프레이지(Belfrage, 2008: 282)와 데이비스와 매그너스(Davis and Magnus, 2010: 242) 등에서도 동일한 추론을 하고 있음.

어왔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과도한 가계와 기업 및 정부 부채로 말미암아 부동산 및 금융자산 가격 거품이 형성되고 이것이 서브프라임 사태로 연결되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스웨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계 및 기업부채가 금융위기 이후에 높게 형성되면서 지속적으로 부동산가격을 상승시켜 오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가계부채가 GDP의 80%를 상회하면서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점이<sup>22)</sup> 이를 잘 대변하고 있다. 해외부문으로부터의 투자유입도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금융수요를 증대시키는 데 일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양국에서 금융화와 소득불균등의 심화 간에 상당한 상관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점이다. 양국 모두 역 프래토-로렌츠 계수 추이, 상위 10% 소득계층의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 지니계수 추이 등에서 금융화 심화 기간 동안 공통적으로 소득불균등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양국 모두 정책적 변화에 의해 금융화가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탈규제를 중심으로 제도적 측면에서 금융화에 유리한 정책조치들이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금융화가 빠르게 심화되었다. 특히 과거 실물부문의 조력자로서의 금융의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많은 금융상품을 통해 자립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주체로 부상되어왔음을 확인하였다. 금융의 자립화가 심화되면서 금융기관들은 경제시스템을 합리화하는 협력자로 기능하기 보다는 오히려 정보비대칭성을 자본화하여 투기와 위험선호를 통해 사적이윤을 추구할 가능성을 크게 높여왔다.

다섯째, 2000년대 이후 양국에서의 저금리정책이 유동성 증대를 초래해 금융화를 심화시키는 데 일조하였다는 점이다. 200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22) <http://in.reuters.com/article/2012/09/18/idINL5E8KI4A220120918> 참조.

1~2%대의 저금리가 지속되고, 스웨덴에서는 2~4%대의 저금리가 유지되어왔다. 그 결과 기업과 가계 모두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데 익숙해졌다. 기업은 저금리로 돈을 빌려 투기적 투자에 나섰고 개인도 빚을 얻어 주택이나 기타 소비재를 사들였다. 그리하여 부채 증가의 가속화가 20세기 말 이후 금융자본주의의 지속적이고 제도화된 특징이 되었다.

여섯째, 양국 모두 연금제도가 금융화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스웨덴도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들 연금재원의 일부를 모두 개인이 자유롭게 금융상품을 선택해 적립하도록 적립연금을 적용(연금위탁 개인계정 개설)하고 있다. 이런 개별적 적립방식은 연금제도를 금융시장 활동에 직접 연결시킴으로써 금융화를 심화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다양한 제도적 표현에도 불구하고 연금펀드시장의 팽창을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양국의 연금제도를 살펴보면 연기금의 상당 부분이 사회적 기금이 아니라 가입자 개인자산의 성격을 띠게 되면서 연기금 운용의 최대 과제가 점차 어떻게 투자하여 이윤을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연기금의 금융시장 투입 증가와 함께 국내외 주식시장 및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 등과 관련한 연기금 운용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면서, 연기금이 전 지구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금융자본으로 탈바꿈하고 세계적인 금융자본주의를 뒷받침하는 주요한 동력으로 기능하게 되었다(주은선, 2009: 82).

## 2) 미국과 스웨덴 금융화의 차이점

양국 금융화의 차이점은 먼저 금융화의 수준과 금융이윤의 수준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양 지표 모두 1980년대 이후 높은 수준에서 출발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에 스웨덴의 경우 양 지표의 수준이 미국보다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출발하였으며 신용시장과 자본시장의 개방에 따라 높은 증가세를 보이긴 했으나, 1990년대 초반 금융위기를 겪은 후 상대적으로 금융화 수준의 상승세가 완만하게 이루어졌으며 금융부문 이윤율의 비중도 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결국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삼아온 미국의 경제 시스템과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의 근간을 유지해온 스웨덴의 경제 시스템의 차이에 기인한다. 스웨덴의 금융화 수준이나 금융이윤의 비중 및 소득양극화 수준 등이 미국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것은 1980년대 금융자유화의 결과 겪게 된 금융위기의 경험과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정책 및 탈상품화 정책 기조 등이 급격한 금융화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그동안 유지되어오던 사회민주주의적 요소의 일정 부분이 금융화 심화와 함께 약화되어온 것은 사실이다.

둘째, 금융화 심화와 관련된 정부 역할에서의 차이점을 들 수 있다. 양국 모두에서 가계와 기업의 부채 증가를 통한 유동성 증대로 금융수요 창출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정부부채도 동시에 크게 증가하여 2011년 GDP의 100% 수준을 유지할 정도로 유동성 증대를 초래하는 데 일조를 하였다. 반면에 스웨덴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에 힘입어 GDP 대비 정부부채는 금융위기가 수습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 40% 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경우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모두에서 부채 증가를 통해 유동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금융화가 심화될 수 있는 여지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왔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스웨덴의 경우 비록 민간부문의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금융자산과 부동산가격을 상승시켜왔지만 건전재정 정책과 인플레이 억제정책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에서는 오히려 급격한 금융화를 억제

하는 혹은 적절히 견제하는 정책 노력의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미국에 비해 스웨덴의 금융화 심화가 완만하며 안정적 추세를 보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글로벌 불균형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달러 중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국제 유동성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시현하였으며 그 적자를 흑자국의 미 국제 투자자금 등으로 보전하는 구조를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지속적인 해외 유동성 공급에 의한 금융투자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스웨덴의 경우 기축통화국 역할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경상수지 흑자국이기에 때문에 미국에 비해 해외부문 유동성 공급의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소득불균등의 정도 문제를 들 수 있다. 양국 모두 금융화가 소득불균등성을 높여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스웨덴의 경우 미국보다 훨씬 양호한 소득분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모습은 스웨덴 모델이 미국 모델에 비해서 금융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훨씬 더 안정적인 완충장치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스웨덴 모델의 경우 기업수준의 노동 유연성은 높으면서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높은 노동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보편적 복지체제의 근간을 유지함으로써 소득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각국 경제의 고유한 특성 차이 때문에 금융화 수준과 그 영향의 크기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미국과 스웨덴의 금융화 과정에 대한 검토에서 금융화의 계기와 금융화를 촉진시킨 동인들은 상당 정도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들 공통적인 요인들이 각 경제주체들의 부채규모를 증대시켜 경제를 끊임없이 불안정화하고 임금소득자의 자산과 소득을 전유하는 방식으로 축적체제를 변화시켜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미국과 스웨덴 금융화의 비교 요약

물론 스웨덴의 경우 미국과 달리 정부부채가 매우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경제불안정성의 방과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절벽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미국에 비해 상당히 안정성을 보인다. 하지만 기업과 가계의 부채가 임계치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의 금융 주도 축적체제 모두 금융자본의 자유와 수익성 증진에 기초한 성장전략에 기대어왔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본격적인 금융화 심화 기간을 거치는 동안에 소득불균등의 정도나 정부부채 문제를 포함해 미국이 스웨덴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불안정 요소들이 증폭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의 경우도 금융화 이후 중앙노사교섭체제도 와해되고 소득분배도 이전 기간에 비해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지 1990년대 초반의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인플레이 억제정책과 적극적 노동관리정책 및 보편적 복지체제를 근간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스웨덴에서 금융화가 완만하게 진행되어온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주주이익을 중시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한 미국이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제를 혁신한 반면, 노사협력과 복지정책을 중시한 유럽 국가는 노동시장 경직성과 무거운 사회복지비용으로 국가경쟁력이 추락했다면서 미국 모델의 우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유럽 내 다양한 경제모델(라인 모델, 노르딕 모델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유럽 모델을 하나로 묶어 미국과 비교 평가함으로써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모델은 그동안 높은 경제·금융자유화와 노동유연성으로 대표되는 시장친화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왔다. 1990년대 이후 20여 년간 스

웨덴에서는 감세 등의 조세개혁, 재정영역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출 축소, 사회복지에서는 복지의 부분적 축소와 연금의 급여 인하와 자동안정화 조치 등이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화가 심화되는 시기에도 여전히 높은 경제성과 고용안정성 및 보편적 복지제도를 관찰해왔다는 점은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복지국가 모델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 근거가 취약한 것임을 입증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험은 세계화, 금융화에 적응하는 방법이 영미식 모델 외에 다른 대안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새로운 연금제도 시행으로 스웨덴 국민들의 일상이 금융시장 성과와 개별 기업의 성과에 밀접하게 연계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금융규제나 연대임금제 등을 통해 금융적 위험이나 사회적 위험이 상당한 정도로 사회화되었던 과거 사회민주주의적 포디즘적 관행이 점차적으로 금전적 개인주의로 대체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추세 변화는 임금노동자 기금제도와 임금의 중앙교섭 관행이 무너지고 점차 개별 사업장별 임금협상이 확산되면서 스웨덴에서의 정치경제적 힘이 조직된 노동조합으로부터 자본가와 고용주 쪽으로 다소 기울어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 결과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체제는 점차 ‘공급중시에 초점을 맞추는 진보적 국가경쟁력 강화 모델’로 변화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5. 결론

미국과 스웨덴 등 각 나라의 시장경제제도는 그 나라의 사회제도에 착근되어(embedded) 있다. 따라서 단일한 세계화, 금융화 압력에 대해서도 각국

의 다양한 경제모델은 다양한 반응을 하며, 특정 모델로 획일적으로 수렴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스웨덴 양국 모두에서 금융화가 심화되어 왔지만 그 정도나 대응방식 및 변화 추이 등에서 양국의 고유한 경제사회 시스템의 성격에 따라 그 골간이 상호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분명한 것은 양국 모두에서 금융화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금융화를 촉진한 근거에서도 많이 닮아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국에서 금융화 심화 과정은 금융부문의 자립화와 함께 경제주체, 즉 미국의 경우 정부, 기업, 가계가, 스웨덴의 경우 기업과 가계가 각기 부채를 증대시키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온 과정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금융화는 오늘날 부채에 의존한 경제를 탄생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양국 경제가 채권-채무라는 권력관계에 점점 더 의존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금융화 과정은 양국 모두에서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켜왔으며 경제주체들의 지속적인 금융버블에 의존해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건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도 알 수 있다. 그것은 실물경제에서 출구를 찾지 못한 과잉자본이 금융에 투입됨으로써 자산가격의 상승을 통한 투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화되어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상위 소득계층에 부가 더욱 집중되는 소득 양극화를 초래함으로써 하위 소득계층의 금융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키우는 동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기존 경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버블에 계속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서브프라임 위기 후 세 차례에 걸친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과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 무제한 매입 정책 등이 이를 잘 대변하고 있다. 즉, 양국 금융화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금융의 과잉, 부채의 과잉이 세계적 금융화의 현주소인 것으로 판단된다.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동일한 금융상품, 동일한 조직, 동일한 상층 관리자, 시스템적 위험성을 감안한 대마불사 은행의 구제 관행 유지,

낮은 이자율 유지, 유동성 증대(Q3: 3차 양적완화 정책)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위기 이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결국 새로운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만약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금융위기 전에 금융부문이 버블이었다는 가설이 맞다면 향후 새로운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즉, 새로운 금융투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국 금융부문은 다시 GDP의 궤적을 크게 벗어나 비정상적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란 점이다. 당연히 새로운 위기는 아마 현재 우리가 극복했다고 평가하는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로 나타나 세계경제 전반을 요동치게 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 점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금융의 공공재적 기능에 대한 믿음은 무너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생존을 위한 사적이익 추구에 내몰리게 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향후 금융의 한계에 대해 새롭게 접근해야 하며, 새롭게 금융기능을 재건할 글로벌 거버넌스 및 국제금융체제 수립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해져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카데미

## 참고문헌

- 기타오카 다카요시. 2010. 『복지강국 스웨덴, 경쟁력의 비밀: 베푸는 복지를 넘어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복지국가 실현까지』. 최려진 옮김. 위즈덤 하우스.
- 김의동. 2006. 「세계화시대의 스웨덴 모델: 신자유주의 정책과 복지국가체제 간 적합성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6호, 385~413쪽.
- \_\_\_\_\_. 2011.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와 자본축적 구조 변화: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무역연구》, 제7권 4호, 561~594쪽.
- 로고프·라인하트(Kenneth S. Rogoff and Carmen M. Reinhart). 2010. 『이번엔 다르다』. 최재형·박영란 옮김. 다른세상.
- 신정완. 2009. 「스웨덴 ‘제3의 길’ 정책의 실패 원인: 정책 부조화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경제평론》, 제32호, 67~99쪽.
- \_\_\_\_\_. 2010. 「1990년대 초 스웨덴의 금융위기: 원인과 진행경과, 그리고 스웨덴 모델에 미친 영향」. 《스칸디나비아 연구》, 제10호, 41~62쪽.
- 유모토 겐지·사토 요시히로. 2011. 『스웨덴 패러독스』. 박선영 옮김. 김영사.
- 이종태. 2012. 「악마의 속삭임 ‘부자되세요」. 《시사IN》, 제262호, 30~33쪽.
- 전창환. 2009.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와 금융자본의 재편」. 《동향과 전망》, 2009년 여름호(통권 76호), 109~143쪽.
- 정민. 2010.12.7. 「한국과 미국 퇴직연금 시장의 특징 비교와 전망」. 《연금시장리뷰》, 27호. 현대증권, 1~13쪽.
- 조복현. 2009. 「미국 금융위기와 신자유주의 경제질서」. 《사회경제평론》, 32호(2009년 상반기), 335~369쪽.
- 주은선. 2006. 『연금개혁의 정치: 스웨덴 연금제도의 금융화와 복지정치의 변형』. 한울아카데미.
- \_\_\_\_\_. 2009. 「신자유주의 시대의 연금개혁: 노후보장의 시장화, 개별화, 금융화」. 《경제와 사회》, 겨울호(통권 제84호), 70~107쪽.
- 퍼거슨, 니얼(Niall Ferguson). 2010. 『금융의 지배: 세계금융사 이야기』. 김선영 옮김. 민음사.
-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팀. 1997. 『스웨덴 금융위기와 정부의 지원정책』. 한국금융연구원.
- 홍장표. 2010. 「글로벌 금융위기와 금융주도 자본주의」.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7권 제3호, 241~272쪽.
- Assa, Jacob. 2012. “Financialization and its Consequences: the OECD Experience.” *Finance Research*, Vol.1, No.1, pp.35~39.
- Atkinson, Tyler, David Luttrell and Harvey Rosenblum. 2013. “How Bad Was It? The

- Cost and Consequences of the 2007-09 Financial Crisis.” Staff Papers(2013.7.20). 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
- Belfrage, Claes. 2008. “Towards ‘Universal Financialisation’ in Sweden?” *Contemporary Politics*, Vol.14, No.3, September, pp.277~296.
- Crotty, James. 2005. “The Neoliberal Paradox: The Impact of Destructive Product Market Competition and ‘Modern’ Financial Markets on Nonfinancial Corporate Performance in the Neoliberal Era.” in G. A. Epstein(ed.). *Financialization in the World Economy*. Northampton, MA: Edward Elgar. pp.77~110.
- Cynamon, B. Z. and S. M. Fazzari. 2009. “Household Debt in the Consumer Age: Source of Growth-Risk of Collapse.” *Capitalism and Society*, 3(2), 1~30.
- Dadush, Uri, Kermal Dervis, Sarah Puritz Milsom and Bennett Stancil. 2012. *Inequality in America*. Washington, D.C.: Brooking Institute Press.
- Domeij, David. 2008. “Rising Earnings Inequality in Sweden: The Role of Composition and Prices.” *The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110(3), pp.609~634.
- Duménil, G. and D. Lévy. 2004. “The Real and Financial Components of Profitability: USA 1948-2000.”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y*, 36, pp.82~110.
- Edin, P. A. and B. Holmund. 1995. “The Swedish Wage Structure: The Rise and Fall of Solidarity Wage Policy.” in R. B. Freeman and L. F. Katz(eds.). *Differences and Changes in Wage Struc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ptstein, Gerald A. and Arjun Jayadev. 2005. “The Rise of Rentier Incomes in OECD Countries: Financialization, Central Bank Policy and Labor Solidarity.” in Gerald A. Eptstein(ed.), *Financialization and the World Economy*. Edward Elgar. pp.46~74.
- \_\_\_\_\_. 2007. *The Correlates of Rentier Returns in the OECD Countries*. unpublished manuscript.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MA.
- Ertuk, I. et al. 2004. “Corporate governance and disappointment.”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1(4), pp.677~713.
- Eva de Francisco and Vincenzo Quadrini. 2012. “Financial Globalization, Inequality, and The Raising of Public Debt.” Working Paper No.12-6. Research Department, Federal Reserve Bank of Philadelphia.
- Freeman, R. B. 2010. “It’s Financialization!” *International Labour Review*, Vol.149, No.2, pp.163~183.
- Freeman, Richard, B., Birgitta Swedenborg and Robert H. Topel(eds.). 2010. *Reforming the Welfare Stat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owan, P. 2009. “Crisis in the Heartland: Consequences of the New Wall Street System.” *New Left Review*, 55, pp.5~29.
- Hacker, Jacob S. and Paul Pierson. 2010. “Winner-Take-All Politics: Public Policy, Political Organization, and the Precipitous Rise of Top Incomes in the United

- States.” *Politics & Society*, 38, pp.152~204.
- Hein E. and Van Treeck. 2008. “‘Financialisation’ in Post-Keynesian Models of distribution and growth: A Systematic Review.” Macroeconomic Policy Institute Working Paper.
- Jones, S. 2008. “A trillion dollar mean reversion.” *ft.com/alphaville*, *Financial Times*, blog, July 15(<http://www.ft.com/alphaville>).
- Johnson, S. 2009. “The Quiet Coup.” in *the Atlantic Magazine*, May. Available at <http://www.theatlantic.com/magazine/print/2009/05/the-quiet-coup/307364/>
- Johnson, S. and J. Kwak. 2010. *The Wall Street Takeover and the Next Financial Meltdown*. New York: Pantheon Books.
- Kedrosky, P. and D. Stangler. 2011. “Financialization and Its Entrepreneurial Consequences.” Kauffman Foundation Research Series: *Firm Formation and Economic Growth*, March .
- Khatiwada, Sameer. 2010. “Did the financial sector profit at the expense of the rest the economy?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bor Studies*. ILO. Discussion Paper. DP/206/2010.
- Kregel, J. 2008. “Changes in the U.S. Financial System and the Subprime Crisis.” The Levy Economics Institute of Bard College. Working Paper, No.530.
- Krippner, G. 2005. “The Financialization of the American Economy.” *Socio-Economic Review*, 3(2), pp.173~208.
- Lapavitsas, C. 2009. “Financialised Capitalism: Crisis and Financial Expropriation.”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Research on Money and Finance Discussion Paper, No.1.
- Mckinsey Global Institute Mapping. 2011. “Mapping Global Capital Markets 2011.” Mackinsey&Company.
- Madigan, K. 2011. “Like The Phoenix, U.S. Finance Profits Soar.” *Real Time Economics*. WJS Blogs; (<http://blog.chosun.com/ifins/5875459>).
- OECD. 2011. “Growing Income Inequality in OECD Countries: What Drives It and How Can Policy Tackle It?” OECD Forum on Tackling Inequality. Paris: OECD. <http://www.oecd.org/social/socialpoliciesanddata/47723414.pdf>
- Orhangazi, Özgür. 2008. *Financialization and the US Economy*. Edgar Elgar.
- Palley, T. 2007. “Financialization: What It Is and Why It Matter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olitical Economy Research Institute Working Paper.
- Power, D., G. Epstein and M. Abrena. 2003. “Trends in the Rentier Income Share in OECD Countries, 1960-2000.” unpublished manuscript.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MA. April.
- Roine, Jesper and Daniel Waldenström. 2010. “Top Incomes in Sweden over the Twen-

- tieth Century.” in A. B. Atkinson and T. Piketty(eds.). *Top Incomes: A Global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chapter 7. Series updated by the same authors.
- Sanja, Panic. 2010. “Household debt ratios: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determinants of the debt increase from 1980-2009.” Bachelor thesis, Department of Economics, Lund University.
- Stephen, G. C., M. S. Mohanty and Fabrizio Zampolli. 2011. “The Real Effects of Debt.” BIS.
- Steven, J. Davis and Magnus Henrekson. 2010. “Economic Performance and Market Work Activity in Sweden after the Crisis of the Early 1990s.” in R. B. Freeman, Birgitta Swedenborg and Robert H. Topel(eds.). *Reforming the Welfare State: Recovery and Beyond in Sweden*. NBER. pp.225~252.
- Stiglitz, J. E. 2009. *Freefall*.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Stockhammer, E. 2004. “Financialization and the Slowdown of Accumulation.”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28(5), pp.719~741.
- \_\_\_\_\_. 2008. “Some Stylized Facts on the Finance-Dominated Accumulation Regime.” *Competition and Change*, 12(2), pp.184~202.
- Torres, R. 2010. “Incomplete Crisis Responses: Socio-Economic Costs and Policy Implication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Vol.149, No.2, pp.227~237.
- UNCTAD. 2012. “The Paradox of Finance-Driven Globalization.” UNCTAD. Policy Brief, No.01(January).
- Whyman, Phillip. 2003. *Sweden and the ‘Third Way’: A Macroeconomic Evaluation*. Ashgate.

## 중국 발전국가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정구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 1. 서론

1978년 중국이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한 이래로 놀라운 경제적 성과를 보여주면서 중국 관련 전문가들에게 두 가지 쟁점을 던져주었다. 첫째는 중국이 높은 경제성장을 거둔 동력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고, 둘째는 미국이 국제 정치경제 영역에서의 영향력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특히 둘째 쟁점은 중국이 세계 2위의 무역대국으로 올라서고 무역수지 흑자폭을 확대하여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고를 기록함으로써 중국의 경제성장 모델이 워싱턴 컨센서스로 요약되는 미국의 신자유주의 발전 모델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또는 전망을 반영하고 있다.

---

\*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10-413-B00027)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

이 두 가지 쟁점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이 신고전과 성장모델(시장의 확대, 규제완화, 작은 정부, 전면적인 대외개방 등)을 따른 것이 아니라면 중국식 발전 모델이 미국 같은 앵글로색슨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이다. 중국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에 비해 미국은 쌍둥이 적자에다 2007년 심각한 경제위기의 진원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두 국가의 경제전망은 뚜렷한 대비를 보이고 있다. 2004년 라모(Joshua C. Ramo)의 베이징 컨센서스는 이런 기대를 적절히 잘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Ramo, 2004). 또한 최근 중국 모델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증대한 것도 이를 반영한다(전성홍, 2008; 장윤미, 2011).

중국 경제도 2007년부터 시작된 세계경제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중국의 발전경험에 대한 인기와 기대 그리고 중국 경험의 일반화와 중국 모델의 해외 확산 기대가 존재한다. 퓨스미스(Joseph Fewsmith)는 중국 모델에 대한 논쟁이 1990년대 초반에 벌어진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하는 논쟁의 재연이며, 더 나아가 중국 문명의 독특성에 대한 논쟁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Fewsmith, 2011). 중국 내에서도 중국 모델에 대한 관심이 많다. 대표적인 인물은 북경대학교 판웨이(Pan Wei) 교수인데, 그는 중국 모델이 성공적이었을 뿐 아니라 중국 문화의 연속성을 구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Pan, 2010).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판웨이 교수가 법치와 민주주의는 분리할 수 있고 또 분리되어야 하는데, 중국은 전자는 받아들이고 있지만 후자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판웨이의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민주주의는 억압하지만 그 대가로 경제발전을 가져다주었다는 인식 때문인 듯하다.

중국은 권위주의적 체제이고 또 중국공산당(CCP)의 일당국가이긴 하지만 바로 그 덕분에 경제발전을 가져왔다는 함의가 발전국가론에 내포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경제발전을 설명하는 하나의 유력한 가설인 발전국

가론을 검토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 논문은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경제발전을 설명하는 가설로 제기된 발전국가론을 중국에 적용하는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발전국가론의 역사적 기원과 이 모델을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에 적용한 사례를 통해 발전국가론의 일반적 특징을 묘사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3절에서는 발전국가론 모델을 중국에 적용해 설명했던 이전 논의들을 검토할 것이다. 4절은 발전국가론을 중국에 적용할 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국가와 자본의 관계, 국가의 산업정책, 그리고 국가의 대외 경제정책의 측면에서 고찰할 것이다. 이 장에서 논의되고 도출되는 결론은 중국의 경제발전을 발전국가론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주장에서 더 나아가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에도 발전국가론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함의를 보여줄 것이다. 5절에서는 중국의 경제발전을 설명하는 대안적인 명제들을 제기할 것이다. 6절은 결론이다.

## 2. 발전국가론과 동아시아 신흥공업국

발전국가론의 역사적 기원은 19세기에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후진국이었던 독일에서 형성된 역사학파나, 경제발전에서 후진성의 이점을 주장한 거셴크론(A. Gerschenkron) 또는 미국 건국 초기에 영국의 선진산업의 침투에 대비해 보호주의를 주장한 해밀턴(A. Hamilton)으로까지 거슬러갈 수 있다. 위의 세 경우에서 공통점은 자유무역과 시장 개방을 주장하는 선진 자본주의 경제의 영향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후진 상태의 자국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전략을 추구했다는 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남미 국가들은 수입대체공업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추진했지만 1980년대 초반에 외채위기를 겪으면서 경제발전은 실패로 귀결되었다. 이어서 1980년대 후반 냉전 종식과 더불어 정부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시장의 힘(market force)을 강화할 경우에만 경제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이 널리 퍼졌는데, 이런 믿음을 보통 신자유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지적 분위기에서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이 등장했다. 처음에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발전은 제약 받지 않은 시장의 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Balassa et al., 1982). 하지만 일본 경제발전과 이 과정에서 통산성(MITI)이 수행한 역할에 대한 찰머스 존슨의 고전적 연구(Johnson, 1982)를 필두로 엘리스 암스덴(Amsden, 1989), 로버트 웨이드(Wade, 1990), 피터 에반스(Evans, 1995) 등의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이 연구들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을 지도하는 국가의 전략적 역할에 대한 강조였다. 이로 인해 발전국가론이 인기를 얻고 학계에서 논의가 활발해지자 자유시장과 최소정부의 강력한 옹호자였던 세계은행도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에서 국가의 역할을 인정하게 되었다(World Bank, 1993).

발전국가론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나름의 역사성을 갖고 있으며, 국가의 독특한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국가론과는 구분된다. 보통 정부는 재정 및 통화 정책을 통해 경제에 개입하고 자국 산업과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및 환율 정책을 펼치지만 이런 모든 국가들을 발전국가라고 말할 수는 없다. 발전국가론은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발전국가는 국가의 경제발전, 생활수준의 향상, 기술 격차의 해소를 위해 힘과 권한을 지닌 강력한 정치경제적 엘리트 또는 정책입안자를 갖고

있다. 이 엘리트들은 발전이라는 의제를 달성하기 위해 민족주의에 호소하기도 한다.

둘째, 이 엘리트들을 보완할 능력 있고 권위주의적인 국가기구가 경제영역에서 존재하는데, 이 기구들이 수행하는 기술적 관리능력은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지도하고 촉진한다. 이런 경제기구로는 일본의 통산성(MITI), 한국의 경제기획원, 대만의 경제계획발전위원회 등이다.

셋째, 발전 지향적인 엘리트나 국가기구들은 사회의 특정한 이해집단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relative autonomy)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발전국가는 자본이나 노동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경제발전이라는 지상과제를 수행한다. 에반스는 경제발전이라는 목표를 수행하는 데 발전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착근된 자율성(embedded autonomy)’이라는 개념을 주조했다. 그는 “국가를 사회에 묶고, 목표들과 정책들의 지속적인 협상과 재협상을 위한 제도화된 경로를 제공하는 것은 일련의 구체적인 사회적 유대에 착근된 자율성”(Evans, 1992: 162)이라고 주장했다.

넷째, 발전국가는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시민사회나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경향을 가진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좋은 정부(good government)가 들어설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발전국가론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사이의 연관이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발전국가론의 특징들을 다른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할 뿐 아니라 발전국가론에 대한 정의도 논자들에 따라 다양하다(윤상우, 2006, 45~68; 박은홍, 2008: 17~38 참조). 그래서 스티브스(R. Stubbs)는 “발전국가 개념은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데, 어떻게 발전국가를 정의하느냐에 따라 논쟁의 많은 것이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의가 협소할수록 발전국가

의 사망을 선언하는 것이 더 쉬워지고, 정의가 광범할수록 발전국가 최초 구성의 더 많은 측면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현대사회에 남아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Stubbs, 2009: 13).

1990년대 들어서면서 발전국가론은 두 가지 점에서 도전을 받았는데, 하나는 이론적인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실제 현실의 검증의 문제였다. 첫째는 세계화가 확산되고 심화되면서 발전국가는 물론이고 심지어 모든 국가가 그 권한이나 역할을 제약받거나 억제된다는 주장이었다(Cerny, 1997). 둘째는 1997년의 동아시아 위기를 계기로 발전국가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고, 세계화나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인위적인 시장개입 및 전략적 산업 정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규제국가로 바뀌었다는 주장이다(김운태, 1999). 이런 주장들에 대해 발전국가론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논자들은 세계화 시대에 국가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형되었을 뿐이며,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신흥공업국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에서 국가의 역할을 제기하며 발전국가론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다(위스, 2002: 110~118).

특히 세계화로 인해 국가 능력의 약화 주장에 반대하는 위스(Linda Weiss)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생산의 지역적 통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세계화에 대응했다고 주장한다. 위스는 통합과정에서 위계적 질서가 확립되는데, 이것은 국가의 강력한 변형능력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그녀는 세계화 시대에 국민국가의 역량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위스, 2002: 309).

다른 한편 하야시(Shigeko Hayashi)도 발전국가론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전국가 모델은 시장 메커니즘이 저발전 상태에 있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개도국에서 국가 주도의 산업화 모델이다. 시장의 저발전(또는 부재)은 산

업이 성장하거나 사라져야 하는 신호를 시장이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모든 경제활동을 시장에 내맡기기보다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는 어떤 산업을 정해서 발전시킬지를 파악하고 정해야 한다. 하지만 특정 산업을 촉진하는 수단이 보호무역주의와 같은 것은 아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다국적기업들을 활용해 국가 주도의 산업화를 수행하고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자신들의 경제적 구조를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켰다. 오늘날 개도국들이 추구해야 할 미래의 전략을 고려할 때 이들의 경험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Hayashi, 2010: 62).

왕(Joseph Wong)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현실에서 기존의 발전국가는 더 이상 맞지 않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의 역할이 변화했지만 발전의 개념을 폭넓게 정의하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여전히 발전국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의 발전국가를 재구성하는 것이 진부화를 의미하지 않으며, 발전을 지향하는 국가들이 동아시아의 경제, 사회, 정치 발전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Wong, 2004: 357). 특히 왕은 새로운 발전국가의 역할이 산업정책에 국한되지 않고 연구개발, 사회복지개혁, 일반적인 경제정책까지 포함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국가는 여전히 경제발전에서 중요하고 단지 그것이 어떻게 중요한가가 상당히 변화했을 뿐”이다(Wong, 2004: 357).

비슨(Mark Beeson)은 동아시아 발전국가들이 미국식 자본주의로 수렴한다는 가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세계화 현상으로 모든 곳에 산재한 외부적 경쟁 압력이 있음에도 고도로 독특한 형태의 경제적 조직들이 지속된 것은 가장 놀랄 만한 역설”(Beeson, 2001: 488)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발전국가라는 것이 동아시아의 특수한 역사적 환경에서 과거의 투쟁과 타협을 통해 형성된 독특한 계급구조에 기초하여 성장해왔고, 가장 강력한 행위자들

인 국가와 자본가계급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이해를 증진시켰기 때문에 지속되었다는 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뮌처럼 강력하게 주장하지는 않지만 발전국가가 더 이상 적절하거나 효과적이지 않게 되어도 경로의존성 때문에 계속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Beeson, 2001: 489).

발전국가론에 대한 다양한 도전과 반박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경제발전을 설명하기 위해 주조된 발전국가론을 중국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 3. 발전국가론의 확장: 중국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

많은 중국 전문가들은 개혁과 경제발전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들을 도입하곤 했는데, 기업가적 국가(entrepreneurial state), 조합주의 국가(corporatist state), 규제국가(regulatory state), 이중발전 국가(dual development state), 시장촉진 국가(market-facilitating state), 지대추구 국가(rent-seeking state) 등이 그것들이다.

p.115, 124  
이중적 발전주의 국가  
용어통일

중국의 경제발전을 설명하는 데 이처럼 다양한 개념들이 등장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에 비해 중국은 너무 거대하다는 점이다. 중앙정부 외에도 31개의 지방정부가 개혁과 경제발전의 주체들일 뿐 아니라 같은 중국 내에서 경제정책도 서로 상반되기까지 하는 사례가 동시에 나타나곤 한다. 그래서 중국을 하나의 개념들로 일반화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둘째는 첫째 이유와 연결되는 것으로서, 정책결정의 단위가 분권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산하의 각 부처들이 경제적 업적을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방권양리(放權讓利) 정책 덕

분에 정책결정 단위가 더욱 분산되면서 정책의 방향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중국을 발전국가 모델로 설명한 최초의 학자는 화이트(Gordon White)였다. 그는 발전국가라는 개념을 사회주의 국가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성숙한 사회주의 발전을 이룩한 중국 같은 국가와 니카라과, 앙골라 같은 원형산업화(proto-industrializing) 단계에 있는 국가 그리고 쿠바, 베트남 같은 이들 사이에 있는 국가군으로 분류했다(White, 1984: 111~114). 그는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던 초기 중국이 전형적인 개혁주의 발전국가라고 주장했다(White and Wade, 1988: 19). 하지만 대부분의 발전국가론자들은 국가가 경제발전에 유리하도록 시장을 규제하긴 하지만 시장 메커니즘, 사적 소유권 등을 부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발전국가론이 더 잘 적용된다고 보기 때문에 화이트의 논의는 학계에서 발전되거나 이어지지 못했다. 더욱이 화이트가 사회주의로 분류한 국가들 대부분이 시장개혁을 추진하면서 사회주의 발전국가라는 개념은 이데올로기적 유용성을 상실했다.

블레처(Marc Blecher), 슈(Vivienne Shue), 오이(Jean C. Oi) 같은 학자들은 개혁개방 초기인 1980년대에 지방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를 수행했다(Blecher, 1991; Blecher and Shue, 1996; Oi, 1995). 슈는 기업가 국가, 규제국가라는 새로운 용어를 주조했는데, 그녀는 기업가 국가란 생산에 직접 관여할 뿐 아니라 심지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고 자금을 제공하며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존재로 설명했다(Shue, 1995). 오이도 발전국가라는 개념에 영감을 받아서 분권화된 발전국가의 한 유형으로서 지방정부의 조합주의 국가(local corporatist state)라는 용어를 사용했다(Oi, 1995: 1139). 지방정부 관료들이 사업 정보나 자원과 기술을 제공하고 심지어 자원을 재분배하여 지방의 농촌기업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경제발전을 촉진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지방정부의 조합주의 국가 모델에서 지방정부 관료

들은 완전한 의미에서 경제적 행위자가 되었다. 더 나아가 오이(Walder and Oi, 1999: 12~15)는 중국 농촌에서의 공업화 과정을 자본에 대한 접근방식에 따라 조합주의적 형태(corporative form)와 연안적 형태(littoral form)로 구분했는데, 전자에서는 지방 관료들이 자금을 공급하여 사실상 경영주처럼 행동하는 반면 후자에서는 홍콩 등 동아시아 화교들이 보내준 자본으로 사기업을 시작한 것이 특징이다.

다른 한편 두켓(Jane Duckett)은 텐진시정부의 부동산개발부와 도시상업부가 기업가적 국가 역할을 한 사례를 연구했는데, 그녀의 연구가 블레처나 오이와 다른 점은 지방정부의 특정 부서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신규 사업을 벌이거나 공공자금을 투자하고 다른 부서와 경쟁하면서 이윤 추구에 나섰다는 점이다. 하지만 시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개별 부서를 이윤 추구를 위한 독자적인 단위로 보기는 힘든데, 이 부서가 시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의해 폐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Duckett, 1998).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국가가 기업가적 마인드를 갖고 경제활동의 주요 행위자가 된다는 점에서 기업가적 국가가 발전국가론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기업가적 국가는 발전국가론의 특징으로 제시되는 요소들, 즉 경제발전에 대한 집단적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엘리트의 존재, 경제발전을 조율하는 국가의 조정능력 그리고 사회 전체의 이해관계를 통합하는 통일되고 단일한 국가 등의 요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전국가와는 구별된다.

다른 한편 1980년대 이후 추진된 분권화 정책 때문에 중앙정부뿐 아니라 31개의 지방정부도 경제정책을 담당하고 독립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발전국가로 보기 힘들다는 주장과 분권화된 거버넌스 구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전국가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논의의 연장선에서 밉 시아(Ming Xia)는 중앙정부와 하위 정부

단위 사이 그리고 집행부와 입법부 사이의 새로운 권력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이중적 발전주의 국가(dual developmental state)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Ming, 2000: 21~26).

다른 한편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경제발전을 설명하는 가설로 제시된 발전국가론이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을 서로 비교하거나 이들 국가(들)와 중국을 비교하면서 중국도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길을 걸을 것인가 하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백승욱은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발전국가적 특징을 더 많이 보이고 있지만, 중국의 경우 국유기업의 높은 비중과 정부의 시장형성 정책을 통해 발전한 비국유부문(또는 국유기업과 비국유기업의 이원체계), 그리고 비국유부문의 수출 지향 공업화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한다(Back, 2005: 493~495; 백승욱, 2008: 264~265). 또한 그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는 은행 중심의 금융체계를 통해 투자자금을 제공하고 이런 통제에 기초하여 경제구조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지만, 금융체제 면에서 주거래은행 제도를 통해 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지닌 일본이나, 대기업 집단의 형성을 통한 다각화 현상을 보이는 한국과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한다(백승욱, 2008: 265~266). 윤상우도 중국의 경제성장을 단일요인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시장화 개혁을 추동하고 성장의 동기와 유인을 제공하며 제반 경제적·제도적 요인을 조정하고 조율했던 중국의 발전국가의 역할을 가장 중요한 성장요인이라고 지적한다(윤상우, 2006: 304).

백승욱이나 윤상우는 특히 2001년 WTO 가입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중국이 이전과 같은 발전국가적 성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을 던진다(백승욱, 2008: 267~268; 윤상우, 2006: 299~303). 백승욱은 중국이 처한 이런 난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자본시장 자유화를 동반한 영미식 모델을 추구하기보다는 동아시아 발전 모델의 몇 가지 중요한 특

정들을 공유하는 방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백승욱, 2008: 269~271).

다른 한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국가의 권한이 약화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동아시아 발전국가론도 이제 낡은 개념들이 되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또 중국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고, 일본은 장기침체에 빠져 있어서 이 국가들을 더 이상 발전국가로 부를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여전히 발전국가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비손은 일본과 중국의 발전국가 경험을 비교하고 있는데, 일본은 국가 주도의 발전 모델을 개혁하고 있긴 하지만 발전국가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때 이른 주장이라고 언급한다. 더욱이 일본의 전후 초기 경험을 추종하고 있는 중국이 신중상주의적(neo-mercantilism)이고 국가개입주의(state interventionism) 요소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Beeson, 2009: 22~27).

정용넌(Zheng Yongnian)은 세계화 시대에 중국이 어떻게 변형되었는가를 연구했는데, 그의 결론은 세계화가 중국에게 심각한 문제들을 가져다주었지만 중국의 이데올로기적·제도적 차원에서 매우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Zheng, 2004: x vii).

지금까지 발전국가론 개념을 중국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논의들을 살펴 보았다. 그렇다면 중국의 맥락에서 발전국가론이 과연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 4. 발전국가론의 중국 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중국을 발전국가론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핵심 주장을 국가와 자본의 관계, 국가의 산업정책, 그리고 국가의 대외정책의 측면에서 살펴보자.

## 1) 국가와 자본의 관계

국가를 국가에 속해 있는

발전국가론은 국가가 속해 있는 사회의 여러 집단들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이들의 이익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주체로 본다. 이런 점에서 국가는 독립적인 조직일 뿐 아니라 자율적인 조직이기도 하다.<sup>1)</sup> 스크폴(Theodor Skocpol)은 국가란 “사회집단, 계급 또는 사회의 요구나 이해를 넘어서는 목적을 형성하고 추구한다”고 주장했는데, 그에 따르면 “자율적인 국가를 구분하는 핵심적인 특징은 국가가 계급들의 이해로부터 독립적인 목표를 가진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Skocpol, 1985: 9). 또한 루시마이어(Dietrich Rueschmeyer)와 에반스(Peter Evans)는 국가관료들은 사적 지배계급 집단과 구분되는 독특한 안목을 가지는데, 이는 국가관료들에게는 단기적인 이윤 고려에 대한 관심이 구조적으로 부재하고 공유된 전문적 훈련이 국가관료들에게 독특한 안목을 양산해주며, 국가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스스로를 보편적 이해의 보호자로서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Rueschmeyer and Evans, 1985: 53). 스크폴, 루시마이어와 에반스는 국가가 사회의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되어 독립함으로써 시장에 반대되는 사회가 국가의 지도에 따라 구조화되고 시민사회가 경제적·정치적·이데올로기적 영역의 빈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들은 발전의 핵심적인 추진주체로서 “국가를 다시 끌어들이기(Bringing the State back in)” 한다는 개념이 핵심적이다.

문장 모호

중국의 경험을 보면, 국가가 경제발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 1) 블레처는 “보나파르티즘이 현대 권위주의의 선구자일 뿐 아니라 자본주의 발전국가의 선구자이기도 하다”(Blecher, 2008: 171)고 지적했다, 이는 루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나폴레옹 3세) 치하의 국가가 자본가와 노동자 모두로부터 거리를 두고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사회집단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제된 역사적 사실을 현대의 발전국가와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사실이다. 1980년대에 중국의 경제정책은 국유부문을 유지하면서 비국유부문에서 사영기업의 발전을 용인 또는 묵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략을 노턴(Barry Naughton)은 ‘계획 밖에서 성장하기(Growing out of the plan)’라고 지적했다(Naughton, 1996). 비국유부문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경제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 대외개방과 해외직접투자의 유치 등으로 세계경제 편입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국유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시할 만큼 줄어든 것은 아니다. 국유부문은 중화학공업, 철강, 에너지, 원자재 부문에서 핵심적인 비중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정자본투자, 생산총액, 고용 노동자 수 등에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유부문과 비국유부문의 이원체계가 1990년대부터 형성된 것을 중국 경제의 주요한 특징으로 지적하기도 한다(백승욱, 2008: 250~251).

또한 1995년 중국공산당 14기 5중전회에서 결정된 ‘조대방소(抓大放小)’ 정책이 국유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국가의 국유부문 강화 정책이었다. 이 정책에 대해 피터 놀란(Peter Nolan)은 글로벌 경쟁의 장에서 중국이 살아남기 위해 “중소기업은 신경 쓰지 말고 대기업을 육성하자”는 전략이라고 지적했고, 1997년 제15차 중국공산당 대회에서 장쩌민 총서기는 “우리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유연한 정책을 펴나가는 한편 대기업을 잘 경영하여 국유기업을 전략적으로 개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놀란, 2002: 38~39)이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하면 이 정책은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은 민영화하는 대신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지원을 더 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03년 이후부터 중대형 국유기업의 민영화를 주도하고 있는 국무원 산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는 국가 소유의 기업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장기업의 전체 주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비유통주를 계속 보유하고 있고, 군수, 에너지, 천연자원 등 기간산업이나 공익사업에 대한 국

가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다.<sup>2)</sup> 정용넨은 중국의 대규모 국유기업 개혁의 주된 전략은 한국의 재벌과 같은 대규모 산업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Zheng, 2004: 105).

하지만 중국이 1990년대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한 국유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은 회사법 등의 시장제도 확립, 대량 해고와 복지제공의 축소 등 발전주의적이라기보다는 신자유주의적이었다. 이는 국가 스스로가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집합적 자본가일 뿐 아니라 외국자본과 민간자본의 이익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에서 개혁개방 이후 사영기업이 급속히 증대했고, 이렇게 형성된 부르주아지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자기집단의 정체성을 갖기 시작했다(Dickson, 2003: 163). 중앙 차원에서 성공적인 기업가들은 인민대표자대회 대표로 선출되어 관련 법안을 제정 및 개정함으로써 경제정책에 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 노력했다. 또한 자본가계급은 중국공산당의 연줄이나 상공인협회 같은 주요 기업가조직의 전략적 책략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도 했다. 특히 디슨(Bruce Dickson)은 공산당이나 중앙정부 부처에서 물러나 기업가가 된 사람과 이와 다른 사회적 배경을 가진 기업가들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두 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했다. 첫째는 에반스가 말한 착근된 자율성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인 비공식적 연계가 중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sup>3)</sup> 당과 정부 관료들과 기업가들이 학력과

2)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05년 ‘주식주권불일치개혁’이라는 주식시장 개혁조치를 단행했는데, 대표적인 내용이 비유통주를 유통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2007년 비유통주의 비중이 69.6%였지만 2009년 말에는 40.6%로 줄어들었다.

3) 에반스는 국가 내에서 그리고 국가와 산업 엘리트 사이의 비공식적인 네트워크가 발전 국가 효율성의 핵심 요소라고 주장했다. 같은 학교 출신이나 비슷한 사회적 경험에 기반을 둔 국가관료와 산업계 엘리트들 사이의 사회적 연계는 산업화 과정을 촉진하는

경험을 서로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당 관료로 있다가 사영기업의 경영자가 된 사람들이 점점 당과의 연계고리를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Dickson, 2003: 44~45). 둘째는 사영기업주들이 경제에서 미치는 힘과 영향력이 거대해짐으로써 국가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2001년 7월 21일 장쩌민이 사영기업주들에게 당 문호를 개방한다고 발표한 것은 사영기업주들의 힘과 영향력이 강력해졌음을 의미한다.<sup>4)</sup> 그 결과 중국정부는 산업자본의 축적과정에서 선별적 개입을 하고자 해도 이런 의도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정책적 의도에 대한 사영기업주들의 끊임없는 의심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사영기업주들의 신뢰가 높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Dickson, 2003: 107~114, 161~162).

중국정부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로 사영기업의 등장과 발전을 위한 기반과 영역을 제공해주었고, 국가의 이런 뒷배에 기초하여 사영기업은 발전했다. 중국의 경제발전에서 국가의 역할이 지대하게 컸다는 점에서 발전국가론이 주장하는 바가 중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점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발전국가론에서 국가는 강력한 힘을 갖고 사회 전체를 이끄는 능력 있는 존재이지 그 스스로가 자본으로 역할하지는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중국은 상대적 자율성을 지닌 발전국가라기보다는 그 스스로 집합적 자본가로서 사회 전체 자본과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행동하고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라는 국가가 스스로 집합적 자본가의 구실을 했다는 사실은 국가가 국유기업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경제의 관제고지를 장악하고자 시도(발전국가론자들은 이를 발전국가의 모습으로 제시한다)하면서 동시에 시장경제제도를 확

요소다(Evans, 1995: 20, 41).

4) 그럼에도 불균등성은 존재하는데, 일부 부유한 지방정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에서는 아직 기업주들의 힘이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보여주는 것이다

립하고 단일한 규제를 강화하고 복지를 삭감하는 등의 소위 규제국가 또는 약탈국가의 모습도 함께 보여주는 이유를 말해 준다. 한편 2000년대 들어 중국 정부 또는 국가는 발전한 사영자본과 해외자본과의 경쟁의 압력에 노출되어 있다.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사적자본에 대한 통제력을 1990년대 이전만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Howell, 2006: 285).

## 2) 국가에 대한 해부

발전국가론에서 국가는 경제발전이라는 정언명령(imperative)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행동하는 단일한 이해관계를 갖는 집단으로 이해된다. 또한 국가의 이해관계는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이나 국가관료 개인의 이해관계와는 구별되는 사회 전체의 집합적 이해관계로 이해된다.<sup>5)</sup> 그래서 에반스는 국가 행위를 개인 동기의 단순한 총합으로 개념화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국가관료들의 의사결정은 사회적 구조 속에 체화된 역사적으로 등장하는 복잡한 상호작용 양식의 제도적 맥락에 의존하며, 이러한 제도적 양식은 개인적 이해에 선행하는 현실적 존재를 가진다고 주장했다(Evans, 1995: 28).

에반스는 국가가 보여줄 수 있는 상대적 자율성의 여지는 지배계급 내의 분열과 피지배계급으로부터 받는 압력(Rueschemeyer and Evans, 1985: 63)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 점에서 그는 국가를 단일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위계화

특히 관심을 가졌다

5) 루시마이어와 에반스는 국가가 지배수단, 조합주의적 행위자(corporate actor), 사회갈등의 장, 보편적 이해의 수호자의 네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보편적 이해의 수호자로서 국가의 역할은 주류 국가이론의 최소국가와 비슷한 주권, 방위, 제도적 하부구조의 유지 등이다. 루시마이어와 에반스는 조합주의적 행위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주장했다(Rueschemeyer and Evans, 1985: 47~48). 이때 조합주의적 행위자란 관료 개인의 이해관계도 아닐 뿐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들(자본, 노동, 시민 등) 중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된 구조물로 보지는 않았다. 또한 에반스의 주장에서 유추해볼 수 있는 점은 국가의 내부구조와 사회의 계급구조 관계가 국가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에반스는 이런 제약을 극복할 조건들도 존재하는데, 바로 충분히 협력적인 응집력을 갖춘 관료 장치와 지배계급으로부터의 일정한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ueschemeyer and Evans, 1985: 67).

그런데 중국의 정치적·경제적 정책결정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응집력 있고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관료집단을 찾기 힘들다. 리버탈(K. Lieberthal)은 이를 ‘파편화된 권위주의(fragmented authoritarianism)’라고 표현했다. 리버탈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이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고, 부서 간 경쟁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이데올로기적·군사적 배경을 달리하는 지도자들의 경쟁 때문에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Lieberthal, 1992: 1~30). 더욱이 비비안 슈가 지적했다듯이,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통치의 정당성을 경제성장과 빈영의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하는 것에 두고 있지만(Shue, 2004: 24~30), 이런 기반은 1978년 이전 혁명적 열기에 기반을 둔 것에 비하면 불확실하고 취약한 편이다.

정용넌은 중국정부가 시장을 관리하는 핵심 부서로서 1993년에 주룽지 총리에 의해 설립된 SETC(State Economic and Trade Commission)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 기구조차 정치 지도자들의 교체와 기구의 개편 등으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Zheng, 2004: 103~108).

국가의 일치단결된 정책 지향성과 목표를 추진하는 강력한 능력과 의지가 발전국가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한 위스는 기존의 발전국가론이 자신의 목표와 결정을 부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상대적으로 강력한 국가를 주장했지만 이는 역사적 사례들과 모순되고 국가의 일방주의는 발전에 이점보다는 약점으로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국가가 자율성

을 사용해 사적부문과 상의하여 동의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점”(Weiss, 1995: 595)이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위스는 국가와 자본가계급의 협력과 국가의 자본가계급으로부터의 단절성 모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관리되는 상호의존성(governed interdependence)’, 즉 역설적이게도 거리를 두면서 동시에 밀접한 연계를 지니는 개념을 제시했다(Weiss, 1995: 604).

위스의 ‘관리되는 상호의존성’ 개념은 발전국가론의 국가론이 지닌 모순, 즉 국가가 자본에서 거리두기를 한다는 것이 실제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모순을 반영한다. 그럼에도 ‘관리되는 상호의존성’ 개념에는 여전히 국가가 자본과 거리두기를 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하지만 다른 어느 발전국가보다 국유부문의 비중이 큰 중국에서 국가가 자본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앞서 지적했듯이, 국가가 집합적 자본으로서 민간 및 해외 자본뿐 아니라 다른 국유부문 자본과도 경쟁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발전국가론이 제기하는 일사불란한 국가가 중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사실 중국의 관료주의가 단일한 이데올로기와 정치경제적 목표를 갖지 않는 것은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다. 1978년 개혁개방 이전에도 중국의 관료주의 내에는 시장경제의 가격경쟁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국가관료와 산업의 책임자들이 더 높은 직위와 더 많은 영향력을 위해 자원이나 노동력을 확보하는 경쟁을 벌이곤 했다(Solinger, 1984: 36). 중국 국가 내부의 다면적이고 다층적 이해관계가 관료들의 내부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 3) 중앙-지방의 관계

발전국가론의 일반적인 정의는 중앙정부가 경제발전의 추동력 역할을 한

다는 점이다. 그래서 발전국가론은 중앙정부의 경제정책 결정기구나 경제발전을 강조하는 국가 지도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특징은 지방정부가 중앙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순순히 따르지 않고 나름의 경제정책 결정의 자율권을 갖고 있는 중국의 현실과 거리가 멀다. 또한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들도 서로 동질적인 경제주체라고 보기 힘들 뿐 아니라 발전국가에서 핵심적 요소인 내적 응집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중국은 1980년대 초반부터 분권화 작업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정책권한과 힘이 지방정부에 속해 있다. 그래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내려보내는 예산 외에도 거대한 자금을 자체적으로 동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예산 외(off-budget)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상하이, 광둥, 텐진 같은 부유한 지방정부는 별도의 대외차관을 끌어들이거나 다양한 수수료 수익을 거두고 있어서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존도가 낮은 편이다.

이런 분권화 전략이 초래한 약점은 중앙정부가 국가적 정책을 강제하거나 일관된 방향으로 국가의 경제발전을 추진하기가 힘들 뿐 아니라 자원을 지역적으로 분배하는 데서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다(Breslin, 1996: 690). 차이(Kellee S. Tsai)는 지방정부가 사영부문에 대해 보이는 태도가 적극적인 장려와 협력에서부터 방해나 적대감을 보이는 등 매우 다양하다고 지적했다(Tsai, 2004). 이런 점 때문에 밉 시아(Ming Xia)는 중앙정부의 엘리트들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엘리트들도 발전에 대한 열망을 지적하면서 **이중의 발전국가론**을 제기했다(Ming, 2000: 136~77).

앞과 용어통일

중국의 행정구조가 연방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발전국가라고 보기 힘들다는 주장과 그럼에도 여전히 발전국가라고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몬티놀라(G. Montinola) 등은 중국의 연방적 성격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지만(Montinola et al., 1995: 50), 차이(H. Cai)와 트레이스만(D. Treisman)은 실사 거

버넌스가 연방정부의 구조를 떼다 할지라도 발전국가의 모습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국이라는 국가가 매우 집중화되어 있고 권위주의적일 뿐 아니라 최근의 발전의 토대가 된 주요 개혁들은 분권화가 진행되기 전인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Cai and Treisman, 2006: 505~535). 하지만 차이와 트레이스만의 주장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데, 시장개방 이후 지역 간, 부문 간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 이를 말해준다. 2008년 까지 지방정부가 직접 추진하거나 조장한 부동산 개발붐은 중국 전체 경제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렸을 뿐 아니라 지금도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요소 중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에서 나타나는 지역주의는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제약하고 그로 인해 자원배분에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지방정부들 사이에서 투자유치 등의 경쟁을 격화시킬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지역적 격차를 좁히지 못하게 만든다.

#### 4) 관시(关系)자본주의

발전국가론의 핵심적 요소 중의 하나는 중앙정책을 추진하는 정치 엘리트들의 사회응집 이데올로기의 역할이다. 중국에서는 이런 사회응집 이데올로기가 한편으로는 경제발전에 대한 강조로,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주의로 나타난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억압하더라도 경제발전을 가져다준다는 경제발전 이데올로기가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중국에서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면서<sup>6)</sup> 농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불만이 증대하고 있다. 다른 한편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도 양날의 칼과 같은 효과를 지닌다. 1998년 나토군이 유고를 폭격할 당시 중국대사관도 함께 폭격을 받았고,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반미 시위가 거대하

6) 중국에서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한 지표로 지니계수는 최근 들어 0.48까지 치솟았다. 이는 1980년대의 0.24와는 대비되는 수치이다.

게 일어났다. 이런 반미 시위는 중국정부와 공산당에 대한 불만으로 번지면서 중국정부는 이 시위를 강제로 진압해야 했다. 이 사건은 사회적 불만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우연적인 불씨가 중국의 이런 응집력을 일거에 허물어 버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발전국가의 정당성은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인구의 다수로부터 공유되는 성장에 대한 기대다. 하지만 경제성장을 하더라도 생활수준의 향상이 없다면 이런 성장 제일주의의 이데올로기가 효력을 계속 발휘할 수 없다. 중국의 낙후된 지역에서 교육과 보건 시설의 열악함은 이런 응집 이데올로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든다. 이런 상황 때문에 2003년 집권한 후진타오-원자바오 체제는 화목사회라는 가치를 내걸 수밖에 없었다.

다른 한편 당과 국가기관의 부패 문제도 이런 정당성을 허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당내에서 강력한 규율이 부재한 상황에서 당에 기반을 둔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만들어내는 잠재적인 ‘조합주의적 응집력(corporate coherence)’(Evans, 1992: 163)은 개인적 이해관계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의 이익이 아닌 사적 이해관계가 우선시되는 현상은 중국에서 국가와 당 관료들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정부패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발전국가에서 행정부가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권위적이지만 특정한 이해관계에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여기는 입장과 대비된다. 에반스는 한국이나 일본의 발전국가가 잘 작동했던 것은 착근된 자율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sup>7)</sup>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런 요소가 없다.

국무원 산하 사회과학아카데미와 중앙당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7년 1억 위안 이상의 부를 소유한 3,320명의 중국인 중에서 약 2,932명이 당

7) 에반스는 “국가를 사회와 연계시키고 목표와 정책의 지속적인 협상과 재협상을 위한 제도화된 채널을 제공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회적 연결고리에 착근된 자율성”(Evans, 1992: 163)이라고 지적했다.

또는 정부 고위층 자녀였다(Bardhan, 2010). 맥널리(C. A. McNally)는 민간부문의 제도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비공식적인 판시(guanxi) 네트워크가 사영기업의 성공에서 여전히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는데(McNally et al., 2007: 2), 이런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관료들의 부패로 이어지는 주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민신, 2011: 268~273, 313~318).

## 5) 산업정책

발전국가론은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개입에서의 핵심이 바로 산업정책이라고 여긴다.<sup>8)</sup> 산업정책의 목표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지향적 공업화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웨이드는 “국경 내에서 산업투자를 촉진하고 이런 투자의 많은 부분이 미래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산업에 투입되도록 국가정책을 활용해야” 하고 “수출촉진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Wade, 1990: 350) 한다고 강조했으며, 에반스는 국가가 산업에 얼마나 많이 개입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개입이 어떤 상이한 효과를 초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Evans, 1995: 10~20). 발전국가에서 국가의 산업정책은 기업 또는 산업이 (국제적) 시장기준을 스스로 충족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국가개입이 이루어진다. 더욱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시대에 국가의 산업정책은 이전과는 달리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시장 불완전성 접근이 주장하는 것처럼 산업정책은 국가와 자본 사이를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

8) 발전국가론은 국가의 경제발전이 산업, 즉 제조업의 발전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자본주의 발전이 농업에 비해 제조업의 우선적 발전에 기초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잘못된 주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근 생태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장하는 생태주의자들의 발전국가론 비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니다. 산업정책을 고려할 때 다양성, 복잡성, 역사적 맥락 등을 살펴봐야 할 뿐 아니라 기술발전, 금융부문의 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의 확대, 숙련도 제고, 경쟁의 억제 또는 강화, 국제무역에 미치는 효과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는 국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우스만(R. Hausmann)과 로드릭(D. Rodrik)은 “정부는 시장에 대해 보완적인 투입물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것은 국가 대 시장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투입물을 제공하지 못하면 시장 효율성도 낮아질 것이다. 이런 세계에서 자유방임주의는 막다른 골목이다. 그 대신 대안적인 것은 정부가 모든 잠재적인 [시장] 활동에 대해 보완적인 모든 투입물을 제공하는 것”(Hausmann and Rodrik, 2006: 25)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우스만과 로드릭의 주장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첫째는 정부가 모든 잠재적인 하부구조의 필요를 파악하고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모든 규범이나 규율을 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금융, 관리, 정치적 자원들을 모두 그리고 완전히 통제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국가가 개입하거나 하려는 것의 목록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제도와 시장은 함께 발전하며, 새로운 거래가 등장하면 새로운 시장과 제도가 발전하는 식으로 거래비용과 그에 따른 문제들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발전국가론의 산업정책이 과연 계획한 대로 실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다른 한편 발전국가론의 산업정책이란 무엇인가 하는 정의를 내리는 것도 힘든 문제다. 왜냐하면 발전국가가 아닌 국가들도 산업정책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미 기업을 연구하는 라조닉(W. Lazonick)과 오설리반(M. O'sullivan)은 영미 국가들이 민간기업의 발전을 위해 금융을 포함한 각종 자원할당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미국 같은 국가도 발전국가라고

주장하는데(Lazonick and O'sullivan, 1997: 22), 이런 적용은 발전국가론 개념의 인플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발전국가론의 산업정책에 대한 정의가 중요하다. 장하준은 “산업정책이란 특정 부문에게 유리하도록 정부의 선별적인 개입을 통해 이 부문의 확장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에 도움을 주는 것”(Chang, 1993)이라고 정의하는데, 발전국가론의 특징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정책에 대한 범위와 정의에 천착하기보다는 그의 정의에 기초하여 논의를 시작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다른 한편 산업정책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 경쟁, 혁신 등과 관련한 수평적 정책, 특정 부문을 목표로 하는 수직적 정책 그리고 경제활동의 구조적 변화를 추구하는 구조적 정책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기준을 갖고 중국의 산업정책을 살펴본다면, 개혁개방 이후부터 1993년 사이에는 국유부문의 개혁에 초점을 맞춘 수직적 정책이 주로 추진되었다면, 1993년 이후에는 회사법의 도입과 국유기업의 지배구조 변화와 같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수평적 정책이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1993년 이후에도 국유부문 중 중소기업의 민영화와 중대형 기업의 경쟁력 강화 같은 수직적 정책도 함께 추진되었다. 그리고 개혁개방 이후 일련의 산업정책은 점진주의적이긴 하지만 구조적 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백승욱도 중국의 산업정책은 산업조직의 개편보다는 산업구조조정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지적한다(백승욱, 2008: 260).

중국의 산업정책은 국유기업의 생산력 저하에서 비롯한 구조조정의 필요성 때문에 추진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산업정책이 구체적 내용을 결여하고 있거나 아니면 계획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점 때문에 산업정책이 뚜렷하게 정착되지 않았다(백승욱, 2008: 260~261). 이런 점 때문에 백승욱은 중국이 대체로 발전국가적 산업정책을 따랐음에도<sup>9)</sup> 중국의 산업정책을 발전국가의 그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하지 못한다(백승욱, 2008:

259~264).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세계화의 흐름에 직접 편입되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중국의 산업정책에서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이전까지 활용했던 수출보조금이나 수입관세 등의 정책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외국자본, 특히 헤지펀드의 중국 내 유입으로 인해 국가의 금융정책상의 목표(금리나 환율의 조정)를 이전처럼 쉽게 달성하기가 힘들어졌다.

하지만 세계화 시대에 깊숙이 들어간 중국이 시장의 힘이나 외부의 압력에 완전히 굴복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한편으로는 국가가 통제하거나 장악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산업부문이 있는 반면(이 부문에서는 여전히 발전국가의 산업정책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시장의 압력이 국가의 관리나 통제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산업부문(사영기업이 지배하는 부문들)도 존재한다. 이런 다면적인 성격은 적어도 중국에서는 발전국가론에서 말하는 국가 주도의 일면적 산업정책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 5. 중국 경제발전에 대한 대안적 명제들

발전국가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와 중국을 발전국가론으로 보는 입장에 대한 비판적 연구들이 많이 존재한다(Breslin, 1996; Hart-Landsberg and Burkett, 2001; Howell, 2006; Radice, 2008; Fine, 2012). 특히 중국을 발전국가론으

9) 백승욱은 중국이 국유기업의 높은 비중과 국유/비국유의 이원적 틀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과도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중국의 이런 특징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도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백승욱, 2008: 245).

로 보는 입장에 대한 비판들은 주로 중국이 분권화된 체제라는 점과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들을 지적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아래와 같다.

- ① 국가는 상대적 자율성을 지닌 기구가 아니라 자본축적을 위한 도구이자 스스로 자본축적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국가가 자본축적을 수행한다는 것의 의미는 국가 자체가 집합적 자본으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유기업으로 표현되는 국유부문과 사영기업과 외자기업으로 표현되는 민간부문 사이에서 그리고 각 부문 내에서 자본간 경쟁이 존재하며, 이런 경쟁이 국가를 사회 일반이 아니라 자본에 친화적인 구조물로 역할을 하도록 강제한다.
- ② 국가가 경제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필요하다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국은 신자유주의 국가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중국은 국가의 역량 또는 능력이 국내의 자본들 사이의 경쟁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발전국가와는 다르다.
- ③ 국가와 자본은 구조적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경제의 발전이 세수 확대 등을 통해 국가의 강화에 도움을 주고 또 권위주의적이고 강력한 국가가 자본의 이해관계를 침해할 수 있는 사회세력을 제압해준다는 점에서 국가와 자본은 구조적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국가와 자본 사이의 융합 또는 유착 정도는 대외적으로는 세계자본주의 경쟁이 가하는 압력과 대내적으로는 사회 내부의 여러 계급들(특히 노동자와 농민)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세계자본주의 경쟁 압력이 강력할수록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적을수록 국가와 자본 사이의 융합 정도는 강화될 것이다.

중국은 지역적 거대함이나 분권화 때문만이 아니라 국가와 자본 사이의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들의 양식(form of the relation) 때문에 다면적 성격을 가진다. 이런 성격은 중국뿐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들 모두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국가부문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는 거대 소비자이면서도 구매력을 이용해 다른 정책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한 바처럼, 국가는 경제적·사회적 하부구조를 제공함으로써 자본친화적인 정책들을 수행한다. 또한 국가는 그 스스로 거대 산업이면서도 산업정책을 통해 산업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이런 특징은 국유부문과 민간부문의 이원적 구조를 가진 중국 경제에서 잘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는데, 발전국가론이 제기하는 국가의 지도를 통한 발전이 아니라면 또는 국가의 지도적 역할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니라면 무엇이 중국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물음이 그것이다.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비결은 개혁개방 이후 시기별로 그 원인이 서로 다르다. 1978~1993년까지는 국내시장의 확대, 농촌의 잉여노동력과 국내 틈새시장에 기반을 둔 향진기업의 발전, 국가가 허용한 시장경제의 영역에서 사영기업(개체호 포함)의 발전이 주요 원인이라면, 1993~2000년대 초반까지는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해외직접투자 덕분이었고,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중국이 국제 생산 네트워크의 한 고리를 차지하는 과정이 주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1993년 이후 비약적으로 증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중국 내부의 저렴한 노동력(농민공)과 결합하면서 수출 주도의 경제로 탈바꿈하도록 만들었다.

특히 중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로 변모하면서 두드러진 특징들을 보여주었다. 첫째, 중국이 아시아에서 생산된 부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만든 다음 미국이나 유럽 같은 최종 소비지로 보낸다. 이 때문에 중국은 세계의 공장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에게 거대한 시장을 제공하고 있다(Ahearne et al., 2006; Haltmaier et al., 2007). 둘째, 중국이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면서 벌어들인 경상수지 흑자가 미국 국채 매입에 사용됨으로써 달러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환류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달러 환류 흐름의 이면에는 바로 재화의 유통이 자리잡고 있다(하트-랜스버그·버킷, 2005: 99~108).

특히 1993년 이후 중국의 경제발전은 국제적으로는 생산 네트워크의 재편과정에서 틈새영역을 잘 발견한 점과 국내적으로는 농민공의 존재와 노동역압적이고 자본친화적인 권위주의체제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중국 경제가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났는데, 그 하나는 투자(총자본 형성)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노턴, 2011: 189)과 다른 하나는 중국의 산업금융이 은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기업금융의 80% 이상이 은행을 통해 조달되고 있고, 5대 국유상업은행이 기업금융을 대부분 지배하고 있다(노턴, 2011: 412, 607).

그런데 중국 경제가 개방과 자본축적 등을 추진하면서 국내외적으로 경쟁과 압력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시장 도입과 자유화는 국내 기업들을 국제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트-랜스버그와 버킷은 발전국가론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수용하라고 요구하면서 신자유주의의 견해를 수용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자본-노동 사이의 협력이라는 유토피아적 호소를 하며, 신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발전국가들도 자본의 수익성과 경쟁력만 회복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주장했다(Hart-Landsberg and Burkett, 2001: 422).

## 6. 결론

이 논문은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경제발전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로 등장한 발전국가론과 이 이론의 중국 적용에 대한 논의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중국을 발전국가로 보는 입장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한 설명, 중앙정부-지방정부의 관계, 산업정책 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특히 발전국가론은 국가를 상대적 자율성을 지닌 기구로 설명하는데, 이런 설명은 중국에서 국가가 집합적 자본의 역할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발전국가에 있다기보다는 다양한 요소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특히 해외직접투자의 증대, 수출 주도 경제로의 변모, 농민공의 노동력 제공 등의 점들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물론 중국과 더 나아가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경제발전에서 국가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이 논문은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국가들을 발전국가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앞의 본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비판적이다. 더 나아가 이 논문은 중국을 포함한 이들 국가들의 경제발전이 세계 자본주의에 편입되고 그 속에서 수출 주도 경제로서 틈새시장을 발견했던 점이 국가의 역할보다 더 중요한 요소일 것이라는 주장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을 발전국가로 볼 수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하며 각 국가별로 연구하고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 논문의 향후 과제로 남겨 놓고 있다.

## 참고문헌

- 김윤태. 1999. 「동아시아 발전국가와 지구화」. 《한국사회학》, 33(1), 83~102쪽.
- 노턴, 배리(Barry Naughton). 2011. 『중국 경제: 시장으로의 이행과 성장』. 이정구·전용복 옮김. 서울경제경영.
- 놀란, 피터(Peter Nolan). 2002. 『중국과 세계경제』. 임정재 옮김. 함께읽는책.
- 민신, 페이(Minxin Pei). 2011. 『불확실한 중국의 미래』. 황성돈 옮김. 책미래.
- 박은홍. 2008. 『동아시아의 전환 - 발전국가를 넘어』. 아르케.
- 백승우. 2008. 『세계화의 경계에 선 중국』. 창비.
- 위스, 린다(Linda Weiss). 2002. 『국가몰락의 신화』. 박형준·김남줄 옮김. 일신사.
- 윤상우. 2006. 『동아시아 발전의 사회학』. 나남출판.
- 장윤미. 2011. 「‘중국 모델’에 관한 답론 연구」. 《현대중국연구》, 13집 1호, 75~116쪽.
- 전성홍. 2008. 「중국 모델의 등장과 의미」. 전성홍 편. 『중국 모델론』. 부키.
- 하트-랜스버그·버킷(Martin Hart-Landsberg and Paul Burkett). 2005. 『중국과 사회주의』. 임영일 옮김. 한울아카데미.
- Ahearne, A. et al. 2006. “Flying Geese or sitting Ducks: China's Impact on the Trading Fortunes of other Asian Economies.”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International Finance Discussion Papers, No.887.
- Amsden, Alice H. 1989.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s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aek, Seung-Wook. 2005. “Does China Follow ‘the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Vol.35, No.4, pp.485~498.
- Balassa, B. in association with J. Berlinski et al. 1982. *Development Strategies in Semi-industrial Economies*.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for the World Bank.
- Bardhan, Pranab. 2010. “The Paradigm of Capitalism under a Developmental State: Does It Fit China and India?” *Singapore Economic Review*, Vol.55, No.2, pp.243~251.
- Beeson, Mark. 2001. “Globalization, Governance and the Political-Economy of Public Policy Reform in East Asia.” *Governance: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y and Administration*, Vol.14, No.4, pp.481~502.
- Blecher, M. 1991. “Development State, Entrepreneurial State: The Political Economy of Socialist Reform in Xinji Municipality and Guanghan County.” in Gordon White(ed.). *The Chinese State in the Era of Economic Reform: The Road to Crisis*. Basingstoke: Macmillan. pp.265~294.
- \_\_\_\_\_. 2008. “Into Space: The Local Developmental State, Capitalist Transition and the

- Political Economy of Urban Planning in Xinji.” *City*, Vol.12, No.2, pp.171~182.
- Blecher, Marc and Vivienne Shue. 1996. *Tethered Deer: Government and Economy in a Chinese Count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Breslin, Shaun G. 1996. “China: developmental state or dysfunctional development?” *Third World Quarterly*, Vol.17, No.4, pp.689~706.
- Cai, Hongbin and Daniel Treisman. 2006. “Did Government Decentralization Cause China’s Economic Miracle?” *World Politics*, Vol.58, No.4, pp.505~535.
- Cerny, Philip G. 1997. “Paradoxes of the Competition State: The Dynamics of Political Globalisation.” *Government and Opposition*, 32(2), pp.251~274.
- Chang, H-J. 1993. *The Political Economy of Industrial Policy*. London: Macmillan.
- Dickson, Bruce J. 2003. *Red Capitalists in China: The Party, Private Entrepreneurs and Prospects for Political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uckett, Jane. 1998. *The Entrepreneurial State in China: Real Estate and Commerce Departments in Reform Era Tianjin*. London: Routledge.
- Evans, Peter. 1992. “The State as Problem and Solution: Embedded Autonomy and Structural Change.” in Stephen Haggard and R. R. Kaufman(eds). *The Politics of Economic Adjustment*.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139~181.
- \_\_\_\_\_. 1995. *Embedded Autonom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vans, Peter, Dietrich Rueschemeyer and Theda Skocpol(eds.). 1985. *Bring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ewsmith, Joseph. 2011. “Debating ‘the China Model’.” *China Leadership Monitor*, No.35, pp.1~7.
- Fine, Ben. 2012. Locating the Developmental State and Industrial and Social Policy after the Crisis. mimeo.
- Haltmaier, J. et al. 2007. “The Role of China in Asia: Engine, Conduit, or Steamroller?”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International Finance Discussion Papers, No.904.
- Hart-Landsberg, Martin and Paul Burkett. 2001. “Economic Crisis and Restructuring in South Korea: Beyond the Free Market-Statist Debate.” *Critical Asian Studies*, Vol.33, Issue. 3, pp.403~430.
- Hausmann, Ricardo and Dani Rodrik. 2006. “Doomed to Choose: Industrial Policy as Predicament.” paper prepared for the first Blue Sky seminar organized by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September). Harvard University.
- Hayashi, Shigeko. 2010. “The Developmental State in the Era of Globalization: Beyond the Northeast Asian Model of Political Economy.” *The Pacific Review*, Vol.23, No. 1, pp.45~69.
- Howell, Jude. 2006. “Reflections on the Chinese State.” *Development and Change*, Vol.37,

- No.2, pp.273~297.
- Johnson, Chalmers. 1982.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The Growth of Industrial Policy, 1925 - 1975*.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Lazonick, W. and M. O'Sullivan. 1997. "Finance and industrial development." *Financial History Review*, No.4, pp.7~29.
- Lieberthal, Kenneth G. 1992. "Introduction: The 'Fragmented Authoritarianism' Model and its Limitations." in Kenneth G. Lieberthal and David M. Lampton(eds.). *Bureaucracy, Politics, and Decision Making in Post-Mao China*. Berkeley, Calif.: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1~30.
- McNally, Christopher, Hong Guo and Guangwie Hu. 2007. Entrepreneurship and Political Guanxi Networks in China's Private Sector. East-West Center Working Papers, No.19, Aug. 2007.
- Ming, Xia. 2000. *The Dual Developmental State: Development strategy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China's transition*. Aldershot: Ashgate.
- Montinola, Gabriella, Yingyi Qian and Barry R. Weingast. 1995. "Federalism, Chinese Style: The Political Basis for Economic Success in China." *World Politics*, Vol.48, No.1, pp.50~81.
- Naughton, Barry. 1996. *Growing out of the pla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i, Jean. 1995. "The Role of the Local State in China's Transitional Economy." *The China Quarterly*, No.144, pp.1132~1149.
- Pan, Wei. 2010. "Western System Versus Chinese System." The University of Nottingham China Policy Institute Briefing Series, issue 61.
- Radice, Hugo. 2008. "The Developmental State under Global neoliberalism." *Third World Quarterly*, Vol.29, No.6, pp.153~174.
- Ramo, Joshua. C. 2004. *The Beijing Consensus*. London: The Foreign Policy Centre.
- Rueschemeyer, Dietrich and Peter Evans. 1985. "The State and Economic Transformation: Toward an Analysis of the Conditions Underlying Effective Intervention." in Peter Evans, Dietrich Rueschemeyer and Theda Skocpol(eds). *Bring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44~77.
- Shue, Vivienne. 1995. "State Sprawl: The Regulatory State and Social Life in a Small Chinese City." in Deborah S. Davis, Richard Kraus, Barry Naughton and Elizabeth J. Perry(eds.). *Urban Spaces in Contemporary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and Woodrow Wilson Center Press. pp.90~112.
- \_\_\_\_\_. 2004. "Legitimacy Crisis in China?" in P. H. Gries and S. Rosen(eds.). *State and Society in 21st Century China: Crisis, Contention and Legitimation*.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Curzon. pp.24~49.
- Skocpol, Theda. 1985. "Bringing the State Back in: Strategies of Analysis in Current

- Research.” in Peter Evans, Dietrich Rueschemeyer and Theda Skocpol(eds.). *Bring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3~37.
- Solinger, Dorothy J. 1984. *Chinese Business Under Socialis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tubbs, Richard. 2009. “What ever happened to the 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 The unfolding debate.” *The Pacific Review*, Vol.22, No.1, pp.1~22.
- Tsai, Kellee S. 2004. *Back-Alley Banking: Private Entrepreneurs in China*. Ithaca, NY,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Wade, Robert. 1990. *Governing the Market: Economic Theory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Industrializ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alder, Andrew G. and Jean C. Oi. 1999. “Property Rights in the Chinese Economy: Contours of the Process of Change.”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ed.).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Weiss, Linda. 1995. “Governed Interdependence: Rethinking the Government-Business Relationship in East Asia.” *The Pacific Asia*, Vol.8, No.4, pp.589~616.
- White, Gordon. 1984. “Developmental States and Socialist Industrialisation in the Third World.”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Vol.21, No.1, pp.97~120.
- White, Gordon and Robert Wade. 1988. “Developmental States and Markets in East Asia: An Introduction.” in Gordon White(ed.). *Developmental States in East Asia*. Basingstoke: Macmillan Press. pp.1~29.
- Wong, Joshep. 2004. “The Adaptive Developmental State in East Asia.”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4, No.3, pp.345~362.
- World Bank. 1993.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 Zheng, Yongnian. 2004. *Globalization and State Transformation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지식기반경제의 모순과 노르딕 모델

김어진 | 소속?

### 1. 지식기반경제의 사회적 자본 모델의 논리

KBE(Knowledge-based Economy, 지식기반경제)론에서는

KBE론에서는 ‘근력경제’에서는 지식 및 정보가 자본에 체화되지만, ‘지식기반경제’에서는 물적자본(physical capital)이 아니라 인적자본(human capital)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중요하며 이것이 노동력에 체화된다고 주장한다. 생산성 향상에 핵심적인 지식과 정보가 자원(근력)기반경제에서는 자본에 체화되지만 지식기반경제에서는 노동력에 체화된다. 따라서 자원(근력)기반경제에서 중요한 자본은 물적자본이지만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진다는 것(김호균, 2001: 126)이다.

자원(근력)기반경제에서는 전체 노동시간에서 생산된 가치가 임금과 이윤으로 이루어졌다면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이에 초과이윤이 덧붙여진다. 이는

노동시간의 척도인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화되어 크게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김호균, 2001: 139).

이런 전제 위에서라면 지식기반경제는 경제적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토양을 제공해줄 것이다. 후쿠야마(F. Fukuyama)도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창의성과 지속적인 지식창출로 높은 경제성과와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가 될 것이고, 기회의 확대와 사회적 통합이 유지되는 인간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즉, 지식이 정보인프라를 통해 자유롭게 유통됨에 따라 개인 간의 지식격차가 최소화되어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고, 공동체 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sup>1)</sup>고 말했다(Fukuyama, 1995).

그런 점에서 KBE론의 일각에서는 교육을 통해 지식노동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지식경영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정설이 존재한다. 이 논리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핀란드 사례를 거의 모범으로 언급하는 내적 논리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 내적 논리에는 드러커(Peter Drucker)의 지식노동자론이 매우 깊게 스며들어 있다. 그래서 그의 ‘지식노동자’론과 ‘지식경영’론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전통적인 생산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은 오히려 제약이 되고 그 대신 지식이 단 하나의 중요한 생산요소가 된다고 말한다(Drucker, 1993). 그는 육체노동자들은 생산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반면, 지식노동자들은 지식이라는 생산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은 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지식노동자들이 자본가들과 대등한 관

?

1) 지식기반사회를 비판론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쓰레기정보(garbage information)의 범람, 정보망을 이용한 범죄의 증가, 사생활침해 등의 위험이 대두되고 있으며, 정보기술의 오류로 인해 전체 시스템이 붕괴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지식의 수확체증적 성격에 따라 지식을 먼저 장악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계를 맺을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육체작업을 하는 종업원들은 생산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물론 값진 경험을 많이 축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경험은 오직 그들이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만 값진 것이다. 그것은 휴대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식근로자는 생산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그들의 두 귀 사이에 축적돼 있는 지식은 전적으로 휴대가능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자본적 재산이다. 지식근로자는 조직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조직이 그들을 더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대부분의 지식근로자에게는 진실이 아닐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식근로자에게 있어 자신과 조직이 서로 대등하게 필요하다는 것은 공생적 관계(symbiotic relationship)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에서 육체근로자의 경우처럼 일자리가 지식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지식근로자가 일 자리를 한층 더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드러커, 2002: 147).

만약 생산성과 부가가치 창출이 전통적인 노동과 자본이라는 두 가지 투입요소가 서로 대립하지 않고 ‘지식’이라는 새로운 ‘자본’이 더 중요해졌다면, 이 ‘지식자본’은 옛날의 물적 생산수단으로서의 자본과 달리 누구나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스스로 지니고 소유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를 주도하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애플 등이 오픈 라이선스 프로그램 등을 공개할 수 있다면,<sup>2)</sup> 사람들이 스스로 지

2) 예를 들어 그러나 “IBM은 오래된 역사 만큼이나 컴퓨터를 비롯한 기술산업에 방대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새 기술을 오픈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통해 특허 사용을 지원”(한국정보화진흥원, 2011)한다는 것이다. 오픈 라이선스 프로그램 등의 한계에 대해서는 올레타(2010) 참조.

식을 만들어내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등장하기도 한다. 누구나 새로운 지식을 생성시키고 자연히 수명이 다 된 지식은 사라진다는 ‘지식생태학’ 연구도 활발하게 제기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지식경제하에서의 자본주의의 동학이 바뀌었기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기든스(Anthony Giddens)의 『제3의 길』에서 제기된 것은 전혀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더 나아가 지식기반경제하에서 복지국가 모델의 상이 정립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른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은 지식기반경제하에서 북유럽 같은 모델이 가능할 수 있었음을 주창한다. “자유주의 복지국가(영국)와 조합주의 복지국가(독일) 모델이 아니라, 이들 두 복지국가 유형과는 국가의 역할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북유럽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특성이다.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한 ‘사회적 영역’의 대대적인 확장, 보편주의 사회정책, 개발과 유연성이 담보된 지속적 경제성장,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시스템적 조화와 조정 등이 그것이다”(이상미, 2010: 22). 그런데 이런 역동적 복지국가의 동력인 ‘혁신적 경제’의 핵심은 지식기반경제구조 확립이라는 것이다.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소품종 대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규모의 경제가 중요시되어 우리나라의 개발연대에서 보듯,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전략을 추구하였는데, 과거에는 이것이 유효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식기반경제하에서는 다품종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므로 규모의 경제보다는 창의성, 다양성, 유연성이 더 중요시되고, 혁신적 중소기업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산업사회의 경제성장 이론은 고전경제학의 성장모델에서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결정된다고 보았으나, 1980년대 대두된 신성장론에서는 인적자본과 지식스톡을 경제성장의 내생변수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구적으로 전환되는 지식경제체제에서 지식기반경제구조를 확립하고 과학

기술을 촉진하는 소위 혁신적 경제를 추구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이상익, 2010: 60).

북유럽 복지국가의 미래가 지식기반경제에 달려 있다는 주장은 이른바 ‘노르딕 모델’을 통해서 재생산되고 있다. 지식노동자들이 자본과 기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여전히 자본은 노동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 지식기반경제는 교육과 지식축적이 새로운 평등과 창조적 세계로 갈 수 있는 활로를 줄 수 있을 것처럼 회자됐다. 그러나 오히려 기업이 고등 교육을 받은 인재를 싼값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기업은 이윤만을 추구하고 경영진들은 보너스를 챙기기 위해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직업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그러는 사이 불평등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세계경제에 더 **아말감 되고** 있다.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볼 북유럽 노르딕 모델은 오히려 불안정한 이 구조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심화되고

## 2. 지식기반경제와 ‘노르딕 모델’

### 1) 지식기반경제의 성공사례로서의 ‘노르딕 모델’

그렇다면 ‘노르딕’ 모델은 과연 어떠한가. 여기서는 스웨덴, 핀란드를 중심으로 국제비교를 진행한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지식기반경제의 ‘노르딕’ 모델의 핵심이라 할 수 있고 ‘지식경제’와 관련한 각종 지수 면에서 북유럽 국가들 내에서 1위와 2위를 다투는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스웨덴은 지속적으로 1위를, 핀란드는 8위(2000년)에서 2위(2012년)로 경쟁 뛰어올랐다.

〈표 4-1〉 지식경제 지수(KEI) 2012 순위

국가/경제	2012 순위	KEI 2012	2000 순위	2000년 비교 등락폭
스웨덴	1	9.43	1	0
핀란드	2	9.33	8	6
덴마크	3	9.16	3	0
네덜란드	4	9.11	2	-2
노르웨이	5	9.11	7	2
뉴질랜드	6	8.97	9	3
캐나다	7	8.92	10	3
독일	8	8.90	15	7
호주	9	8.88	6	-3
스위스	10	8.87	5	-5
아일랜드	11	8.86	11	0
미국	12	8.77	4	-8
대만	13	8.77	16	3
영국	14	8.76	12	-2
벨기에	15	8.71	14	-1
아이슬란드	16	8.62	19	3
오스트리아	17	8.61	13	-4
홍콩(중국)	18	8.52	25	7
에스토니아	19	8.40	26	7
룩셈부르크	20	8.37	22	2
스페인	21	8.35	23	2
일본	22	8.28	17	-5
싱가포르	23	8.26	20	-3
프랑스	24	8.21	21	-3
이스라엘	25	8.14	18	-7
체코	26	8.14	33	7
헝가리	27	8.02	29	2
슬로베니아	28	8.01	28	0
한국	29	7.97	24	-5
이탈리아	30	7.89	27	-3

자료: KAM2012([www.worldbank.org/kam](http://www.worldbank.org/kam)).

스웨덴이나 핀란드는 복지국가를 통해 형성한 풍부한 인적자원을 통해서 지식기반경제 모델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주장은 매우 흔하다. 특히 미국과는 달리 복지와 정보혁명을 잘 결합시킨 주장도 그 가운데 하나다.

특히 핀란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히 발달한 정보통신 강국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잔여적 복지국가인 미국과는 정반대로 보편적 복지 국가로 많이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 핀란드는 아직까지 정보통신혁명을 통한 ‘정보화 사회=지식기반경제’로의 진전과 보편적 복지국가제도의 유지·강화를 잘 조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핀란드는 혁신과 연대가 잘 조화되고 있는 몇 안 되는 하나인 것이다(전창환, 2007).<sup>3)</sup>

그런데 “20세기 초까지 이들 국가는 여러 농촌 지역이 가난, 질병, 대규모 이민으로 황폐해져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한 사회”였다 는 점을 감안하면 지식기반경제 모델로서의 성장은 매우 극한 변화를 동반한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스칸디나비아 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하게 성장했다. 많은 설명들은 그 비결은 강력한 재분배정책 때문 이었고 자본주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한 시스템 덕분이라고 요약한다.

그런데 ‘노르딕’판 지식기반경제의 모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북유럽 국가들이 경제성장의 기반과 조건을 마련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과 계기들도 살펴봐야 한다. 20세기 초까지도 가난한 농업국이었던 스웨덴이나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거의 50년 동안 소련의 그늘 속에서 살았던 핀란드가 어떻게 복지국가와 지식기반경제의 모델로 회자됐을까?

3) <http://www.hani.co.kr/arti/SERIES/59/197876.html>

## 2) 경제성장의 역사적 조건들

첫째, 1930년대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전쟁특수 효과를 들 수 있다. 스칸디나비아의 주요 국가들은 세계 공황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었으며, 전쟁 피해도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심각하지 않았던 유리한 지위에 있었다. 독일을 선두로 한 열강들의 군비경쟁 때문에 특히 스웨덴과 덴마크의 경우 대외무역량은 급증했다.

스웨덴이 1930~1940년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던 것은 전쟁 기간 동안 운송, 제조업, 공공부문의 급속한 팽창 덕분이었는데, 특히 고품질 철광석이 독일로 수출돼 나치의 전쟁을 지원하는 구실을 했다.<sup>4)</sup>

위와 같이 중립을 지키면서 제국주의 전쟁에서 이득을 취했던 까닭에 전쟁 피해를 줄이면서도 공황을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셈이다. 사실 이와 같은 객관적인 조건들 덕분에 북유럽에서 파시즘이 정치권력을 획득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다(아벤트로트, 2001: 151). 스웨덴과 덴마크에서도 1930년대 세계경제 공황으로 파시스트 운동이 일어났지만 전쟁특수 호황 때문에 파시스트들이 준동하지 못했던 셈이다. 노르웨이의 파시스트 정당 큐이슬링 국민묘목단이나, 핀란드의 파시스트 랍포 운동, 스웨덴 및 덴마크에서도 중간계층들 속에서 일어났던 파시스트 운동들이 이용할 만한 사회적 분위기가 허락되지 않았다. 경제회복과 노동자들의 승리는 사회민주당 집권의 중요한 토양이었던 당시 현실과 대조적이게도 말이다.<sup>5)</sup>

4) 일부 지배층의 노골적인 친나치는 스웨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사실 핀란드 사회민주당조차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친나치적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핀란드는 1942년 히틀러의 소련 침공을 지지했는데, 그때 탄너 주위의 핀란드 사회민주당 지도부는 사실상 히틀러의 적극적인 동맹자가 됐다. 핀란드 사회민주당은 1950년대에는 CIA와 관련을 맺기도 했다(버첼, 1995: 201; 아벤트로트, 2001: 153)

둘째, 소련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마셜플랜 등의 냉전 효과를 들 수 있다. 헬싱키 대학에서 북유럽 현대사와 노르딕 모델에 관해 연구하고 있는 힐슨(Mary Hilson)은 여기에 또 다른 요인을 덧붙인다. 우선 그는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노르딕 국가들에 대한 마셜플랜이 미친 경제적 효과를 지적한다. 미국이 자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설계한 마셜플랜은 북유럽에도 확대됐다. 노르웨이, 덴마크는 각각 거의 4억 달러의 원조를 받았다. 스웨덴도 중립적 지위였음에도 마셜플랜을 통해 3억 5,000달러를 지급받았다. 핀란드 정부의 경우, 소련의 반감을 피하기 위해 마셜 원조를 거절해야 했다. 그럼에도 1947년까지 미국으로부터 7,000만 달러의 차관을 조건부로 제공 받았다. 스웨덴 한 나라가 받은 원조 액수가 독일의 20% 정도였는데 스웨덴 인구가 독일 인구의 10분의 1 정도임을 감안했을 때 북유럽에 대한 마셜플랜 원조의 규모는 꽤 큰 것이었다.

북유럽 국가들에 대한 마셜플랜은 구소련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할 미국 및 서유럽 지배층의 필요성과 관련 있다. 사실 복지국가의 발전과 관련 있는 역사적 상황의 한 중요한 특징은 소련과 동유럽에 경쟁적인 경제체제가 존재했다는 점이다. 발(Asbjørn Wahl)은 홉스봄(Erics Hobsbawm)이 『극단의 시대』에서 서유럽 자본가들이 노동과의 타협을 받아들이도록 만든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지적했음을 상기시킨다. “소련과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맞서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 서구 자본주의 모델에 대한 지지를 광범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여전히 매우 중요했다”(발, 2012: 65)는 것이다. 발은 다음과 같은 린더트(Lindert)의 말을 인용한다.

린더트  
영문 풀네임

5) 그러나 심각한 경제위기가 ‘노르딕 모델’을 강타하고 사회민주당과 노동당 등이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구실을 하지 못할 경우, 파시스트가 준동할 수도 있다. **박노자 교수의 진언에 따르면 (→박노자(2012)는)** 핀란드에서 극우 포퓰리즘의 전형에 가까운 ‘진정한 힌란드인당’이 2011년 총선에서 돌연히 19%의 득표율을 보여 국회 **제3당이 되었다. (→제3당이 된 사실에도 주목한다)**

유럽의 가톨릭교회와 가톨릭민주당과 기독교민주당들의 경우 원래 공공복지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들은 교회와 가족이 그런 문제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930년대의 불황과 두 차례의 전쟁을 겪은 뒤, 변화가 일어났다. 이제 이런 정당들에게도 국가에 의한 재분배가 보다 공정한 분배를 이루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졌다. 아울러 그런 조치가 공산주의의 위협도 물리칠 수 있을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발, 2012: 66에서 재인용).

물론 북유럽 주요국들에게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1945년 스칸디나비아가 직면한 문제들(식량과 원자재를 비롯한 모든 생필품의 부족, 사회기반시설의 파괴, 부채와 국제무역의 붕괴)이 나머지 유럽 국가들만큼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핀란드의 경우 경제생산이 심각하게 붕괴되었고 전쟁에서만 국민 9만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무엇보다 소련에 전체 국토의 10%에 달하는 영토를 빼앗겼다. 나아가 소련과 평화협정을 맺는 조건으로 1938년 가치로 3억 달러에 해당하는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이는 1938년 핀란드 수출액의 1.5배에 달하는 액수였다(힐슨, 2008: 88~89).

힐슨: 참고문헌엔 2012/인터넷검색결과 2010

그럼에도 북유럽 국가들이 제공받은 마셜플랜 기금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마셜플랜의 효과는 매우 컸다. 이 원조를 통해서 “노르딕 국가들은 주요 무역상대국을 기존의 중부 유럽과 독일에서 앵글로색슨 국가 쪽으로 조정”(힐슨, 2008: 91)하였고, 수출 대상 지역은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영국으로도 확대됐다. 자신이 영향권 아래 두고자 하는 지역의 공업국들에게 자국의 시장을 전폭 개방하는 것을 통해서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을 윌리엄스(William Appleman Williams)가 ‘문호개방 제국주의(Imperialism of the Open Door)’라고 불렀던 시스템이 스웨덴과 핀란드에게는 서유럽 버전으로 전개됐다.

다시 말해, 노르딕 모델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기 동안 전쟁 특수로 이득을 취하거나 중립적 위치를 유지하고, 서방의 무역개방 정책에 적극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행보를 취함으로써 경제 재건과 발전의 마중물을 구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지 않는 작은 규모와 유럽의 분쟁에서 중립적으로 존재한 덕분에 전후 생산력이 손상되지 않았고 특히 군비경쟁의 직접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상황에서 유리한 조건을 구가할 수 있었다.<sup>6)</sup>

말하자면 스웨덴 모델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한 대안이라기보다는 냉전과 자본주의적 호황이 만들어낸 특수한 조건의 효과다(이상훈, 2011).

### 3) 주요 수출품목에 몰입 의존하는 시장 주도 거버넌스 전략

노르딕 국가들은 인구규모가 작아 국내 시장 규모가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경제 변화를 활성화는 데에 수출 영역이 중요했다. 특히 풍부한 천연자원 덕분에 전통적으로 수출품은 원자재였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광활한 산림을 개발해 타르, 목재, 펄프, 종이를 생산했으며, 특히 스웨덴은 몇몇 국가들에 고품질의 철을 수출했다.

스웨덴의 경제는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4%에 이를 만큼 거의 완전한 개방경제다. 스웨덴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볼보(Volvo)와 정보통신기기의 에릭슨(Ericsson), 세계 25위의 군수업체인 사브(SAAB), 제약회사인 메디콘 밸리(Medicon Valley) 등 약 10개 주요 대기업들<sup>7)</sup>의 수출전략에 의존하

6) 홍기빈은 비그포르스(Emst Wigforss)의 경제정책을 소개하는 책에서 “스웨덴 경제가 1931년 금 본위제를 탈퇴하면서 급격한 환가치 하락으로 크로나가 과소평가되어 수출이 급격하게 살아나고 또 수입대체 산업이 활황을 맞은 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보였다. 여기에 당시 긴장이 고조되던 유럽의 지정학 정세에서 독일의 군비확장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면서 스웨덴 수출이 활성화된 덕을 보았다”고 지적한다(홍기빈, 2010: 191).

는 경제라고 말할 수 있다. 기계류(15.7%), 전자 및 통신(14.4%), 수송(15.1%), 종이·펄프(13.4%) 등 주요 수출부문의 주력 상품들을 서유럽(43.8%), 북유럽(20.3%), 북미(13.4%)에 수출하는 경제구조다.

핀란드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핀란드는 전기전자산업, 금속산업, 기계산업, IT를 기술산업으로 분류하고 이 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는데, 이 부문은 전체 상품수출(726억 유로, 2003년 예측치, 핀란드 통계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이른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독일, 스웨덴, 미국, 러시아 등으로서 이 부문에 대한 핀란드 경제의 의존율은 매우 높다.

1936년의 몇 달을 제외하고 1949년까지 17년 동안 재무부 장관을 하면서 스웨덴 경제 모델의 초석을 쌓았던 비그포르스(Emst Wigforss)는 스웨덴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성 증대를 통한 대기업 육성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노동계급의 경제적 양보 아래 사회적이고 이에 상응하는 복지의 증대로 상쇄한다는 발전전략을 갖고 있었다. 그의 복지 및 발전전략은 수출 대기업들의 효율성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수립됐다.

그러나 수출 의존 경제의 난점은 해외시장의 불안정에 동조화 현상을 보인다는 것인데 이 한계는 1980년대 말에 극적으로 나타났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경우 1980년대 국내 은행의 대출금리와 민간차입 제한을 철폐했는데 이런 조치는 자산과 외채에 바탕을 둔 투자 붐을 불러일으켰다. 긴축재정정책으로 이를 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나라의 경제는 1980년대 후반까지 심각한 수준으로 과열됐다. 결국 호황은 1989~1990년 극적인 붕괴로 끝이 났다. 두 나라는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었고 금융부문은

7) 볼보(Volvo), 에릭슨(Ericsson), 노르데아 은행(Nordea Bank), 바텐폴(Vattenfall), 스칸스카(Skanska), SEB은 포춘지가 선정하는 매출액 대비 세계 500대 기업에 속한 기업이다. 그 외에도 ABB, 아스트라 제네카(Astra Zeneca), IKEA, H&M, 사브(Saab), 일렉트로룩스(Electrolux), 텍트라 팩(Tektra Pak), 아사 अब्ल로이(Assa Abloy), 아트라스 콤포(Atlas Copco), SKF, 샌드빅(Sandvik) 등이 있다.

정부 개입 덕분에 겨우 구제됐다. **과대평가된 통화는 ……** 엄청난 평가절하가 단행됐다. 스웨덴의 경우 경제성장률은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핀란드의 경우는 더 극단적이었다. 핀란드는 1991년 GDP 성장률이 -5.9%, 1992년에는 -3.48%를 기록했다. 1991년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하룻밤 사이에 주요 무역 대상국을 잃은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실업률이 급증해 스웨덴의 경우 1993년까지 9% 이상, 핀란드는 16% 이상까지 상승했다. 경기침체는 1930년대 대공황 때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었고 국민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은 1860년대 기근 시기와 비견될 정도였다고 한다(힐슨, 2010: 114). 두 나라 모두 몇 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에 머무르는 수준이었다.

#### 4) ICT 부문에 국한된 성장전략

그러다가 1990년대부터 스웨덴과 핀란드는 에릭슨과 노키아 등이 주도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부문의 선도자 구실을 하면서 지식기반경제의 모델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여기서부터 바로 ‘지식기반경제 모델’과 ‘노르딕 모델’의 진정한 역사가 시작된다.

1990~1993년은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 시기에 민영화와 소유규제 철폐가 매우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1993년에 외국인 소유규제가 완전히 제거되면서 핀란드에서 노키아는 급속히 팽창하기 시작했다. 스웨덴은 1990년대 들어 자유화와 민영화를 가장 열정적으로 받아들인 나라들 중 하나였다. “우파 정권이냐 좌파 정권이냐에 따른 차이도 거의 없었다. 2006~2007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스웨덴정부가 소유한 자산은 스톡홀름 주

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체 자산의 1%에 지나지 않았다”(발, 2012: 106).

특히 핀란드에서의 노키아의 성장은 매우 극적이었다. 노키아는 제지펄프 회사와 고무회사 등을 매각하고 1992년 이동전화사업에 집중했다. 전선 회사와, 텔레비전, 컴퓨터 사업체도 매각했다. 유럽 표준의 GSM(Global System for Mobil communication, 유럽 및 기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디지털 이동전화 시스템) 개발은 커다란 성과였다. 2000년에는 세계 10개국에 생산기지를 건설하고 15개국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세계 130여 개국에 제품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무선통신 분야에서 에릭슨의 역사는 노키아에 비해 ‘유구하다’. 애초 임업이 가장 유력한 산업이었던 스웨덴에서 목재회사들이 벌채목의 운송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성 때문에 무선통신 보급이 자연스럽게 촉진되었는데 그 덕택에 1970년대 초반에 거의 모든 산림지역을 포괄하는 무선 네트워크가 구축됐다. 1981년 1세대 아날로그 휴대전화(자동차 전화)를 상용화하면서 이동통신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이동전화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기초시설 영역인 GPRS와 3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의 50%를 점유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스웨덴과 핀란드에서의 ICT 부문의 성공은 자본을 특정 분야에 집중시킨 결과이긴 했다. 투자를 특정 부문에 집중한 주체는 단지 노키아와 에릭슨 등 사적 기업만이 아니었다. 국가도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시스타사이언스시티(Kista Science City)

특히 스웨덴은 스톡홀름 인근에 **시스타사이언스시티**라는, 이른바 북유럽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도시를 만들었다. 스웨덴 ICT 산업의 본산지이며 에릭슨 본사가 위치하면서 관련 ICT 기업, 연구소, 대학교 등 총 4,600개 사가 입주해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이어 세계 2위의 IT 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는 시스타사이언스시티는 실로 스웨덴의 지식기반경제를 상징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시스타 에르바펠렛(Jaervafaellet)이라는 군 주둔지였던 이곳은 스웨덴 대기업과 대기업을 주축으로 한 산학협력재단인 ‘일렉트룸 재단’이 연구 투자를 지원해서 만들어진 R&D 중심의 클러스터 조성사례로 꼽힌다. 이 지역은 1970년대 초까지 군사훈련장으로 사용됐으나 1972년부터 주택건설이 시작되면서 개발이 진행됐다. 1976년 토종기업인 에릭슨(Ericsson)이 시스타(Kista)에 무선통신 사업본부와 연구소를 설치하고 1978년 IBM이 추가로 진출해서 본격적인 정보통신산업 메카로 발전했다. 1980년대 말에는 스톡홀름 시의 지원하에 스웨덴 왕립공대와 에릭슨이 협력지원센터를 건립했다. 1994년에 에릭슨이 시스타사이언스파크에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Microelectronics) 생산공장을 설립했다. 여기에는 어도비(Adobe), 컴팩, 휴렛팩커드, 마이크로소프트, 노키아, 에릭슨, IBM, 선 마이크로시스템 등 20여 개 이상의 다국적기업들이 각각 진출해 있다. 세계 첨단과학기술 지역 집적부문 순위에서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2위가 바로 이 지역이다.<sup>8)</sup> 국가가 민영화에 열을 올리면서도 북유럽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대규모 지원과 투자를 해나갔던 것은 대조적이었다.<sup>9)</sup>

한편 핀란드는 지식기반경제의 주된 동력이 고급인력 창출 시스템이라는 이데올로기의 진원지로 여겨졌고 ‘인적자본’ 이론의 성공사례로 칭송받았다. 실제로 대학을 자본주의체제에 종속시키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지식경제론(Callinicos, 2006)은 오랜 무상교육 전통을 유지한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도 1990년에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발전시키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했다

참고문헌  
없음

8) 박상철, 「스웨덴 혁신클러스터구축 전략: 시스타사이언스시티」,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2006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2006); 시스타사이언스시티 홈페이지: <http://www.kista.com>

9) 도시학자 카스텔이 『정보도시(The Information City)』에서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포함한 주요 도시들을 조사하면서, 언급한 비대칭성과 지리적 불균등성 경향은 ‘시스타사이언스시티’에서도 잘 나타난다.

참고문헌  
없음(Antikainen, 2010; Pekkola, 2009).<sup>10)</sup>

사실상 핀란드의 산학협력 모델로 언급되는 주된 내용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을 위해 맞춤형 폴리텍 확산”이나 “기업인 출신 교수들을 다양하게 중용, 실무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 제공”(정우성, 2012) 등이다.

정보도시 프로젝트와 강도 높은 산학협력 시스템 등이 어떤 작용을 했는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제시할 수는 없지만 에릭슨과 노키아 등으로 대표되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ICT 산업은 계속 상승장구하는 듯 보였다. 스웨덴의 에릭슨은 1999년에는 CDMA의 원조 격인 미국 퀄컴사의 이동통신 장비부문마저 인수하면서 GSM(유럽에서 시작되어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화한 이동통신 방식)과 CDMA(한국을 비롯한 환태평양 지역에서 사용되는 이동통신 방식)를 아우르는 경쟁력을 확보했다. 주식시장에서는 2000년 3월 초 주당 26달러로 올라 에릭슨은 시가총액 2,100억 달러의 거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이 규모는 당시 스웨덴 GDP의 8%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핀란드의 경우 노키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컸다. 노키아는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전 세계에 총 14개의 생산설비를 운영하고 있었고 핀란드에만 100여 개의 하청업체를 두고 있는, 핀란드 경제의 가장 중심적 기업으로, 2010년 핀란드 GDP 산업별 구성을 볼 때 핀란드 GDP 2,392억 달러 중에서 제조업이 30.3%를 차지했는데(농업 3.6%, 서비스 66.1%), 그 중에서 노키아가 80%를 차지했다. 1998~2007년까지 10년간 노키아는 핀란드 GDP의 25%, 연구개발의 30%, 수출의 20%, 전체 기업세금 중 23%를 부담했다(ETLA, ‘노키아 보고서’). 그 결과 1990년대에는 노키아의 성공은 핀란드를 OECD 국가에서 심각한 경제위기에서 제외시키는 구실을 했다는 평가도 있다(Pajarinen, 2013). 그러나 1990년대말 미국의 닷컴 위기에서 ‘노르딕 모델’

OECD 국가의 심각한 경제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만든 역할을

10)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정진희(2012)를 참조.

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다.

##### 5) 1990년대 말 닷컴 위기, 아이폰 출시 이후의 ‘노르딕’ 모델

연간 40% 이상 성장하던 시장환경을 근거로 공급계획을 세웠지만 그 예상은 계속 수정돼야 했다. 2001년의 수요에 대해 1999년 말에는 약 2억 2,000만 대 정도로 전망했지만, 2000년 초가 되자 6억 대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업체들은 누구나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하고 화상통신을 하는 미지의 세계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선전했다. 누구도 이러한 장밋빛 미래를 의심하지 않았기에 유럽의 거대 통신기업들은 3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서 무려 12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써넣었다.

그러나 과도한 투자는 공급과잉과 기업의 부채 확대로 이어지며 업계의 채산성을 압박했다. 공급과잉의 정도는 매우 심했다. 북미에서만 2,000억 달러 이상이 과잉투자되어 장거리 광통신망의 경우 전체 용량의 4~7%만 사용됐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전 세계 광통신 수요는 1998~2001년 사이에 4배가량 증가하는 데에 그쳤지만 광통신 용량은 무려 500배나 증가했다.

특히 이동통신부문의 경우, 주파수 경매를 위해 끌어다 쓴 부채로 신음했고, 에릭슨도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에릭슨은 2000년까지만 해도 세계 최강의 휴대전화업체였지만 20%의 노동자들을 감원해야 했다. 에릭슨은 소니와 합병을 통해 휴대폰 부문에서의 재도약을 노렸지만 소니의 침몰로 그 조차 힘겨웠다. 현재 에릭슨은 130억 달러(약 14조 원) 규모의 러시아 4G(LTE) 통신장비시장을 놓고 글로벌 기업들과 격돌하고 있다. 핀란드의 노키아와 스웨덴의 에릭슨이 일단 선제권을 잡은 가운데 중국 화웨이가 바짝 추격하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러시아 통신시장은 토종 대형 통신사

들인 모바일텔레시스템(MTS)과 메가폰, 빔펠콤, 로스텔레콤 등과의 경쟁도 매우 치열한 상황이다.

2008년 이후 노키아의 운명은 더욱 드라마틱하다. 아이폰 등장과 노키아의 심비안(Symbian) OS가 외면당하면서 세계 휴대폰 시장점유율이 급감했고 실적 저조는 기업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2011년에는 노키아 주가가 4분의 1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

스마트폰이 처음 출시된 1990년대에는 통합형 기업인 노키아, RIM(블랙베리를 제조한 캐나다 기업),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했다.<sup>11)</sup> 사실 2000년대 중반까지 모바일 업계에서 최선주 주자였던 노키아의 경우 OS와 AP에서 제품경쟁력을 잃고 난 뒤 디자인과 운영체제가 낡은 것으로 뒤처지기 시작하면서 2011년부터 2012년 12월 현재까지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안드로이드와 iOS의 약진으로 노키아는 사실상 ‘심비안’의 신규 개발을 단념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제휴해서 새로운 OS ‘윈دوز즈 폰7’로 반격을 도모했지만 그 결과는 완전한 패배였다.

AP(Application Processor)

노키아는 결국 2008~2010년 사이에 약 7,000명을 해고하는 것으로 대응했다(Pajarinen, 2013). 노키아가 2007년을 정점으로 시장에서 사라져간 이유는 단지 애플의 스마트폰 때문만은 아니었다. 중국 시장을 선점했던 노키아는 저가기술에 기반을 둔 중국 업체의 공략에 속수무책이었다. 중국 업체들의 원가경쟁력에서 밀리며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데도 소홀해졌다. 경쟁업체가 6개월마다 새로운 제품을 내놓을 때 노키아는 1년 이상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여기에 한때는 혁신의 상징이었던

11) 노키아 1100 모델은 80개의 언어로 지원됐을 정도였고 지난 5년 동안 무려 2억 5,000만 대나 판매돼 단일 제품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자제품으로 기록된다. 모토로라의 레이저가 5,000만 대였던 것에 비하면 5배 규모였다(drian Slywotzky: 2011). → 참고문헌 없음

심비안 운영체제의 몰락과 아이폰 등장으로 노키아는 마이크로소프트사로 인수되는 운명을 맞이했다.

노키아는 그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국내 고용인원 수는 약 29만 명이며, 이것은 핀란드 고용인구 1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해외 고용인원 수는 30만 명을 넘어선다. 이것은 핀란드 전체 노동력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2012년 6월). 노키아는 핀란드 민간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의 고용주이자 공공부문까지 포함해도 헬싱키 시 정부에 이어 두 번째 규모의 고용을 차지한다(KT 경제경영연구소, 2011). 따라서 노키아의 몰락은 급격한 실업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100여 개의 협력사를 고려하면 이른바 ‘노키아 생태계’에서의 2차 실업 쓰나미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와 실업률 증가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 MS 인수로 핀란드 전체 실업률이 0.2%로 즉각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핀란드 기업 연구개발(R&D)에서 노키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까지 40% 이상을 유지해왔지만 앞으로는 17%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핀란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에는 4%였지만 **지난해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013년 ???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벤처기업 로비오(Rovio)는 모바일 게임인 ‘앵그리 버드’의 성공으로 단숨에 세계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등극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매출규모가 약 1억 달러에 불과하나 향후 영화, 캐릭터 사업 등으로 다양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노키아에서 나온 우수 인력들이 벤처 창업과 국내외 SW 기업에 채용되면서 소프트웨어 산업을 통한 ‘제2의 중흥기’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제 핀란드의 자부심은 노키아에서 로비오로 넘어갔다”고 말하지만 소프트웨어 업체 로비오의 고용규모는 약 500명 정도에 불과하다.<sup>12)</sup>

스웨덴과 핀란드의 지식기반경제 모델의 주역인 에릭슨과 노키아의 몰락

과 정체는 도전과 혁신의 이미지와는 이제 거리가 멀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 6) 불평등의 심화

앞에서 지적한 지식기반경제가 창출하는 불평등 축적 구조는 노키아와 에릭슨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노키아와 에릭슨도 본사에 연구개발 및 설계 등의 핵심 인력만을 남긴 채 저임금 위주의 인력을 찾아 해외 아웃소싱을 해왔던 IBM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을 추구하고 있었다. 실제로 노키아의 경우, 2002년 브라질 마나우스(Manaus)에 있는 노키아 공장에 대한 고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파견회사를 통해 간접고용된 노동자들은 약 20%에 육박한다. 전체 1,356명 가운데 256명이 파의 경우 2002년, 파견회사를 통해서 고용한 노동자들이 265명에 이른다. 특히 파견노동자들 가운데 80%가 여성이었다(스미스 외, 2009: 107).

?

사실 유럽 최초로 전체 제조시설을 매각한 통신업체는 바로 에릭슨이었다. 1997년 에릭슨은 전체 제조시설을 매각했다. 그 다음으로 지멘스가 독일에 있던 주요 서버 제조시설을 매각했는데 이 과정에서 에릭슨은 중요한 ‘선구자’ 구실을 했다(스미스 외, 2009: 68).

위와 같은 에릭슨과 노키아의 전략은 특정 수출품목 생산 및 수출에 사활을 걸고 이 부문에 자원을 집중시키는 전략의 일환이었다. 그리고 1990년대 초부터 더욱 강화된 시작된 이 전략은 가장 시장주의적 정책이 추진됐던 시기이다. 이 전략은 1990년대 초부터 더욱 강화되었는데, 이 시기는 시장주의적 정책이 강하게 추진됐던 시기이다

사실상 노르딕 모델 중 특히 스웨덴식 성장경제 모델이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과 구분되는 점으로 꼽히는 것은 시장친화적이면서도 평등주의적 분배

12) <http://www.economist.com/news/special-report/21570834-nordic-region-becoming-hothouse-entrepreneurship-if-doubt-innovate>

정책을 결합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 그림은 1990년대 부터 이미 현실과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1990년대 말 선진국 내에서 소득불평등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때에 공공재정을 건전화하려는 공격적인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었다. 그 결과 스웨덴과 캐나다, 핀란드의 경우 1995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빈곤율은 OECD 내에서 가장 높은 국가들 중 하나가 됐다(Pimlott, 2010). 특히 스웨덴은 지난 15년 동안 OECD 국가들 중 불평등이 가장 높이 증가한 국가다.

성(性)과 이주민들의 경우 실업률은 더욱 높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일 자리 지원은 종종 그들의 성과, 외모와 출신 지역에 따라 거절당한다. 인구의 15%가 이주민인 스웨덴의 경우 이주민들의 실업률은 스웨덴 출신 실업률 6%에 비해 16%나 된다. 격렬한 폭동이 일어난 바 있는 허스비의 1만 1,000명의 거주자의 약 80%가 이주민 1세대, 2세대들이라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 지역에서 청년실업률은 높고 등급이 너무 낮아 고등학교에 갈 수 없는 주니어 과정(16세까지 의무교육)을 마친 아이들의 거의 50%다.

핀란드의 경우에도 1990년대 초에 비정규직 고용이 ‘자율화’돼 1999년에는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이미 21%에 달했다. 한국에 비해 낮은 수치이지만 이것은 유럽연합의 평균치인 14%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재분배 조세정책 등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스웨덴과 핀란드가 상대적으로 평등하지 않느냐는 주장에는 분명히 그렇다는 대답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결코 과장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 사회민주당 집권 20년이 지난 1950년대 중반, 상위 10%의 수입자가 세금공제 후 총소득의 27%를 차지했는데 이 수치는 영국(24.5%)의 수치와 큰 차이를 내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1970년대 초반의 정부보고서조차 “사회정책하에서 소득재분배는 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는 제도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교육제도 역시 계속 차별화돼 상류계층의 자녀들에

〈표 4-2〉 OECD 주요 국가들의 지니계수 상승 변화

	2008(↘)	1985
멕시코	0.48	0.45
미국	0.38	0.34
이스라엘	0.37	0.33
영국	0.34	0.32
이탈리아	0.34	0.31
호주	0.34	0.309
뉴질랜드	0.33	0.27
일본	0.33	0.30
캐나다	0.32	0.29
독일	0.30	0.25
네덜란드	0.29	0.27
룩셈부르크	<b>0.288</b>	<b>0.25</b>
핀란드	<b>0.259</b>	<b>0.209</b>
스웨덴	0.26	0.20
체코	0.26	0.23
노르웨이	<b>0.25</b>	<b>0.22</b>
덴마크	<b>0.25</b>	<b>0.22</b>

자료: OECD, "Divided We Stand"(2011 report).

게 유리한 것이 되었다(버첵, 1995: 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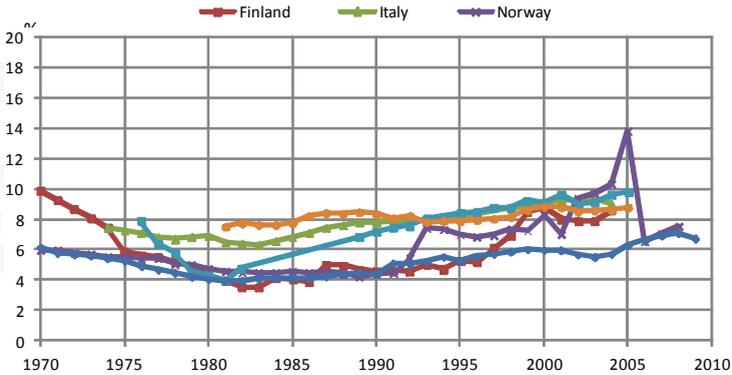
2008년 이후의 소득불평등 심화 정도는 매우 심각하다. 소득불평등에 관한 OECD 보고서(2011년, "Divided We Stand")에 따르면, 스웨덴의 경우 2010년의 빈곤율은 1995년의 4%의 두 배를 넘는 9%에 이른다. 2011년 실업률의 경우 스웨덴은 OECD 국가들 평균 실업률을 상회해 7.93에 이른다.

7.93%

1985년과 2008년의 소득 지니계수를 비교한 OECD의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과 핀란드의 지니계수도 상승했다. 다시 말해 이들 국가도 불평등 심화 경향에서 전혀 제외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큼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지니계수의 변화(불평등 변화)는 1990년대 말 긴축정책과 관련

〈그림 4-1〉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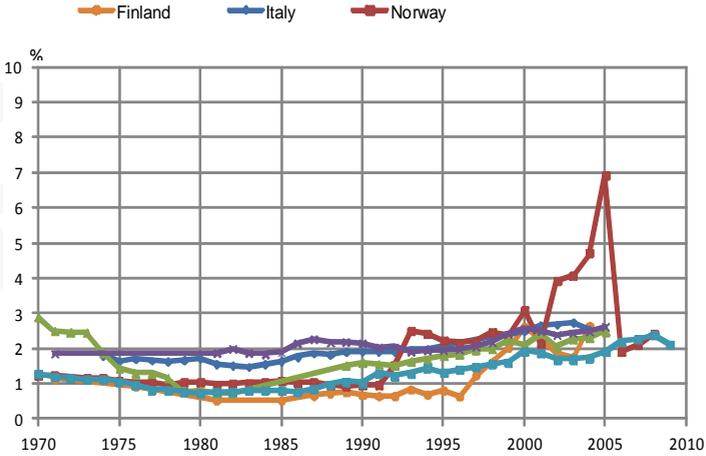


자료: OECD, "Divided We Stand"(2011 report).

이 있다. 핀란드와 더불어 스웨덴은 두 나라 모두 공공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공격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었던 1990년대 후반에 선진국 사이에서 가장 급격하게 수입불평등의 증가를 겪었다. 수입불평등은 큰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움직였던 영국과 여러 다른 나라들뿐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증가했다. 스웨덴, 캐나다, 핀란드에서 1995~2005년 중반 사이 빈곤 증가율은 OECD 국가들 사이에서 가장 높았다.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경우 핀란드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1975~1980년대 중반 사이에 낮아졌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2〉 상위 0.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료: OECD, "Divided We Stand" (2011 report).

### 3. 나가며

지식노동자들이 자본과 기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란 예상과 달리, 여전히 자본은 노동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 지식기반경제는 교육과 지식축적이 새로운 평등과 창조적 세계로 갈 수 있는 활로를 줄 수 있을 것처럼 회자됐다. 그러나 오히려 기업이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를 싼값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기업은 이윤만을 추구하고 경영진들은 보너스를 챙기기 위해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직업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그러는 사이 불평등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세계 경제에 더 **아말감 되고** 있다. 북유럽 노르딕 모델은 오히려 불안정한 이 구조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심화되고

## 참고문헌

- 강남훈. 2002. 『정보혁명의 정치경제학』. 문화과학사.
- 그로스만, 엘리자베스(Elizabeth Grossman). 2008. 『디지털 쓰레기』. 팜파스.
- 김인성. 2012. 『두 얼굴의 네이버: 네이버는 어떻게 우리를 지배해 왔는가』. 에코포인트.
- 김인중 외. 2001.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지역혁신체제 구축모형」. 산업연구원.
- 김호균. 2001. 『제3의 길과 지식기반경제』. 백의.
- 노나카 이쿠지로·곤도 노보루. 1988. 『지식경영』. 21세기북스.
- 드러커, 피터(Peter F. Drucker). 1992. 『미래기업』. 한국경제신문사.
- \_\_\_\_\_. 2002. 『21세기 지식경영』. 한국경제신문사.
- 랑센핑·쑤진. 2012. 『벼랑 끝에 선 중국 경제』. 책이있는풍경.
- 민병익. 2006.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보격차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 박노자. 2012. 『좌파하라』. 꾸리에.
- 박해광. 2003. 「정보격차의 새로운 경향」. <경제와 사회>. 비판사회학회.
- 발, 아스비에른(Asbjørn Wahl). 2012. 『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신자유주의 시대, 복지정책의 딜레마』. 남인북 옮김. 부글books.
- 버첼, 이안(Ian Birchall). 1995. 『서유럽 사회주의의 역사: 1944~1985』. 배일용 옮김. 갈무리.
- 브라운·로더·애쉬턴(Phillip Brown, Hugh Lauder and David Ashton). 2013. 『더 많이 공부하면 더 많이 벌게 될까』. 이해진·정유진 옮김. 개마고원.
- 산업연구원. 1999. 『지식기반산업』.
- 삼성경제연구소. 1999.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정부의 역할」. 삼성경제연구소.
- \_\_\_\_\_. 2002. 「지식기반경제와 국민계정」.
- 송재용·이경목. 2013. 『이건희경영학: SAMSUNG WAY』. 21세기북스.
- 스미스, 테드 외(Ted Smith, David A. Sonnenfeld and David Naguib Pellow). 2009. 『세계 전자산업의 노동권과 환경정의』. 메이데이.
- 아벤트로트, 볼프강(Wolfgang Abendroth). 2001. 『1968년 이전의 유럽 좌파(1848-1968)』. 신금호 옮김. 책갈피.
- 알페로비츠·데일리(Gar Alperovitz and Lew Daly). 2011. 『독식비판: 지식 경제 시대의 부와 분배』. 민음사.
- 올레타, 켄(Ken Auletta). 2010. 『Googled! 구글드: 우리가 알던 세상의 종말』. 타임비즈.
- 우 팀(Tim Wu). 2012. 『마스터 스위치: 정보제국의 생성과 몰락으로 보는 21세기 패권』. 백미란 옮김. 라이프맵.
- 워시, 데이비드(David Warsh). 2008. 『지식경제학 미스터리』. 김영사.
- 유노가미 다카시. 2012. 『일본전자·반도체 대붕괴의 교훈』. 성안당.

- 유장희·김남두. 2001. 『지식기반경제추진전략: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상락. 2002. 「지식기반경제의 공급적 성격」. 『현대자본주의의 분석』. 한울아카데미.
- 이상이. 2010.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민.
- 이상훈. 2011. 「스웨덴 모델의 역사와 신자유주의화」. 《사회화와 노동》, 7-8월, 101호. 사회진보연대.
- 이진복. 2004. 「지식기반경제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일 고찰」. 한양대학교 제3섹터 연구소.
- 전창환. 2007.3.21. 「성장-분배 조화시킨 핀란드 모델」. 《한겨레》, 칼럼.
- 정우성. 2012. 「연구중심 대학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연구」.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연구소.
- 정진희. 2012. 「신자유주의와 핀란드 고등교육의 위기」.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9권 제2호(2012년 여름호).
- 조상섭·조병선. 2003. 「OECD 국가 지식기반산업 형성에서 IT 산업역할」. 《전자통신동향분석》, 제18권 제3호(2003년 6월).
- 조용호. 2011. 『플랫폼전쟁: 이기는 자가 미래다』. 21세기북스.
- 켈리니코스, 알렉스(Alex Callinicos). 2009. 『제3의 길은 없다』. 인간사랑.
- 하야시 노부유키. 2008. 『애플의 법칙』. 샐림Biz.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미래 정부를 위한 지식플랫폼 구축방향」.
- 헤드릭, 대니얼(Daniel R. Headrick). 2011. 『정보화 혁명의 세계사』. 너머북스.
- 홍기빈. 2010.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의 잠정적 유토피아』. 책세상.
- 힐슨, 메리(Mary Hilson). 2012. 『노르딕 모델: 북유럽 복지국가의 꿈과 현실』. 삼천리.
- KT 경제경영연구소. 2011. 김재욱 외. 「노키아의 위기가 핀란드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www.digieco.co.kr

Carchedi, G. 2011. *Behind the Crisis*. Brill.

Drucker, Peter F. 1993. *Post-Capitalist Society*. New York: Haper Press.

*Economist*. 2013.2.2. "The Nordic countries."

Fahsi, Magda. 2013. "Stockholm's Riots Reveal The Illusion Of Sweden's Tolerance Model." <http://oppenheimer.mcgill.ca/Stockholm-s-Riots-Reveal-The>

Fukuyama, F. 1995. "Knowledge Makes the Difference at Motorola." *Journal of Democracy*, 6(2).

Garganas, Panos. "Austerity politics." *International Socialism* 128.

Hardy, Jane. 2005. "The changin strucure of the British economy." *International Socialism* 106. <http://www.isj.org.uk/?id=92>

Hayek, Friedrich A. 1945. "Use of Knowledge in Society." *American Economic Review*.

Mudambi, R. 2008. "Location, Control and Innovation in Knowledge-intensive Industries."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pp. 699~725.

- OECD. 1996. *The Knowledge-Based Economy: A Set of Facts and Figures*. Paris.
- \_\_\_\_\_. 1998. *21st Century Technologies : Promises and Perils of a Dynamic Future*. Paris.
- \_\_\_\_\_. 1999. *The Knowledge-Based Economy: A Set of Facts and Figures*. Paris.
- Pajarinen, Mike. 2013. "Nokia's Labor Inflows and outflows in Finland." ETLA report.
- Pekkarinen, J. 1992. "Coporatism and Economic Performance in Sweden, Norway, and Finland." in J. Pekkarinen et al.(eds.). *Social Corporatism: A Superior Economic System?* Oxford: Clarendon Press.
- Pelkonen, A. 2008. "Reconsidering the Finnish Model." *TRAMES* 12(62/57), 4.
- Pimlott, Daniel. 2010. "Doubt Cast on Osborne's 'Fair' Cuts Pledge." *Financial Times*.
- Pontusson, Jonas. 1984. "Behind and beyond social democracy in Sweden." *New Left Review*, 143, pp.69~96.
- Roos, J. 2002. "The Consequences of the Crisis of 1990's to the Nordic Welfare State: Finland and Sweden." in Auleytner(ed.). *O roztropna polityke społeczna*. Polskie Towarzystwo Polityki Społecznej.
- Selwyn, B. 2012. "Beyond firm-centrism: re-integrating labour and capitalism into global commodity chain analysis."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2, pp.205~226. Advance Access Published on 4 July 2011.
- <http://www.scb.se>(스웨덴 통계청)
- <http://www.stat.fi>(핀란드 통계청)
- <http://www.nokia.com>
- <http://www.ericsson.com>



제 5장

## 아이슬란드의 교훈 자본주의, 공황 그리고 저항

마틴 하트-랜즈버그 | [소속?](#)

자본주의의 대안을 구축하려면 자본주의적 경제활동과 관련된 국가목표의 이익과 한계뿐 아니라 자유화와 사유화를 확대하기 위한 현대 자본주의 운동의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해야 한다. 비록 작은 국가이지만, 최근의 아이슬란드 사례는 자본주의적 동학과 변화전략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1991년 아이슬란드 정부는 아이슬란드 은행 세 곳을 급격하게 확장시키는 적극적인 자유화, 사유화 정책을 도입했다. 그들의 높은 레버리지 성장은 거대한 주식시장과 주택거품의 형성을 부채질했는데, 이는 2000년대 중반까지 아이슬란드의 1인당 GDP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만들었다. 아이슬란드 경제는 세 은행이 파산을 피할 수 없었던 2008년 10월 붕괴했고, 아이슬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침체를 겪는 국가 중 한 곳이 되었다.

아이슬란드 국민들은, 유럽에서는 독특하게도,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책임이 있는 정치지도자들을 사임시켰다. 그리고 그들은 재정, 통화, 주택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핵심적인 사회정책의 확장을 목표로 하는 사민주의 연정을 출범시켰다. 그 결과 아이슬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빠르고 광범위한 경제회복을 경험한 국가 중 한 곳이 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국가 활동의 범위는 여전히 강력한 자본가계급에 의해 제한되었다. 특히 2013년 4월의 정치적 반전과 지배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정권의 당선으로 이전 노동계급이 획득한 것들은 과거될 운명에 처했다.

## 1. 자본주의 계급동학과 신자본주의

1990년대나 최근에 신자본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를 선출했다는 점에서 아이슬란드는 전혀 특별한 사례는 아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결과를 야기한 계급동학은 각 국가별로 동일하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슬란드에서 벌어진 과정에 대한 연구는 폭넓은 현상에 대한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자본주의가 자본가계급의 프로젝트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자유화와 사유화에 대한 국가의 결정과정은 자본주의적 이윤창출 기회를 확장시키기 위한 목적, 자유주의자들에게 정당성을 제공하는 그들 자신의 주장과 종종 모순되기도 하는 목적에 따라 신중하게 형성된다.

제2차 세계대전 말 아이슬란드는 서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다. 아이슬란드는 덴마크의 식민지였고, 1944년에 가서야 완전한 독립을 쟁취했다. 식민지 역사의 결과로, “아이슬란드의 자본주의는 그 시작부터 흔히 ‘문어(The Octopus)’로 알려진, 14개의 특정한 경제적·정치적 지배엘리트 가문들의 블록에 의해 지배되었다”(Wade and Sigurgeirsdottir, 2010: 10).

‘문어’는 공식적인 집단은 아니었다.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가문들

은 가장 핵심적인 산업들을 공동으로 지배했다. ‘문어’는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정당인 독립당(Independence Party)을 지배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보여주었는데, 독립당 최고지도자의 다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문어’ 가문의 구성원이었다. 다음으로, 이보다는 덜 강한 가문집단은 ‘오징어(The Squid)’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종종 독립당의 하위 연정 파트너로 역할을 하는 진보당(Progressive Party)을 지배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아이슬란드는 높은 수준으로 경제를 관리했다. 1960년대 초 다시 한 번 유럽의 흐름에 따라 아이슬란드는 경제활동에 대한 통제된 자유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그 역사 때문에 아이슬란드의 경제는 다른 서유럽 경제보다 규제가 강했고, 그 형성에 있어 후견인주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예컨대, 가장 큰 은행들은 국가 소유였고, “자본은 정부에 의해서 서로 다른 산업 간에 할당되었고, 명목이자율은 정부의 통제를 받는 아이슬란드중앙은행(CBI)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실질이자율은 1980년대 후반까지는 마이너스로 유지되었다”(Benediktssdottir et al., 2011: 187~188). 동시에 이들은 행은 상당 부분 주요 정치정당과 그들 각각의 후원자의 이익을 위해 관리되었다. 예를 들어 독립당에서 지명된 사람이 국가 소유의 **란즈방키 은행(Landsbanki)**을 운영하고 ‘문어’가 관리하는 사업에 대출해줄 것을 지시했다.

대략적으로 보자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이슬란드의 경제는 잘 작동했다. 출발 당시에는 초라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까지 [아이슬란드] 가처분소득의 양과 분배 모두에서 북유럽 평균과 같은 수준에 도달했다”(Wade and Sigurgeirsdottir, 2010: 11). 그러나 사태는 곧 아이슬란드의 정치경제를 변화시킬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최초의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새로운 사건은 1980년대 초 ‘기관차(The Locomotives)’로 알려진 “신자유주의/자유주의” 정치이해집단의 등장이다.

란즈방키  
(Landsbanki)  
를~  
방키=은행  
동의어 중복  
이하 이에 준  
하여 수정함

이 집단은 아이슬란드 대학교(University of Iceland)의 법학, 경영학 학생 출신들이 주도했다. 그들은 1970년대 초 학생들이 운영했고 자유시장 사상을 촉진시키는 데 이용되었던 비슷한 이름의 잡지로부터 자신들의 명칭을 차용했다.

‘기관차’의 구성원들은 국영기업이 아이슬란드 경제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힘을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 아이슬란드의 성장속도가 느려지고 노동-자본 갈등이 격렬해지며, 신자유주의 정책을 대변하는 정부가 유럽과 미국에서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그들의 주장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났다.

‘기관차’의 창립자 중 한 명인 데이비드 오드슨은 1982년 레이카비크의 시장이 되었다. 그는 적극적인 사유화 정책으로 다른 독립당 구성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그의 지위는 빠르게 상승하여 결국 1991년 당 지도자와 총리가 되었다. 그는 2004년 CBI의 수장이 되기 위해 사임할 때까지 14년간 권력을 유지했다. 오드슨은 독립당 정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주류 인사였지만, 그가 총리와 아이슬란드 신자유주의 개혁의 입안자로 성공적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슬란드의 기성의 전통적인 부유한 가문들로 하여금, 빠르고 체계적인 사유화가 그들의 부에 손해를 주거나 그들의 권력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킬 수 있었던”(Boyes, 2009: 33) 그의 능력 덕분이었다.

아이슬란드의 지배적 가문들은 그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에 대해 점점 더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은행업과 다른 주요 사업부문에 대한 국가 소유 유지, 작은 규모의 국가는 그들의 이윤창출 기회를 제한했다. 그리고 경제적 문제와 정치적 긴장이 커질수록 독립당에 대한 오드슨의 지도력은 그들에게 더욱더 매력적인 것이 되었다.

오드슨은 총리가 되자마자 법인세율을 낮추고 국가 소유의 기업들을 사

유화하기 시작했다. 심각한 변화는 아이슬란드가 유럽연합의 자유무역블록인 유럽경제지역(EEA)에 가입한 1994년 이후에 일어났다. 아이슬란드는 회원국의 지위로서 개방된 유럽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아이슬란드의 정치경제 지도자들은 사유화, 탈규제, 금융부문의 확장이 이윤을 제한하는 자국의 시장규모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수단이라는 것을 빠르게 파악했다(Benediktssdottir et al., 2011: 215).

은행 사유화는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는데, 매우 통제되고 정치적인 과정을 거쳐 2003년에 완료되었다. 첫 번째로 사유화의 대상이 된 것은 작은 투자은행이었다. ‘범고래(The Orcas)’로 알려진, 비교적 신흥의 기업집단으로 구성된 가문이 그 은행의 지배권을 획득했고, 인수합병을 통해 아이슬란드의 주요 세 은행 중 하나가 된 글리트니르(Glitrnir) 은행을 창설했다. 거대한 국영은행 두 곳 – 란즈방키와 [나중에 카우프싱(Kaupthing) 은행이 될] 브라다르방키(Buradarbanki) – 이 중요한 상품이었는데, 정부는 입찰과정을 통해 전자의 소유권 대부분은 독립당의 후원자인 ‘문어’ 가문에게, 후자는 진보당의 후원자인 ‘오징어’ 가문에게 돌아가도록 보장했다. 이 새로운 소유자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엘리트들이 소유한 기업들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들 각각의 은행들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지주회사를 설립했다. 또한 새로운 소유자들은 그들 각각의 정당과 정당 지도자들에게로 돈이 되돌아가도록 했다(Boyes, 2009: 44; Wade and Sigurgeirsdottir, 2010: 12).

이렇게 형성된 아이슬란드 경제개혁은 국가와 지배엘리트 사이의 관계에서, 후자의 상대적인 권력이 강화되는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또한 그것은 엘리트 간 관계의 재구성을, 특히 주요 가문들 사이의 결속 약화와 새로운 권력중심의 등장을 야기했다. 그러나 그것이 동반한 자유시장/자유주의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는 국가사업을 둘러싼 폐쇄적인 유대관계를 깨뜨

리거나 경제 전반의 독점지배를 끝내려는 의도를 가진 것도, 그것을 실현하는 것도 아니었다.

## 2. 성장과 공황

아이슬란드의 경제는 특히 2003~2007년 사이에 급성장했다. 연평균 GDP 성장률은 5.5%였고 실업률은 3.4% 이하에서 1%까지 감소했다(Benediktsdottir et al., 2011: 186, 202). IMF는 아이슬란드가 2005년 기준 세계에서 1인당 부(富)가 세 번째로 높은 국가라고 평가했다(Vaklimarsson, 2012).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성과는 아이슬란드의 주요 은행 세 곳의 높은 레버리지 성장에 의해 발생했는데, 이 성장은 2008년 경제 붕괴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었다.

2003년에서 2007년까지의 아이슬란드 은행 시스템 성장률은 전례 없던 것이었다(Benediktsdottir et al., 2011: 185). 주요 은행 세 곳의 총 연말자산은 2003년 GDP의 2배에 미치지 못했지만, 2007년에는 8배를 초과했고, 2008년 6월에는 거의 10배 가까이 성장했다(Wade and Sigurgeirsdottir, 2012: 134).

그 은행들의 확장은 주로 외화에 의지했다. 초기의 자금은 대부분 유럽 시장에서 판매된 채권에서 나왔다. 2006년 유럽 시장으로부터 고립된 아이슬란드 은행의 건전성에 대해 해외 신용평가기구가 경고했을 때, 그 은행들은 간단하게 미국 채권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이듬해 란즈방키와 카우프싱 은행은 또다시 다른 시장으로, 특히 영국과 네덜란드를 상대로 하는 해외소매 예금으로 눈을 돌렸다. 또한 세 은행 모두 유로시스템으로부터 간접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룩셈부르크의 자회사를 이용했다. 2004년 말까지 아이슬란드 GDP 대비 총 해외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였다(Ólafsson, 2011: 4).

아이슬란드의 성장과정을 떠받쳤고, 또 결과적으로는 불안정하게 만든 것은 은행들과 그 소유집단 사이의 복잡한 관계였다. 예를 들어 이 관계는 아이슬란드 은행들이 해외 채권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든 핵심요인이었다. 아이슬란드 은행들은 보통 그들의 높은 자기자본비율 덕분에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높은 비율은 기만적인 것이었는데, 그것들은 대부분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주식가격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웨이드(Robert H. Wade)와 시거게르스도티르(Silla Sigurgeirsdottir)는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아이슬란드의 새로운 은행 엘리트는 거품에 편승하고, 국가경제에 대한 그들의 통제를 확장하려고 했으며,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동했다. 자신들의 주식을 담보물로 이용하면서 그들은 자기 소유의 은행에서 막대한 대출을 제공받아왔고, 그 중 일부를 동일한 은행에서 더 많은 주식을 구매하는 데에 다시 사용함으로써 주가를 상승시켰다. 그들의 경영자들은 이러한 일을 그대로 따라하도록 지시받았다. 그들은 다른 은행들을 포함한 다른 고객들을 위해서도 같은 일을 수행했다. 은행 A는 은행 B의 주주에게 대출해주었고, 그 담보물로서의 주식으로 B의 주식을 더 구입함으로써 B의 주가를 올려주었다. 은행 B는 은행 A 주주의 호의를 되갚았다. 순수하게 남은 결과는 새로운 화폐의 유입 없이 두 은행의 주가가 모두 상승했다는 점이었다(Wade and Sigurgeirsdottir, 2010: 13~14).

은행 엘리트들은 다수의 아이슬란드 사업 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금을 제공하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아이슬란드 외부의 대량 투자에도 관여했다. 주요 대상은 의류판매점, 완구점, 영국의 축구팀, 미국과 스칸디나비아의 슈퍼마켓이었다(Boyes, 2009: 2).

이러한 활동은 주식시장 거품을 형성함으로써 아이슬란드 주가를 상승시켰다. 평균 주가는 2003~2007년 사이에 연평균 43.7% 상승했다. 또한 주가 상승과 결부되어 손쉬워진 신용대출은 주택시장 거품을 야기했는데, 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한 해 평균 16.6% 상승했다. 이러한 성장은 기업과 가계의 자산·대출·지출,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성장을 큰 폭으로 상승시켰다. 또한 성장은 엄청난 무역불균형을 낳았는데, 경상수지 적자는 2003년 GDP의 5%에서 2006년에는 20%로 상승했다(Benediktsdottir et al., 2011: 202).

이러한 금융 주도 성장과정은 CBI의 정책에 의해 더 힘을 얻었다. CBI는 물가상승을 우려하여 이자율을 높였다. 그러나 아이슬란드와 다른 국가의 이자율 격차가 벌어지자, 금융거래자들 – 아이슬란드와 해외의 – 은 아이슬란드 외부에서 돈을 빌려 아이슬란드에서 빌려줌으로써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했다.

아이슬란드 은행은 국내 소매대출에 열을 올렸다. “중개업자들은 동분서주하면서 채무를 늘리고 신규 혹은 기존의 아이슬란드 크로나 채무를 더 낮은 이자율의 스위스 프랑이나 일본 엔으로 전환하라고 가계를 설득했다”(Wade and Sigurgeirsdottir, 2010: 14).<sup>1)</sup> 해외은행은 아이슬란드 채권을 구입한 후, 그것을 ‘빙하(Glacier)’ 채권으로 재포장하여 판매했는데, 그 이자율은 유럽 이자율의 5배 이상이었다.

화폐유입의 결과로 크로나의 가치는 유로화나 다른 유럽 국가들의 통화보다 상대적으로 상승했고, 이는 아이슬란드인을 부유하게, 그들로 하여금 수입품을 많이 소비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웨이드와 시거게르스도티르가 지적했듯이, “캐리 트레이드는 위험하고 불안정하며, 외환딜러들은 문제의 첫 신호를 발견하자마자 회피한다. 이것이 은행들 – 높은 채무를 가지고 있고

1) 자산가치의 90%까지를 차입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위해 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한 2004년의 정부 결정은 아이슬란드 은행의 주택융자와 관련된 외화의 급증을 촉진했다.

비유동적이며, 신용이 바닥났을 때 그들의 책임을 다할 수 없는 — 이 결국 파산할 때 벌어지는 일이다”(Wade and Sigurgeirsdottir, 2010: 22).

앞에서 서술했듯이, 아이슬란드 은행체계의 안정성에 대한 경고는 2006년에 제기되었다. 가장 큰 염려 중 하나는 은행자산의 질에 대한 것과, 문제가 커졌을 때 정부자금이 국영은행을 지원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사실이었다. 염려는 현실이 되었다. GDP의 20%까지 확대된 경상수지 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 화폐유입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크로나의 가치는 폭락할 것이었다. 그 결과로 외화 대출자들의 채무상환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은 은행체계의 지급능력을 위협할 수도 있었다. 또한 수입가격은 급상승하여 국내지출과 생산을 감퇴시킬 것이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는 아이슬란드 경제를 침몰시킬 것이라고 예측될 수도 있었다.

주식시장에서 벌어졌듯이, 2006년 통화가치는 일시적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작은 위기’는 빠르게 극복되었다. 아이슬란드 정부와 상공회의소는 아이슬란드 은행체계가 건전하지 않다는 것을 부인하는 주요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다. 컬럼비아 비즈니스 스쿨 경제학자인 프레드릭 미시킨과 런던 비즈니스 스쿨 리차드 포츠 교수는 각각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더 중요하게는 그 은행들이 자신들의 부채전략을 절반으로 축소했다는 것이다.

그 은행들은 자신들의 약점과 새로운 자금의 필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에 따라 란즈방키와 카우프싱 은행은 그들이 직접적으로 해외예금을 유치할 수 없는 몇몇 유럽 국가에서 소규모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EEA에서의 아이슬란드의 회원국 지위를 활용했다. 란즈방키는 2006년 10월 영국, 2008년 5월 네덜란드에서 아이스세이브(Icesave)라고 불리는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시작했다. 3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많은 기관들 — 옥스퍼드·캠브리지 대학교, 런던 경찰청, 116곳의 지방정부를 포함한 — 이 아이스세이브 계좌에 예금을 했다. 네덜란드에서는 12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계좌를 열었다

(Boyes, 2009: 127). 카우프싱 은행은 2007년 독일과 몇몇 다른 유럽 국가에 카우프싱 에지(Kaupthing Edge)를 설립함으로써 그 뒤를 따랐다.

전략이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은행은 다른 방향을 추구했다. 카우프싱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운영한 반면, 란즈방키는 해외지점으로 운영했다. 이 차이는 중요했는데, 자회사가 해당 국가의 감독과 보호 아래 있는 동안, 지점은 자국의 감독과 보호의 관할 아래 있었다. 2008년 유럽 투자자들은 아이스세이브 계좌에 거의 105억 달러를 예금하고 있었다(Boyes, 2009: 133). 이 금액은 아이슬란드 GDP의 절반을 넘는 액수였고, 아이슬란드의 통화당국은 아이스세이브 사업의 실패를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금융 우세의 성장은 아이슬란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으며, 과정상 모순적인 것도 아니었다. 특히 미국 거품경제의 붕괴는 국제적인 영향에 의한 일련의 금융충격을 유발했다. 파산 당시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투자은행이었던 리먼 브라더스는 2008년 9월 파산을 선언했다. 이 파산은 국제신용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아이슬란드 은행과 경제의 붕괴를 이끌었다.

아이슬란드의 주요 은행 세 곳 중 가장 취약했던 글리트니르 은행은 최초로 그 영향을 받았고, CBI에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CBI를 이끌던 오드슨은 중앙은행에게 글리트니르 은행 주식의 75%를 구입하도록 지시했다.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행동은 아이슬란드 전체 은행체계의 국제적 신용도를 떨어뜨렸다. 크레디트라인(credit line)은 철회되었고, 아이스세이브의 해외지점에서는 예금회수 사태가 발생했다.

아이슬란드의 주요 은행 세 곳은 2008년 10월의 첫 2주 사이에 파산했고 아이슬란드 정부에 의해 인수되었다. 그들 파산의 의미를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 이들을 하나로 묶을 경우, 그들의 파산은 “1위인 리먼 브라더스(6,910억 달러), 2위인 워싱턴 뮤추얼(3,280억 달러)과 함께 역대 미국 파산규모에 3위로 기록될 것이다. 각각 독립적으로 본다면, 카우프싱 은행(830억 달

리)은 5위, 란즈방키(500억 달러)는 9위, 글리트니르 은행(490억 달러)은 10위에 기록”(Benediktssdottir et al., 2011: 197)될 것이다.

은행들의 채무불이행은 통화위기, 주식시장 공황, 아이슬란드 기업과 가계의 상환위기, 주택공황과 같은 급격한 그리고 서로 연관된 일련의 위기를 이끌었다. 크로나는 2008년 유로화 대비 80% 이상 하락했고 주식시장은 그 가치의 75%를 상실했다(Benediktssdottir et al., 2011: 201). 실질임금은 2008년 4.2% 하락했고 2009년에 다시 8% 하락했다(Ólafsson, 2011: 9). 실업률은 2007년 1%에서 2009년 8%까지 급상승했고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은 임금과 노동시간을 감축당했다(Benediktssdottir et al., 2011: 203). 국가 성장의 기초가 급속하고 허약하게 형성된 것이 놀랍지 않게도, 아이슬란드는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총 9.3%의 GDP 감소를 겪으면서 선진국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경기침체에 직면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Ólafsson, 2011: 6).

특히 가계부문은 통화와 가격변동에 의해 크게 충격을 받았다. 2008년 초 가계부채는 GDP의 100%와 동일했고, 심지어는 가처분소득의 225%보다 더 높았다. 채무의 약 13%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의 국내 통화가치의 두 배에 해당하는 외화에 연동된 대출이었다.<sup>2)</sup> 가계부채의 약 80%는 인플레이션에 연동된 것이고, 그 금액은 같은 기간 27% 상승했다. 채무를 갚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와 집을 잃었다. 비금융사업 역시 피해를 입었다. 2007년 말 그들의 채무는 GDP의 300%를 넘었고, 이 사업들이 은행에서 대출한 총금액의 약 70%는 외화에 연동된 대출이었다(Benediktssdottir et al., 2011: 201; Ólafsson, 2011: 9, 11).

은행체계가 얼어붙고 통화가치는 폭락하면서, 아이슬란드 정부는 10월에 국제통화기금(IMF)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IMF는 원조조건으로 영국과

2) 외화 연동금리대출은 크로나로 지불·상환되지만 외화 금리에 연동되는 대출이다.

네덜란드 정부가 각각의 아이스세이브 예금자를 보상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을 아이슬란드가 변상할 것을 제시했다. 아이스세이브가 란즈방키의 지점이었기 때문에 아이슬란드 정부는 EEA의 회원국으로서 각 계좌마다 2만 887유로의 최소예금보증보험금을 제공할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영국과 네덜란드는 아이슬란드에게 더 많은 돈을 받기를 원했다. 두 정부는 아이슬란드가 행동에 나서기를 기다리지 않고 각각의 예금자들에게 그들이 잃은 금액 전부를 변상했고, 아이슬란드에 그 금액을 이자까지 포함하여 갚기를 요구했다.

영국과 네덜란드가 아이슬란드로 하여금 그들의 조건을 승인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동안, 그 조건이 엄청난 세금 상승과 정부지출의 축소, 그리고 파산한 민간은행의 해외지점이 부담하는 모든 것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던 대다수의 아이슬란드인들은 그와 같은 어떠한 조약에도 강력하게 반대했다. 외환을 간절히 필요로 하던 아이슬란드 정부는 결국 최소한, 미래의 언젠가는 예금자의 일부에게는 보상하겠다는 것을 약속했다(Boyes, 2009: 178). 이 약속은 두 정부를 만족시켰고, 아이슬란드는 IMF로부터 21억 달러를,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과 러시아로부터 추가로 30억 달러를 대출받았다.

### 3. 저항, 국가개입 그리고 회복

아이슬란드 정부에 반대하는 저항들은 공황이 발발한 거의 직후인 10월 후반에 시작되었는데, 레이카비크 주요 광장에서 있었던 집회 중 가장 큰 규모의 토요 집회와 레이카비크의 주요 극장에서 있었던 월요일 저녁 집회에 의해 저항은 자리를 잡았다. 가장 공통적인 요구는 총리의 사임과 새로운 정

부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였다. 2009년 1월, 의회건물 밖에서 취사도구를 두드리며 항의하던 2,000명의 시위대는 진압경찰에 의해 공격받았다. 이 사건은 아이슬란드 언론이 “프라이팬 혁명(pots and pans revolution)”이라고 이름 붙인 시위의 규모와 격렬함을 확대시켰다.

이름을 붙이면서

대중의 분노를 진정시킬 수 없게 되자 집권당이었던 독립당은 처음에는 2009년 4월에 새로운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후 연정 파트너였던 시민주의연합(Social Democratic Alliance)이 지지를 철회하자 총리와 내각은 사퇴했다. 시민주의연합과 좌파녹색운동(Left Green Movement)이 이끄는 과도정부가 공백을 채웠고, 이 연정이 4월 선거에서 승리했다. “지금까지 아이슬란드는 세계금융공황의 결과로 정부를 사퇴시킨 유일한 국가이다. 또한 아이슬란드는 2008년 9월의 여파로 명확하게 좌로 이동한 유일한 국가이다”(Wade and Sigurgeirsdottir, 2010: 23).

이후 몇 년간 아이슬란드의 진보적 정부는 다른 유럽의 정부들과는 상당 부분 다른 일련의 정책활동을 취했다. 가장 중요하게는, 긴축이라는 방법을 통해 기존의 경제활동 구조와 양식을 되살리려 시도하기보다 다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표의 사회적 프로그램을 강화시키고 재정·통화·주택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그 결과는 《블룸버그 뷰》의 편집인들이 묘사했듯 인상적이었다.

2008년 금융공황에 아이슬란드보다 더 극적으로 두드러진 국가는 거의 없다. …… 그 이후로 아이슬란드는 꽤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아이슬란드는 IMF의 구제요자를 일정보다 빠르게 상환했다. 올해[2012]의 성장은 최신진국 경제보다 더 높은 2.5%에 달할 것이다. 실업률은 절반으로 하락했다. 2월, 피치레이팅스는 “비전통적인 공황 대응정책”을 만족스럽게 언급하며, 아이슬란드의 투자등급 지위를 회복시켰다.<sup>3)</sup>

급진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음에도, 국가적 위기에 대한 아이슬란드 정부의 대응은 정말이지 관행에 매인 것이 아니었다. 또한 그것은 경제회복을 이끌어내는 데에 더 성공적이었고, 다른 유럽 정부들의 더 관습적인 대응들보다도 대중의 복지를 잘 지켜냈다.

#### 4. 재정정책

한 아이슬란드 분석가는 아이슬란드 정부의 재정정책과 다른 유럽 국가들의 정책 사이의 핵심적인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아일랜드, 그리스 그리고 지금 스페인과 같은 나라를 강타한 심각한 “크레파(Kreppa)”<sup>4)</sup>와는 다르게, 아이슬란드는 파산한 은행을 구제하지 않았다. 유럽중앙은행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신조는, 유로화에 대한 신용을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유로존에서 파산하는 은행은 없어야 하고, 손실을 입는 채권소유자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 경기후퇴 당시 다른 유럽 국가와 아이슬란드를 구별한 또 다른 결단력 있는 조치는 기업과 개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하고 막대한 대출금의 평가절하이다(Davíðsdóttir, 2012).

클리트니르 은행과 란즈방키는 2008년 10월 7일 국유화되었다. 카우프싱 은행은 다음날 인수되었다. 세 은행 각각은 신규 은행과 예전의 은행, 둘

3) The Editors, “Fighting Recession the Icelandic Way,” *Bloomberg View*, September 26, 2012. <http://bloomberg.com>

4) ‘크레파(Kreppa, 아이슬란드어로 ‘위기’-역주)’는 보통 “위기를 맞은”, “궁지에 빠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다가, 지금은 국가의 재정위기를 보편적으로 의미하는 용어가 되었다.

로 분할되었다. 신규 국가 소유 은행들은 오직 예전 은행에 남아 있는 국제적 의무 때문에 모든 저당권, 타 은행 용자, 그리고 예전 은행의 예금을 이어 받았다. 신규 은행의 생존력을 보장하기 위해 예전 은행에 의해 유지되던 대출은 대개 크게 할인되어 새로운 은행으로 이전되었다.

IMF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새로 창립된 은행 두 곳을 사유화했는데, 그것은 세 번째 은행인 새로운 란즈방키의 사적 소유권의 지분을 늘리는 과정이 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예전 은행의 채권자들은 신규 은행에 재투자했다. 신규 은행 세 곳 모두 “높은 자본비율로 구성이 재편되었고 – 총자산의 16%를 초과하여 – 그 90%는 예금으로 자금이 조달되었다. 대부분의 더 작은 저축 은행 역시 재구성되었다. 모든 과정을 거치는 동안 아이슬란드의 예금액은 (자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전부 보장되었다”(Darvas, 2011: 7).

정부는 또한 가계와 비금융사업의 채무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이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2010년 6월 대법원은 외화로 된 자동차 대출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고, 2010년 12월 의회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2011년 6월 대법원은 기업 대출도 포함시켰다. 이 모든 대출금은 “국내통화 대출금으로 전환되었고, 그로 인해 대출금의 잔존 원금은 상당히 줄었고, 이자율 역시(마찬가지로 소급되어) 아이슬란드 중앙은행이 발표한 물가지수와 비연동된 최저 이자율로 다시 계산되었다”(Darvas, 2011: 6).

이러한 진전은 아이스셰이브, 그리고 영국, 네덜란드 정부의 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었다. 결국 2009년 10월 유럽공동체로부터의 압력을 받아, 아이슬란드 정부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55억 유로(아이슬란드 GDP의 약 50%)를 두 정부에 지불하겠다고 합의한 협정문을 의회에 제출했다. 같은 해 12월 의회는 마지못해 협정문에 동의했지만, 아이슬란드 대통령은 국민투표 없이는 협정문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2010년 5월 투표자들은 93%의 반대로 협정을 거부했다. 지불기간

이 늘어나고 이자율은 낮춘 새로운 협정내용이 합의되었다. 2011년 4월에 새로운 국민투표가 실시되었고, 이번에는 투표자의 66%가 거부했다.

이 두 번째 투표 이후 유럽자유무역연합 감독기구는 유럽자유무역연합 법원에 아이슬란드를 제소했다. 2013년 1월에야 판결이 내려졌다. 판결은 많은 이들이 놀랄 내용이었는데, 법원은 “아이슬란드에서 벌어진 체계적인 은행 파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예금보험에 대한 규정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슬란드가 두 정부에 보상할 의무는 없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슬란드는 란즈방키의 자산을 판매해 얻은 돈으로 EEA의 회원국으로서 요구되는 최소예금 보험금의 90% 이상을 이미 상환한 상태였다(Myles, 2013).

## 5. 통화정책

아이슬란드의 통화는 해외자금의 대규모 유입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위기 직전의 팽창기간 동안 강세를 유지했다. 은행체계의 파산으로 그 유입은 중단되었고, 크로나의 가치는 폭락했다. 그 하락은 국가의 경제 문제를 심화시켰다. 많은 가게와 기업은 국내 가격으로는 폭발적으로 상승할 외화연동채무를 가지고 있었다. 위에서 서술했듯, 정부는 이러한 은행들로 하여금 그들의 대출을 국내통화로 재조정하도록 만듦으로써 사태 전개로부터 발생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를 취했다.

동시에 통화가치 하락의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 특히 그로 인해 아이슬란드는 빠르게 국제경쟁력과 경제적 유인을 회복할 수 있었다. 2009년 아이슬란드는 부분적으로 수출 회복으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유로스

타트(Eurostat)에서 발표한 재화, 서비스 실질수출액 통계 대상 34개국 중 아이슬란드가 2008년 대비 2009년에 성장을 보인 유일한 국가였다”(Darvas, 2011: 10). 게다가 상승한 수출액은 국가 내 수입대체산업의 회복도 촉진시켰다.

아이슬란드의 공황 사례는 아일랜드나 라트비아와 자주 비교된다. 세 국가 모두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해외부채와 채무 거품에 크게 의지하고 있었고, 세 국가 모두 대체로 같은 이유로 경제붕괴를 겪었다. 그러나 아일랜드와 라트비아는 아이슬란드보다 더 급격한 경기침체를 경험했고, 그들의 회복세는 더 미약했고 가혹했다(Darvas, 2011: 9~14).

이러한 결과의 원인 중 하나는 아일랜드나 라트비아 모두 그들 각각의 통화 가치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는데, 전자는 통화로 유로화를 사용했고, 후자는 유로화에 대한 고정환율제를 유지했다. 그 결과 아일랜드와 라트비아 모두 “내적 평가절하”라고 불리는 것을 통해 국제적 안정성을 유지할 것을 강요받았다. 달리 말해, 그들은 그들 각각의 경제적 경쟁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국내임금과 비용 삭감에 의존했다.

또한 아이슬란드의 통화정책은 대부분의 다국적 자본의 이동을 불법화하는 엄격한 자본통제의 사용을 포함했다.<sup>5)</sup> 이러한 통제는 아이슬란드 GDP의 50%에 가까운 약 8억 달러의 해외유출을 차단했다. 만약 정부가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면, 유출은 완전한 통화붕괴를 야기했을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통제 덕분에 크로나는 약세로 거래되었지만, 곧 강세화되고 안정화되었다.

5)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Government of Iceland, Act No.127/2011 Amending the Foreign Exchange Act, the Customs Act and the Act on the Central Bank of Iceland, article 13b.

## 6. 주택정책

정부는 주택거품 붕괴에 의해 야기된 가계자산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절차를 밟았다. IMF가 설명했듯, 정부는 “일시적 문제 때문에 가정들이 그들의 주택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장하고, 주택시장 붕괴를 야기하는 압류의 증폭을 예방하기 위한” 다수의 조치를 빠르게 시행했다. 이 조치들은 다음을 포함했다.

압류에 대한 유예, 환율과 소비자물가지수 연동대출을 고려한 채무상환의 일시적 보류, 그리고 이러한 대출의 지불연기(지불조정). 자격에 맞는 대출가계 중 절반 정도는 각각 소비자물가지수 연동대출로 15~20%, 환율연동대출로 30~40%의 현재 채무상환지급액을 감소시키는 지불조정을 이용했다(IMF, 2012: 107).

그 후 정부는 확대된 장기보조금 제공 계획을 담은 몇몇 새로운 조치를 도입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주거 대안과 세입자를 위한 지원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지급액을 줄였다. 예를 들어 처음에 정부는 주택소유자로 하여금 그들이 대개 움부즈맨의 도움을 받아 채권자들과 직접 채무가치 절하를 협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계획을 추진했다. 느린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대출금보다 주택가격이 높은 경우의 주택담보대출액을 가계자산의 110%까지 줄여주는 채무변제 계획을 도입했다. 노동자들이 그 계획의 주요 수혜자라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재정지원액은 보통의 주택과 가족 규모에 해당하는 가치에 제한되었다. 특히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빠진 가계에게는 더 큰 채무가치 절하 가능성과 더 꼼꼼한 재정적 검토가 가능했다(Ólafsson, 2011: 19).

위에서 서술했듯, 정부는 외화에 연동된 주택담보대출을 불법으로 규정했는데, 그것은 가계가 더 이상 통화의 약세 때문에 오른 금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또한 그것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주택소유자가 그들의 이자지급의무를 대처하는 것을 돕기 위해 자산조사 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급, 주택담보대출 이자세 할인과 특별보조금을 제공했는데, 이 조치들은 금융기관과 연금기금에 대한 특별세를 통해 자금을 마련했다(Ólafsson, 2011: 20).

결과적으로 정부는 새로운 임대조건을 포함해 가정주택에 대한 더 다양한 조건을 도입하기 위해 “금융기관, 지방정부, NGO”와 공조하였다. 또한 그것은 저소득 가정의 집세 할인을 현저하게 증가시켰다(Ólafsson, 2011).

## 7. 사회정책

2009년 아이슬란드 정부는 공황의 결과로 GDP의 13.5%로 상승한 재정 적자와 함께 심각한 국가재정상의 문제에 직면했다. 인상 깊게도, 2011년 아이슬란드는 일제히 강화된 핵심적인 사회적 프로그램을 실시한 것에 반하여, 전반적인 지출과 적자를 GDP의 2.3%로 줄였다. 예를 들어 정부는 2007~2010년 동안 실업수당을 늘렸고, 노동자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게다가 자산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수당과 최소연금수당을 현저하게 인상했다(Ólafsson, 2011: 13~14).

같은 기간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지급을 위한 보조금을 108.1%까지 올렸는데, 이것은 40.6% 상승한 주택담보대출 비용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승은 이자액을 위한 평균 가계보조금을 총 이자액의 13%에서 20%로 확대시켰다. 더 나아가 이자 할인은 노동계급 가계를 주로 목표로

했는데, 이것은 “저소득, 평균 소득 가계의 이자액의 약 1/3이 2010년 정부에 의해 지급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Ólafsson, 2011: 14).

정부는 노동시장 개입에도 참여했다. 예를 들어 정부는 거의 평균 임금인상의 2배, 물가상승과 일치하는 수준까지 최저임금을 현저하게 인상했다(Ólafsson, 2011). 요컨대, 대부분의 사회지표는 여전히 과거 정점을 밑돌았고 공황의 여파가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슬란드 정부의 정책은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를 방어하는 데에 대체로 성공했다.

또한 금융시장은 아이슬란드의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많은 분석가들이 아이슬란드는 자본통제를 유지하고 아이스세이브 채무를 해결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대출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이슬란드는 이미 시장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처럼 보인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2011년] 6월 국가부채로 약 6% 이자율의 채권 10억 달러를 발행했다. 이것은 투자자에 의해 2배로 초과신청되었다”(Chu, 2011). 2012년 기준으로, “벨기에에서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든 비용과 아이슬란드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보험을 든 비용은 대략 같았다”(Valdimarsson, 2012).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고려할 때

이 기록을 고려할 때, 아이슬란드가 신자유주의의 많은 저항자들에게 하나의 모델과 영감이 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서는 안 된다. 조셉 스티글리츠와 폴 크루그먼을 비롯한 다수의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힘에 대한 신뢰에 대해, 최소한 공황기간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이 더 우수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아이슬란드의 사례를 지적했다(Davíðsdóttir, 2012). 나옴이 클라인을 비롯한 많은 활동가들은 “충격요법에 저항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으로 아이슬란드를 사례로 들었다(Andersen, 2011).<sup>6)</sup>

사실은 놀람 일이 아니다

6) 클라인은 현지자료를 통해 발전양상에 관해 더 많이 연구한 이후, 아이슬란드 사태가 그녀가 처음 생각했던 사회적 변화를 대변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다.

## 8. 개혁의 한계

아이슬란드의 사례는 국가의 활동이 대중의 이해관계를 방어함에 있어서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만, 동시에 국가정책이 자본가계급의 논리에 갇힌 채로 남을 때에는 대중이 얻은 성과가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폭로한다. 2009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아이슬란드는 사민주의연합과 더 소규모의 좌파녹색운동의 연정이 집권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 정부는 대체로 자신에게 권력을 부여한 대중운동에 부응하는 정책들을 추진했다. 그러나 자본가계급의 이해관계는 개혁과정에 심각한 제한을 가했는데, 국가 능력의 약화와 그때까지 획득된 많은 성과들의 과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듯했다. 아이슬란드의 활동가들은, 아이슬란드 외부의 활동가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지만, 이러한 한계와 그 정치적·사회적 결과를 잘 알고 있었다. **아르니 다니엘 줄리어슨이 설명했다:**

삭제해도 무방할듯

2010년 12월과 2011년 1월, 아이슬란드 아탁(Attac)은 프랑스 아탁과 스페인 아탁의 구성원들로부터 아이슬란드의 조용한 혁명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기 시작했다.<sup>7)</sup> 활동가들까지도 조용한 혁명에 대해 알아내기 위해 아이슬란드를 방문하기 시작했다.

아이슬란드 아탁이 느릿느릿 대답했을 때 — 그리고 아이슬란드에서 어떤 종류의 혁명이 있었다는 것에 동의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했을 때 — 국제 활동가들은 아이슬란드 은행은 국유화되었고, 정부는 실각했으며, 아이슬란

7) 아탁(Attac)은 국제금융관세연대의 약자이다. 이 단체는 많은 국가에 독립적인 지부를 두고 있다. 1990년대 후반 금융투기에 대한 토빈세 도입을 지지한다는 단일한 목적으로 시작된 운동이지만, 현재 각 지부들은 세계화와 채무와 관련된 문제들에도 개입하고 있다.

드 중앙은행의 관리자들은 교체되었고, 아이스세이브 교섭 내용에 대한 거부로서 아이슬란드는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이었지만, 심지어 이것이 매우 강력하고 성공적인 저항운동이고 신자유주의적 질서의 붕괴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중적 반응 중 하나이며 2011년까지도 확실하게 가장 강력했던 것으로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슬란드 이탁은 이것을 혁명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

따라서, 아이슬란드의 활동가들과 반신자유주의자에게 이 상황은 조금은 어색했다. 결과적으로 아이슬란드가 국제 활동가 사회의 감탄을 받을 만한 무언가를 창조했을 때, 아이슬란드의 활동가 집단은 그 사태의 본질을 외국인들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마지못해 인정했다. 왜 그런가?(Júlíusson, 2011)

이유 중 하나는 국영은행의 구조조정 과정의 성격이었다. 위에서 논의했듯, 아이슬란드 정부는 국가의 주요 민간은행 세 곳을 파산하도록 둔 후 새로운 국영은행 세 곳을 창설했는데, 각 은행은 예전의 은행에서 새로운 은행으로 용자와 예금을 이전하는 것에 의존했다. 그 과정 동안 많은 해외 채권자들은 민간은행 세 곳에서 발행했던 채권을 유지했다. 은행들의 파산과 함께 가치회복을 포기한 많은 채권자들은 그들의 채권을 “탐욕스러운” 투자자들에게 헐값으로 판매했다. IMF의 압력을 받고 있던 정부가 새롭게 설립된 국영은행 두 곳을 사유화하기로 약속했을 때, 이 투자자들은 그 상황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잡고 있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그들의 채권을 신규 은행의 지배주식으로 정부와 거래했다.

예전 은행들에 의한 대출들은 신규 은행으로 이전되면서 많은 할인을 받았다. 정부가 신규 은행으로 하여금 할인의 부담을 대출자들과 함께 나누도록 했을 때, 이것은 결코 의무가 아니었다. 그 결과 “액면가의 30~50%로 습득된 가계부채는 100%로 상승되어 재평가되었다. …… 따라서 지불될 수

없을 만큼의 높은 채무가 장부상에 남았는데, 이 양도가격은 금융 약탈자들에게는 황재로 작용했지만, 채무자에게는 10년 또는 그보다 더 오랫동안 역자산으로 인한 채무까지 지도록 했다”(Arnarson et al., 2011).

정부는 여전히 새로 설립된 세 번째 은행인 란즈방킨(Landsbankinn)의 지분 81.3%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 소유지분을 2/3로 내리기 위해 충분한 만큼 주식을 판매하도록 전념하고 있다. 또한 남아 있는 주식의 작은 부분은 다른 두 은행에 판매하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Koranyi, 2012).

아이슬란드 활동가들이 우려했던 또 다른 이유는 자본을 통제하는 체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공약이었다. 정부의 최초 목표표마감일은 2013년이었지만, 2015년까지 연기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강력한 수출회사와 투자관계자들은 정부에게 가능한 서두르도록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2013년 4월 선거에서의 시민주의연합의 패배에 핵심적으로 기여한 것은 유로화 지역에서의 아이슬란드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그들의 결정이었는데, 이것은 국가가 자본통제뿐만 아니라 자국통화 역시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sup>8)</sup> 아이슬란드는 2009년 7월 유럽연합에 가입신청을 했다. 형식적인 절차가 약 1년 후 시작되었고 계속해서 진행되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아이슬란드는 이제 EU의 신규 가입국이 수행해야 할 35개의 조항 35개 10개를 끝냈는데, 그 속도는 스테판 홀 확대위원이 말했듯이 2006년 새로운 조항이 도입된 이래 어떤 국가보다도 빨랐다”(Geitner, 2012). 선거에서 패배하기 얼마 전까지도 시민주의연합은 공황이 진행 중인 유로화 지역에서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했다. 새로운 정부는 일반적인 부조제도로, 즉시 유로존에 가입하려는 시도를 포기했다(Valdimar-

35개의 조항 중  
10개를

8) 독립당 지도자들은 아이슬란드 크로나를 미국 달러나 캐나다 달러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다. 그들은 이 변화로 아이슬란드가 자본도피의 위험 없이 자본통제를 즉시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sson, 2013).

최소한 혁명적인 과정은, 점차 대중적인 지지를 얻고 있던 것이면서 동시에 내수 중심과 완전고용의 성장과정을 확립하기 위한 두 가지의 핵심요소인 공적으로 소유·관리되는 은행체제와 자본통제체제에 대한 국가공약을 포함할 수도 있었다. 대조적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정반대의 것이었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해외의 탐욕스러운 투자자들에게 거대 은행 세 곳 중 두 곳의 소유권을 직접적으로 넘겨주지는 않았지만, 그 투자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시민들을 착취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넘겨주었다.

## 9. 아이슬란드 사례의 교훈

아이슬란드의 대중운동은 그 성과에 있어서 주목받을 만하며 2013년 4월의 선거패배로부터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지받을 가치가 있다. 더 일반적으로 아이슬란드의 사례는 의미 있는 사회적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을 조직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용한 교훈을 줄 수 있다.

첫째, 정책상의 실수나 과격분자에 의한 정부 장악으로 인해 국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그것은 더 큰 이윤 추구를 위해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자본주의적 욕구와, 그것을 위해서는 규제의 측면과 지리적인 측면에서 모두 더 많은 시장의 자유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표현이다. 이러한 정책들의 도입이 자본가계급 간 관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이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

둘째, 신자유주의에 의해 야기된 팽창이 그 자신의 실패의 씨앗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모순적이고 불안정한 체제이고, 시장의 힘이 점점

덜 억제될수록 경제는 더 빨리 성장하고 더 극적으로 추락한다. 특히 아이슬란드의 사례는 우리의 복지가 얼마나 쉽게 투자관계자들의 음모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놀라운 예시를 보여준다.

셋째, 국가가 다방면의 서로 연결된 시장에 효율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며 인상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 중요한 것은 타국의 사례와 아이슬란드의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시장을 재구성하고 지휘하는 적극적인 국가개입이 공황에 대응하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핵심이라는 점이 명확해 진다는 점이다.

넷째, 공황 자체만으로는 자본주의적 이해관계가 자유화와 사유화를 추진하는 것을 그만두게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황을 야기한 신자유주의적 정책 도입을 지휘한 자본주의적 이해관계는 마찬가지로 같은 정책의 든든한 수호자로도 남는다. 책임을 져야 할 정부를 몰아내고 그 자리를 더 사민주의를 지향하는 쪽으로 대체하는 것을 대중의 힘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아이슬란드는 독특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전의 지배적인 이해관계는 강력한 입지를 유지했고, 권력으로서의 복귀를 주장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았다. 예를 들어 언론은 여전히 독립당의 지배하에 있었고, 전 총리인 오드슨은 아이슬란드의 주요 일간지의 편집장이다. “독립당의 다수의견은 ‘공황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었다. ……’라는 의미에서 ‘일류 아이슬란드는 해외에서 불어온 완벽한 폭풍에 강타당한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믿는 입장이다. 현재의 [사민주의] 정부가 그들의 문제에 어쨌든 책임이 있다고 국민 대다수가 성공적으로 설득되었다는 것을, 투표결과는 보여준다”(Wade and Sigurgeirsdottir, 2012: 141). 사민주의연합과 좌파녹색운동이 23%의 득표율을 얻은 데 비해, 독립당과 진보당은 51%가 넘는 득표율을 획득하면서 2013년 4월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다섯째, 공황기 동안 사민주의적 정책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대중의 이해

를 방어했는지와는 무관하게, 그것이 사회적 변화의 의제를 향한 지지를 자동적으로 형성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시민주의 정당들이 그들의 개입을 일시적인 것, 특별한 상황에 의해 불가피하게 형성된 것으로 제시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일단 안정이 회복되면 자본주의적 이해관계는, 성장에 족쇄가 되지 않기 위해 이러한 개입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매우 유리한 입장에서 있다.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혁명적 과정이 진전되기 위해서는 활동가들이 단지 공적소유와 경제활동을 관리하는 국가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대중적 지지를 건설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자본주의적 규칙의 정당성에 직접적으로 도전하고 사회적 소유와 생산, 분배 양식의 새로운 전망을 고양시키는 운동의 일부로서 그것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 Andersen, Anna. 2011.8.24. "A Deconstruction of 'Iceland's On-going Revolution'." *Rekjavik Grapevine*. <http://grapevine.is>
- Arnarson, Olafur, Michael Hudson and Gunnar Tomasson. 2011.11.15. "'Vulture Capitalism': Iceland's New Bank Disaster, A Dress Rehearsal for Greece and Italy?" *Global Research*. <http://globalresearch.ca>
- Benediktsdottir, Sigridur, Jon Danielson, and Gylfi Zoega. 2011.4. "Lessons From a Collapse of a Financial System." *Economic Policy*, pp.187~188.
- Boyes, Roger. 2009. *Meltdown Iceland: Lessons on the World Financial Crisis From a Small Bankrupt Island*. New York: Bloomsbury. p.33.
- Chu, Ben. 2011.9.6. "Iceland: The Broken Economy That Got Out of Jail." *Independent*. <http://independent.co.uk>
- Darvas, Zsolt. 2011.12. "A Tale of Three Countries: Recovery After Banking Crises." *Bruegal Policy Contribution*, Issue 2011/19, p.7.
- Davíðsdóttir, Sigrún. 2012.2.10. "Iceland: From a 'Kreppa' Basket Case to a Miracle Example." *Rekjavik Grapevine*. <http://grapevine.is>
- Geitner, Paul. 2012.6.22. "Iceland Plans to Join European Bloc Despite Economic Turmoil." *New York Times*. <http://nytimes.com>
- IMF. 2012.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2: Growth Resuming, Dangers Remain*.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p.107. <http://imf.org>
- Júlíusson, Árni Daníel. 2011.7.10. "Inspired By Iceland...no, really!," *Rekjavik Grapevine*. <http://grapevine.is>
- Koranyi, Balazs. 2012.6.12. "Europe Should See Iceland as Recovery Role Model: PM." *Reuters*. <http://reuters.com>
- Myles, Robert. 2013.1.31. "Iceland Triumphs Over UK and Netherlands in Icesave Court Battle." *Digital Journal*. <http://digitaljournal.com>
- Ólafsson, Stefán. 2011.12. Iceland's Financial Crisis and Level of Living Consequences, Working Paper no.3, Social Research Centre, University of Iceland. p.4. <http://thjodmalastofnun.hi.is>
- Vaklimarsson, Omar R. 2012.8.13. "IMF Says Bailouts Iceland-Style Hold Lessons in Crisis Times." *Bloomberg Businessweek*. <http://businessweek.com>
- Valdimarsson, Omar R. 2012.2.19. "Icelandic Anger Brings Debt Forgiveness in Best Recovery Story." *Bloomberg News*.
- \_\_\_\_\_. 2013.5.23. "Laureate Phelps Warns Against EU as Iceland Drops Bid." *Bloom-*

*berg.com.*

Wade, Robert H. and Silla Sigurgeirsdottir. 2010. "Lessons From Iceland." *New Left Review*, No.65, p.10.

\_\_\_\_\_. 2012.1. "Iceland's Rise, Fall, Stabilization and Beyond."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36, No.1, p.134.



## 축적위기 맥락에서 본 글로벌 금융구조하에서의 BRICS와 신흥시장의 좌절\*

아류제국주의의 지정학 경제의 대두, 생태사회경제적 조건의 저하, 아래로부터의 BRICS에 대한 저항의 등장

패트릭 본드 | 남아프리카공화국 콰줄루나탈 대학교 교수

전체적으로 번역상 부자연스러운 곳이 많습니다. 손을 많이 보기 했지만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곳은 물음표 표기만 했습니다.

참고자료가 없는 것도 다수.

### 1. 머리말

글로벌 금융구조에 대한 극적인 변화의 필요성은 명백한 편이지만, 아직 이런 상식은 변화를 아래에서나 위에서나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미국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re, 2013)가 실시한 가장 최근의 세계여론조사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사람들의 3분의 1만이 주요한 위협으로 ‘국제 금융 불안정성’을 꼽아(다음으로는 기후변화와 중국 경제의 부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결과인 52%에 못 미친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런 사람들의 무시는 부끄러운데, 왜냐하면 1994년에 자유화가 승리하고, 란드화는 몇 주 만에 7번이나 급락하여 15%가 넘게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부분적으로는

?

\* 이 글은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작성되었으며, 한국정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13S1A5B8a01055117)을 받은 것이다.

우리 사회의 보다 관대한 태도는 전 세계의 전형적 문제인 금융산업과 동맹인 정부로부터의 유화적인 메시지의 결과이다.

예를 들어 2013년 8월 남아공 란드화는 다시 붕괴하였는데, 재무부 장관인 프라빈 고단(Pravin Gordhan)은 “우리는 변동환율제이며, 이 시기에 우리가 통제하기 힘든 사건으로부터 나온 충격의 일부는 흡수할 수 있다”고 장담하였다(Reuters, 2013). 그러나 란드화는 예전에 존재했던 자본통제 유형의 방어, 특히 몇 년 전에는 존재하였던 지역환율통제(1985~1995년에 있었던 금융 란드 시스템) 없이 출렁거렸다. 전체 시스템을 보호하는 미국 금융기구들은 1990년대 클린턴 정부하에서 붕괴되었고, 뉴욕의 은행가들은 더 많은 이윤을 벌었다(Palast, 2013). 탈규제화는 남아공과 마찬가지로 제국주의에서의 금융화의 등장에 영향을 받았고 세계통화 질서를 만들었다. 이 변동성은 더 불안정하게 되었고, 지불적자의 큰 균형은 남아프리카의 총 외채를 150억 달러 이상으로 상승시켰다. 그 시점은 2014년에 도달하고, 30년 전 윌렘포타 대통령 시절의 GDP 대비 부채비율과 같은 수준이다.

고단은 가끔씩 전전공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2013년 8월 미국 금융정책 컨퍼런스 중 《파이낸셜 타임스》의 인터뷰에서 그는 그의 동료들에 대해 “전 세계적인 일관되고 응집력 있는 대응으로 통화의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데 무능력하며, 또한 감정적으로도 그렇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England and Harding, 2013). 그 다음 주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에서 고단은 곧 설립된 BRICS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과 비상외환보유고 합의(Contingency Reserve Arrangement: CRA)를 축하하는 BRICS 네트워크에 참여하였다. 과연 이 두 가지가 다가올 혼란스러운 세계 금융환경에서의 브레튼우즈 제도에 대한 초보적인 도전이 될 수 있는가?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의 은행을 회복시키고,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을 설립한 지 거의 70년이 지났으며, BRICS는 워싱턴과 신자유주의 이데올로

기를 남반구 중심적, 국가 주도적 자본축적으로 대체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어쨌든 그것은 수사적인데, 하지만 2013년 중반 BRICS의 전략이 국제 금융구조의 자멸과 완전히 다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무엇보다 남아공 재무부 관료에 따르면, CRA의 목표 중 하나는 “현존하는 국제적 합의를 보완하는 것이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나 아시아 통화기금 역시 유사한 절충물인데, IMF 관료들에 의해 총체적인 거시경제정책이 정복당하는 치욕을 겪은 1997~1998년 아시아 위기 시에도 그랬다.

BRICS 신개발은행의 위태로운 점은 제도적 리더십과 위상인데, 2013년 4월 BRICS 더반 정상회담에 참석한 러시아가 G20 재무장관 회담과 정상회담의 의장국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위태로움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견해주는 충분한 조짐일 수는 있다. BRICS 신개발은행의 500억 달러 자본금은 매년 그것보다 더 많이 대부해주거나 투자하는 세계은행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없다. 그리고 1,000억 달러 규모의 CRA는 심각한 금융위기 시에는 손쉽게 소진될 수 있다. 아마도 총금액은 몇 년 내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인데, 왜냐하면 러시아의 기록적인 570억 달러 긴급구제를 포함하여 여러 나라들이 하룻밤 사이에 균중심리적 형태로 진행된 금융자금회수를 멈추는 데 500억 달러 패키지를 필요로 했던, 1990년대 중반에 목격한 신흥시장 금융위기에 대처하기에 그것은 너무 초라한 규모이기 때문이다. 이후 러시아의 위기는 남아공의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시기의 가장 심각한 통화위기를 직접적으로 촉진하였으며, 남아공 중앙은행 총재 크리스 스탈스(Chris Stals)는 자본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2주에 걸쳐 이자율을 8% 올렸고, 그리하여 경제는 경기후퇴로 진입하였다(Bond, 2003).

15년 후 위험은 더 커졌고, 남아공은 여전히 이전의 취약함으로부터 배우는 데 실패하였다. 2013년 중반 수조 달러 가치의 금융자산이 증발되어, 대

부분의 BRICS에서 극심한 통화위기로 몰고 갔다. 아마도 원인은 미 연준 정책의 변화, 즉 Fed의 ‘테이퍼링’과 때문에 은행들에게 더 적은 규모의 양적 완화가 실시된다는 것과 몇 주 만에 이자율이 2배로 뛰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이후 신흥시장과 급락한 남아공의 란드, 브라질의 헤알, 러시아의 루블, 특히 인도의 루피로부터 극적인 자본유출을 야기하였다.

?

많은 이들이 언급하고,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2013)가 보도했듯이 “성장세의 신흥시장들은 선진국의 취약함을 보완하지 못한다.” 영향력 있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스웨덴 경제학자 앤더스 애슬룬드(Aslund, 2013)는 《파이낸셜 타임스》를 통해 “BRICS 파티는 끝났다. 그들의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려운 시기에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으며, 호황기에 그들은 용기가 부족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전 남아공 야당의 당수 토니 레온(Leon, 2013)은 “발전 중인 시장경제는 투자자의 공동체의 열렬한 사랑을 얻었다. 그 로맨스는 비난으로 대체되었다”고 덧붙였다.

신자유주의적인 BRICS 비판주의자와 질투심은 의미 없는 것이 되었고, BRICS의 자신감은 일시적인 금융적 변동 때문이 아니라 몇몇 나라들의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증대하였다. 칭화대학교 경제학자 리다오쿠이(Li Dokui)가 2013년 9월에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에 대한 감소는 더 이상 가치상승이 없다는 점에서 ‘위안’에 있어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하였다(Tian, 2013). 하지만 동시에 그는 “BRICS 개념은 사라지고, 중국과 다른 신흥경제만 남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메릴린치 경제학자 루팅(Lu Ting)은 “중국은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적은 외채, 막대한 외환보유고, 높은 저축과 자본통제로 인한 영향에 대체로 면역이 될 것이다”고 언급하였다. 심각한 위협에 대한 공식적, 다자적인 인식도 제기되는데, IMF 부총재 주민(Zhu Min)은 “만약 중국이 환율자유화를 통해 자본계정을 개방하면 글로벌 위기를 촉진할 것이며, 이는 IMF 사람들이 쉬쉬하고 있는 의견이다”고 말하였다(Tian, 2013).

그러나 생태사회적 정의를 믿는 사람들, 즉 BRICS가 단지 상품 사이클의 종언, 금융적 긴축, 신용제약으로 제기된 문제를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글로벌 권력구조를 바꾸고, 동시에 잠재적으로 세계 자본주의체제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이런 논자들의 주장에 대해 어떤 논박을 통해 논의할 것은 아니고, 독자들이 라디카 데사이(Desai, 2013), 페페 에스페시토(Espesito, 2013), 글렌 포드(Ford, 2013), 도트 키트(Keet, 2013), 빌 마틴(Martin, 2013), 윌리엄 페섹(Pesek, 2013), 발디미르 슈빈(Shubin, 2013), 제3세계 네트워크(Third World Network, 2013)의 BRICS 낙관론 분석을 살펴보면 된다.

참고문헌  
없음

모든 평론가들이 인정하는 것은 2013년 9월 시리아 폭격을 막아낸 것을 제외하고는 BRICS의 지도자들에 의해 지지되는 전략이 여태까지는 세계경제, 생태위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IMF 안에서 중국의 투표권이 상당히 증대하였지만, 이 기관의 어젠다에는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세계은행에 대해서는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김용이 BRICS의 연합된 대응이 없는 상태에서 총재가 되었다(Fry, 2012).

그러므로 BRICS 지도자들이 브레튼우즈 시스템과 다른 글로벌 권력의 구조를 바꾸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 따져보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무엇보다 개발금융을 변혁하는 데 있어, 이미 그들이 지지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한다. 2007년 베네수엘라 대통령인 우고 차베스가 설립하고,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지지한 남반구은행(the Bank of the South)이다. 남반구은행은 2013년에 자본금이 7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개발금융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특히 에콰도르의 급진 경제학자 페드로 파예즈(Pedro Paez)에 의해 그 구조가 개선된 뒤로 더욱 그렇다. 반면에 BRICS는 가장 불평등하고, 본질적

으로 불안정한 구조를 급진적으로 바꾸기보다는 세계금융의 현상유지와 안정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확실한 증거는 중국이 1.3조 달러가 넘는 미국 재무부 채권을 지속적으로 보유함으로써, 워싱턴의 막대한 무역적자에 대해 계속 돈을 대주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2013년 중반 중국은 400억 달러 정도의 미 재무부 채권을 팔았지만, 이것은 그다지 워싱턴의 파워를 약화시키지 않았으며, 하물며 전 세계에서 더 민주적으로 관리되는 새 통화를 촉진시키는 것은 더욱 아니며, 그 대신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인 연준의 이해관계에 편향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RICS의 통화들 또는 바터무역을 이용하거나, 미국 달러가 세계의 시노리지를 갖는(즉, 워싱턴 관료들이 권력을 어떻게 남용하던 기축통화인) 파괴적인 시스템을 끝내지는 수사는 증가하고 있다. 만약 중국이 정말 위안이 언젠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원한다면, 속도는 아주 느리게 진행될 것이며, 그동안에는 2013년 금융적 혼란에서 보여주듯이 다른 BRICS들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BRICS의 경험은 개발금융의 좁은 분야에서도 일치단결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경제의 좀 더 핵심적 측면은 금융을 통해 작동하며, 금융가들은 여전히 남아공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적 맥락에서 배후조종하고 있다.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맥락을 고려하면 남아공의 특수한 입장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아류제국주의적 권력(모든 문명화된 시민들에 의해 혐오되는 불량국가)의 한 종류에서 1994년 엄청난 정당성을 지닌 또 다른 모습으로 극적으로 변신한 사례이다.

## 2. 남아공의 국제사회에서의 입장

《비즈니스 데이(Business Day)》의 피터 부르스(Bruce, 2003)는 “이라크 전쟁 개전 이후 몇 개월 만에 조지 부시 대통령의 프리토리아 방문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보도하였다. 비록 조지 부시와 타보 음베키 대통령 간의 인간적이고, 긴밀한 신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들의 빈번한 포옹, 토닥거림 등은 외교적 관례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넬슨 만델라와 음베키 대통령 시절에 수용한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남아공의 외교적 관례는 꽤나 인상적인데, 조지 부시의 호의를 정당화해줄 만하다. 아마도 음베키는 또한 서로 동의할 수 없는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골치 아픈 짐바브웨 문제에 대해선 ‘선봉장’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었다(Biti, 2013).

참고문헌  
없음

민주주의의 첫 10년 동안 프리토리아의 의원들은 국제무대에서 초대받거나, 의장직을 역임하거나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 IMF와 세계은행의 이사
- 비동맹회의와 저·중위소득 나라들의 모임 G77 그룹
- UN 무역개발회의
- 영연방
- 아프리카단결기구(OAU)와 이후 출범한 아프리카연합(AU)
-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 (이하 생략)

음베키는 남아공에서 권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꽤 노력하였는데, 2005년부터 약 3년 동안 진행된 제이컵 주마(Jacob Zuma)를 궁지에 몰려 했던, 성공하지 못한 캠페인에 대해 주의를 딴 곳으로 돌리기 위함이었다. 음베키가 2008년 9월 그의 정당지도자들에 의해 탄핵되고 난 후 세계경제

는 일제히 붕괴하였으며, 국제금융을 중재하는 새로운 권력 지형이 필요하게 되었다. 관리형 대통령인 칼레마 모틀란테(Kgalema Motlanthe)는 2008년 워싱턴, 2009년 런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가하였다. 런던 G20 정상회담에서 재무부 장관 트레버 마누엘(Trevor Manuel)은 IMF의 자본재편이라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2009년 후반 주마 대통령이 수행한 첫 번째 주요한 국제무대에서의 역할은 UN 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기간에 코펜하겐 협정에 다른 4개 가맹국과 더불어서 조인하는 것이었다. 2010년 중반에 그는 축구 월드컵을 개최하였고, 중국의 초대로 BRIC 클럽에 합류할 수 있었다. 2011년 주마는 UN 글로벌 지속가능성 고위급 패널에 반기문과 더불어 공동의장을 역임하여 국제무대에서 부상하였다. 2011년 12월 주마 대통령과 은코아나 마사바네(Nkoana-Mashabane) 외교부 장관은 UN 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개최하였으며, 2012년 그의 전 부인이자 전 외교부 장관인 니코사자나 들라미니 주마(Nkosazana Dlamini-Zuma)는 아프리카연합 의장이 되었다. 2013년에는 주마가 BRICS 회담을 개최하여, 고도성장 경제들이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투자를 우호적으로 만드는 관문 역할을 수행하였다.

BRICs

하지만 이런 풍부한 기회들을 통해 실제로 무엇이 실현되었는가? 필자가 다른 곳에서 논의한 것은 아래와 같다(Bond, 2003, 2006a, 2006b, 2009, 2012).

2012a  
2012b

- IMF와 세계은행은 그들의 운영에 있어 단지 사소한 변화만 있었는데, 예를 들어 아프리카 대신에 중국에 친화적인 투표권의 변화가 있었고, 이는 남아공 재무부 장관이 그 기관의 개발위원회 의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랬다.
- 비동맹회의와 G77은 애매한 상황에 직면하였고, 단일한 입장에서 중국의 잠재적으로 거대한 권력과 씨름할 수 없는 상황이다.

- UN 무역개발기구는 남아공 무역부 장관인 알렉 에르윈(Alec Erwin)이 의장인 시기에 신자유주의적 워싱턴 컨센서스의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 영연방의 주요한 도전이었지만, 결국 짐바브웨를 민주주의로 이행시키는 데 실패하였다.
- 무아마르 카다피(Muammar Ghaddafi)의 영향력하에 있던 아프리카연합은 2012년 들라미니 주마의 의장 임후보를 둘러싼 영어권/프랑스어권 간의 균열로 혼란스러웠는데, 그것은 이전의 아프리카 대륙의 가장 강력한 나라(남아공, 나이지리아, 이집트)의 시민이 그런 주요직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이전의 협정 때문이었다.
-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는 경제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무능했으며, 남아공의 지배하에서 자유민주주의보다도 못한 자유권을 방어하는데(예를 들어 무가베의 2000년대 토지재분배에 대한 백인 농민들의 소유권)에도 무능하였다. (이하 생략)

이 모든 것에 대해 평론가 쏘펠라 망쿠(Mangcu, 2013)는 “프리토리아의 정치인-요하네스버그 기업 동맹은 다른 것들을 제쳐놓고 글로벌 자원에 대한 단순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망쿠는 남아공의 지배계급이 수행한 위의 것들 중 “미국과 논쟁이 될 만한 외교정책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는 아마 과장법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시리아와 리비아의 경우 프리토리아는 미국에 반대되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 있는 사안의 경우에 얼마나 워싱턴과 프리토리아가 의기투합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공 관료들은 해외 테러리스트로 추정된 자에 대한 위험적인 용의자 인도에 공모하였는데, 이는 고문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발적 국외추방을 의미한다(Ross, 2010). 아이러니하게도 테러리스트의 명단에는 넬슨 만델라가 올라와 있는데, 이는 1962년

CIA가 그를 감옥에 수감하는 것을 도와준 이후로 워싱턴이 공식적으로 입장유지를 하였기 때문이었는데, 2008년 의회투표를 거쳐 명단에서 지워졌다. 전직 남아공 주택부 장관이자 광산업 거물인 도쿄 섹스웰(Tokyo Sexwale)은 2013년 후반까지 그가 테러리스트 감시 명단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일도 있었다. 카디자 파텔(Patel, 2013)에 따르면 신식민주의적 서구 권

2013a  
2013b

?

력과 협력은 후자의 호의를 필요로 하는데, 2013년 10월 프랑수아 올랑드의 방문은 적개심이 아니라 협력의 정신으로 승인되었고, 그는 대륙 북부의 군사적 책임을 공유하고자 방문한 것이었다. 주마는 말리에 대한 프랑스의 개입보다는 코트디부아르에 대한 프랑스의 개입에 더 수용적이었다. 외교부의 에브라힘 에브라힘(Ebrahim Ebrahim)은 말리와 코트디부아르에 대한 프랑스의 개입에 대한 입장 차이를 중재시켰는데, 말리와 코트디부아르의 단 하나의 차이는 올랑드가 주마에게 전화하여 말리에 대한 프랑스의 계획에 대해 알려주고, 의견을 물은 것이라고 말했다. “사르코지는 우리 대통령에게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전화 한 번 한 적이 없다.”

이런 선행적 평가로부터 어떤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가? 프리토리아는 서구의 이류제국주의적 동맹인가? 만약 당신이 이 범주를 받아들인다면, 뒤따르는 위험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은코아나 마사바네(Nkoana-Mashabane, 2013)는 “고전적 제국주의론이나, 윌러스틴의 중심-주변 모델을 이 상황에 교조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이론들이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것과 다르다. 이 경우 안타까운 문제는 그런 지적 담론들이 역사에 의해 비일관되거나 부적절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반론을 제기하자면, 일관된다는 것의 전제는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약탈행위를 강화하는 신자유주의, 금융화, 엄청난 불균등결합발전의 논리를 따르는 것인가? 용어 ‘아류제국주의’는 그런 일관된 형태를 묘사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참고문헌  
없음

### 3. 인류제국주의 혹은 반제국주의 BRICS?

1965년 루이 마우로 마리니(Marini, 1965: 22)는 인류제국주의를 “제국주의적 팽창, 핵심 국가의 입장을 담보하는 팽창의 활발한 협력”으로 정의하였다. 거의 반세기가 지나서 그의 선견지명이 적극적 동맹으로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BRICS)의 대두라는 결과로 증명되었다. 2013년에 이들 다섯 핵심 국가들은 전통적 3대 강대국(미국, EU, 일본)을 감싸안는 분명한 제국주의의 협력자였다. 그들은 글로벌 제도적 권력구조를 자본개편하고, 재승인하여 신자유주의의 명분을 강화시켰다. 그들은 과잉생산적·과잉소비적 난개발을 추동하며 중심부의 논리와 공모하였다. 또한 그들은 기후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세계적 환경재앙을 촉진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잠재적으로 작동 가능한 세계적 규모의 생태적 규제에 대한 사보타지에 동조하였다. 전반적으로 신제국주의에서 그들의 역할은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순응하는 것이었다.

몇몇 이들에게 혼란스럽게 BRICS 정권들은 이러한 어젠다를 그들이 급진적으로, 이따금 반제국주의적 수사와 외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 동시에 실천하였다. 예를 들어 그런 행위들은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그들의 내부적, 국가주의적,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일어난다. 2013년 중반 두 사건에서, 워싱턴의 입장을 보류하게 만드는 외교전략이 수행되었다.

첫 번째는 시리아의 경우인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강한 반대를 조직하였고, 다른 BRICS의 지지를 통해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담에서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폐기를 촉진하는 대안전략을 제시하였다. 오바마는 자신의 폭격 경고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는 브라질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된 목표로서 미국 NSA가 세계의 대부분의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화통화를 해킹하

고 있다고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을 내부고발자로 간주하여 보호하는 것이었다. 호세프 대통령은 2013년 10월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워싱턴으로의 국빈방문을 취소하였다. 브라질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는 NSA 해킹의 또 다른 피해자였으며, 전례 없는 규모의 미국에 의한 경제스파이 활동이 확인되었다. 그동안 스노든은 미국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망명자로서 많은 부와 명예를 누렸다. 아이러니한 것은 스노든이 이전 미국 내부고발자인 첼시 매닝(Chelsea Manning)의 비극적 운명을 피하고 있는 바로 그 시기에 러시아 정부는 그린피스 활동가 30명을 북극 석유 채취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체포하였으며, 그들은 15년의 형기에 직면하였다.

2013년 두 가지 사례를 제외하면, BRICS는 다방면에서 축적과정과 지정학을 더 심화시키는 데 기여한 활발한 협력자였다. 그 중 하나는 아프리카에서의 제국주의적, 인류제국주의적 지정학적 관계였다. 다른 하나는 프리토리아의 신자유주의 정당화인데, 특히 달러 헤게모니라는 측면에서 미국 권력의 강화였다. 신자유주의는 개별 BRICS 나라들의 금융자본, 상업자본 분과들이 크게 혜택을 본 프로젝트였다. 남아공에서 인류제국주의적 지역권 지배에 대한 오랜 비판이 여전히 제기되었고, 부분적으로는 남아공 기업의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도 그렇지만, 새로운 현상은 경제의 ‘금융화’이다. 금융규제는 1990년대 동안 인종적 아파르트헤이트에서 계급적 아파르트헤이트로 넘어가는 ‘엘리트적 이행’의 필요조건이었고, 이 과정은 동시에 인류제국주의적 측면을 갖고 있었다(Ashman, Fine and Newman, 2011; Bond, 2005; Mohammed, 2010; TerreBlanch, 2012).

아프리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인류제국주의는 제국주의와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 최근 시기에는 미국 중심적 제국주의와 연결된 주요 군사적 분쟁은 중동,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집트는 워싱턴의 인류제국주의 동맹의 기지였다. 하지만

참고문헌  
없음

1960년대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남부 아프리카는 냉전과 반식민지 해방 투쟁을 기반으로 하는 많은 전쟁이 일어난 장소였다. 아파르트헤이트 시기의 남아공은 워싱턴의 강력하면서도 만만한 대리인이었다.

이후 20년 동안 이 지역에서 우리가 주로 목격한 것은 대부분 국가-시민 간의 갈등이었다. 그것들은 보통 자원분쟁, 신자유주의, 이따금씩 일어나는 쿠데타, 독재지배체제와 관련된 것이며, 많은 경우 그것들의 결합이었다. 내전은 아파르트헤이트와 그리고 모잠비크와 앙골라의 CIA가 획책하여 1991년과 2001년에 발생한 수백만의 죽음을 남긴 채 종식될 수 있었고, 더불어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두 나라는 높은 GDP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에 극단적으로 불평등하다.

2013년 중반 오바마의 남아공 방문은 몇몇에게는 환영받았지만 수천 명에게는 항의를 받았다. 동시에 350명의 미국 군인들은 포트엘리자베스에서 남아공 방위부대를 훈련시켰다. 그것은 남아공에게는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재확립한 전술, 전략을 배울 기회였고, 미국에게는 아프리카의 대게릴라전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기회였다. 6개월도 지나지 않아 1,350명의 남아공 군인들은 1,700명의 탄자니아, 말라위 동맹군과 함께 광물이 풍부한 동 콩고 동부 지역에서 게릴라 그룹 M23을 격퇴하는 콩고 군을 도왔다. 그러나 유사한 수십 개의 그룹은 지역의 군벌로 남아있고, 지난 20년 동안 600만 명의 사람들이 자원 저주의 희생자로 사망하였다.

아프리카에서 직접적인 군사적 갈등은 줄어들었지만 제국주의적 통제의 교묘한 형태나, 2000년대 초 이후의 상품가격 상승 이후 ‘아프리카의 대두’라는 수사는 늘어났다. **대륙에서나 특히 남부아프리카 지역은 다양한 다국적기업의 지역권 주요 거점인 요하네스버그와 어느 정도는 남아공의 ‘관문’ 기능 덕분에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올랐다.**

남아공 정치인들의 반제국주의적 수사 덕분인지,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시기의 가장 혼란스런 특징은 바로 외교정책이다. 이것은 ANC의 국제주의적 전통과의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더 그렇다. 넬슨 만델라가 수감되고 나서 1963~1990년까지는 국외 망명하에서 ANC가 운영되던 시기였다. ANC의 물질적·이데올로기적 지지자의 범위는 UN, 소련, 스웨덴, 흑인의식운동, 제3세계주의자, 국제진보운동과 시민사회기구 등이었다. 그러므로 ANC의 정치적 전통을 고려하면 넬슨 만델라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비판한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라크와 관련된 미국의 전함 3척이 아프리카의 가장 큰 항구인 더반에 정박하여 연료를 보급받았다. 남아공의 국영 무기제조사는 함포 추진연료를 1,600만 달러어치를 팔았고, 326개의 휴대용 레이저 거리측정기를 영국군에게, 125개의 레이저조준기를 미 해군에게 판매하였다. 부시는 2003년 6월 남아공 수도 프리토리아를 방문하여 만델라의 후계자인 음베키를 만났고, 깊고 친밀한 인상을 남겼다. 2004년 5월에 만델라는 그의 비판을 철회하였다.

이해할 수 없는 것만은 아니었다.

2011년 미군 아프리카사령부 지휘관 카터 험은 워싱턴은 “작전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전통적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아프리카사령부를 궁극적으로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AfriCom Public Affairs, 2012). 더욱이 미국 항공대학교의 계간 《전략연구(Strategic Studies Quarterly)》는 아프리카연합에 대한 미군의 군사적 조언을 대해 “우리는 우리 군대가 직접 참가하여 녹초가 되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참가하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Cochran, 2010). 예를 들어 2006년 후반 부시가 이슬람 법률을 따르는 정부의 수립을 막기 위해 소말리아를 침공하려고 할 때, 그는 음베키에게 그런 내용의 정당화를 도와달라고 전화하였고, 3주 후에 멜레스 제나위(Meles Zenawi)의 에티오피아 군대가 그것을 수행하였다(White House Press Office, 2006). 2011년에 오바마는 카다피를 제거하기 위해 리비아를 침공하

을법을

기를 원했는데, 남아공은 아프리카연합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나토의 폭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 4. 아류제국주의적 상업화 과정

광범위한 경제적 맥락에서 남아공의 아류제국주의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남아공의 아프리카 시장으로의 팽창은 지정학적 논리의 측면이기 때문이다. 텍사스 민간정보기업 스트랏포(Strafor)의 내부 메모를 인용해보자.

남아공의 역사는 나라의 광물자원을 개발하려는 국내와 해외의 이해관계 간에 경쟁과 협력의 상호작용에 의해 추동되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에 의해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의 핵심적 지상명령은 남부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혹은 지역으로부터의 자유로운 노동과 자본의 유출입을 유지하며, 동시에 중남부 아프리카로의 진출의 안정을 보장하는 자유주의체제의 지속이다(WikiLeaks, 2013).

참고문헌  
없음

지역 내, 지역 밖으로 자본의 유출입과 벌어들인 ‘은과 금’은 남아공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떠받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남아공의 초기 세계경제에 대한 개방은 핵심 필요조건이었지만 강렬한 모순을 만들어냈다. 1993년 후반 아파르트헤이트의 벽이 무너지고, 만델라는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의 부채를 상환하는 첫 번째 민주정부로서 조약에 서명하였고, 민주주의와 상관없는 남아공 중앙은행을 위해 IMF 구제금융을 표준적인 구조조정 조건을 수용하여 받을 수 있었다. 1994년에 남아공은 경쟁력 없는 제조업과 노동자를 희생하여 WTO에 가입하였고, 1995년 금융적 란드 통제 시스템을

완전히 해제하여, 남아공 부자들이 아파트트헤이트 시기의 부의 상당수 부분을 유출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었다(Bond, 2005).

이후 남아공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환율통제 완화는 남아공 기업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한 것이었다. 하지만 2000년에는 예전에 요하네스버그와 케이프타운을 기반으로 했던 기업들 앵글로 아메리칸(Anglo American), 드비어스(DeBeers), 겐코르(Gencor), SA 브루어리(SA Breweries) 등의 금융본부가 완전히 대륙을 떠났다. 이들 남아공의 대기업들은 이제 런던, 뉴욕, 뮌헨에 본사가 있다. 2000년 이후 이윤, 배당, 이자의 유출의 결과는 남아공이 《이코노미스트》지가 2009년에 선정한 17개 신흥시장 중 가장 위험한 곳이 되도록 만들었다. 높은 환율을 하락시킨 것은 막대한 자본유출을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2007년도에는 외채가 GDP의 20%가 넘도록 치솟게 되었다(Mohammed, 2010).

참고문헌  
없음

경제적 절망이 증대하는 이 시기에 지역권의 배후지는 전환되었고, 이는 특히 2002~2008년 상품의 슈퍼사이클이 빠르게 상승하였기 때문이었다. 아프리카 대륙은 포스트-아파트트헤이트 시기(1994~2012)에 주요 신흥경제와의 거래 비중을 모든 상업의 5~20%로 증가시켰다. 2009년에 중국은 아프리카의 주요 거래 파트너였던 미국을 대체하였다. 바로 그 이후 BRICS 나라들과의 좀 더 긴밀한 대륙적 경제 관계의 합리화와 축진이 프리토리아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되었다. 외교부 장관 마리우스 프랑스만(Fransman, 2012)에 따르면 “남아공은 대륙에 대한 투자의 관문 역할을 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아프리카 대륙은 인프라 발전을 위해 4,800억 달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은코이나 마사바네가 정확히 파악했듯이 단순한 관문이 아니라 선봉장으로서, “2012년 남아공은 세계의 어떤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아프리카 지역에 투자했다”(Mataboge, 2013). 2010년에는 지난 10년 동안 자본유출이 진행

참고문헌  
없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톱 20개 기업 중 17개가 남아공 기업이였다(Laverty, 2011). 어떤 조사에 따르면 광산기지, MTN 휴대폰, 스탠다드 은행, 쇼프라이트 유통, 산람 보험 등 덕분에 남아공의 다른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2007년 이후 57% 증가하였다(Ernst and Young, 2013).

남아공 자본의 대륙 전체를 축적 대상으로 삼는 추세는 빠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요하네스버그의 기업들은 광업, 소매, 은행, 맥주양조, 건설, 서비스, 여행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였다. 가장 큰 남아공 기업은 프리토리아가 강력하게 추동한 아프리카의 금융자유화로 큰 이득을 보았으며(Mminele, 2012), 그래서 그들은 손쉽게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0년의 경우처럼 대부분의 돈들은 요하네스버그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금융유출은 주로 대부분의 남아공 대기업들이 새 천년의 전환기에 정착한 런던으로 흘러갔다(Bond, 2003).

참고문헌  
없음

BRICS는 이런 관계들에 대해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한편으로는 그들은 무역, 금융, 투자를 통해 전달된 강화된 경쟁압력에 직면하였다. 하나의 사례로 브라질에서의 닭고기 수입과 관련되어 2013년 중반에 이 영향이 드러났는데, 남아공 무역부 장관 롭 데이비스는 수입관세로 82%를 부과하였고, BRICS가 정말로 동맹이라고 생각하는 확실한 블록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좀 더 일반적으로 남아공에 이득이 되는 추출과정을 더 강화되었다. 국가계획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

한 나라의 외교는 재계와 기업 지도자들, 연구 및 학술기관과 지식공동체와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수행되어야 하며, BRICS의 거래상대방들과의 관계를 촉진해야 한다. 외교부는 연구기관 및 학자들과 함께 중국이 광물, 광업, 연구 개발, 대륙에 대한 인프라 확대에 많은 연관을 맺도록 하는 전략적 기획을 이끌어야 한다. (이하 생략)

이전 10년과의 차이는 분명한데, 2002년 중반 널리 알려진 아프리카신개발협력(Nepad)의 보증에도 불구하고 요하네스버그 재계가 주도하는 187개의 기업 지도자들은 대륙시장에 회의적이었다. 2004년에도 주요한 20개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투자는 일어나지 않았고, 단지 아프리카 내 전문가 심사제도가 부패한 정치인들을 규율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기업의 목소리만 존재했다.

?

다른 한편으로는 신제국주의자들이 분명한 요하네스버그에 기반을 둔 기업들의 전망은 중요한 걱정거리가 되었다. 2004년 초 프리토리아의 공기업 장관 제프 라데베(Jeff Radebe)는 “아프리카의 다른 곳에서 활동하는 많은 남아공 기업들이 지역 재계와 구직자, 심지어 정부에 대해서도 무례하고, 무시하며, 냉혹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SAPA, 2004)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미비아 정치경제학자 헤닝 멜베(Melber, 2010)도 공감했는데, 왜냐하면 “프리토리아는 다른 나라의 초기 산업기반을 파괴하고 자신들의 산업만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남아공 기업은 지역 기업을 붕괴시키고,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에서 독점을 형성하고자 한다. 남아공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단지 그런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닐 것이지만, 나미비아의 관점에서 남아공은 아류제국주의이며, 제국주의의 하위 파트너이다.”

## 5. 배후지 신자유주의의 아류제국주의적 준동

음베키하에서 공식적인 남아공-아프리카 관계는 다소 냉랭하였고, 동시에 신자유주의적이었다. 요하네스버그 《선데이 타임스》는 2003년 7월 아프리카연합 회의에서 다른 아프리카 리더들이 바라본 음베키에 대한 인상으로 “너무나 강력하고, 그의 의지를 다른 이들에게 관철하고자 하는 인상

을 받았다. 북도에서는 그를 아프리카의 조지 부시라고 불렀다. 이웃들 사이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를 지도하며, 그 자신의 어젠다를 관철시키기 위해 금융, 군사적 압력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그렇다”라고 보도하였다(Munusamy, 2003).

이러한 음베키 비판에는 아프리카 지식인들도 동참하였다. 2002년 아프리카 사회과학연구소와 제3세계 네트워크-아프리카가 가나에서 개최한 연합 컨퍼런스에서는 ‘Nepad의 가장 근본적 흐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근본적으로 지난 20년 동안의 구조조정 정책 패키지를 반복하며, 이런 정책들의 재앙적 결과를 경시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프레임워크
- 플랜에 대한 아프리카 민중의 핵심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선언되어 있지만, 아프리카 민중은 Nepad의 형성, 개념, 구조에서 많은 역할도 하지 못했다.
- 사회적·젠더적 평등에 대한 관심이 언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주변화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적 척도를 도입하였다.
- 아프리카적 관점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주요 대상은 해외공여자, 특히 G8이다
- 민주주의에 대한 비전은 잘 기능하는 시장의 창출에 대한 필요로 정의된다.

Nepad의 핵심인 음베키의 아프리카 내 전문가 심사제도(APRM) 그 자체는 아프리카 정권이 궁극적으로 그들 자신을 빈틈없이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Nepad는 또한 무역자유화를 받아들였고, 이는 착취과정의 증대로 이어졌으며, 그것은 G8 국가들이 발전시킨 싱가포르 이슈(투자, 경쟁, 무역의 촉진) 때문이기도 하다. 새 조건들은 G8의 막대한 농업 보조금, 불공평한 산

업장벽, 끊임없는 서비스 사유화, 지적재산 독점 등을 의심스럽게 보는 가난한 나라들의 불만을 증폭시킨다. 비록 최근의 ‘아프리카의 대두’는 몇몇 나라들의 높은 GDP 성장률 때문에 회자되는 말이지만, 남부사하라 아프리카의 실제적 부는 2000년 시기에 재생불가능한 자원고갈이라는 측면에서 극적으로 저하하고 있다. 상품 무역 덕분에 절정의 호황기 아프리카는 ‘조정된 순저축’이라는 측면에서 연간 -6%를 기록하였고, 생태적·사회적 요인을 고려한 GDP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심지어 세계은행의 보고서가 보여준 것이다(World Bank, 2011). 다른 말로 하면 Nepad의 정통적, 세계경제로의 더 깊은 연관을 따르는 것은 아프리카가 다양한 방식으로 악화된 자원의 저주(난개발, 생태적 파괴, 강제이주, 저항의 억압, 자본유출)를 겪는다는 의미이다(Bond, 2012).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것은 이 지역에서 남아공 금융관계의 주요 특징이다.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 이것은 대륙과 지구의 미래를 위협한다.

세계경제에 더 깊숙이 들어갈수록

2012a/b

정통적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쓰인 것인지?

## 6. 기후정책은 제국주의와 아류제국주의를 융합시킨다

프리토리아가 전 지구적 신자유주의와 결탁하여 전체 아프리카에 악영향을 주는 가장 극단적 측면이 바로 기후정책이다. 여기서 남아공 엘리트의 이해관계는 대부분의 남아공 사람들과도 그렇지만, 더 광범위한 배후지의 이해관계와 대체로 대립된다. 프리토리아의 지배적 열망은 첫째, 나라의 이익이 되는 ‘광물-에너지 복합체’의 매우 높은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고, 둘째, 코펜하겐 회담에서 교토의정서를 파기하고, 2011년 더반 회의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사보타지하는 것이다.

글로벌 거버넌스를 전환시키는 게 아니라 순응하는 데 있어 주마의 개인적 역할의 중요한 사례는 2009년 12월 BASIC(브라질, 남아공, 인도, 중국) 국가 지도자들이 워싱턴과 함께 기후재앙을 방치한 것이다. 덴마크에서 열린 UN 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주마는 오바마, 룰라, 원자바오, 싱과 더불어 교토의정서의 의무감축량을 좌절시켰고, 2100년까지 일어날 지구온난화의 최소 4단계를 아프리카 중심부에는 9단계로 변환하였다.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 2009)은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세계의 가장 큰 배출자들 사이의 더러운 조약에 불과하다. 만약 당신이 기후변화에 대해 뭐가 하는 것처럼 가장하면, 나도 그렇게 가장하겠다. 콜? 콜”

이행할

코펜하겐 협정과 더반 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두 번째 목적은 어려움에 처한 탄소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자신감을 높이는 것이었다. 이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난 5년 동안 주요 EU 시장에서 탄소가격이 약 90% 하락하였기 때문에 엘리트들에게 있어 중요한 사안이었다. 처음에 전략은 BASIC 국가들의 CDM(청정개발체제) 탄소거래를 경유하여 북반구 기업의 탄소를 상쇄한다는 허상을 2012년 중지될 때까지 지속하는 것이었다. 그 이후 BASIC 국가 중 오염산업이 배후지 시장에서의 그들 자신의 CDM 프로젝트를 개발을 진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브라질과 중국에 새로운 내부 탄소시장을 창설하였다.

?

전 지구적 기후변화협상에서는 워싱턴과 BASIC 국가의 협상가들은 분명히 그들의 화석연료 및 추출산업의 이익의 견지에서 배출량 감축의무를 완화시키려고 한다. 바르샤바 19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다시 목격한 것은 그들의 금융분야에 대한 지원이며, 정작 더반 회의에서 합의한 기후변화체제는 2020년어야 윤곽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유사하게도 프리토리아 정치인, 런던에 기반을 둔 광산기지, 요하네스버그의 흑인 재계 거물들, 그들과 우호적인 노조 사이의 친밀한 연계는 마리카나에서 폭로되었다. 다른

BRICS 국가들은 유사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으며, 러시아의 경우 1990년대 세계경제에 대한 산업경제의 극단적 노출의 결과로서 탄소시장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고온의 이득**에도 불구하고, 교토의정서의 두 번째 이행기간(2012~2020년)에 대한 의무감축 철회를 주도하였다. 경제위기는 러시아의 배출량을 첫 번째 이행기간(2005~2012년)에 1990년대 소련 수준보다 낮게 만들었다. 그러나 2008~2013년 탄소시장의 붕괴로 인해 모스크바의 속셈은 그들의 석유와 가스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었고, 그러므로 배출량 감축 의무는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아니었다. 심지어 2010~2011년 기후와 연관된 가뭄과 산불이 밀의 가격을 엄청난 수준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하였다.

다른 4개 BRICS 국가에서도 비슷한 친기업적 선택이 진행되었다. 물론 그들의 지도자는 가끔씩 북반구의 더 큰 산업국가의 배출량 감축에 대한 필요를 언급하는 자세를 취하기도 한다. 하지만 UN의 기후와 연관된 규제 목소리에 대한 핵심적 과정에 대한 해결책은 2011년 12월 더반 회의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더반 플랫폼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되었다”고 《뉴욕타임스》의 미국 담당 선임기자가 보도하였다. “1인당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개발도상국들이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는 것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행위의 차이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Broder, 2012).

UN 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금융가들에게 칭송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글로벌 탄소시장에 대한 새로운 물신성을 주도하는 ‘새로운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허용 때문이다. **남아공으로부터의 걱정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파이낸셜 타임스》는 ‘더반 플랫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힌다.

이에 대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더반 플랫폼은 세계의 허우적거리는 탄소시장에 새로운 자극을 제공해야 한다. 그것은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추진력을 제공한다”라고 BOA-메릴린치의 글로벌 탄소시장 담당자 아비드 카말리(Abyd Karmali)가 말했다. 이것은 유로존 위기라는 비통합의 한복판에서 얻은 성과이며, 그가 말하기를 ‘요동치고 있는 탄소시장에 대한 비아그라 한 알’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비아그라가 얼마나 재빨리 소멸되었는가를 지적할 수 있다. 정말로 짧은 급등 이후 시장은 다시 자유낙하하고 있다. 이런저런 방식으로 더반 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합의는 가난한 나라들의 기후재앙에 대해 방어하는 능력을 축소시키고 있다. 크리스천 에이드(Christian Aid)에 따르면 남아공 외교부 장관 은코야나 마사바네가 의장을 맡고 있는 기후정상회담에서 금세기에 기후와 관련되어 예상되는 사망자 수가 아프리카 사람 180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예측을 확인하고 있다. 이미 매년 40만 명이 기후와 관련된 혼란 때문에 생기는 농업, 공중보건에서의 재앙과 이상기후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궁극적 역할은

기후 문제와 관련된 워싱턴의 믿을 만한 아류제국주의적 동맹으로서 프리토리아의 역할의 궁극적 확인은 기후금융의 핵심적 문제에 재차 등장한 마누엘의 역할에서 알 수 있다. 그는 2010년 기후금융에 대한 UN의 고위급 자문그룹에서 일했는데, 그는 전 세계은행 수석 경제학자인 스톤의 제안에 동참하였고, 그것은 녹색기후기금에 대해 힐러리 클린턴이 약속한 1조 달러의 절반이 사적 분야의 수입원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Manuel and Stern, 2010). 남아공 중앙은행 부총재 대니얼 미넬(Mminele, 2012)도 같은 태도로 “남아공은 기후금융 이슈에 대해 선진경제와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사례로는 부유한 나라들이 기후변화의 주요 희생자들에게 지고 있는 ‘기후부채’는 갚지 않는 것,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최악의 위기를 해결하

참고문헌  
없음

기 위해 글로벌 탄소시장에 의존하는 것이 있다(Bond, 2012).

2012a/b

## 7. 배후지에 대한 아류제국주의적 개발금융

세계경제의 축적 사이클의 현 단계에서 금융의 지배는 1980년대부터 등장하였다. 이것이 왜 BRICS 신개발은행과 비상외환보유고 합의(CRA)가 최근 BRICS 정상회담의 가장 놀랄 만한 두 측면인 이유다. **고단의 정례적인 세계은행과 IMF 비판과** 더불어, BRICS가 글로벌 거버넌스의 민주적 결손(democracy deficit)에 대해 좌파적으로 말하기(talk left) 전략을 취할 수 있는 잠재력이 분명히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아직 세계은행 총재 투표 이전인 2012년 4월 고단의 선택은 워싱턴 컨센서스 이데올로기이자 나이지리아 재무 장관인 은고지 오킨조-이웨알라(Ngozi Okonjo-Iwala)였다. 그녀는 2012년 1월 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오규파이 운동을 준(準)혁명적 상황으로 촉진시켰듯이, 휘발유 보조금을 폐지하여 비슷한 상황을 만든 사람이다. 브라질의 선택은 케인지언 경제학자 호세 안토니오 오캄포(Jose Antonio Ocampo)였고, 모스크바는 워싱턴이 내세우는 김용을 지지하였다. 이것은 그 이전 해의 IMF 총재 선거의 반복이었는데, BRICS는 분할통치당한 것이다. ‘신홍 블록’이라는 접근은 두 사례 모두에 대해 무능했고, 단일 후보에 대한 합의를 만들 수 없었다.

세계은행과 IMF에 대한 고단의 비판과

2012년 7월 BRICS 재무부는 유럽에서 위기에 노출된 은행의 구제금융의 새로운 시스템을 모색하는 IMF에 새 자본금으로 750억 달러를 냈다. 남아공의 기여분은 20억 달러 정도로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끌어모은 돈이었다. 남아공의 기여분에 대해 고단은 《머니웹(Moneyweb)》을 통해 그것은 IMF가 절망적인 유럽 채무자들에게 더 ‘지독할 것’이라는 조건부 기여였다

고 말했다(Moneyweb, 2011). 마치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의 빈곤층과 노동계급이 충분히 고통당하고 있지 않다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BRICS 개입의 결과는 중국이 더 많은 IMF 투표권을 얻는 것이었고, 동시에 아프리카는 실제 그 지분의 많은 부분을 잃었다는 점이다. 고단(Gordhan, 2012)은 2012년 9월 IMF와 세계은행의 도쿄 회합에서 “신흥, 개발도상국의 압도적 다수가 지분 할당에서 손해를 볼 것이며, 그 결과는 민주적 결산을 영구화시킬 것이다”고 이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정당성, 지불가능성, IMF의 유효성에 대한 위기’는 아프리카가 단지 45회원국들 중에서 2석만 차지한다는 점을 변호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IMF에 대한 BRICS의 더 많은 자본금 출자를 촉진시키는 고단의 역할은 정당성의 위기를 영구화시키는 원인일 것이다.

어떤 측면에선 프리토리아는 글로벌 금융에 대해서는 다른 BRICS 나라들과 공동보조에서 동떨어진다. 미넬(Mminele, 2012)은 2012년 11월에 프리토리아가 금융거래에 대한 로빈후드세와 같은 글로벌 규제 부과에 대해선 워싱턴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남아공의 금융 파워를 통해 가난한 나라들을 쥐어짜는 것은 오래된 문제이며, 요하네스버그는 대륙 최고의 핫머니 센터가 되었다. 2002년 중반 마누엘(Manuel, 2002)은 영연방 경제위원회에서 약속한 것은 대륙에 대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법적, 규제 프레임워크의 건설을 통한 빠른 금융시장 통합”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2년 후 마누엘의 상관인 레셋차 가냐고(Kganyago, 2004)가 발표한 새로운 ‘아프리카를 위한 금융센터’ 프로젝트는 요하네스버그의 특권적 경제지구인 샌턴시티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화 경향을 강화시켰다. “2002년까지 지난 5년 동안 금융 분야는 연간 7.7% 성장률을 기록했고, 이는 경제 전체의 성장률보다 2배 높은 것이다.” 그런 금융 버블은 기생적이고, 위험한 경제의 신호로 보통 이해되는데, 프리토리아의 금융관료들에게는 전혀 아니었다. 프리토리아의

참고문헌  
없음

?

특정한 목표는 “아프리카와 글로벌 투자자에게 남아공의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포함하여, 글로벌 거래비용과 거래리스크의 감소, 투자자 보호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 금융기업의 아웃소싱을 위한 글로벌 허브 등을 포함한다. 가나고는 결론적으로 “아프리카의 경제들은 개발에 대한 거대한 해외자본유입에 필요한 채널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적 금융시장의 느린 성숙을 기다릴 수 없다. 오직 지역적 금융센터만이 가까운 장래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음베키는 아프리카로부터의 불법적인 자본유출을 주도적으로 비판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실 글로벌 신자유주의 금융에 대한 아류제국주의적 지원은 BRICS의 입장에서 핵심적인 것은 아니며,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그들에게는 남반구 은행(the Bank of South)을 지지하는 것이 더 낫다. 2012년까지 120억 달러의 자본금을 확보한 그 프로젝트는 우고 차베스가 구상하였으나, 좀 더 보수적인 브라질의 관료들이 재차 사보타지를 하였고, 음베키 대통령 시절 남반구 은행에 대한 참여를 거부하는 것으로 프리토리아에 의해 반대되었다. 남반구 은행이 지속적으로 무시되더라도, 완전히 다른 방식의 금융 발전에 대한 다른 옵션이 존재한다. 전 세계은행 수석 부총재이자 경제학자인 니콜라스 스텐과 조셉 스티글리츠는 BRICS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발도상국과 신흥경제가 힘들게 얻은 저축을 대체로 부유한 나라에 있는 위험한 포트폴리오가 아닌, 개발도상국과 신흥시장의 건전한 투자로의 더 좋은 배분을 보장하는 새로운 기관이 필요하다. 특히, 저탄소 인프라와 기술은 다음 10년의 성장 회복세를 마련하는 데 핵심적이다. 기후변화의 위험을 완화하고, 적응하고, 경제성장을 이뤄내고, 빈곤을 감소시키고, 안정과 안전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투자가 긴급하게 요구된다(Stern and Stiglitz, 2011).

비록 이런 도덕적 정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BRICS의 광범위한 프로젝트를 고려하면 이런 희망이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스텐(Stern, 2013)은 컨퍼런스에서 그가 BRICS 은행의 아이디어에 대한 선구 자임을 자랑하면서 그의 동료들에게 진실을 말하였다. 그는 ‘경제성장의 다른 유형’에 대한 근거를 무시하였고, 국가와 다국적기업 간의 거래를 촉진하는 데 있어 은행의 이점을 강조하였다고 말이다.

참고문헌  
없음

## 8. 맺음말

결국 우리는 아류제국주의의 정의와 재정립에 대한 이론적 문제로 되돌아와야 한다. 앞에서 묘사한 대로 BRICS의 전략은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다자적인 금융 거버넌스의 맥락에서 아류제국주의로 해석될 수 있다. 그 근거는 첫째, 신자유주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지지는 그것의 실패를 구원하였다. 둘째, 배후지에 대한 기업적 수탈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지역권에 대한 영향력을 점증하고 있다. 셋째, 개발은행에 대한

지향을 나타냈다.

신자유주의적 **지향**.

남아공의 사례는 글로벌 제국주의 지배의 이해관계 안에서 아류제국주의적 지역권 지배의 냉혹한 과거의 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별로 놀란 일도 아니다. 정말로 넬슨 만델라(SAPA, 2003)의 경우처럼 이런 말도 충분히 가능하다. “나는 세실 존 로즈가 남아공의 경제를 21세기 초에 적합하게, 이 시대에 걸맞게 만들려는 노력에 대해 동의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2003a/b/c/d

아프리카의 악화된 자원의 저주 시기에 ‘시대에 걸맞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884~1885 베를린 회담의 아프리카에 대한 쟁투에서 북부 말라위에 대한 권리를 얻은 로즈의 브리티시-남아프리카 회사처럼, 채취는 핵

심적 목적이다.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남아공에서 다양한 내부 기업, 국가-기업 관계가 잉태되었는데, 이러한 관계는 2012년 중반 론민 사건으로 드러났다. 당시 ANC의 정치지도자 크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는 프리토리아 보안회사에 대한 커백션과 막대한 지분으로 혜택을 얻었다. 론민의 마리카나 백금광산에서 파업 진압은 필수적인 것처럼 보였고, 라마포사는 그의 광업과 경찰청장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충분한 병력이 투입되도록 하였다. 그들은 실탄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 34명의 광산 노동자가 죽고, 78명이 부상당했다.

이런 유혈적 방식, 또는 덜 폭력적인 방식의 탈취에 의한 축적(accumulation by dispossession)은 지난 십 년 동안 이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남아공, 미국, 유럽, 호주 및 캐나다 회사 소유의 광산에서 일어났고, 최근에는 중국, 인도, 브라질의 주요 회사도 여기에 합류하였다. 그들의 사업은 광물, 석유, 가스 채취를 위한 식민지 인프라 토대(도로, 철도, 운송관, 항구)와 그것들의 보장에 의존한다. 특히 중국은 주요 프로젝트를 실행할 능력이 있고, 부대조건이 없는 신용을 제공할 여력도 있다. 2013년 3월 중국은 석탄 수송과 항구 개축을 위해 철도 공기업 트랜스넷(Transnet)에 50억 달러의 대부를 제공한 바 있다.

모요와 예로스(Moyo and Yeros, 2011: 19)에 따르면 제국주의와 이류제국주의와의 관계는 국내 노동의 초과착취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당연하게도 그것은 이윤실현위기의 해결을 위해 외부 시장을 필요로 한다. 이런 내용은 로자 룩셈부르크(Luxemburg, 1968: 396)가 한 세기 이전 1913년에 쓴 『자본 축적론』에 나오는 사고에 유래한 것인데, 어떻게 자본주의의 경제 외적 강제능력이 상호부조, 공유시설, 가족, 토지, 자연의 모든 형태를 수탈하는지를 보여준다.

여러 측면에서 남아공은 세계 신자유주의와 결탁했고, 세계적 생태 문제

를 악화시키고 있고, 배후지 수탈의 진행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견딜 수 없는 내부압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하비(Harvey, 2003)가 제시했듯이 신자유주의에 수반되는 더 많은 자원에 대한 ‘탈취에 의한 축적’ 이고, 삶과 환경의 ‘비자본주의적’ 측면에 대한 강화된 초과착취 자본주의의 수탈이다.

자본의 과잉축적은 모든 곳에서 반복되는 문제이며 위기 시에 대두된다. 결과적으로 몇몇 BRICS 국가들에서는 지역 자본이 외부화, 금융화하려는 강력한 충동이 존재한다. 하비의 개념인 시공간적 조정(spatio-temporal fixes)으로 평가해보면 남아공과 다른 BRICS는 현 세계에서 새로운 아류제국주의의 가장 극단적 장소이다. 하지만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 초과착취의 독특한 역사적 양식에 대한 옛 시대의 주장들(소위 월프의 생산양식 접합론) 또한 아류제국주의 축적의 내적 차원을 인식하였다. 더욱이 1884~1985년 베를린 회담에서의 아프리카에 대한 정치적 분할처럼 2013년 BRICS 더반 정상 회담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서구의 우려에 대한 부담 없이, 대륙의 경제적 분할을 목표로 하였고, 25개국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협력자였다. 그들의 해결책은 다음과 같았다.

- 친기업적 채취와 토지수탈 전략에 대해 군대 투입까지 포함하여 지지한다.
- 아프리카의 소매 주도적 탈산업화를 강화시키는 것
- Nepad라는 실패한 프로젝트를 다시 살리는 것
- BRICS 신개발은행을 통한 아프리카의 토지수탈과 신식민주의적 인프라의 확대에 대한 금융지원을 승인하는 것

금융과 결탁하여 남아공은 누구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BRICS는 그들의 성난 주민들을 그들의 배후지와 마찬가지로 통제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보안관 대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BRICS 도처에서 일어나는 생태과괴적, 소비주의적, 과도한 금융화, 기온을 드높이는 난개발 모델은 기업 이윤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지만 지구의 대다수 민중들에게는 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류제국주의라는 명칭은 설득력이 있다.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마리니(Marini, 1974)는 1970년대 브라질 지역 지역의 경제적 수탈과 자본수출, 국내의 기업 독점화와 금융화 때문에 아류제국주의의 가장 현재적 표현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우리가 보았듯이, 만약 BRICS가 분명히 아류제국주의라면 이 체제에는 두 가지 추가적 역할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지역권의 지정학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브라질이 아이티에 과병한 것과 프리토리아의 남수단, 대호수 지역(the Great Lakes),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아프리카의 분쟁지대에 대한 중재 등이다. 두 번째는 신자유주의의 광범위한 어젠다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시장적 접근은 정당화된다. 증거는 IMF 자본재편에서의 BRICS의 역할, 남아공의 Nepad, 중국, 브라질, 인도의 WTO 재활성화를 위한 노력, 브라질의 남반구 은행 사보타지 등이다. 은코어나 마사바네가 말했듯이 “BRICS의 초점은 모두에게 득이 되는 경제발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며, 그것은 남반구 친화적이지만, 북반구에 적대적이지는 않다”(Mataboge, 2013).

참고문헌 없음

그 결과 이런 경향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대립을 타당하게 만든다. 최근 제기된 하나의 목소리는 잠비아의 부통령 가이 스콧(Guy Scott)의 것인데, “나는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이 미국을 싫어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남아공을 싫어한다”(Smith, 2013)고 말했다. 그러나 좀 더 적절한 것은 ‘아래로부터의 BRICS’ 프로젝트가 반대파를 연결하는 것이다. 이전의 사례가 BRICS 국가를 포함한 서구와 남아공의 반아프르트헤이트 활동가들의 연대 프로젝트였다면, 최근에는 아마 이런 연대의 가장 좋은 사례는 2008년 불법적인 짐바브웨 정권에게 무기와 탄약을 전달하기 위해 더반 항구에 정박한 중국

선박 안예지양(An Ye Jiang) 사례일 것이다. 이 선박은 항구노동자들, 종교지도자들, 짐바브웨와 연대하는 사회운동가들의 행동에 의해 하역이 거부되었다.

이런 행동을 위한 기회는 다음 달, 다음 해에 더 많이 증가할 수도 있다. 더 많은 BIRCS 지도자들이 IMF의 긴축친화적 금융을 뒷받침할 것이고, WTO 공세의 새로운 라운드를 추진할 것이다. 더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이 더 많은 광물, 석유 채취라는 목적을 갖는 아류제국주의 사이의 상호 파괴적 갈등의 전장이 되어갈 것이다. 기후변화 협상에 대한 BRICS와 미국의 위선적 사보타지는 지속될 것이고, 탄소시장은 승인될 것이다. 새로운 BRICS 개발은행은 세계은행의 생태적·경제적 혼란을 악화시킬 것이다.

아프리카 데미

## 참고문헌

- AfriCom Public Affairs. 2012.8.29. Ham discusses AFRICOM mission with African journalists, PAOs at symposium. Garmisch, Germany. Available at <http://www.afri.com.mil/getArticle.asp?art=8266&lang=0>
- Amabhungane. 2013.3.28. "Is this what our soldiers died for?" *Mail&Guardian*. Available at <http://mg.co.za/article/2013-03-28-00-central-african-republic-is-this-what-our-soldiers-died-for>
- Amanthis, J. 2012.7.27. "How the private sector didn't solve Ghana's water crisis." *Pambazuka*.
- Andes. 2013. "The Banco del Sur initiates operations in Caracas." *Andes*, June 12. Available at <http://www.andes.info.ec/en/economia/banco-sur-initiates-operations-caracas.html>
- Aslund, A. 2013.8.22. "Now the Brics party is over, they must wind down the state's role." *Financial Times*. Available at <http://www.ft.com/intl/cms/s/0/0147b43c-040b-11e3-8aab-00144feab7de.html#axzz2keJpWM2W>
- Associated Press. 2004.5.25. *Mandela extends conciliatory hand to the US*.
- Bello, W. 2009.3.31. "U-20: Will the global economy resurface?" *Foreign Policy in Focus*.
- Böhm, S., M. Misoczky and S. Moog. 2012.11. "Greening capitalism? A Marxist critique of carbon markets." *Organization Studies*, p.11, 33, 1629.
- Bond, P. 2003. *Against Global Apartheid*. London: Zed Books.
- \_\_\_\_\_. 2005. *Elite Transition*. London: Pluto Press.
- \_\_\_\_\_. 2006a. *Talk Left Walk Right*. Pietermaritzburg: University of KwaZulu-Natal Press.
- \_\_\_\_\_. 2006b. *Looting Africa*. London: Zed Books.
- \_\_\_\_\_. 2009. "Removing neocolonialism's APRM mask: A critique of the African Peer Review Mechanism." *Review of African Political Economy*, 36(122), pp.595~603.
- \_\_\_\_\_. 2012a.4. "South Africa's Dangerously Unsafe Financial Intercourse." *Counterpunch24*. Available at <http://www.counterpunch.org/2012/04/24/south-africas-dangerously-unsafe-financial-intercourse>
- \_\_\_\_\_. 2012b.10.16. "Who will get 'whacked' next in Africa?" *Black Agenda Report*. Available at <http://blackagenda.com/content/who-will-get-%E2%80%9Cwhacked-%E2%80%9D-next-africa>
- Broder, J. 2012.1.24. "Signs of new life as UN searches for a climate accord." *New York Times*.

- Bruce, P. 2003.6.4 “SA Needs a Market Economy that Works for All People.” *Business Day*.
- Business Day*. 2003.7.11. “Mbeki’s gift.”
- Clark, P. 2011.12.12. “‘Viagra Shot’ for Carbon Markets.” *Financial Times*.
- Cochran, S. 2010. “Security assistance, surrogate armies, and the pursuit of US interests in Sub-Saharan Africa.” *Strategic Studies Quarterly*, 4(1). Available at <http://www.au.af.mil/au/ssq/2010/spring/cochran.pdf>
- Columbia University and Yale University. 2012.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2012*. New York.
- Council for Development and Social Science Research in Africa, Dakar and Third World Network-Africa. 2002. Declaration on Africa’s development challenges. Resolution adopted at the Joint Conference on Africa’s Development Challenges in the Millennium, Accra, April 23~26.
- Creamer, M. 2013.4.17. “Looming China/Africa head-on collision—Solomon.” *Mining Weekly*. Available at <http://www.miningweekly.com/article/looming-chinaafrica-head-on-collision-solomon-2013-04-17>
- De Wet, P. 2013.10.10. “Zuma to business: Seize Africa, settle with labour.” *Mail& Guardian*.
- Desai, R. 2013.4.2. “The Brics are building a challenge to western economic supremacy.” *The Guardian*.
- Donnelly, L. 2012.6.22. “Throwing Good Money at EU Troubles.” *Mail&Guardian*.
- England, A. and R. Harding. 2013.8.25. “Call for aggressive action over emerging markets crisis.” *Financial Times*. Available at <http://www.ft.com/intl/cms/s/0/91c89454-0d89-11e3-9fbb-00144feabdc0.html#axzz2keJpWM2W>
- Ernst and Young. 2013. *Africa Attractiveness Survey*. New York. Available at <http://www.ey.com/ZA/en/Issues/Business-environment/Africa-Attractiveness-Survey>
- Escobar, P. 2013.3.27. “Brazil, Russia, India, China and South Africa: BRICS go over the Wall.” *Asia Times*.
- Ford, G. 2013.3.28. “Throwing BRICS at the U.S. Empire.” *Black Agenda Report*.
- Fransman, M. 2012.11.21. South Africa: A strong African Brick in BRICS. Stellenbosch, University of Stellenbosch.
- Fry, T. 2012.4.16. “Kim Crowned World Bank President.” *World Bank President*. Available at <http://www.worldbankpresident.org/tom-fry/uncategorized/kim-crowned-world-bank-president>
- Gordhan, P. 2012. Statement by Pravin J. Gordhan, Minister of Finance, South Africa.
- Harvey, D. 2003. *The New Imperi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7. *The New Imperialism*. Toronto: Knopf Canada.

- Hosken, G. and I. Mahlangu. 2013.3.31. "We were killing kids." *Sunday Time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Committee, Tokyo, October 13 2012. Available at <http://www.imf.org/External/AM/2012/imfc/state-ment/eng/zaf.pdf>
- James, D. 2013.11.19. personal correspondence.
- Jobson, E. 2013.9.6. "Outgoing US envoy warns African Union about South Africa." *Business Day*.
- Keet, D. 2013.11. "Perspectives and Proposals on the BRICS for and from popular Civil Society Organisations." Economic Justice Network.
- Kganyago, L. 2004.8.11. "South Africa as a Financial Centre for Africa." Speech to the Reuters Economist of the Year Award Ceremony, Johannesburg.
- Klein, N. 2007. *Shock Doctrine*. Toronto: Knopf Canada.
- \_\_\_\_\_. 2009.12.21. "For Obama, no opportunity too big to blow." *The Nation*.
- Laverty, A. 2011.5.2. "Globalization in emerging markets: How South Africa's relationship to Africa serves the BRICS." *The African File*. Available at <http://theafricanfile.com/public-diplomacy/international-relations/globalization-in-emerging-market-s-united-how-south-africa%E2%80%99s-relationship-to-africa-serves-the-brics/>
- Leon, T. 2013.8.27. "Brics caught with pants down as tide changes." *Business Day*. Available at <http://www.bdlive.co.za/opinion/columnists/2013/08/27/brics-caught-with-pants-down-as-tide-changes>
- Luxemburg, R. 1968·1913. *The Accumulation of Capital*.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Magalhaes, L. 2013.8.23. "China Only BRIC Country Currently Worthy of the Title -O'Neill." *Wall Street Journal*. Available at <http://stream.wsj.com/story/latest-headlines/SS-2-63399/SS-2-308220/>
- Manby, B. 2008.4.15. "African Peer Review Mechanism: Lessons from Kenya." *Pambazuka News* 362.
- Mangcu, M. 2013.6.30. "Obama no enemy of ours." *CityPress*.
- Manuel, T. 2002.9.24. *Mobilizing International Investment Flows: The New Global Outlook*. Speech to the Commonwealth Business Council, Johannesburg.
- \_\_\_\_\_. 2009.3.31. *Letter to Dominique Strauss-Kahn*. Pretoria.
- Manuel, T. and N. Stern. 2010.11.6. "Funding the low-carbon revolution." *Financial Times*.
- Marini, R. M. 1965. "Brazilian interdependence and imperialist integration." *Monthly Review* 17(7), p.22.
- \_\_\_\_\_. 1974. *Subdesarrollo y Revolución*, XXI Editores. Mexico City: Siglo. translated at [http://mrzine.monthlyreview.org/2010/bt280210p.html#\\_edn13](http://mrzine.monthlyreview.org/2010/bt280210p.html#_edn13)

- Martin, W. 2013. "South Africa and the 'New Scramble for Africa': Imperialist, Sub-imperialist, or Victim?" *Agrarian Sou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2), pp.161~188.
- Mbeki, T. 2012. Tackling Illicit Capital Flows for Economic Transformation. Thabo Mbeki Foundation, Johannesburg. Available at <http://www.thabombekifoundation.org.za/Pages/Tackling-Illicit-Capital-Flows-for-Economic-Transformation.aspx>
- Melber, H. 2013.8.16. "SA subimpi choice within EU v Southern Africa trade war." *debate-list*.
- Moneyweb*. 2011.9.29. "Special report podcast: Pravin Gordhan, Minister of Finance." Available at <http://www.moneyweb.co.za/moneyweb-special-report/special-report-podcast-pravin-gordhan--minister-of?sn=2009+Detail>
- Moyo, S. and P. Yeros. 2011. "Rethinking the theory of primitive accumulation." Paper presented to the 2nd IIPPE Conference, May 20~22, 2011, Istanbul.
- Msimang, S. 2013.5.8. "Will the real superpower please stand up?" *Daily Maverick*. Available at <http://www.dailymaverick.co.za/opinionista/2013-05-08-will-the-real-superpower-please-stand-up/#.UYti34fwNDp>
- Munusamy, R. 2003.7.13. "The George Dubya of Africa." *Sunday Times*.
- Murphy, J. 2003.2.3. "Mandela slams Bush on Iraq." *CBS News*. Available at [http://www.cbsnews.com/2100-500257\\_162-538607.html](http://www.cbsnews.com/2100-500257_162-538607.html).
- National Union of Metalworkers of South Africa. 2013.9.20. Ideological Reflections and Responses to Some of the Recent Attacks, Johannesburg.
- Onyango, C. 2013.9.19. "Return to crisis in the Great Lakes." *Naked Chiefs*. Available at <http://nakedchiefs.com/2013/09/19/return-to-crisis-in-the-great-lakes-star-of-the-uma-clan-hits-a-jackpot-in-dr-congo/>
- Palast, G. 2013.8.22. "Larry Summers and the Secret 'End Game' Memo." *Vice Magazine*. Available at <http://www.gregpalast.com/larry-summers-and-the-secret-end-game-memo/>
- Patel, K. 2013a.1.25. "The world according to Dirco(v. Jan 2013)." *Daily Maverick*.
- \_\_\_\_\_. 2013b.10.15. "Francois Hollande visit: mopping up Sarkozy's Mess." *Daily Maverick*.
- Pesek, W. 2013.3.28. "The BRICS Expose the West's Hypocrisy." *Bloomberg*. Available at <http://www.bloomberg.com/news/2013-03-28/the-brics-expose-the-west-s-hypocrisy.html>
- Pew Research Global Attitudes Project. 2013. *Climate Change and Financial Instability Seen as Top Global Threats*. Available at <http://www.pewglobal.org/2013/06/24/climate-change-and-financial-instability-seen-as-top-global-threats/>
- Radebe, K. 2012.12.11. "SA's business leaders open letter courageous- DBSA CEO."

- Moneyweb*. Available at <http://www.moneyweb.co.za/moneyweb-blogs-different-questions/sas-business-leaders-open-letter-courageous--dbsa->
- Reuters*. 2013.8.22. "Gordhan: floating rand helps absorb shocks." Available at <http://www.iol.co.za/business/markets/currencies/gordhan-floating-rand-helps-absorb-shocks-1.1566777#.UoUbPfkqwqch>
- Republic of South Africa Department of National Treasury. 2012. "Contingent Reserve Arrangement." Available at <http://www.treasury.gov.za/brics/crp.aspx>
- Republic of South Africa Government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ervice. 2002. 6.26. Statement on Cabinet Meeting. Pretoria.
- Republic of South Africa National Planning Commission. 2012.8. 2030, *Our future - make it work: National Development Plan*. Minister in the Office of the President, Pretoria, Chapter 7.
- Republic of South Africa Office of the Presidency. 2013. *President Zuma returns from the G20 Leaders' Summit*. Available at <http://www.thepresidency.gov.za/pebble.asp?releid=16066&t=79>
- Rose, R. 2004.5.24. "Companies 'shirking' their Nepad obligations." *Business Day*.
- Ross, S. 2010.4.1. Rendition and the global war on terrorism: 28 nations have supported the US in the detention and torture of 'suspects'. Global Research. Available at <http://www.globalresearch.ca/index.php?context=va&aid=18419>
- Sanusi, L. 2013.3.11. "Africa must get real about Chinese ties." *Financial Times*. Available at <http://www.ft.com/intl/cms/s/0/562692b0-898c-11e2-ad3f-00144feabdc0.html#axzz2PKy79X3R>
- SAPA. 2003a.6.2. "G8 Vows to 'Fully Commit' to Developing African Nations." *Financial Times*.
- \_\_\_\_\_. 2003b.7.9. "Texas is missing an idiot."
- \_\_\_\_\_. 2003c.7.9. "Anti-Bush crowd braves cold."
- \_\_\_\_\_. 2003d.8.25. "Mandela criticises apartheid lawsuits." *Financial Times*, Cape Town.
- \_\_\_\_\_. 2004.3.30. "SA's 'imperialist' image in Africa."
- Schmitt, E. 2013.10.18. "U.S. Army Hones Antiterror Strategy for Africa, in Kansas." *New York Times*.
- Shear, S. 2013.9.1. "A brief(brutal) history of the Rooivalk." Available at <http://www.enca.com/technology/brief-brutal-history-rooivalk>
- Shubin, V. 2013.3.20. "BRICS viewed from Russia." *Pambazuka News*. Available at <http://www.pambazuka.org/en/category/features/86658/print>
- Smith, D. 2013.5.1. "Zambian vice-president: 'South Africans are backward'." *The Guardian*.
- South African International Marketing Council. 2013. "SA to validate BRICS membership."

- Available at <http://www.imc.org.za/news/853-sa-to-validate-brics-membership>
- Stern, N. and J. Stiglitz. 2011.9. "An International Development Bank for Fostering South-South Investment: Promoting the New Industrial Revolution, Managing Risk and Rebalancing Global Savings." Unpublished paper. London and New York.
- Stratfor. 2009.5.5. "Monography for comment: South Africa." Available at <http://search.wikileaks.org/gifiles/?viewemailid=951571>
- Tatlow, K. 2012.4.19. "BRICS agitate for a seat at the table." *New York Times*. Available at [http://www.nytimes.com/2012/04/20/business/global/brics-agitate-for-a-seat-at-the-table.html?pagewanted=all&\\_r=0](http://www.nytimes.com/2012/04/20/business/global/brics-agitate-for-a-seat-at-the-table.html?pagewanted=all&_r=0)
- The Economist*. 2013.7.27. The Great Deceleration. The Economist Leader Edition. Available at <http://www.economist.com/news/leaders/21582256-emerging-market-slow-down-not-beginning-bust-it-turning-point>
- The Guardian*. 2013.9.18. "Dilma Rousseff, the Brazilian president, isn't happy with Barack Obama." The Guardian Passnotes Blog. Available at <http://www.theguardian.com/world/shortcuts/2013/sep/18/dilma-rousseff-barack-obama-isnt-happy>
- Third World Network. 2013.6. "Whither the BRICS?" *Third World Resurgence* 274. Available at <http://www.twinside.org.sg/title2/resurgence/2013/twr274.htm>
- Tian, W. 2013.9.14. "End to QE to 'Split' Emerging Markets." *China Daily*. Available at [http://www.chinadaily.com.cn/business/2013-09/14/content\\_16969677.htm](http://www.chinadaily.com.cn/business/2013-09/14/content_16969677.htm)
- Van Hove, K. 2013.10. Interview with João Samuel Caholo, former SADC Deputy Executive Secretary. *GREAT Insights*, 2, 7.
- White House Press Office. 2006.12.8. Press release: Remarks by President Bush and President Mbeki of South Africa in photo opportunity. Washington.
- Wolpe, H.(ed.). 1980. *The Articulation of Modes of Productio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World Bank. 2011. *The Changing Wealth of Nations*. Washington, DC: World Bank Group.

- 정진상**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장귀연**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장시복** 목포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김영수**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장상환**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장대업** 런던 아프리카아시아대학(SOAS) 개발학과 교수  
**윤자영**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은 사회과학 전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협동을 통해 노동문제를 비롯한 주요 사회문제와 국내의 문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매년 수행한 공동연구와 학술대회 및 워크숍의 연구성과를 ‘사회과학연구 총서’(도서출판 한울 간행 단행본 시리즈)로 간행하고 있다. 경상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원은 2001년도에 한국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로 지정되어 전임연구교수를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학술지 《사회과학연구》와 《마크스주의 연구》(도서출판 한울)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http://iss.gnu.ac.kr>

이메일 [iss@gnu.ac.kr](mailto:iss@gnu.ac.kr)

한울아카데미 1495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총서 38

## 세계화와 계급구조의 변화

이론적 접근

© 정진상 외, 2012

역은이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지은이 | 정진상 · 장귀연 · 장시복 · 김영수 · 장상환 · 장대업 · 윤자영  
펴낸이 | 김종수  
펴낸곳 | 도서출판 한울  
편집책임 | 배은희  
편집 | 이황재

초판 1쇄 인쇄 | 2012년 9월 20일  
초판 1쇄 발행 | 2012년 9월 25일

주소 | 413-756 경기도 파주시 파주출판도시 광인사길 153(문발동 507-14) 한울시소빌딩 3층  
전화 | 031-955-0655  
팩스 | 031-955-0656  
홈페이지 | [www.hanulbooks.co.kr](http://www.hanulbooks.co.kr)  
등록 | 제406-2003-000051호

Printed in Korea.  
ISBN 978-89-460-5495-0 93330

\* 가격은 겉표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의 중점연구소 지원 연구 과제, '대안세계화운동과 대안사회경제모델 연구'의 2단계 과제 '세계화와 축적체제 및 계급 구조 변화'(NRF-2010-413-B00027)의 1세부과제 1차년도(2010. 12-2011. 11) 연구결과를 엮은 것입니다.